

Daejon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 Self-government

2005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기총회

# 대전을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도시로 가꿉시다

---

2005. 1. 28(금) 오후 7시 / 참여광장

***www.cham.or.kr***



(301-825)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84-22 보문평화회의집 1층  
전화/ 042)331-0092~5 전송/ 252-6976 대표이메일/ cham@cham.or.kr

## • 대전참여자치연대의 역사 •

87년 6월 항쟁을 통해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독재체제 하에서 억압되어 있던 시민 사회 공간이 열리면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대변하는 시민운동이 90년대 이후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당시 시민운동은 출발부터 그 이념과 노선에 있어서 민중운동과의 차별성을 강조했고, 민중운동 역시 시민사회에 기반한 시민운동에 적극적인 의무부여를 하지 않음으로써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관계는 분화와 대립의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극복하고 발전적인 행태의 새로운 시민운동체를 건설하자는 문제의식으로 탄생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민주화운동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시민사회의 확장이라는 시대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진보적 시민운동을 표방하였다.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새로운 시민운동체 건설 논의를 위해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공유해오다가 1995년 4월 28일 대전지역의 88개 시민사회단체들의 대표자들이 발기인이 되어 창립되었다. 창립당시 문민정부 초기의 금융실명제 실시와 같은 의욕적인 개혁추진이 기득권의 반발로 유야무야되던 시기였고, 30년만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실시로 본격적인 지방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던 때였다. 결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운동은 참된 주민자치를 열어가자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운동, 참된 개혁의 힘을 아래로부터 지역사회로부터 만들어가야 한다는 믿음으로 시작한 새로운 형태의 시민운동이자, 지역운동의 시작이었다.

대전참여자치연대는 국가의 횡포와 재벌에 대한 시민의 개입과 실천의 뜻으로 ‘참여’, 지방자치시대를 참된 주민자치의 시대로 만들어가기 위한 뜻으로 ‘자치’, 그리고 학연과 지연 등 문제점을 극복하고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뭉치자는 뜻을 ‘연대’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 • 대전참여자치연대 목적문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역 사회의 주인인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기초하여 참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는 인권 존중사회, 정직과 양심이 우선되는 맑은 사회, 모든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복지사회, 시민참여로 운영되는 민주사회를 추구하며,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관치와 타율에서 자치와 참여로, 부패하고 닫힌 행정에서 깨끗하고 열린 행정으로, 경직과 비효율적 재정에서 건전한 재정으로, 입시위주에서 미래지향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으로, 성장우선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환경파괴에서 환경보전으로, 분단에서 화해와 통일로 가기위한 여러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Daejon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 Self-government

2004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기총회

## 대전을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도시로 가깝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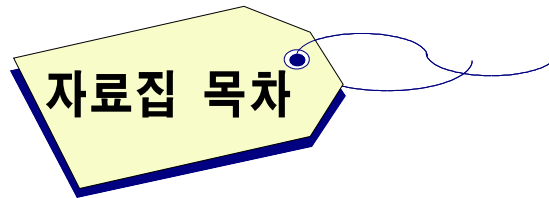
2005. 1. 28(금) 오후 7시 / 참여광장



*[www.cham.or.kr](http://www.cham.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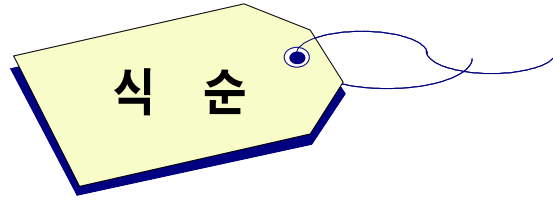


## 제10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기총회



<input type="checkbox"/>	정기총회 식순	5
<input type="checkbox"/>	공동의장 인사말	6
<input type="checkbox"/>	회원생활문화규범	8
<input type="checkbox"/>	제10차 정기총회 경과보고	9
<input type="checkbox"/>	제 9차 정기총회 회의록	10
<input type="checkbox"/>	2004년도 사업보고 평가 및 결산보고서	13
<input type="checkbox"/>	2004년도 감사보고서	59
<input type="checkbox"/>	안전심의	
	의안1호 / 규약 개정의 건	61
	의안2호 / 규정 개정의 건	62
	의안3호 / 2005년도 운동기조 및 사업과제 심의의견	65
	의안4호 / 2005년도 예산안 심의의 건	69
	의안5호 / 총회 결의문 채택의 건	72
	의안6호 / 기타 안전	
<input type="checkbox"/>	참여자치시민상, 참여시민상 등	74
<input type="checkbox"/>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규약	77
<input type="checkbox"/>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주요규정	85
<input type="checkbox"/>	2004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보도자료	105
<input type="checkbox"/>	<참고> 대전지역 시민운동에 대한 시민의식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213
	<참고> 대전지역 시민단체 상근활동가 복지현황 분석보고서	225
	<참고> 설인호 화백 작품 감상	246

## 제10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기총회



☐ 만찬 [19:00~19:30 / 2F 환경교육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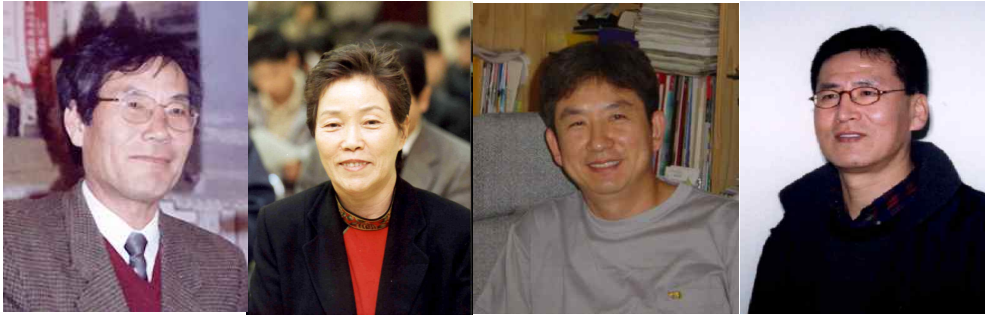
☐ 제1부 / 개회식 [19:30~19:45 / B1 참여광장]

- ☐ 개회
- ☐ 국민의례
- ☐ 회원생활문화규범 낭독
- ☐ 총회 경과보고
- ☐ 상임의장 인사
- ☐ 참여자치시민상 시상
- ☐ 올해의 언론인상 시상
- ☐ 참여시민상 시상
- ☐ 광고

☐ 제2부 / 총회 [19:45~20:50 / B1 참여광장]

- ☐ 성원보고
- ☐ 서기선출
- ☐ 회순채택
- ☐ 전차회의록 보고
- ☐ 2004년도 사업보고 평가 및 결산보고
- ☐ 감사보고
- ☐ 안건심의
  - 의안 ①호 / 규약 개정의 건
  - 의안 ②호 / 규정 개정의 건
  - 의안 ③호 / 2005년도 운동기조 및 사업과제 심의의 건
  - 의안 ④호 / 2005년도 예산안 심의의 건
  - 의안 ⑤호 / 총회 결의문 채택의 건
  - 의안 ⑥호 / 기타안건
- ☐ 회의록채택
- ☐ 폐회

## □ 의장단 인사



김선건 공동의장

민명수 공동의장

윤종삼 공동의장

송인준 상임의장

제10차 정기총회에 함께 해주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한해 우리 단체는 탄핵무효 투쟁을 필두로 신행정수도 위헌대책활동, 경륜장 건립 저지활동의 지속추진과 급행버스 시스템 도입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중요한 성과가 많았습니다. 우리 단체의 자립적 활동의 기반이 확충되는 가운데 (가칭)대전시민사회연구소 설립 준비도 시작되었습니다. 주민 공동체운동의 일환으로 어린이도서관 사업과 회원 상호간의 품앗이공동체인 참장터도 시작되었고,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한 여성위원회의 활동도 활발했던 한 해였습니다.

대전참여자치연대가 만약 시대가 부여한 소명을 일부라도 감당 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온전히 생활 현장 속에서 자신이 속한 사회 구성원의 도리를 다하려 생활해 온 회원님들의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현안을 중심으로 한 국가개혁과제와 사회적 실천 속에서 여전히 회원과 시민의 참여에 기반한 실천의 전형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시민운동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며 시민운동 표준활동 교범이 만들어지지도 못했습니다. 다양한 회원 소모임을 더 많이 만들며 작은 지역단위별 주민실천을 확충하는 일도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굵직한 사업 속에서 계획된 일상사업들이 유실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올 한 해는 더욱 정진하여 이런 숙제들을 차곡차곡 풀어가도록 노력하여야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올해는 창립 10년을 맞은 해이면서 마침 지방자치의 실시 10주년을 맞은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과거를 회고하고 오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역 사회의 발전의 다짐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 10년을 참여민주주의 완성의 해로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압축적 고령화와 극단적 양극화로 인한 지속가능성이 의심받는 한국 사회의 미래를 새롭게 만드는 실천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 기득권 세력은 대통령 탄핵으로 권력 탈취를 기도하는가 하면, 색깔론과 국회 봉쇄 등 온갖 폭력적인 수법으로 개혁을 무산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관습’을 동원해 ‘변화’를 파탄냈습니다. 경제는 4년 넘게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줄지 않는 신용불량자와 가계 부채, 불안한 고용사정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 등으로 내수는 살아날 기미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소득, 계층, 지역, 산업 사이의 양극화와 불균형 성장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까지 위협할 정도입니다. 신자유주의의 파도가 수많은 삶의 뿌리를 뽑고 사회구조를 해체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이제 지역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 일해 온 회원 여러분께 새로운 과제를 위해 일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한국사회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일에 나서길 호소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개혁의 정당성에 대해 확신을 갖고 2005년을 희망의 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 인간의 존엄에 대한 믿음과 헌신으로 사회 변혁에 나설 것을 회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작은 생활 속에서의 실천으로부터, 이웃과 더불어 사는 시민으로 나아가 나라와 민족의 희망까지 함께 전진하길 희망합니다.

오늘의 총회가 이런 한국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의 극복을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됨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싹틔우길 소망합니다.

2005년 1월 28일

공동의장 김선진 민명수 송인준 윤종삼

☐ 회원생활문화규범

- ☐ 우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갖습니다.
- ☐ 우리는 우리가 속한 사회에 대해 책임지려고 노력합니다.
- ☐ 우리는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의 연대를 소중히 합니다.
- ☐ 우리는 사회적 지위나 명성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만납니다.
- ☐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 ☐ 우리는 한 사람의 한 걸음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 ☐ 우리는 회비를 성실히 납부합니다.
- ☐ 우리는 자율적으로 모임에 참여합니다.



## □ 제10차 정기총회 경과보고

- 12월 7일, 제5차 상임집행위원회에서 2005년도 정기총회를 2005년 1월 28일에 개최기로 결의하고 의장단 및 상임집행위원 등 당연직 총회준비위원과 약간명의 집행위원으로 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다.
- 12월 30일, 사무처 상근활동가들이 모여 2004년도 활동평가 워크숍을 개최하고 평가 초안서를 제출하다.
- 1월 5일, 임원 업무구상회의를 개최하고, 2004년도 사업평가 및 2005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검토하다.
- 1월 11일, 제1차 총회준비위원회 및 제6차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총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확정하는 한편, 총회공고 등의 총준위 일정, 2004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005년도 사업기조와 사업과제, 예산안, 규약 및 규정 개정, 참여자치시민상 선정 등에 대해 검토한 후, 안전심의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총회준비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기로 하다. 단 6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규약에 의거하여 정권조치하되, 총회에 출석하여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기로 약속한 회원은 그러지 아니하기로 의결하다.
- 1월 12일,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 인터넷을 통해 제10차 정기총회를 공고하였으며, 정회원을 대상으로 우편엽서를 발송하다.
- 1월 20일, 송인준 상임의장, 이현주 집행위원장, 김제선 사무처장, 박상우 국장이 출석한 가운데 이동규 감사의 2004년도 회계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다.
- 1월 21일,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대전지역 시민운동에 대한 시민의식 설문조사를 마치다.
- 1월 21일, 여성위원회 정기총회를 자치마당에서 개최하고, 임역원 재신임 및 2005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의결하다.
- 1월 22일, 김제선 사무처장, 박상우 국장이 출석한 가운데 손규성 감사의 2004년도 사업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다.
- 1월 25일, 제2차 총회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기총회 안건으로 제출할 각호 의안 등에 검토하고, 참여자치시민상 등 수상자를 선정하다.
- 1월 28일 오늘 제10차 정기총회에 이른다.

## ☐ 제9차 정기총회 회의록

☐ 일 시 : 2004년 2월 12일 오후 7시15분~8시40분

☐ 장 소 : 충청하나은행 대강당

### ☐ 제1부 / 만찬과 친교

### ☐ 제2부 / 개회식

1. 개 회/ 이현주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개회하다.
2. 국민의례/ 민주화를 위해 먼저가신 분들 및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갖다.
3. 회원생활문화규범 낭독/ 사회자의 선창으로 회원생활문화규범을 다같이 낭독하다.
4. 총회경과보고/ 최정우 협동처장이 총회 자료집 8쪽에 게재된 총회준비 경과보고를 낭독하다.
5. 의장인사/ 의장단을 대표하여 김선건 상임의장께서 한해동안 고생하셨던 회원들을 격려하고 정치개혁을 위해 다같이 노력할 것을 주문하는 인사를 하시다.
6. 참여자치시민상 시상/ 김선건·민명수 두분의 공동의장께서 참여자치시민상으로 선정된 한화교 대구지방국세청 공무원과 책임어주는 엄마모임 부회장에게 상패와 부상, 꽃다발을 증정하고 수상자들의 인사말을 듣다.
7. 올해의 깨끗한 정치인 시상/ 김선건 공동의장께서 올해의 깨끗한 정치인으로 선정된 정진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에게 상패와 부상, 꽃다발을 증정하고 수상자의 인사말을 듣다.
8. 아름다운 사람상/ 민명수 공동의장께서 아름다운 사람상에 선정된 강도목 경동기술공사 대표 이사에게 상패와 부상, 꽃다발을 증정하고 수상자의 인사말을 듣다.
9. 참여시민상(모범회원상)/ 김선건·민명수 두분의 공동의장께서 참여시민상으로 선정된 장재완 회원과 정찬명 회원에게 상패와 부상, 꽃다발을 증정하고 수상자들의 인사말을 듣다.
10. 감사패 증정/ 민명수의장께서 참여와 자치 월간지를 꾸준히 발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주)참다자인을 대표해 이용훈 회원에게 감사패와 부상, 꽃다발을 증정하다.
11. 참석자 및 내빈 소개/ 김제선 사무처장이 총회에 참석해주신 내빈을 소개하다.

### ☐ 제3부 / 정기총회

1. 개회선언/ 김선건 상임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2. 성원보고/ 유성미 회원사업국장이 정회원 661명 가운데, 참석 127명과 위임 206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3. 서기선출/ 의장이 김수현 회원을 서기로 지명하고, 회중에게 물어 회중이 이에 찬성함으로 김수현 회원이 서기로 선출됨을 알리다.
4. 회순채택/ 의장이 제안된 회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그대로 받자고 동의하고 여러 회원이 제청하여 다른 의견을 묻되, 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다.

5. 전차총회록 보고/ 의장이 노현승 협동처장에게 전차총회록을 보고케 하자 자료집 6쪽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보고하고, 다른 의견을 물으니 다른 의견이 없어 의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보고를 채택하다.
6. 2003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이현주 집행위원장이 자료집 16쪽의 내용을 요약 보고하고, 의장이 다른 의견을 물으니 다른 의견이 없어 그대로 받을 것을 동의하고 여러 회원이 제청하여 만장일치로 보고를 채택하다.
7. 감사보고/ 윤종삼 감사가 자료집 44쪽의 감사보고를 행하고, 의장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물으니 다른 의견이 없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채택하다.
8. 안전심의/ 김선건 의장이 안전 심의를 상정하고,
  - 1) <제1호 의안 - 임원선거 결과 승인의 건>에 대해 의장이 류진석 협동처장에게 임원선거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류진석 협동처장은 총 212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김선건 후보가 찬성196명 반대16명, 민명수 후보가 찬성195명 반대16명 기권1명, 송인준 후보가 찬성196명 반대14명 기권2명, 윤종삼 후보가 찬성195명 반대15명 기권2명이었으며, 감사후보인 손규성 후보가 찬성201명 반대10명 기권1명, 이동규 후보가 찬성198명 반대12명 기권2명, 집행위원장 후보인 이현주 후보는 찬성202명 반대10명으로 나타난 투표결과를 보고한 후, 승인을 회중에게 묻자 다른 의견이 없어 투표결과대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하다.
  - 2) <제2호 의안 - 기타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의장이 이현주 집행위원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이현주 집행위원장은 총회자료집 47쪽의 기타임원안(아래)을 참조로 보고한 후, 의장이 회중에게 다른 의견을 물으니 다른 의견이 없어 의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① 정책위원회	위원장 이은구(한남대 행정학과)
	부위원장 문화 / 김양주(배재대 일본학과) 경제 / 조복현(한밭대 경제과)
	정치행정 / 장수찬(목원대행정과) 복지 / 심재호(목원대 사회복지)
	기획·도시 / 최정우(목원대 도시공학)
②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본부장 송동호(변호사)
	집행위원장 유병구(건축사) *아파트분과장 겸임
	공익소송분과장 / 여운철(변호사) 사회인권분과장 / 장동환(변호사)
③ 복지포럼	회장 김종생(월평복지관장)
	부회장 김형돈(치과의사) 이문희(의사)
	집행위원장 심재호(목원대 사회복지과)
	장애인분과장 / 정진일(기자) 복지행정분과장 / 정기룡(전담공무원)
	보건의료분과장 / 미정
④ 회원모임	등산모임 회장 이재화(ITC대표) 총무 정관성(대미농수산 대표)
	협동총무 이정규(건설업), 양동철(부동산중개업), 허남주(TRS대전지사장)
	문화모임 회장 염완석(자유업)
	주부모임 회장 신선화(주부)
	축구모임 회장 김주현(변호사) 부회장 이광기, 장팔수(헬스클럽)
	총무 장재완 부총무 금홍섭, 복진국
⑤ 사무처장단	사무처장 김제선
	협동처장 (회원)노현승 (복지)심재호 (작은권리)여운철 (정책)최정우
  - 3) <제3호 의안 - 집행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이현주 집행위원장에게 보고토록 하여, 총회자

료집 49쪽에 나와있는 집행위원 후보안(아래)을 참조로 보고한 후, 의장이 회중에게 다른 의견을 물으니 다른 의견이 없어 의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① 당연직 집행위원

의장단	김선건 민명수 송인준 윤종삼
집행위원장	이현주
사무처장단	김제선 노현승 여운철 최정우
정책위원회	이은구 김양주 조복현 장수찬 최정우
복지포럼	김종생 김형돈 이문화 심재호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송동호 유병구 여운철 장동환
회원모임	등산모임(1인) 문화모임 회장 주부모임 회장 축구모임(1인)
여성위원회 준비위	김영숙

② 선임직 집행위원 : 본인이 수락하는 조건으로 집행위원으로 선임기로 함

강민구, 강영희, 강현수, 고갑준, 고미자, 고제열, 권선필, 김봉구, 김수현, 김양기, 김영숙, 김용분, 김용세, 김정옥, 김진화, 김학일, 나준식, 류진석, 박경란, 박경혜, 박노동, 박성경, 박용운, 박종만, 복진국, 손나연, 신현정, 심현우, 안정선, 양동철, 염완석, 오광영, 우희창, 유달상, 이기동, 이영남, 이외원, 이재영, 이종석, 이종운, 장은령, 장팔수, 전수경, 정관성, 정덕재, 정선기, 정완숙, 정진일, 조병렬, 조병제, 최영규, 하상욱, 한진걸, 허남주

③ 집행위원 추가 선임 : 필요한 인사 약간명을 차기 집행위원회에서 추가로 선임할 수 있도록 위임함.

4) <제4호 의안 - 2004년 사업기조와 과제 심의의 건>에 대해 김제선 사무처장에게 보고토록 하여, 총회자료집 50쪽에 나와있는 내용을 참조로 보고하였으며, 보고후 의장이 회중에게 다른 의견을 물으니 다른 의견이 없어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다.

5) <제5호 의안 - 2004년 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해 김제선 사무처장에게 보고토록 하여, 총회자료집 59쪽에 나와있는 내용을 참조로 보고하였으며, 보고후 의장이 회중에게 다른 의견을 물으니 다른 의견이 없어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다.

6) <제6호 의안 - 규약개정 의 건>에 대해 김제선 사무처장에게 보고토록 하여, 총회자료집 61쪽에 나와있는 내용을 참조로 보고하였으며, 보고후 의장이 회중에게 다른 의견을 물으니 다른 의견이 없어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다.

7) <제7호 의안 - 회원투표 및 임원선거 규정 제정의 건>에 대해 김영숙 집행위원에게 보고토록 하여, 총회자료집 64쪽에 나와있는 내용을 참조로 보고하였으며, 보고후 의장이 회중에게 다른 의견을 물으니 다른 의견이 없어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다.

의장이 다른 안건이 있는지를 묻고 다른 안건의 상정이 없자 안건심의 종결을 선포하다.

9. 회의록 채택/ 의장이 서기에게 회의록 보고를 요청하였으나, 김제선 사무처장이 서기록의 정리가 아직 미흡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9기 1차 집행위원회에 회의록 채택의 권한을 위임하자고 제안하여,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총회록의 채택을 집행위원회로 위임하다.

10. 의장이 제9차 정기총회의 폐회를 선언하고, 회중 전원이 참여하는 기념촬영을 제안하여 사진촬영을 마치니 20시 40분이었다.

2004년 2월 12일

총회서기 : 김수현 (인)

## □ 2004년도 사업보고 평가 및 결산보고서

< 보고자 : 총회준비위원회 >

### 1. 조직개요

#### 1) 사무실의 소재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84-22 보문평화의집 1층

대표전화 042-331-0092~5 전송 252-6976

인터넷홈페이지 www.cham.or.kr / E-mail cham@cham.or.kr

#### 2) 임직원 현황

공 동 의 장 / 김선건, 민명수, 송인준(상임), 윤종삼

감 사 / 손규성, 이동규

집 행 위 원 장 / 이현주

사 무 처 장 / 김제선

협동 사무처장 / 노현승, 심재호, 여운철, 최정우

사회개혁실천팀 / 금홍섭, 김수현, 백경원

시 민 참 여 팀 / 박상우, 이억수

정 책 위 원 장 / 이은구

(실무담당 : 사회개혁팀 금홍섭)

정치행정분과장 / 장수찬

문 화 분 과 장 / 김양주

지역경제분과장 / 조복현

복 지 분 과 장 / 류진석

운 영 분 과 장 / 최정우

※각 분과장은 부위원장 겸임

여 성 위 원 장 / 김영숙

(실무담당 : 시민참여팀 이억수)

부위원장 / 박경혜

총 무 / 장은령

복지포럼 회장 / 김종생

(실무담당 : 사회개혁팀 금홍섭)

부 회 장 / 김형돈, 이문희

집 행 위 원 장 / 심재호

장애인 분과장 / 정진일

복지행정분과장 / 정기룡

보건의료분과장 / (미정)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장 / 송동호

(실무담당 : 사회개혁팀 금홍섭)

집 행 위 원 장 / 유병구

공익소송분과장 / 여운철

아파트 분과장 / 유병구

사회인권분과장 / 장동환

어린이도서관추진위원장 / 윤종삼

(실무담당 : 사회개혁팀 백경원)

편 집 위 원 회 / 김정옥, 고제열, 노현승, 한진걸, 허남주 (실무담당 : 시민참여팀 박상우)  
 축구모임 '늘푸른축구단' 회장 / 김주현 (실무담당 : 시민참여팀 이억수)  
 부회장 / 이광기, 장팔수 총무 / 장재완 부총무 / 금홍섭, 복진국  
 주부모임 '깨아모' 회장 / 신선화 총무 / 신정미 (실무담당 : 시민참여팀 유성미)  
 등산모임 '참산' 회장 / 이재화 총무 / 정관성 (실무담당 : 시민참여팀 이억수)  
 협동총무 / 양동철, 이정규, 허남주  
 대학생모임 '아청모' (실무담당 : 시민참여팀 박상우)  
 지도위원 / 강창일, 김광식, 김순호, 김용우, 김조년, 김홍수, 문국모, 박노영, 손명환, 안성호,  
 양현수, 이명남, 이정순, 이춘아, 조연상, 정지강, 진경희, 최교진, 홍종오  
 지문위원 / 가명현, 강도목, 김문창, 김선미, 김영완, 김준언, 김주현, 김창태, 김창훈, 김필중,  
 문성호, 박영기, 신명식, 심현우, 이계석, 이동선, 이명직, 이충재  
 전문위원 / 강성복, 고병년, 고영주, 김미옥, 김종필, 류기형, 박종범, 오옥희  
 선임직 집행위원 / 강민구, 강영희, 강현수, 고갑준, 고제열, 권선희, 김봉구, 김양기, 김용세,  
 김정옥, 김진화, 김학일, 나준식, 류진식, 박경란, 박경혜, 박노동, 박성경, 박용운,  
 박종만, 복진국, 손나연, 신현정, 심현우, 안정선, 양동철, 염완석, 오광영, 우희창,  
 유달상, 이기동, 이영남, 이외원, 이재영, 이종석, 이종운, 이재화, 장은령, 장팔수,  
 전수경, 정관성, 정덕재, 정선기, 정완숙, 정진일, 조병렬, 조병제, 최영규, 하상욱,  
 한진걸, 허남주 (※당연직 상임집행위원 명단제외)

### 3) 가입 연대조직

#### • 주요 상설 연대조직 (5)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간사단체 수임)
-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간사단체 수임)
-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간사단체 수임)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 전국적 연대조직 (9)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지방분권국민운동
- 도박장반대전국네트워크
- 보행권 네트워크
- 판공비 네트워크
-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개선전국네트워크

- 아파트공동체 네트워크
- 지역복지 네트워크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 · 지역 연대조직 (26)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 신행정수도건설비상시국회의
- 신행정수도지속추진범대전시민연대
- 신행정수도범충청권협의회
- 이라크파병반대전시민행동
- 교육의공공성실현을위한민주교육개혁대전시민연대
- 대전버스사랑시민모임
- 대전경륜장건립저지 충청지역 공동대책위원회
- BRT전면도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대전정치개혁시민연대(해산)
- 2004대전총선시민연대(해산)
-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을 위한 범국민대전행동(해산)
- 대전충남기록문화포럼
- 금강보전네트워크
- 산내학살대책회의
- 어린이도서관추진위원회
- 리베라호텔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제2차 대전충남 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
- 원자력연구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 차별없는 세상만들기 걷기대행진 대전추진위원회
- 국가보안법폐지대전시민연대
- 올바른 교육감 선거를 위한 대전시민연대
-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대전시민운동본부
- 2004 대전충남 통일축전 준비위원회
- 우리쌀 지키기 식량주권수호 대전충남운동본부

#### 4) 자매결연단체 (1)

- 일본 평화헌법을 살리는 구마모토현민의 회

#### 5) 각종 공공 기관 참여 현황 (46)

-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김제선
-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김종생
-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 심재호
- 대전광역시 여성정책위원회 위원 김제선
- 대전광역시 경제대책위원회 위원 민명수
- 대전광역시 중구청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 위원 김제선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 위원 박상우
- 대전광역시 시내버스개선민관공동대책위원회 위원 김제선
- 대전광역시 시내버스개선민관공동대책위원회 실무위원 금홍섭
- 대전광역시 한꿈이카드 추진협의회 위원 김제선
- 대전광역시 한꿈이카드 추진협의회 실무위원 금홍섭
- 대전광역시 보행환경회의 위원 김제선
- 대전광역시 시보명예기자 금홍섭
- 대전광역시 정기간행물폐간심의위원 김제선
- 대전광역시 원도심활성화자문위원회 위원 송인준
- 대전광역시 동구청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평가위원 유병구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평가위원 유병구
- 대전광역시 중구청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평가위원 장은령
-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평가위원 유병구
-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건축위원회 위원 유병구
- 대전광역시 언론지원 심사위원회 위원 김제선
- 대전광역시 언론지원 심사위원회 위원 여운철
- 대전광역시 2004자원봉사대축제 심사위원회 위원 금홍섭
- 대전광역시 행정서비스현장심의위원회 위원 민명수
-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이현주
- 대전발전연구원 대전천생태하천 복원관련용역 교통대책 자문위원 금홍섭
- 국세청 국정과세심의위원 김용분
- 국세청 법령해석자문위원 김주현
- 국세청 자산재평가위원 최승룡
- 대전지방법원 사법모니터 요원 유성미
- 병무행정 국민참여위원 신현정
- 철도청 정보공개심의위원 강영희



-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유병구
- 충청남도 혁신분권연구단 위원 김제선 최호택 안성호 장수찬 권선표 강현수
- 충남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위원 금홍섭
- 행정자치부 정부혁신지방분권자문위원회 위원 김제선
- 교육부 지방대학 지원 평가위원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사신축 및 부대시설공사 예비준공검사단 위원 이정규
- 기획예산처 정책수립 여론자문위원 금홍섭
- 대중교통 기본체계수립 및 BRT준비단 위원 김제선
- 시내버스 준공영제 준비단 위원 김제선
- 한국전력 대전충남지사 고객만족 자문위원 김제선
-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운영위원 김제선
- 서구포럼 이사 김제선 금홍섭
- 전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풀뿌리공모사업 심사위원 박상우
- 대전일보 독자위원 김제선

#### 6) 주요 보도자료 및 논평·성명 (125)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제9차 정기총회 결과발표(2/11)
- 2004대전총선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2/11)
-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법안 본회의 상정 보류시킨 한나라당 비판 성명(2/17)
- 대전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의 졸속 출범에 대한 입장(2/18)
- 대전총선시민연대 독자적인 낙천낙선대상자 선정위해 총선출마예정자 소명자료 접수(2/18)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성명(2/20)
- 대전총선시민연대 대전지역 출마자 공천반대(철회) 명단 발표(2/24)
- 양민학살특별법 국회부결에 즈음한 한나라당 규탄 성명(3/2)
- 폭설 속 고속도로 대란, 손해배상소송 추진(3/9)
- 대전총선시민연대 공천부적격자 공천철회 및 개혁공천 촉구(3/9)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통령 탄핵추진 중단 촉구 성명(3/10)
-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대통령 탄핵안 발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발표(3/10)
- 대통령 탄핵절차의 중단을 촉구한다(3/10)
- 탄핵추진 중단촉구 대전·충남 6,254인 비상시국선언(3/11)
-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소추는 합법을 가장한 의회 쿠데타다(3/12)
- 경찰 불허 관계없이 촛불집회 예정대로 무저항 비폭력 원칙 밝혀(3/15)
-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을 위한 범국민대전행동 결성 기자회견(3/17)
- 민주개혁 완성을 위한 범국민대회 보도(3/20)

- 민주개혁 완성을 위한 범국민대회 집회신고 불허에 대한 우리의 입장(3/20)
- 대전시는 진정 첨단과학 도박도시로 거듭나려 하는가(3/26)
-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야3당 탄핵철회 및 대국민 사과 촉구(3/26)
- 3·27 민주수호 촛불문화제 탄핵무효, 수구부패정치 심판의 날 보도(3/27)
- 17대 총선후보자 이념 정향성 진단 결과발표 기자회견(3/29)
- 대전광역시, 부패방지 시범기관 협약 체결 환영 논평(3/30)
- 탄핵무효·부패정치 청산 대전지역 서명운동 전개 보도(4/1)
- 대전총선연대 낙선운동을 재개하며, 활동계획 발표(4/1)
- 고속철도 분권·분산시대를 향해 질주하라, 수도권집중 열차를 경계한다(4/1)
- 대전총선시민연대 국회의원 후보자 TV토론회(동구) 논평(4/5)
- 17대 국회의원선거 54대 정책공약 요구에 관한 후보자 기초조사 추진 보도(4/6)
- 대전총선시민연대 국회의원 후보자 TV토론회(중구) 논평(4/7)
-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전면적인 무료환승시스템 도입 촉구(4/7)
- 탄핵무효, 민주수호 촛불행사 관련, 경찰 소환에 따라 자진 출두하며(4/7)
- 415투표참여 대전시민문화제 잘 따져보고, 잘 찍어, 확 바꾸자!(4/9)
-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17대총선 후보자 기초의식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4/12)
- 대전총선시민연대 국회의원 후보자 TV토론회(서구) 논평(4/13)
- 탄핵무효범국민대선행동 대전지역 유권자 여러분께 드리는 투표참여 호소문(4/13)
- 대전총선연대 4.15 투표참여를 위한 유권자 호소문(4/13)
- 대전총선시민연대 국회의원 후보자 TV토론회(대덕구) 논평(4/14)
- 대전총선시민연대 총선결과 발표에 즈음하여(4/15)
- 4.15 총선결과에 대한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입장(4/15)
- 탄핵무효범국민행동 17대 국회의원선거 결과발표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4/15)
- 참다운 국민 참여 정치 시대를 열자(4/15)
- 경전철 반대 BRT 도입 시민대책위 창립 기자회견(4/20)
- 지구의 날 기념 BRT 체험행사 열려(4/22)
- 복지만두레 가능성과 한계 토론회 보도(4/27)
- 도박산업 재정비 특별법 제정 요청(5/5)
- 대전시는 의정회와 행정동우회의 예산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조례를 폐지하라(5/11)
-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5/14)
- 열린우리당의 6.5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선정에 즈음하여(5/14)
- 대전시민단체, BRT 전면도입지지 및 지식인 100인선언문 발표(5/18)
- 경전철 건설반대 BRT 시스템 전면도입을 지지하는 장애우 100인 선언(5/20)
- 주민참정제 토론회 보도(5/20)

- 시내버스 파업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운송사업 조합의 부실협상을 규탄한다(5/24)
- 196개인권시민사회단체, 17대국회 개원 즉시 민간인학살진상규명통합특별법 제정촉구(6/1)
- 대전광역시 주민투표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의견서 보도(6/3)
- 경전철 건설반대 BRT시스템 전면도입을 지지하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100인 선언(6/3)
- 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정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용과 방법 확정해야 한다(6/7)
- 무료환승 전면도입 없는 시내버스 요금인상 결사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6/9)
- 신행정수도 이전반대는 수도권지방 모두 죽이기다(6/14)
- 김선일씨의 석방을 호소하며(6/21)
- 행정수도이전계획은 급조된 공약이 아니다. 최상철 교수 반박(6/21)
- 김선일씨의 사망소식을 접하여 이라크 추가파병 전면백지화와 철군계획 수립 촉구(6/23)
- 행정수도이전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긴급 대토론회 보도(6/23)
- 지역공동체의 장, 마을어린이도서관의 의의와 과제 토론회 보도(6/24)
- 신행정수도 이전관련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논평(6/29)
- 제5차 산내학살 희생자 위령제 개최(7/4)
- 행정수도 후보지 결과발표에 즈음한 지방분권대전본부 논평(7/6)
- 대전경륜장 건설 찬성한 국회의원을 찾습니다 공개질의(7/7)
- 신행정수도건설 후보지선정 '천도' 시비 즉각 중단하라(7/7)
- 대전시는 대전경륜장 건설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라(7/9)
- 행정수도이전 헌법소원에 대한 지방분권국민운동 성명(7/12)
- 대전경륜장 반대 지식인 선언(7/13)
-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 항의피켓시위(7/14)
- 시의회 파행에 대한 우리의 입장(7/16)
-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대한 우리의 입장(7/21)
- 도시철도기본계획안 변경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7/23)
- 행정수도건설을 지지하며 합리적 논의를 기대한다 전국 교수선언(7/23)
- 대전천변 고속화도로 건설 계획에 대한 우리의 입장(7/28)
-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수도,공공기관,기업이전 반대 반박 성명(8/3)
- 신행정수도 관련 한나라당 공개질의서 전달에 대한 우리의 입장(8/5)
- (구)대전백화점 제2 장외경마장 관련 동구청장 간담회 결과 보도(8/10)
- 대전시의 시금고 공개경쟁을 환영한다(8/10)
- 신행정수도 최종후보지 확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8/11)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건설 성공기원 범국민물결대회 보도(8/18)
- 대전시장의 경륜장 허가를 위한 문화관광부 방문에 즈음한 논평(8/24)
- 나눔으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애장품 경매전 보도(8/25)

- 수도권규제완화책 반박성명 수도권 살리기인가(9/1)
- 조선일보 9월 1일자 시민단체 정부지원금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9/2)
- 시의회 산건위의 버스활성화 관련 추경예산 전액 삭감에 즈음한 논평(9/3)
- 외국인전용카지노장 신규허가 계획 철회하라(9/3)
- 대전시민단체, 차별철폐 주간 선포하고 캠페인 전개(9/11)
- 대전시의회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9/13)
- 전국 17개 시민단체 전방위 국회모니터링 위해 네티즌 의정감시단 구성 착수(9/13)
- 갈등조정 능력향상을 위한 충청권 사회활동가 워크샵 개최 보도(9/16)
- 수도이전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출범 규탄성명(9/17)
- 시의회는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라. 사직서 반려는 끝이 아니라 진상규명의 출발(9/22)
- 한나라당 행정수도이전 반대당론에 대한 규탄성명(9/23)
- 정부의 기초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9/30)
- 황진산 시의회의장의 친인척 비서실장 채용요구에 대한 우리의 입장(9/30)
-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공급 민간위탁선정방식 재검토촉구(10/14)
-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판결에 대한 지방분권본부 입장(10/21)
-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판결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10/21)
- 한나라당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10/22)
-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에 즈음한 지방분권국민운동 비상대책회의 결과 보도(10/22)
- 한나라당 과학기술행정도시 입장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10/25)
-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한 토론회 보도(10/27)
- 신행정수도건설 사수 제1차 범국민대회 보도(10/28)
- 16대 총선 한나라당 충청권 출마자 간담회 결과에 부쳐(11/1)
- 신행정수도건설 비상시국회의 향후 투쟁방향 발표 기자회견(11/2)
- 현재 행정수도 위헌판결과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전국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11/3)
-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을 위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지도부 면담 결과 발표(11/4)
- 신행정수도건설 위헌판결수용은 지방살리기 정책의 포기 전국본부 성명(11/17)
-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을 위한 촛불문화제 보도(11/22)
- 신행정수도시수 및 현재탄핵청원 100만이 서명운동 보도(11/23)
- 참여정부는 대전공약인 사회복지전담인력 충원 약속을 지켜라(11/23)
- 고질적인 파벌싸움과 자리다툼으로 인한 대전시의회의 파행사태를 규탄하며(11/23)
- 올바른 교육감 선출을 위한 대전연대 결성 기자회견(11/25)
-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을 부인하는 강동석 건교부장관을 해임하라(11/26)
- 강동석 건교부장관 신행정수도 망발관련 비상시국회의 규탄성명(11/26)
- 신행정수도지속추진범대전시민연대 출범식 보도(12/1)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주민소송제 개악을 중단하라(12/2)
- 우리와 다음세대를 위한 아름다운 기부와 밤 보도(12/3)
- 올바른 교육감 선출을 위한 대전연대 정책요구 사항 발표(12/13)
- 균형발전을 위한 범국민연합 결성제안 기자회견(12/21)
- 정치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발표에 즈음한 긴급 공동기자회견(12/29)

## 7) 활동일지

### • 1 월

- 1 참산 신년산행(식장산)
- 5 늘푸른축구단  
대전의제21 총준위
- 6 사회복지위원회 자활사업 사업비 지원 서면결의
- 8 대전의제21 총회준비 워크샵  
침야자치지역운동연대 긴급 집행위원회 -총선대책(대전)  
여성환경포럼 운영위  
건설노조 무력화저지 공대위 대표자회의
- 9 정개련 상임운영위원회  
처장단회의  
TJB대전방송 시사토론(금홍섭 국장)  
청년포럼 내부워크샵
- 11 우금치 신년회
- 12 늘푸른축구단 정기모임  
대전의제21 총준위
- 13 제5차 집행위원회  
우금치 정세특강(김제선 처장)
- 14 복지포럼 총회준비위원회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신년하례회
- 15 정책위원회 정기총회  
대전연대회의 실무자 워크샵  
장애인야간학교 이전 개소식  
지방분권국민운동 전략기획회의(동대구, 박상우 국장)  
문익환목사 추모제 준비회의  
참여자치시민상 추천 공고
- 16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정기총회

- 기록문화포럼 정기총회
- 전국 총선연대기구 결성 전국 간담회(서울)
- 17 문익환목사 추모제 및 민족민주열사 추모제
- 18 늘푸른축구모임
- 19 정기총회 안전공고 및 인터넷 투표
- 25 사무처 의장단 새배
  - 등산모임 시산재(계룡산)
- 26 대전연대 운영위원회
  - 2004총선시민연대 결성준비 간담회
  - 복지포럼 2004 사업구상회의
  - 대전연대회의 목원대 상호협약 조인
- 27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정기총회
  - 민언련 정기총회
  - 2004업무구상 실무자 내부워크샵
  - 서구포럼 정레이사회
- 28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업 및 회계 감사
- 29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총회준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 지방분권선포식 및 국정과제회의(정부청사, 김제선 처장)
  - 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 대전여민회 정기총회
  - 여성단체 신년하례회
  - 정책위 1차 발제모임
- 30 대중교통포럼
  - 2004대전총선시민연대 준비회의

## • 2 월

- 1 늘푸른축구단 정기모임
- 2 서구포럼 이사회
  - 외노센터 정기총회
- 3 7차 집행위원회 및 총회안전 토론회
  - 2004총선시민연대 대표자회의 및 발족 기자회견(서울)
- 4 유권자위원회 낙천대상자 리스트 점검회의
- 5 복지포럼 총회
  - 1차 낙천대상자 발표 기자회견(서울)

- 총선거획팀 전략회의
- 6 생명의숲 정기총회
  - 대전총선시민연대 결성 2차 준비모임
- 7 KBS심야토론(서울, 김제선 처장)
- 9 총선연대 2차 유권자위원회(서울)
  - 총선거획팀 전략회의
  - 정개련 운영위원회
- 10 2차 낙천대상자 발표 기자회견(서울)
- 11 대전총선시민연대 결성 대표자회의 및 발족 기자회견
  - 대전의제21 상임운영위
  - 정책위원회
- 12 제9차 정기총회
  - 대전대 지역협력원 출판기념회, 정책위원회
- 13 부패방지위원회, 반부패 NGO협력 워크샵
  - 기록문화포럼 운영위원회
  - 실업극복시민연대 정기총회
  - ~15일, 2004한국사회포럼(수원)
- 16 경실련 정기총회
  - 정책위
- 17 지방분권국민운동 전국 보고대회 및 정책워크샵
  - 버스전용차로 견학
  - CBS, CMB, 대전일보 후보자초청토론회 준비모임
- 18 총선보도 모색 전국 순회토론회 및 실무워크샵
  - 지역혁신협의회 창립총회
  - 총선연대 전국 집행위
  - 상공회의소 정기총회
- 19 YMCA 정기총회
- 20 녹색연합 정기총회
  - 대전총선연대 집행위
  - 대전연대회의 총회준비위
  - 대전의제21추진협 상임위단체 간담회
  - 의장단-처장단 연석회의
  - 교통규제심의위원회(금홍섭 국장)
- 21 모두사랑장애인가간학교 정기총회

- 경선감시 활동 -열린우리당 대덕구
- 22 늘푸른축구단 정기모임
- 23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 특강(김제선 처장)  
충선시민연대 법률검토회의  
대전연대회의 총준위
- 24 대전충선시민연대 집행위원회 및 대표자회의  
대전충선시민연대 낙천대상자 발표 기자회견  
서구의회 시민단체 - 의원합동 의정연구회 제안모임  
충선기획팀 평가회 및 뒷풀이
- 25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 특강(김제선 처장)  
여성환경포럼 정기총회
- 26 대전연대회의 정기총회  
대전광역시 BRT포럼  
의회사무처장 간담회  
유성민주자치연합 후원회밤  
경선감시활동 - 민주당 중구  
KBS충청패트를 특집방송출연 -돈선거와 유권자의식(이충재 총장)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창립대회
- 27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동계수련회 및 대표자회의(여수, ~28일)  
경선감시활동 - 열린우리당 동구
- 28 전국연대 정기총회  
경선감시활동 - 열린우리당 서구를  
충남대학교 사회봉사단 OT(박상우 국장)
- 29 늘푸른축구단 정기모임

### • 3 월

- 1 추명구 회원, 김양기 회원, 정찬명 회원 결혼
- 2 지방분권국민운동 전략기획회의(대구)  
충선기획팀 전략회의
- 3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김제선 처장)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총회준비위원회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운영위원회  
대전대 특강(김제선 처장)
- 4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정기총회



- 내일신문 창간기념식  
KBS충청패트럴 특집방송 출연 - 사람이 힘이다(김용분 집행위원)  
충선시민연대 기획팀 전략회의
- 7 지역주의 퇴출을 위한 영호남 충청인 결의대회(화개장터)
- 8 충선시민연대 집행위원회
- 9 제9기 1차 집행위원회
- 10 전국충선연대 집행위  
BRT포럼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전략모색포럼  
대학생 충선연대 출범
- 11 대전충선연대 기획팀 회의  
침례신학대 충선연대 발족  
대통령탄핵추진 중단촉구 대전충남 6,254명 비상시국선언
- 12 성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역운동특강(김제선 사무처장)  
대통령탄핵소추 가결에 따른 대전지역 비상시국회의  
대통령탄핵무효 촛불집회
- 13 대통령탄핵무효 민주수호 전국비상시국회의  
강도묵 회원 상근자 간담  
탄핵무효 민주수호 촛불집회
- 14 탄핵무효 민주수호 촛불집회
- 15 비상시국회의 실무회의  
탄핵무효 민주수호 촛불집회
- 16 충선시민연대 집행위  
대전연대회의 운영위  
지방분권국민운동 전국 운영협의회(대전)  
탄핵무효 민주수호 촛불집회  
2차 비상시국회의
- 17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회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국민행동 조직결성회의  
전국충선연대 집행위  
탄핵무효대전행동 발족 기자회견  
(공동대표/ 송인준 의장, 자문변호인단장/ 이현주 집행위원장,  
공동집행위원장/ 김제선 처장, 공동상황실장/ 박상우 국장 파견)  
탄핵무효 민주수호 촛불집회
- 18 주부모임

-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조찬 운영위
- 탄핵무효국민행동 비상집행위원회
- 탄핵무효 민주수호 촛불집회
- 외노센터 운영위
- 대안정책포럼
- 19 탄핵무효 일일호프
- 탄핵무효 민주수호 촛불집회
- 정책위원회
- 대전연대회의 재감사 실시
- 20 탄핵무효 대전시민 촛불문화제
- 전세계반전행동의 날 행사
- 전국연대회의 운영위 및 탄핵 국민회의
- 22 탄핵무효대전행동 상황실 회의
- 탄핵무효대전행동 집행위원장단 및 소환대상자 연석회의
- 23 대전시 시내버스 배차방법 회의
- 중구청 민간단체 보조금 심사위원회(김제선 처장)
- 자치현장 3주년 기념식
- 여성 유권자교육 -어떤 후보를 선택할것인가 강의(박상우 국장)
- 24 전국총선연대 집행위(서울)
- BRT전면도입을 위한 공동대책위 결성 준비회의
- 양심수후원회 총회
-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회
- 25 탄핵무효국민행동 집행위원회
- 총선연대 집행위원회
- 대전의제21 상임운영위원회
- 탄핵철회촉구 기자회견 및 야 3당 항의방문
- 26 정책위, 후보자 이념성 정향성 분석 준비회의
- TJB대전방송 총선쟁점 토론회 출연(김제선 처장)
- 희망진료소 정기총회
- 27 탄핵무효민주수호 2차 대전시민한마당
- 29 대전시 대중교통포럼(김제선 처장)
- 정책위 17대 총선후보자 이념 정향성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 대덕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박상우 국장)
- 기록문화포럼

- 30 제주4.3유족, 동구청 항의방문  
대전시 3대하천살리기 간담회(금홍섭 패널)  
대전시 반부패시범도시 협약체결 기념 부방위원장 초청 간담회(김제선 처장)  
대전시 반부패시범도시 협약체결 환영논평 발표  
서구의회 의원 분권연구회 모임
- 31 지방분권국민운동 전국대표자회의 및 정기총회(부산)  
BRT전면도입을 위한 공대위 준비회의  
전국총선연대 집행위

#### • 4 월

- 1 BRT전면도입 공대위 결성준비회의  
탄핵무효국민행동 집행위원회 및 대표자회의  
김수현 간사 입사
- 2 충남도 비서실장 면담
- 3 지방분권 요구공약 질의서 발송
- 5 등산모임 정기산행-진안구봉산
- 6 전국총선연대 낙선대상자 발표  
탄핵무효국민행동 상황실회의  
처장단회의
- 17대총선 54대 정책요구 후보자 질의서 발송  
한국병원, 시민사회단체 상근자 무료진료의향 관련 협약체결 간담
- 7 탄핵무효 관련 집시법위반 소환대상자 공동출두 기자회견
- 8 탄핵무효국민행동 집행위
- 9 대전의제21 상임운영위원회
- 10 유권자한마당 4.15투표참여 대전시민문화제
- 12 대전제일교회 노인대학 선거 특강(김제선 처장)  
17대 총선후보자 지방분권 기초의식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BRT전면도입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결성준비회의
- 13 집행위원회  
17대 총선 54대 정책공약 요구 후보자 기초조사 결과 발표기자회견  
유권자 투표참여 기자회견(서울)
- 14 대전대 자원봉사원 BRT강의(금홍섭)  
장재완 회원 면회
- 16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수도계량기 보호통 점검모임

- 대전MBC 특집생방송 선거평가 토론회(김제선 처장)
- 17 국민승리 탄핵철회 촛불한마당
  - 19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운영위원회
  - 20 대전연대회의 운영위원회  
BRT전면도입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결성 기자회견  
송인준 의장, 탄핵무효 상황실 실무자 격려간담  
서구포럼  
대전광역시 공직협 회장 선거
  - 21 전국연대회의 운영위원회(서울)  
문정현신부 평화유랑단 대전방문  
지역혁신 기획조정분과회의(대구)  
여성환경포럼 교육(금홍섭 국장)
  - 22 지구의날 기념 BRT버스 시승행사(~24일)  
전교조 통일위원회 창립식, 문정현신부 강의
  - 23 실무자 연찬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집행위원회(서울)  
총선평가 토론회(대전KBS)
  - 24 주부모임 4월 정례모임
  - 26 정책위, 복지만두레 토론회 준비모임
  - 27 대전광역시 복지만두레 토론회  
생명의숲 5주년 기념식
  - 28 창립 9주년 기념 및 사무실 이전개소식  
여성위원회  
야간집회 금지처분취소 행정소송 심리
  - 29 탄핵무효국민행동 평가워크숍  
사회단체보조금네트워크(서울)
  - 30 복지포럼

## • 5 월

- 2 늘푸른 축구모임
- 3 경륜장 대책위원회  
파병반대 1만인 시국선언 기자회견  
5.18항쟁 24주년 기념행사 준비회의  
도박장반대대책위

- 4 금강보전네트워크 대표자회의  
서구의회 의원-분권연구회 모임
- 5 어린이날 기념 회원가족 한마당
- 6 BRT대책위 운영위원회  
정치개혁시민연대 해단식
- 7 지역복지네트워크(~8일)  
우금치 쪽빛황혼 공연(~8일)
- 8 자주통일비 1주년 기념식(금산)
- 10 기록문화포럼 창립2주년 평가토론회(금홍섭 국장)  
도박장 전국네트워크 긴급모임  
BRT 실무자 모임  
복지재정 토론회(서울)
- 11 집행위원회
- 12 문광부 영상등급심의위원회 주관 토론회(금홍섭 국장)  
양심수후원회 후원먹거리 장터(~14일)  
전국총선연대 해단식
- 13 충남공무원 교육원 특강(김제선 처장)  
여성복지국장 간담회  
활동가협의회 PC능력향상을 위한 워크샵  
사회단체보조금 현황파악 조사발표 토론회(서울)  
어린이도서관 준비모임
- 14 복지포럼 5월 집행위원회  
정책위원회 5월 정례모임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간담회  
외노센터 운영위원회  
교통규제심의위원회(금홍섭 국장)
- 15 참산 산행(설악산)  
대학생 시민운동가프로그램 워크샵
- 16 늘푸른축구단
- 17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운영위원회  
시내버스민관공동대책위원회(김제선 처장)  
5.18 24주년 기념식
- 18 대전연대 운영위원회  
홍선기 전시장 - 시민단체 대담토론회

- BRT전면도입을 위한 지식인선언
- 19 야간집회 행정소송 선고  
여성위원회  
이라크파병반대대전행동 집행위
- 20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주민참정제도 도입관련 토론회  
주부모임  
민언련 창립 4주년 기념식  
BRT전면도입을 위한 장애우 지지선언  
17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시민사회포럼 간담회(서울)
- 21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집행위(청주)  
지방분권국민운동 전국운영협의회(춘천, 22일)  
대전대 사회자본 세미나  
대전지역 국회의원 당선자와의 간담회  
풀뿌리지역공모사업 운영위(서울)
- 22 염대형 회원 결혼식  
민주화계승사업회 6월항쟁 정신계승사업 추진 준비모임
- 23 늘푸른축구단
- 24 대전광역시 여성위원회(김제선 처장)  
시내버스 파업중재 민관공동대책위원회  
시내버스 파업관련 논평발표  
민교협 총회
- 25 대전연대 활동가 단합대회  
BRT대책위 운영위원회  
6월항쟁 기념사업 준비회의  
전국연대 운영위원회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기자간담회
- 26 대전기독교방송 도박장 관련 출연(금홍섭 국장)
- 27 보행권네트워크 워크샵(진주)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회  
모두사랑 이사회  
전국연대 풀뿌리시민운동 사례모집 운영위(서울)
- 28 대전청년포럼 토론회  
양현수 전공동대표의 너 조이스 양 피아노 공연
- 29 대전민예총 창립총회 및 문화시민 한마당

사무처 시민운동 세미나

30 늘푸른 축구단

외노센터 무료진료

31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 특강(김제선 처장)

6.10기념사업 기획단회의

• 6 월

1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 특강(김제선 처장)

2 대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특강(금홍섭 국장)

대전TJB 수요토론 출연(금홍섭 국장)

3 대전YMCA 후원의 밤

BRT전면도입을 위한 운수종사자 지지선언

여성환경포럼

지방분권국민운동 충청권협의회 연석회의

4 대전의제21 여성분과

대구참여연대 버스개혁토론회(대구, 금홍섭 국장)

디트뉴스24 사무실 이전개소식

5 환경의날 기념식

파병철회 대전역 집회

시내버스 요금조정위원회

환경의날 버드내 축제

6 등산모임 '참산' 지리산 등반

늘푸른축구단 정례모임

김울현 회원 결혼식

친일반민족행위자 김창룡, 서춘 묘 이장축구집회

7 대전의제21 상임운영위원회

8 상임집행위원회

시내버스 요금인상 관련 긴급대책모임

사회단체보조금 전국네트워크 기자회견

민간인학살통합특별법 공청회(국회)

9 시내버스 요금인상 결사반대 기자회견

시내버스개선민관공대위

대전지역혁신협의회 워크샵

10 도박장네트워크 대표자회의

- 활동가협의회 워크숍  
초록정치연대 창립식
- 11 교육개혁방안 대학입시개혁 공교육 정상화 토론회  
과학센터 추진위  
 시내버스준공영제 관련 대전MBC 토론회(금홍섭 국장)
- 12 6월항쟁 정신계승 시민한마당  
산내대책회의 위령제 준비모임  
지방분권국민운동 전략기획회의 -신행정수도 논란 대책(청주)  
BRT시스템 도입 관련 김경철 박사 초청강연회
- 13 회원 만남의 날 -금산지역 기행  
늘푸른축구모임
- 14 시내버스 개선대책관련 간담회  
어린이도서관 추진위 전체회의  
신행정수도 반대 논란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발표
- 15 여수시민협 강의(김제선 처장)  
대전연대회의 운영위
- 16 10주년 기념사업위 기획토론회  
CMB 구청장 당선자 초청토론회(금홍섭 국장)
- 17 사학교육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송인준 의장)  
민언련 운영위원회
- 18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광주)  
연대회의, 민간단체보조금 제도 개선 집담회  
장기수송환추진위 3차 준비위  
사학교육법 개정촉구 거리캠페인  
시내버스 요금인상 반대 거리캠페인, 1인시위 돌입
- 21 김선일 무사귀환 및 파병철회 촉구성명 발표  
김선일 무사귀환 파병철회 1인 촛불시위  
신행정수도 관련 지방분권운동 공동 논평 발표  
풀뿌리시민운동 공모사업 심사위, 운영위 연석회의(서울)
- 22 시내버스개선 민관공대위  
처장단 회의
- 23 여성위원회  
김선일씨 사망소식에 접하며 논평 발표  
전국연대회의 운영위(서울)



비상시국회의, 분향소 설치

24 어린이도서관 토론회

신행정수도 언론보도행태 긴급토론회(서울)

시내버스 관련 대전광역시장 면담

파병반대대전시민행동 집행위 및 시국선언 기자회견

기록문화포럼 운영위

25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내부워크샵

제2회 전국 회원사업활동가 워크샵(천안, ~26일)

주부교실 교통모니터단 강의(금홍섭 국장, 최정우 정책위원)

행정학회 토론회 (천안, 김제선 처장)

양심수후원회 총선이후 정치지형 교양강좌

여성환경포럼 운영위

26 김선일 추모 및 파병반대 시민대회

27 늘푸른축구단, 녹색연합 축구팀 친선경기

28 파병반대대전행동 2차 집행위원회

29 장기수송환추진위 대표자회의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행정수도이전관련 논평 발표

30 부패방지 세미나(김제선 처장)

계룡시 주민모임 자치학교 강의(금홍섭 국장)

대전경실련 정책토론회(금홍섭 국장)

평화통일포럼 창립총회

고 김선일 추모 대전역 분향소 설치 및 합동조문식

• 7 월

1 시민과학센터 창립총회

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 준비위

산내학살 희생자 위령제 준비모임

파병반대전행동 집행위

2 복식부기 공동학습회

4 제5차 산내학살 희생자 위령제

5 파병반대 캠페인

연대회의 주관 파병반대 촛불문화제

6 리베라호텔 공대위 준비모임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범국민위 전국 유족협의회(대전)

- 행정수도이전 후보지 발표에 대한 논평 발표
- 7 대전시 여성정책위 토론회-양성평등지수  
대전시 시내버스준공영제 실무팀 모임  
대전경륜장 관련 경륜장 찬성한 국회의원을 찾습니다 논평 발표  
신행정수도 이전, 천도 논란 중단 촉구 논평 발표
- 8 BRT대책위 긴급모임
- 9 리베라호텔 공대위 창립 기자회견  
대전경륜장 중단 촉구 논평 발표하  
정책위원회 전략워크샵(~10일)
- 12 신행정수도 전국순회 공청회(대전, 박상우 국장)  
제2차 장기수송환추진위 기자회견 및 결성식
- 13 집행위원회  
교통국장 면담  
대전경륜장 반대 지식인 선언 보도
- 14 대전시 도시철도정비계획안 변경 공청회
- 15 참여자치연대 주부모임  
윤창녕열사 5주기 추모제 및 충청노련 임시총회  
DTV 관련 대전MBC노조지부장 간담회  
디트뉴스 토론회(김제선 처장)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대전충남 발전전략 토론회  
원자력연구소 공대위  
외노센터 임원회
- 16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대구)  
대전의제21 상임운영위원회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긴급전략회의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간담회(김제선 처장, 박상우 국장)
- 18 늘푸른축구단 정기모임
- 19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비상운영위 및 국고보조금 지방이양 워크샵  
충남공무원교육원 교육(김제선 처장)  
어린이도서관 추진위원회  
준공영제 용역제안서 평가(금홍섭 국장)  
시내버스요금인상반대 반대 성명서 발표
- 20 대전연대 운영위원회  
민언련 운영위원회

- 지방분권국민운동 긴급 전국운영협의회(대전)
- 21 충남공무원교육원 교육(김제선 처장)
- 여성위원회
- TJB대전방송 수요토론 출연(김제선 처장)
- 신행정수도 건설지지 수도권 활동가 및 종교계 인사 1000인 지지선언
- 전쟁반대 시국기도회
- 원자력연구소 대책위 준비모임
- 물가대책위
- 22 연대회의 상임운영위원회(서울)
- 구논회 국회의원과과의 간담회
- 리베라호텔 폐업철회 정상화촉구 기자회견
- 신행정수도 건설지지 전국교수 1200인 지지선언
- 23 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금홍섭 국장)
- 지방분권국민운동, 심대평 충청도지사와의 간담회
- 지방분권국민운동 긴급운영협의회
- 25 늘푸른축구단 정기모임
- 26 경실련 조성근 공동대표 초청간담회
- 원자력연구소 방사능 누출 대책위 결성 기자회견
- 연대회의 행정수도 논의모임 참석
-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염홍철 대전광역시장 면담
- 통일축전 준비위 기획단 1차모임
- 연대회의 파병철회 집회
- 어린이도서관 추진위
- 27 동구포럼 토론회(김제선 처장)
- 처장단회의
- 신행정수도 실무대책회의
- 신행정수도 건설 언론보도행태에 대한 긴급토론회(청주)
- 정전협정체결 51주년 파병반대 기자회견
- 28 재경부 참여예산제 전국순회 대전설명회
-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심대평 지사 면담
- 신행정수도 건설지지 영남권 시민단체 지지선언
- 29 청주시내버스 정책워크샵(금홍섭 국장)
- 신행정수도 실무대책회의
-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김주일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간담

- 통일축전 대표자회의
- 조선일보 친일진상규명 1천만 거리서명전
- 파병반대 전국도보순례단 대전행진
-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충청하나은행 본부장 간담
- 장기수송환추진위
- 30 한꿈이카드 위원회(김제선 처장)
-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간담회
- 한국시민교육원 활동가워크숍 협의
- 파병반대대전행동 공동집행위원장단 회의
- 경전철 반대 BRT전면도입 시민대책위 운영위
- 통일축전 집행위
- 31 파병반대 대전시민 축구대회

## • 8 월

- 1 고 강구철 님 추모제  
늘푸른축구단 정기모임
- 2 금홍섭 국장 휴가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계룡건설 사장 간담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한남대 총장 간담  
지방분권국민운동 충청권협의회(대전)  
연대회의 파병반대 캠페인
- 3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대전시개발위원회 회장 간담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배재대 총장 면담  
신행정수도 실무대책회의  
경기도의회의 공공기관이전 반대에 대한 지방분권국민운동 반박성명  
원자력연구소 대책위
- 4 서울시민단체 신행정수도 관련 내부워크숍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충남대 총장 간담  
원자력연구소 항의방문
- 5 금강보전네트워크 운영위  
행정수도이전 실무추진팀 내부워크숍
- 6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가기산 서구청장 간담
- 7 대전충남 통일축전  
사무처 상근활동가, 의장단, 협동처장단 단합대회(진안)

- 8 늘푸른축구단 정기모임
- 9 친일 김창룡 묘 이장축구 대전시민대회  
     사행산업규제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집행위(서울)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금성백조 부회장 간담
- 10 제3차 상임집행위원회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대전대 총장 간담  
     마권장외발매소관련 동구청장 면담
- 11 대덕대 학장 간담  
     지방분권국민운동 긴급회의(부산)
- 12 5.18재단 아카데미 국내연수(박상우 국장, ~15일)
- 13 주민운동을 위한 공부모임
- 14 기록문화포럼 워크숍
- 16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운영위원회  
     어린이도서관 추진위원회  
     편집위원회
- 17 대전연대 운영위원회  
     한남대 민동 총회
- 18 CMB충청방송 제2경마장 관련 생방송 토론회(금홍섭 국장)  
     대전광역시 지역언론지원 심사위원회(김제선 처장)  
     언론지원 심사위원회  
     여성위원회  
     구청장협의회 간담
- 19 신행정수도 성공기원 범국민물결대회
- 20 장묘문화 개선 토론회(김제선 처장)  
     시정참여운동 어떻게 하나 특강(용인, 금홍섭 국장)  
     KBS 제2경마장 관련 충청패트를 출연(금홍섭 국장)  
     백경원 간사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대전시 교통국 예산편성을 위한 간담회  
     우리쌀지키기 식량주권수호 대전충남선언 기자회견
- 21 사무처 하반기사업 업무구상 워크숍
- 22 늘푸른축구단 정례모임  
     아름다운 가게 간담
- 23 서구포럼 이사회
- 24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하계 워크숍(지리산, 26일)

-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간담회
- 25 박상우 국장 5.18재단아카데미 해외연수(인도, ~9월 1일)  
여성위원회  
통일축전 대표자회의
- 26 주택관리사협 강의(김제선 처장)
- 27 어린이도서관추진위원회 부천어린이도서관 탐방  
대전광역시 예산편성 토론회  
차별없는 세상만들기 대전걷기대행진 준비모임
- 29 늘푸른축구단 정기모임
- 30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간담회
- 31 차별없는 세상만들기 대전걷기대행진 실무회의  
R&D특구 토론회 참석(김제선 처장)

#### • 9 월

- 1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긴급운영위
- 2 어린이도서관 추진위원회 문고실태조사 평가회  
처장단회의  
장기수송환 4주년 기념식
- 3 신행정수도기획단 민간단체 간담회  
아름다운가게 대전점 개장식  
차별철폐대행진 대표자회의  
조선일보 NGO왜곡보도 소송 긴급모임(서울)
- 4 충남대 사회봉사단 교육(박상우 국장)
- 5 김두현 회원 결혼  
보문교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환경운동연합 소개(박상우 국장)  
늘푸른축구단 정기모임  
참산모임
- 6 2차 편집위원회  
조선일보 왜곡보도 관련 손배소추진을 위한 긴급모임(서울)  
홈페이지 실무자 교육(백경원, 이억수 간사 ~18일)  
식량주권수호 기자회견
- 7 균형발전위 주관 워크숍(서울, 김제선 처장 ~8일)  
차별철폐 실무팀 회의
- 8 FTA와 한국사회 그리고 사회운동의 과제 학습모임

- 국가보안법폐지 대전시민연대 집행책임자 회의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집행위원회(서울)
- 전국연대 운영위원회(서울)
- 국회의정감시 모니터사업 실무책임자 교육(서울)
- 조선일보 왜곡보도 총선연대 입장발표 기자회견 및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면담
- 9 차별없는세상만들기 대전걷기대회 행사주간선포 및 기자회견
- 대전문화연대 창립대회
- 참여연대 10주년 토론회 참석(김제선 처장)
- YMCA 현장실습생 단체탐방
- 10 정진향의원 시민단체 간담회
- R&D특구 지역토론회
- 11 쌀개방반대 대전충남대회
- 13 부패무능 의회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국회의정감시 돌입 보도자료 발표
- 차별없는 세상만들기 장애인의날 거리캠페인
- 14 제4차 집행위원회
- 전국연대회의의 6차 상임집행위원회(서울)
- 교육부 교육입시개혁 토론회(김제선 처장)
- 15 비정규직 차별철폐의 날, 초청강연회
- 국가보안법 폐지연대 대표자회의, 발족 기자회견
- 16 여성 차별철폐의 날, 거리캠페인
- 여수시민협 시민토론회 주제발표(여수, 금홍섭 국장)
- 환경연합 창립10주년 기념행사
- 목원대 총장 면담, 행정수도 관련
- 갈등조정 능력향상을 위한 충청권 활동가워크숍(~18일, 백경원 간사)
- 17 이주노동자,빈곤,실업 차별철폐의 날, 거리캠페인
- 여성위원회
- 복지포럼
- 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금홍섭 국장)
- 18 차별철폐 걷기대행진 및 대전시민문화제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조직강화 모색을 위한 모임(참여광장)
- 20 지방분권대전본부 운영위(참여광장)
- 사회단체보조금네트워크, 관변단체지원법폐지 토론회(국회 대회의실)
- 어린이도서관추진위(참여광장)

- 범국민유족협의회 전국모임(참여광장)
- 21 대전연대회의 운영위(민언련)  
대덕구청장 면담, 행정수도관련  
자치경찰제 관련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성명 발표
- 22 대덕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박상우 국장)  
한밭대 총장 면담, 행정수도 관련  
R&D특구 공청회(엑스포국제회의장)  
대전시의회 조신행사퇴반려 관련 논평 발표
- 23 회원 애장품경매전 & 벼룩시장(충청하나은행)  
정책위원회(충청하나은행)  
대전MBC 창사 40주년 기념행사  
풀뿌리지역시민운동공모사업 심사위(서울연대회의)
- 29 사무처활동가 의장단 추석명절인사

#### • 10 월

- 1 국가균형위 후속모임(참여광장)
- 2 민명수 공동의장 이사
- 3 녹색연합 박현주 결혼식(충북제천)  
등산모임 참산 정기산행(만복대)
- 4 국회 의정모니터 사이트 가동  
대전시 2005업무구상회의
- 5 여연 조직위, 지방분권토론회(전주, 김제선)
- 6 지방분권국민운동 전국 긴급연석회의(대전, 참여광장)  
대전시 여성정책위원회
- 7 제4회 전국 시민운동가대회(~9일, 제주도, 김수현, 이억수)  
협동처장단, 인사위원회 연석회의(자치마당)
- 8 정책위 연구소설립추진소위원회 조찬모임(자치마당)
- 10 금홍섭 국장 이사
- 11 대전시장 면담, 대전의제21 예산관련  
신명식 자문위원 병원이전 개업식
- 12 지방분권 관련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모임(서울)  
편집위원회(자치마당)  
제4차 상임집행위원회(참여광장)  
동향공유모임



- 13 CMB토론회-지방의회 파행(박상우)
- 15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집행위(마창진참여자치연대)  
여성위(자치마당)  
정책위 전체모임(목원대)
- 18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운영위(참여광장)  
어린이도서관추진위
- 19 대전연대회의 운영위(환경운동연합)  
대전의제21 상임운영위
- 20 국가보안법 피해자 기자회견(대전지검)  
동향공유모임
- 21 국가보안법 폐지 여성인선언 기자회견(으능정이)  
대덕구모범아파트 평가  
현재 위헌판결 규탄 피켓팅 및 긴급 기자회견(참여광장)
- 22 국가보안법 폐지 대전시민문화제(대전역)  
행정수도 위헌결정 환영 한나라당 대전시당 항의방문  
지방분권국민운동 전국 비상회의(대전, 참여광장)  
대전연대회의 긴급 운영위(참여광장)
- 23 충청권 행정수도 대응 민간단체협의회 구성 회의(참여광장)  
등산모임 이재화 대장 쾌유기원 108배 산행(계룡산)
- 24 제5회 계룡산 산중음악회(갑사)  
국가보안법 폐지 자전거대행진(정부청사~대전역)
- 25 연구소 설립 워크샵(참여광장)  
헌법재판소 규탄 항의집회(서울)
- 26 자원봉사 평가회  
처장단회의(사무처장실)  
범충청권민간단체 비상시국회의 결성 기자회견(청주 예술의전당)  
충남도지사 초청 민간단체 간담회  
TJB토론회-신행정수도 위헌결정(김제선)
- 27 지역혁신 토론회(목원대 창업보육센터)  
동향공유모임  
행수사수 현재규탄 공주집회(공주시)  
열린우리당 초청 사회단체 간담회
- 28 신행정수도 사수 및 국가균형발전 촉구 제1차 범국민대회(대전역)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관련 토론회(서울)

- 29 대전여민회 후원의밤(시민회관 소강당)
- 국가보안법 폐지 시민영상제(으능정이)
- 부패방지 간담회(대전시청)
- 행수사수 헌재규탄 연기집회(연기군)
- 30 국가보안법 폐지연대 한나라당 항의집회

## • 11 월

- 1 비상시국회의 상황실회의(자치마당)
- 2 비상시국회의 향후 투쟁방향 발표 기자회견(둔산웨딩홀)
- 3 헌재 위헌결정 전국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서울)
- 동향공유모임
- 환경비상시국회의 기자회견(서울)
- 행수사수 헌재규탄 천안집회(천안 아라리오광장)
- 4 도박장반대전국네트워크 기자회견(서울 느티나무카페)
- 5 분분모임
- 정책위 연구소 설립 전체모임(자치마당)
- 조선동아 불매운동본부 발대식(으능정이)
- 비상시국회의 행정수도 지속추진 촉구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 면담(서울)
- 비상시국회의 행정수도 지속추진 촉구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 면담(서울)
- 자민련 행정수도 사수대회(대전역)
- 6 동향공유모임 워크샵
- 행수사수 위헌규탄 조선동아불매 촛불집회(동방마트)
- 7 등산모임 산행(오서산)
- 8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 사회단체 간담회(대전 참여광장)
- 대전공무원교육원 강의(송인준 의장)
- 헌재탄핵 100만인 청원 서명운동
- 9 행수사수 위헌규탄 충북도민대회(청주 중앙공원)
- 열린우리당 행수사수 투쟁대회(대전 유성신웨딩홀)
- 대전연대 긴급운영위(생명의숲)
- 제5차 집행위(참여광장)
- 10 교통규제심의위원회(금홍섭)
- 행수사수 위헌규탄 서산시민대회(충남 서산)
- 11 참여정치위원회 -신행정수도 토론회(조연상)
- 지역혁신 박람회(부산, 13일)

- 12 지역혁신워크샵 및 지방분권국민운동 전국운영협의회(부산)  
정책위 모임(예술마당)  
여성위원회(자치마당)  
행수사수 위헌규탄 서천군민대회(충남 서천)  
대전지역활동가협의회 워크샵(충남여성개발원, ~13일)
- 13 행수사수 위헌규탄 촛불집회(동방마트)
- 14 대청호보전본부, 제2회 대청호 한마당
- 15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운영위(참여광장)  
어린이도서관추진위(윤종삼치과)
- 16 보행환경회의(시청)  
행수사수 위헌규탄 계룡시민대회(계룡시)  
연기군 이통장협의회 및 비상시국회의 집행위원장단 회의
- 17 대전지역현안 CMB토론회(김제선)  
배재대 NGO탐방 현장실습
- 18 크리스찬아카데미 지방선거 대응 전국워크샵(대전 동학산장, ~19일)  
대전의회제21 토론회(제주도, 김제선, 19일)
- 19 외노센터 이은미 콘서트(충남대 정심화홀)  
민주평통 수련회(아드리아호텔)  
원도심활성화자문위(시청 중회의실)  
개인택시조합 행정수도 지속추진 차량캠페인(평송수련원)
- 20 행수사수 위헌규탄 촛불집회(동방마트)
- 22 행수사수 위헌규탄 연기군궐기대회(조치원역광장)  
행정수도 지속추진 범시민연대 결성 간담회(시청 대회의실)
- 23 목원대 NGO탐방 현장실습  
올바른교육감선거시민연대 출범식(참여광장)  
여성환경포럼, 의정평가 시상식 및 평가회(시민환경교육센터)  
어린이도서관 추진위(윤종삼치과)
- 24 주부교실, 지역공동체 토론회(시청, 금홍섭)  
정보공유모임  
행정수도지속추진범시민연대 결성 준비회의  
후원의밤 점검 임원회의(자치마당)  
비상시국회의 상황실회의
- 25 제2회 풀뿌리지역운동공모사업 사례발표 및 시상식(서울)  
서구포럼 이사회

- 경기 여연 강의(김제선)
- 26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집행위(전주)  
행정수도 범시민연대 집행위
- 27 행수사수 위헌규탄 촛불집회(동방마트)
- 29 복지포럼 열린마당(월평복지관)  
표준운송원가 용역보고회(시청 중회의실)  
충청권 3개시도 신행정수도 대응모임
- 30 대전의제21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전략모색(하나은행)  
녹색연합 후원의 밤  
문화동 마을공동체 토론회(금홍섭)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비상농성(대전역, ~12월 4일)

## • 12 월

- 1 행정수도범시민연대 대표단회의 및 출범식(시청)  
전략사업기획단, IT산업육성발전방안 토론회(대덕밸리)  
신행정수도대응 경운기 출정식(연기 남면)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촛불문화제(대전역)
- 2 대전참여자치연대 후원의밤(충청하나은행)  
대전의제21 한마당(시민회관 소강당)  
대전일보 독자위원회(대전일보사)
- 3 대전의제21 어린이도서관 토론회  
중촌복지관 재위탁심사위  
시민사회수석실 신행정수도 관련 NGO간담회
- 4 행수사수 위헌규탄 서울 상경집회
- 5 등산모임 정기산행
- 6 환경재단,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해소 토론회(프레스센터)  
대전시 성매매발지 및 피해여성 지원방안 토론회(시청 세미나실)
- 7 제5차 상임집행위(참여광장)
- 8 국보법 유보 열린우리당 향의 기자회견 및 규탄대회  
비상시국회의 상황실회의
- 9 경실련 후원의밤  
정책위 연구소 준비모임  
국보법폐지연대 대표자회의
- 10 TJB산내골령골학살, 대전형무소 학살사건 다큐멘터리 방영

- 지방분권국민운동 전국 총회(춘천, ~11일)  
 건교부 장관 대전NGO 초청간담회
- 11 벨엘의집 후원회
- 12 금산참여연대 창립식
- 13 어린이도서관 추진위  
 신행정수도범충청권협의회  
 MBC 사랑의 포장마차  
 대전의제21 상임운영위
- 14 NGO 영상미디어교육(~19일, 이억수 간사)  
 국회의원, 단체장 신행정수도 간담회  
 한전 자문회의  
 대전연대 대표자 및 운영위원 간담회
- 15 유성구 환경시설 수탁심사  
 신행정수도범대전연대 조찬모임  
 충남대 사회봉사단 평가회
- 16 대전의제21 긴급회의
- 17 여성위 송년회  
 충남대 민동 송년회  
 고갑준 회원, 우리카드놀이 제작발표회(옥천)  
 행수 지속추진 범충청권협의회 결성 기자회견
- 18 윤종삼 의장 집들이
- 20 대전의제21 운영위
- 21 환경연합 환경지표 토론회  
 제2차 행수 지속추진 서울국민홍보전  
 균형발전을위한 범국민연합 결성 제안 기자회견(서울)  
 모두사랑 이사회  
 BRT용역 착수보고회  
 지역혁신토론회  
 교통규제심의위원회
- 22 서울 출향 공직자 송년회  
 신행정수도 기자 간담회  
 리베라호텔공대위 돕기 일일주점
- 23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워크숍(대전, ~24일)  
 시민환경기술센터 7주년 기념식 및 송년회

- 준공영제 준비상황 보고대회
- 금성백조 주택건설협 신행정수도 모금액 전달식
- 신행정수도 대책회의(연기군)
- 24 민노당 초청 신행정수도 간담회
  - 국보법폐지연대 대표자회의
- 25 YMCA 후원음악회
- 27 외노센터 하반기 이사회, 운영위 및 송년회
  - 범충청권협의회 임원워크샵(~28일)
  - 국회 행정수도특위 구성 방청
  - 국보법 철폐 촛불집회(~29일)
- 28 참여자치 송년회
  - 대전시 여성정책위원회
  - 연대회의 총준위
  - 민족민주열사 합동추모제 준비모임
  - 우금치 노다지 공연(~30일)
- 30 사무처 평가워크샵
- 31 국보법 완전철폐, 양심수 석방 대전교도소 앞 송구영신 투쟁

## 2. 활동개요

### 1) 전년대비 2004년도 활동량 분석표

	2001	2002	2003	2004	전년대비증감(%)
등록회원	980	796	888	977	▲ 89 ( 10.0)
정기회비납부회원	154(15.7%)	619(77.8%)	645(72.6%)	749(76.7%)	▲ 104 ( 16.1)
회 의	135	67	82	113	▲ 33 ( 37.8)
회원시민프로그램	51	80	74	105	▲ 31 ( 41.9)
정보공개청구	23	33	22	34	▲ 12 ( 54.5)
시위·캠페인	17	30	31	76	▲ 45 (145.2)
소 송	6	0	6	2	△ 4 (-66.7)
토 론 회	16	13	5	14	▲ 9 (180.0)
외부토론·강연	40	40	67	102	▲ 35 ( 52.2)
상 담·제 보	159	30	120	130	▲ 10 ( 8.3)
공공 기관참여	48	51	55	43	△ 12 (-21.8)
성명·논평발표	46	21	39	97	▲ 58 (148.7)
연대참여 및 사업	115	138	145	327	▲ 182 (125.5)
교 육 사 업	25	11	40	63	▲ 23 ( 57.5)
조 사 사 업	12	11	4	13	▲ 9 (225.0)
회보·사이버소식	48	33	22	31	▲ 9 ( 40.9)
국 제 교 류	8	3	4	2	△ 2 ( 50.0)
행 사	16	12	9	항목삭제	-
기 타	75	55	67	항목삭제	-
합계	840	628	792	1,152	▲ 360 ( 45.5)

### 2) 2004년도 회원 구성을

(※전체 등록회원의 수와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는 성별, 성비 구분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임)

■ 등록 총회원 / 성별분석			
구 분	2002	2003	2004
남	501 명	521 명	591 명
여	160 명	167 명	178 명

■ 회원 연령별 분석 (%)			
구 분	2002	2003	2004
20 대	9 %	56명 ( 8%)	36명 ( 4.7%)
30 대	46 %	283명 (43%)	312명 (40.6%)
40 대	38 %	261명 (40%)	338명 (44.0%)
50대 이상	5 %	61명 ( 9%)	83명 (10.8%)

### 3) 2004년도 집행위원회 참석율

(※격월로 개최된 상임집행위원회를 집행위원의 총수로 나누어 회의참석율이 저조하게 나타남)

■ 월별 회의참석율(위임참석자 제외) / 총 70명 (%)												
2004 평균참석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9.1 %	-	-	36	27	36	29	18	46	23	22	29	25

### 3. 서비스 노력 및 성과보고서(SEA) 요약본

지표	전년도 (B)	당년도 (C)	증감비율 (D=C/B×100-100)	당년도 목표·달성률 (E=C/E×100)
I. 투입				
1. 지출(단위: 천원)	124,670	172,465	▲ 38.3 %	101.5 % (E=170,000)
2. 총 직원수(단위: 명)	5	7	▲ 40.0 %	100.0 % (E=7)
II. 산출				
1. 총 사업(프로그램)수	792	1,152	▲ 45.5 %	128.0 % (E=900)
2. 사업(프로그램) 총 참여 인원수	-	-	-	-
3. 증가 회원수	92	89	△ 3.3 %	29.6 % (E=300)
4. 총 참여회원수	-	(통계불가)	-	-
5. 신문 또는 뉴스 보도횟수	-	(통계불가)	-	-
6. 개선 또는 달성 사업수	-	-	-	-
III. 성과				
1. 조직에 대한 지지율 (긍정적신문보도횟수/총보도횟수)	-	(통계불가)	-	-
2. 내부 달성도 (가부별실적/각부별계획)	-	(미통계)	-	-
3. 회원만족도 (중상이상평가회원수/응답총회원수)	-	회원대상설문 (미실시)	-	-
4. 임원 회의참석율 -집행위(단위: 명)	-	27	-	77.1 % (E=35)
IV. 효율성 지표				
1. 회비납부회원 비율(단위: 명)	645	749	▲ 16.1 %	74.9% (E=1,000)
2. 회원 1인당 금액(단위: 원)	7,642	7,286	△ 4.7 %	-
3. 참여인원 1인당 금액(단위: 원)	10,521	9,504	△ 9.7 %	-
4. 사업(프로그램당) 금액(단위: 원)	-	-	-	-
V. 설명적 요소				
1. 회원 대비 직원비율	178명/1인당	140명/1인당	-	-
2. 총 참여자 대비 직원비율	129명/1인당	107명/1인당	-	-
3. 총 참여자 대비 회원비율	72.6 %	76.7 %	-	-
4. 평균 참여 인원수	-	-	-	-

※참조 IV. 효율성 지표 2) 회원 1인당 금액 (산출기준=회비총액÷등록회원수×1/12)  
 3) 참여인원 1인당 금액 (산출기준=회비총액÷회비납부회원수×1/12)  
 V. 설명적 요소 '참여자'의 기준을 회비납부회원으로 한정하여 산출한 내용임.



## 4. 활동평가

### 1) 2004년도 활동의 기초 및 사업과제

2004년 지역운동의 목표로는 지역사회 개혁연합의 실질적인 구축을 위한 개혁정치 블록의 형성과 운영, 지방분권시대에 부응한 주민운동의 기틀 형성, 전국적 개혁연대의 구축과 활성화를 목표로 삼았으며, 창립 10주년 앞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내적으로는 새로운 운동역량의 개발과 발전을 준비하는 시기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목표속에서 활동기조로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운동(사회인권분야 전문사업단 구성, 장애인, 여성, 빈민 등 연대강화, 중하계층 등 정상적 시민의 빈곤화 억제), 대안으로 참여하는 운동(지역통화운동, 조직화된 주민모임 조직, 개혁연대전선 구축), 모든시민이 시민운동가로 만드는 운동(정치개혁운동, 의정감시 본격화, 도시개혁운동 지속적인 전개, 수구언론 개혁운동, 지역권력감시운동위한 프로그램 개발, 공동사업 개발 및 회원참여위한 매뉴얼 제작), 즐겁게 참여하는 시민운동,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2004년을 만들겠다는 구상속에, 주요과제로 지역사회 개혁운동, 조직민주주의와 독립적 시민운동, 복지인권영역의 강화, 지방정치 개혁 등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내부혁신과 시민에 의한 시민운동을 통한 지역사회를 개혁시키는 원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이같은 당초의 사업기조와 목적은 국가적 개혁과제 및 지역적 개혁과제가 분출하는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볼 때 타당했던 것으로 평가되며, 현안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통한 조직역량을 배가시키고자하는 목표 설정으로 평가된다.

### 2) 2004년도 활동기조에 근거한 평가

2004년 한 해 동안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활동은 대통령 탄핵무효 대책활동을 비롯 제17대 국회의원 총선, 이라크파병반대 운동, 신행정수도위헌결정 대책 활동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적 개혁과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대중적 참여에 기반 한 주도적인 역할이 돋보였던 한해였다.

대통령 탄핵 무효 활동은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선도함으로써 새로운 정치, 국민을 두려워 하는 정치를 17대 국회가 표방하게 만드는 한편으로 수구적 정치세력의 교체를 획득해 내었다. 그러나 향후 정치개혁에서 나아가 사회경제적 개혁의 내용을 확보하는 운동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할 것이다.

반면에 총선연대의 활동은 전국적 낙선대상자와는 차별화된 지역차원의 선정 기준에 입각한 낙선 대상자의 선정에 까지 이르렀으나 대통령탄핵사태 속에서 독립적인 활동을 보이지는 못했다. 다만 전국적 차원의 낙선운동이 다양해지고 활발해지면서 거의 모든 유력 후보자들이 낙선 대상으로 선정됨으로써 운동이 희화화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의 개입과 연대의 방식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남겨 놓았다.

현재도 진행중인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대책 활동은 수도이전 후보지역이라는 특성에 따른 지역민들의 높은 분노와 관심, 심각한 수도권 과밀의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한 대책활동인데 사실상 지금까지 감시와 대립의 지점에 있던 자치단체, 관변단체, 기업체들까지도 망라한 통지역적 운동을 실무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시민운동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지역내 기득권 집단의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과 개혁집단의 후속 대책의 차이를 분명히 함으로써 개혁 역량의 강화의 기초 속에서 범지역적, 국민적 참여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과제는 남아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 반대 세력의 정치적 실체를 폭로하고 이를 기획하고 배후조종한 수구 언론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활동을 강화하면서 실질적인 국가의 중추적 관리기능의 지방이전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이라크 파병반대, 국보법철폐, 언론관련법 개정, 사립학교법 개정과 같은 국가 개혁과제에 대한 참여는 역량의 한계로 말미암아 불균등하였으며, 지역사회의 민주주의를 심화 시키기 위한 국가개혁과제라할 수 있는 주민소송, 주민소환 등의 국가개혁과제화도 미진하였다.

지역사회개혁과제와 관련해서는 경륜장 건립저지 활동과 경전철저지 및 BRT전면도입을 위한 활동이 성과를 내고 있다. 지역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된 경륜장 건립 강행에 대해 전국적 연대를 구성하여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어가는 한편으로 인허가 권한인 중앙정부와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압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주허가를 저지 시켜낸 것이다. 지역차원의 일방적 의사결정이 더 이상 중앙정부에 일방적 동의를 얻어 낼 수 없는 선례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 깊은 실천이었다.

경전철 저지 및 BRT전면도입운동은 고비용 저효율의 지하철과 경전철을 포함한 도시철도의 대안으로서 BRT를 제시하고 도입을 강제하는 대안제시형 운동으로서의 의의를 가졌다. 대전시의 의사결정과 추진과정이 도시철도 2,3호선의 도입과 BRT의 병행 도입으로 결말지어졌음에도 BRT의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빠져 있다. 대안제시형 운동의 새로운 시도를 해냈다는 점, 시행계획의 수립을 획득한 점에서는 성과를 냈으나 여전히 강력한 개발연합의 저항과 시의회를 중심으로하는 반대에 부딪혀 하상도로 철거와 천변고속화도로의 교환 과 같은 친환경적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의 국면전환을 막아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아울러, 국가적 개혁과제에 대한 조직역량의 편중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역량의 투입이 쉽지 않은 조건에서 추진했던 어린이도서관 설립이나 연구소 설립 가시화, 여성위원회 구성, 지역공동체 참장터 개설 등은 커다란 성과로 평가할만 하며, 이러한 새로운 운동 분야에 대한 가시적 성과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나아갈 시민운동의 발전방향 정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또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내외의 요구에 부응한 조직의 외연확장에 따른 재정압박이 커진 가운데, 한편으로는 경기양극화 속에서 각 회원들의 재정부담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이전 및 후원회 행사, 릴레이 회원가입 및 CMS제도 도입 등은 자립적 시민운동의 기반을 더욱더 공고히 다지는 한해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빈발하는 외면할 수 없는 국가 개혁과제를 감당하기 위한 지역연대사업의 주도 속에서 새로운 운동과제를 천착하고 이에 걸맞게 운동역량을 발전시키며 새로운 운동의 중심을 형성하는 분야에서는 매우 부족한 한해였다. 임원 및 회원 참여의 불균등과 사업단의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한 조직혁신의 노력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연대분야에서도 쏟아지는 국가개혁과제 및 지역사회 핵심 개혁과제 모두에 대한 적극적 역할에 대한 기대와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의 미흡의 간극 속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특히, 일부 사업단의 침체와 활성화 추진 노력의 미흡은 조직역량의 부실로 이어져, 앞으로 개혁적 지역사회 역량 구축을 위한 내부 조직역량을 높이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 극복을 2005년 주요사업 과제로 설정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 3) 세부분야별 활동평가

#### ① 회원 및 조직운영의 측면

- 사무처 실무력의 상반기 불안정 → 하반기 안정화 기초
- 집행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참여율을 높이는 성과를 가져왔으나, 편중된 활동으로 임원의 역할 제고를 통한 조직역량을 높이는 목표달성은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인터넷투표, 탄핵반대, 파병반대 등의 분야에서의 회원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관심 이끌어냄.
- 어린이도서관추진위원회, 여성위원회 등의 새로운 분야에 대한 단위모임을 구성했으나, 연대를 통한 사회개혁과제의 집중으로 인한 실무역량 및 조직역량의 부재로 한 차원 높은 시민운동을 전개하는데는 한계를 드러냄.
- 등산모임 등 안정적인 운영 기능했으나, 주부모임, 축구모임 등의 회원모임은 정례적인 모임

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회원참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내부민주주의 실현 및 대중화를 통한 실천하는 시민운동으로는 건인해내지 못함.

- 지역 대학이나 연구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했으나 담보상태에 그쳤으며, 10주년 기념 사업을 위한 준비도 전체적으로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② 연대사업의 측면

- 탄핵반대운동, 총선연대 낙선운동, 파병반대운동, 신행정수도 관련 대응 등 주요현안에 대한 지역여론을 주도하고, 대중적 관심을 높이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현안에 사업역량이 집중되었으며, 도시개혁이나 의정감시 등의 일상적인 지역사회 개혁분야에 대한 사업개발과 기획 및 활동은 부진하였음.
-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 대책활동 등 핵심 개혁과제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은 지역 시민운동의 위상과 역할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었음.
- 반면에 조직재편 및 실무역량의 한계로 지방자치(주민참여), 제도개혁 등 사회 각분야별 대응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와 협력의 획기적 강화를 내세웠으나 주도적인 사업추진과 체계적이지 못한 준비로 일회성에 그치는 한계를 드러냄.

## ③ 종합평가

요구되고 설정한 다양한 과제와 실천 집행의 미흡, 계획 대비 목표 달성 부진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회원중심의 사업논의와 집행력이 취약한 조건 속에서 상근자의 실무지원의 전문성과 적정성 유지 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는 조직역량의 불안정으로 핵심사업과제를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함.

- 요구되는 일감에 비해 주체적 실천력 미흡(실무 역량부재)
- 객관적 요구 ↔ 주체적 준비간의 괴리 발생, 회원, 대중의 요구 ↔ 실제 사업의 괴리 발생
- 과도한 연대중심의 활동으로 인한, 조직내의 참여 및 활동단위가 정체되고 역량이 저하됨.
- 참여자치시민연대 중심의 연대활동에 대한 비판 및 배치의 문제
- 상근 실무력의 불안정 -> 안정적인 조직활동 건인해내지 못했음.
- 자원활동가의 지속적인 충원 및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부재

## 5. 결산보고서

### 2004년도 수입지출보고서 (2004.1.1~12.31)

■ 수입부						
구분	계정	항목	예산액	결산액	달성율	2003년도
사업수입	전년이월		17,887,425	17,887,425		
	회비수입	회원회비	86,700,000	85,423,000	98.5%	81,429,000
	후원금수입	후원금	40,000,000	37,379,933	93.4%	12,573,500
	사업수입	기획사업수입	8,000,000	8,819,000	110.2%	8,076,116
		광고협찬수입	10,000,000	1,000,000	10.0%	9,000,000
		자료판매 등 수입	7,392,575	24,686,911	333.9%	13,573,132
		소계	25,392,575	34,505,911	135.9%	124,651,748
	사업외수입	이자수입	20,000	3,231	16.2%	18,127
사업수입 합계		170,000,000	157,312,075	92.5%	124,669,875	
기타수입	차입금수입		0	10,000,000		
	예수금수입		0	4,594,806		
	기타수입 합계		0	14,594,806		
수입총계(A)			170,000,000	171,906,881	101.1%	124,669,875
■ 지출부						
사업지출	인건비	급여	19,500,000	18,180,000	93.2%	38,603,450
		상여금(퇴직금포함)	2,860,000	2,165,000	75.7%	28,274,240
		사회보험료	960,000	5,117,034	533.0%	4,139,150
		소계	23,320,000	25,462,034	109.2%	71,016,840
	사무비	사무용품비	800,000	653,680	81.7%	747,540
		소모품비	1,500,000	1,027,000	68.5%	1,157,000
		기기구입비	1,000,000	2,109,500	210.9%	
		통신비	4,000,000	4,320,572	108.0%	4,341,117
		소계	7,300,000	8,110,752	111.1%	6,245,657
		관리비	임차료	5,760,000	11,520,000	200.0%
	건물관리비		0	1,624,830		
	잡비(자료구입)		5,000,000	3,117,430	94.8%	2,487,520
	소계		10,760,000	16,262,260	151.1%	13,396,880
	홍보비	출판홍보비	8,500,000	6,708,500	78.9%	5,383,900
		발송비	2,400,000	1,765,640	73.6%	2,128,940
		소계	10,900,000	8,474,140	77.7%	7,512,840
	사업비	회원사업비	38,885,000	35,606,440	91.6%	5,565,775
		연대사업비	5,000,000	8,908,919	178.2%	3,395,390
		시민사업비	27,170,000	18,504,050	68.1%	3,832,937
		기획사업비	24,290,000	24,717,900	101.8%	1,796,530
		사업추진비	3,000,000	2,914,220	97.1%	12,271,816
		소계	98,345,000	90,651,529	92.2%	26,862,448
사업지출합계		150,625,000	148,960,715	98.9%	125,034,665	
사업외지출	사업외지출	지급수수료	2,000,000	2,218,241	110.9%	1,826,005
기타지출	차입금 상환	차입금,이자상환	10,430,000	15,161,773	145.4%	1,823,715
	예수금 지출	예수금 지출	0	4,594,806		
	기부금 (예비비 포함)		6,945,000	1,530,000	22.0%	기타 3,661,990
	기타지출합계		17,375,000	21,286,579	122.5%	5,485,705
지출총계(B)			170,000,000	172,465,535	101.5%	132,346,375
당월수입지출차액(C=A-B)				-558,654		-7,676,500
전 년 도 이월액(D)				17,887,425		
차기년도 이월액(E=C+D)				17,328,771		

※ 2004년도 수입지출보고서에 있어

- 1) 2003년도 결산금액은 계정항목 변경으로 인해 전년도대비 비율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음.
- 2) 2003년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우리단체 사업의 특성상 사업비의 주내용이 인건비임으로  
각 사업비 항목에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식으로 처리함.
- 3) 차기년도 이월액 중 하나은행 차입금 10,000,000원이 남아있음.

4) 상근활동가 인건비 지급현황

이름	직책	고정급여	총급여액	공제액	실수령액	상여금	퇴직정산금	미지급퇴직금
김제선	처장	1,500,000 *12	18,000,000	1,201,865	16,798,135	815,000	1,500,000	100,000
금홍섭	국장	1,230,000 *12	14,760,000	1,009,507	13,750,493	725,000	1,230,000	100,000
유성미	국장	1,095,000 *11	12,095,000	798,202	11,296,798	710,000	1,095,000	100,000
박상우	국장	1,090,000 *12	13,080,000	854,302	12,225,698	725,000	1,090,000	0
김수현	수습	915,000 *9	8,235,000	518,220	7,716,780		0	0
이억수	수습	850,000 * 4	3,460,000	57,190	3,402,810		0	0
백경원	수습	700,000 * 4	2,370,500	49,690	2,320,810		0	0
염대형	*간사	800,000 * 2	1,600,000	165,710	1,434,290		0	0
이해영	*인턴	400,000 * 1	400,000	0	400,000	100,000	0	0
김민희	*인턴	400,000 * 1	400,000	0	400,000	0	0	0
합 계			74,400,500	4,654,686	69,745,814	3,075,000	4,915,000	300,000

5)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 내역

- 회원사업비 : 18,435,940원 (유성미 국장, 백경원 간사, 인턴)
- 연대사업비 : 3,030,919원 (염대형 간사, 이억수 간사)
- 시민사업비 : 10,355,000원 (금홍섭 국장)
- 기획사업비 : 1,587,900원 (박상우 국장, 김수현 국장)

### 2004년도 대차대조표

자 산		부채 / 자본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현금 및 예금	17,328,771	미지급금	0
단기대여금	0	차입금	10,000,000
장기성예금	100,000	퇴직급여충당금	17,242,680
임차보증금	0	순자산	3,857,119
전화가입비	260,908		
우편요금보증금	120,000		
출자금	0		
유형자산	19,874,300		
감가상각누계액	(-)6,584,180		
합 계	31,099,799	합 계	31,099,799

### 2004년도 재산목록

항목	수량	취득가액	취득일	주요사양	시가	비고
책상, 의자	9	270,000	~2001	120*80*74, 150*80*74	54,000	
회의테이블	3	120,000	~2001	180*90*74, 갈색, 사무용	24,000	
소파	6	120,000	~2001	135*85*75, 검정색	24,000	
케비넷	2	50,000	~2001	85*37*180, 회색	10,000	
책장	6	150,000	~2001		30,000	
철재함	2	50,000	~2001		10,000	
586PC	1	900,000	~2001		180,000	
전화교환기	1	100,000	~2001		20,000	
전기난로	4	100,000	~2001		20,000	
회의용의자	7	70,000	~2001		14,000	
카드기	2	500,000	~2001		100,000	
스캐너	1	100,000	~2001	PowerScan 2300U	20,000	
냉장고	1	50,000	~2001		10,000	
칼라박스	13	150,000	~2001	120*24*40, 갈색	30,000	
칼라박스	3	36,000	01.05.29	120*24*40, 갈색	14,400	
냉온수기	1	150,000	01.07.16	성안정밀, 제품번호:11051444	60,000	유성미
커피자판기	1	378,800	01.07.16	Miss Lee, 대화전자, ML100DH	151,520	유성미
전자렌지(중여, 홍안나)	1	150,000	01.11.01	삼성전자, RE-21CN	60,000	유성미
칼라박스	4	60,000	02.01.11	3단 책꽂이	36,000	유성미
책장	2	60,000	02.01.11	87.5*24*42, 진갈색	36,000	유성미

컴퓨터	1	1,025,000	02.02.05	586PC, 컴퓨터 본체, 모니터	615,000	장재완
소형녹음기, 테잎	각1	59,000	02.03.15	소형녹음기, 소니	35,400	유성미
프린터	1	333,000	02.05.23	HP 레이저 1000	199,800	금홍섭
컴퓨터모니터	1	187,000	02.10.21	17인치	112,200	유성미
TV 증여받음(배준현)	1	200,000	02.05.05	삼성전자, 20인치, 칼라	120,000	유성미
디지털카메라	1	400,000	03.01.03	canon, power shot A30	320,000	유성미
컴퓨터자판기	1	15,000	03.01.09		12,000	김제선
팩시밀리	1	320,000	03.04.22	신도팩스 IF 160	256,000	유성미
외장드라이브	2	60,000	03.05.03	32MB	48,000	김제선, 유성미
컴퓨터 본체	1	600,000	03.06.18	슬림 EX2, LG	480,000	금홍섭
컴퓨터 본체	1	710,000	03.10.13	슬림 Q, LG	568,000	김제선
명함인식기	1	90,000	03.10.29	USB301, KT 크로샷	72,000	박상우
문서세단기	1	100,000	03.12.27	RDS 545	80,000	유성미
IP공유기	1	50,000	03.12.27	INB3040SR, zoio	40,000	유성미
파티션	17	546,000	03.12.24		436,800	
사무용책상(증여-오마이)	3	150,000	03.12.27		120,000	
사무용의자(증여-오마이)	5	50,000	03.12.27		40,000	
컴퓨터(증여-오마이,수자원)	2	600,000	03.12.27		480,000	
칼라박스(증여-오마이)	2	20,000	03.12.27		16,000	
2003 합계		9,079,800			4,955,120	
감가상각누계						4,124,680
코팅기 1대(증여)	1	30,000	04.01.05		20,000	
대형벽시계(증여)	1	100,000	04.01.05		50,000	
VTR(증여)	1	70,000	04.01.05		50,000	
원탁테이블, 의자5		50,000	04.01.08		30,000	
난로구입	1	150,000	04.01.12		50,000	
환풍기	1	20,000	04.01.19		10,000	
LCD모니터(증여)	4	1,600,000	04.02.25		1,200,000	
의자	40	400,000	04.01.29		300,000	
앰프, 마이크대(증여)	5	1,000,000	04.02.10		500,000	
그림액자(증여)	1	1,000,000	04.08.03		1,000,000	
선풍기	6	112,500	04.08.05		60,000	
컴퓨터책상	1	10,000	04.08.13		5,000	
칼라박스	6	80,000	04.08.13		60,000	
에어컨(증여)	1	1,000,000	04.08.13		300,000	
책장	1	80,000	04.08.13		60,000	
애장품, 그림 등(증여)	4	3,000,000	04.09.23		3,000,000	
PC좌식테이블	1	19,500	04.10.14		10,000	
녹음기	1	69,500	04.11.10		30,000	
에어컨	1	1,000,000	04.12.20		700,000	
컴퓨터, LCD, 하드80G	각1	1,003,000	04.12.29		900,000	
2004 합계		10,794,500			8,335,000	
감가상각누계		19,874,300			13,290,120	6,584,180



2004년도 사업활동 수지계산서 (2004.1.1~12.31)

계정과목		당년도	전년도	증감(%)	
사업 활동 수입 지출	수입	회비 수입	85,423,000	81,429,000 ▲ 4.9	
		후원금 수입	37,379,933	12,573,500 ▲197.3	
		사업 수입	34,505,911	124,651,748 △ 72.3	
		기타 수입		18,127	
		사업활동수입계(1)	157,308,844	124,651,748 ▲ 26.2	
	지출	인건비 지출(급여+상여금+보험료)	25,462,034	71,016,840 △ 64.2	
		통신비	4,320,572	4,341,117 △ 0.5	
		건물관리비	1,624,830	487,520 ▲233.3	
		지급임차료	11,520,000	10,909,360 ▲ 5.6	
		발송비	1,765,640	2,128,940 △ 17.1	
		도서인쇄비	6,708,500	5,383,900 ▲ 24.6	
		사무용품비(소모용품비 포함)	1,680,680	1,904,540 △ 11.8	
		복리후생비			
		잡비	3,117,430	2,000,000 ▲ 55.9	
		홍보비지출			
		사업비지출	90,651,529	26,862,448 ▲237.5	
		사업활동지출계(2)	146,851,215	125,024,665 ▲ 17.5	
		사업활동수지차액(3)=(1)-(2)	10,457,629	-372,917	
사업 활동 외 수입 지출	수입	이자수입	3,231	18,127 △ 82.2	
		기타수입	10,000,000	미산정	
		사업활동외수입계(4)	10,003,231	18,127	
	지출	차입금이자지출	15,161,773	1,823,715 ▲731.4	
		지급수수료	2,218,241	1,826,005 ▲ 21.5	
		기부금	1,530,000	1,600,000 △ 4.4	
		사업활동외지출계(5)	18,910,014	5,249,720	
사업활동외수지차액(6)=(4)-(5)		-8,906,783	-5,231,593		
경상수지차액(7)=(3)+(6)		1,550,846	-5,604,510		
전기이월활동수지차액(8)		17,887,425	미산정		
당기말이월활동수지차액(9)=(7)+(8)		19,438,271			

2004년도 합계잔액시산표 (2004.1.1~12.31)

차변		계정과목	대변	
잔액	합계		합계	잔액
17,328,771	189,794,306	현 보 통 예 금	172,465,535	
		당 좌 좌 산	17,887,425	17,887,425
17,328,771	189,794,306	예 수 금	190,352,960	17,887,425
	4,594,806	단 기 차 입 금	4,594,806	
	4,594,806	유 동 부 채	10,000,000	10,000,000
		회 비 수 입	14,594,806	10,000,000
		부 정 기 후 원 금	85,423,000	85,423,000
		사 업 수 입	37,379,933	37,379,933
		사 업 활 동 수 입	34,505,911	34,505,911
			157,308,844	157,308,844
18,180,000	18,180,000	직 원 급 여		
2,165,000	2,165,000	상 여 금		
20,345,000	20,345,000	인 건 비		
4,320,572	4,320,572	통 신 비		
1,624,830	1,624,830	건 물 관 리 비		
11,520,000	11,520,000	지 급 임 차 료		
1,765,640	1,765,640	발 송 비		
6,708,500	6,708,500	도 서 인 쇄 비		
653,680	653,680	사 무 용 품 비		
1,027,000	1,027,000	소 모 용 품 비		
2,218,241	2,218,241	지 급 수 수 료		
5,117,034	5,117,034	복 리 후 생 비		
3,117,430	3,117,430	잡 비		
38,072,927	38,072,927	사 업 활 동 지 출		
2,109,500	2,109,500	기 기 구 입 비		
90,651,529	90,651,529	사 업 비		
92,761,029	92,761,029	사 업 총 지 출		
		이 자 수 익	3,231	3,231
		사 업 활 동 외 수 입	3,231	3,231
15,161,773	15,161,773	이 자 비 용		
1,530,000	1,530,000	기 부 금		
16,691,773	16,691,773	사 업 활 동 외 지 출		
185,199,500	362,259,841		362,259,841	185,199,500

## □ 2004년 감사보고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제 회원 귀중

우리는 2004회계연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업무와 회계에 대하여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건전한 관습에 기초하여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 업무

### ◎ 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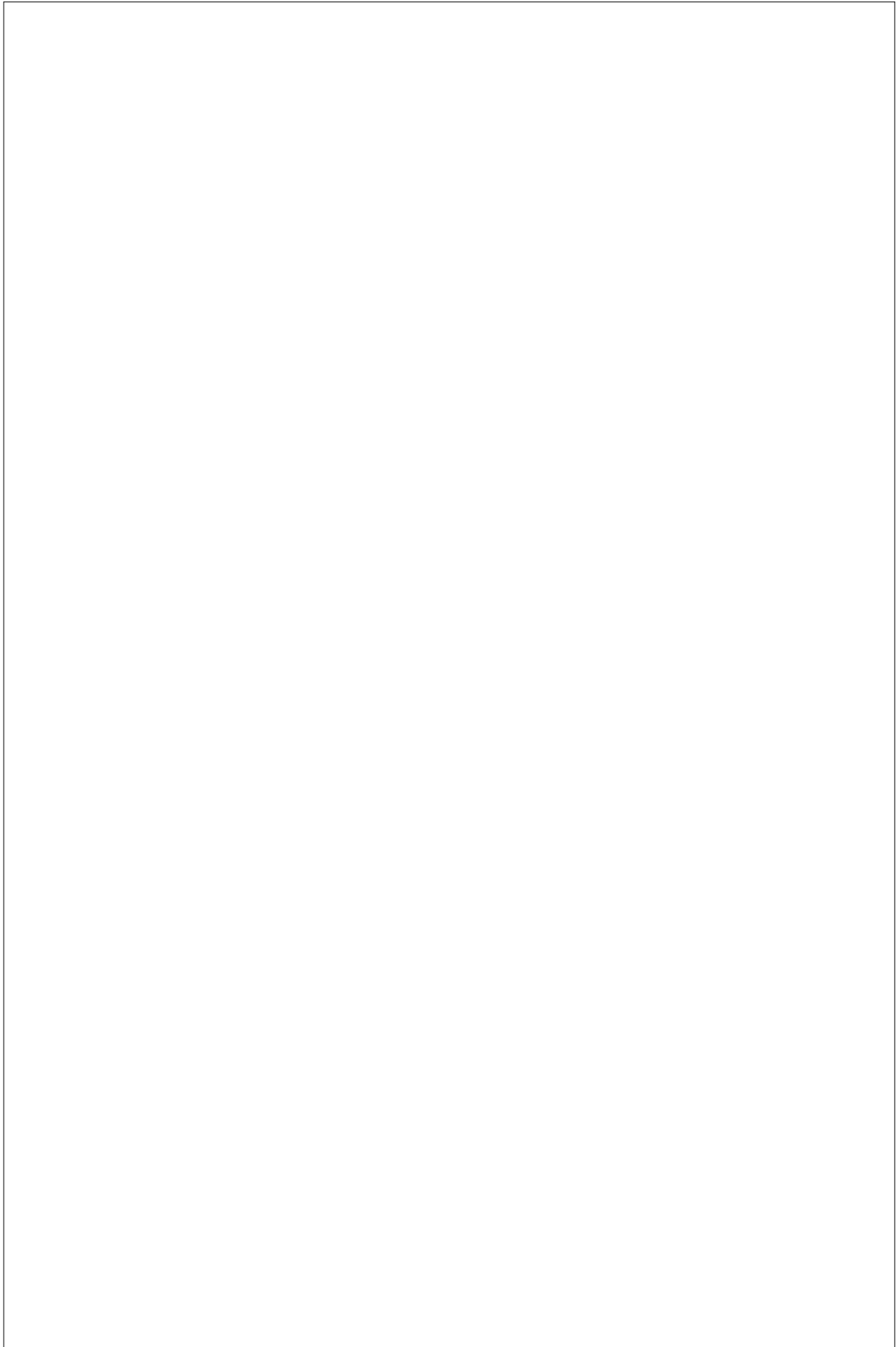
본 감사인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2004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계산서 및 사업활동수지계산서 등 결산보고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결산보고서의 작성책임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장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동 결산보고서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 결산보고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과 관련법규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본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결산보고서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2004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순자산의 변동 및 자금수지 내용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과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 1 월 28일

감 사(업무)    손 규 성                  감 사(회계)    이 동 규



☐ <의안1호> 규약 개정의 건

제안자 : 총회준비위원회

<주문사항>

아래와 같은 규약 개정(안)을 제출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 운영위원회 규정 전문 삭제에 따른 관련조항 삭제

현행규약	개정안
제10조(의결사항) 3.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제10조(의결사항) 3. 집행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사유】 사무처 부서 설치 및 부서명에 대한 포괄적 규정

현행규약	개정안
제15조(사무처) 3. 사무처는 처장과 협동처장, 시민감시국, 회원사업국, 시민사업국, 연대기획국 등의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15조(사무처) 3. 사무처는 사무처장과 업무상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 □ <의안2호> 규정 개정의 건

제안자 : 총회준비위원회

<주문사항>

아래와 같은 규정 개정(안)을 제출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임원 규정

【개정사유】 조직재편에 따른 임원의 용어를 통일함 (집행위원회 이미 개정, 총회 승인사항임)

현행규정	개정안
제1조. 임원은 공동의장, 고문, 자문위원, 감사, 운영위원, 실행위원, 각 기구 실행(운영, 집행)위원을 가르킨다.	제1조. 임원은 공동의장, 감사, 상임집행위원, 집행위원, 각 기구 실행(운영, 집행)위원을 가르킨다.

### 2) 권력감시운동 준칙

### 3) 자원활동 내규

【개정사유】 사무처 부서재편으로 인한 담당부서의 포괄적 규정

현행규정	개정안
제8조(관리 변동 자원업무개발 등) 1. 자원활동가 전체관리는 연대기획국장과 협의하여 회원사업국내 자원활동담당간사가 하고, 부서에 배치된 자원활동가는 활동부서에서 담당한다.	제8조(관리변동 자원업무개발 등) 1. 자원활동가 전체관리는 지정된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활동 담당간사가 하고, 부서에 배치된 자원활동가는 활동부서에서 담당한다.

### 4) 민원처리 내규

【개정사유】 사무처 부서재편으로 인한 담당국장의 명칭을 모두 변경

현행규정	개정안
전문에서 명시된 '연대기획국장'의 명칭을 변경	'사회개혁실천국장'으로 변경

### 5) 제보처리 내규

【개정사유】 사무처 부서재편으로 인한 담당부서의 명칭을 모두 변경

현행규정	개정안
전문에서 명시된 '연대기획국'의 명칭을	'사회개혁실천국'으로 변경

## 6) 회의자료 작성 및 제출

【개정사유】 사업단 재편 및 사무처 부서재편으로 인한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명칭 변경

현행규정	개정안
2) 간부회의  전문에서 명시된 '기획국'의 명칭을	2) 간부회의 '전문 삭제'  '시민참여국'으로 변경
3) 상임/집행위원회 (회의자료)첫 번째주 토요일 오전 e-mail로 집행위 원들에게 보낸다.	3) 상임/집행위원회 (회의자료)두 번째주 토요일 오전 e-mail로 집행위 원들에게 보낸다.
4) 운영위원회	4) 운영위원회 '전문 삭제'

## 7) 회계관리 내규

【개정사유】 사무처 부서재편 및 회계 계정의 변경으로 인한 개정

현행규정	개정안
1) 지출의 발의, 결재, 영수 및 입금 처리 (1) 모든 부서의 지출은 ....에 따른다. (5만원 이하 는 연대기획국장의 협의를 거쳐 회계담당자가 지 출하며 5만원 이상은 실국장을 거쳐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는다.)	1) 지출의 발의, 결재, 영수 및 입금 처리 (1) 모든 부서의 지출은 ....에 따른다. (5만원 이하 는 각 부서의 국장의 협의를 거쳐 회계담당자가 지출하며 5만원 이상은 실국장을 거쳐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는다.)
5) 통장의 개설 (2) 부서별로 개설한 통장은 그 구좌를 회원사업 국에 등록한다.	5) 통장의 개설 (2) 부서별로 개설한 통장은 그 구좌를 회계 담당 부서에 등록한다.
<표1>수입항목 및 계정	<표1>수입항목 및 계정 '개미회계 계정으로 변경'

## 8) 보수기준 내규

【개정사유】 사무처 부서재편 및 회계 계정의 변경으로 인한 개정

현행규정	개정안
2) 표준급여 ① 기본급 : 450,000원 ② 연호봉 : 10,000원×(연령-19)(만19세부터 1년) ③ 근속수당 : 20,000원 × 근속년수 ④ 육이수당 : 50,000원 × 자녀수 ⑤ 직책수당 : 국장급 이상 100,000원 ⑥ 식비 : 100,000원	2) 표준급여 ① 기본급 : 600,000원  ③ 근속수당 : 30,000원 × 근속년수  ⑥ 교통통신지원비 : 100,000원 (집행위 승인사항)

## 9) 인사 내규

## 10) 성희롱 방지 내규

【개정사유】 여성위원회 신설로 인한 보고체계의 변경

현행규정	개정안
제4조(성희롱 고충 처리) 사무처장은 활동 중에 발생한 성희롱에 대한 회원의 고충 접수와 처리를 위해 여성간부 중 1인을 성희롱고충처리 담당자로 지정하며 임원과 상근자는 성희롱에 대한 고충이 발생한 것을 아는 즉시 성희롱고충처리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성희롱 고충 처리 담당자는 고충 접수 즉시 사무처장에 보고하고, 사무처장은 의장단, 집행위원장과 협의하여 신속히 고충을 처리하여야한다.	제4조(성희롱 고충 처리) 활동 중에 발생한 성희롱에 대한 회원의 고충 접수와 처리를 위해 여성위원장을 성희롱고충처리 담당자로 지정하며 임원과 상근자는 성희롱에 대한 고충이 발생한 것을 아는 즉시 성희롱고충처리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성희롱 고충 처리 담당자는 고충 접수 즉시 사무처장에 통지하고, 사무처장은 의장단, 집행위원장과 협의하여 신속히 고충을 처리하여야한다.

## 11) 회원투표 및 임원선정 규정



☐ <의안3호> 2005년도 운동기조 및 사업과제 심의의 건

제안자 : 총회준비위원회

<주문사항>

아래와 같은 2005년도 운동기조 및 사업과제(안)을 제출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 한국사회운동의 국내외 전망

- 지방자치시대 10년

1995년 이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개척한지 10년이되는 시점에서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확대와 자치역량을 높이고, 선거제도 개혁 등을 통한 지방정치 개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 시민운동 역할이 요구됨.

- 대전참여자치연대 창립 10년

창립 1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대전참여자치연대의 지난간 10년을 평가하고 다가오는 10년 준비하는 한해로 만들면서 대전지역 시민운동의 새로운 전망을 모색해보는 계기를 만들어야 함.

- 광복 60주년

광복 60주년을 맞는 올해는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로서의 장벽을 견지 못한다면 통일의 물꼬가 단절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주변국의 각축속에서 남북의 대결구도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음. 핵문제를 둘러싼 불안정성의 단기적 해소 가능성 미흡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남북의 화해와 민족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평화의 정착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노무현 정부 개혁의 사실상 마지막 해

2006년 지방선거라,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정부가 개혁을 추진할 사실상 마지막 해임. 국가적 개혁과제가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체제의 구축으로 진전을 이루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중앙과 지방의 관(官)끼리의 권력배분이 아닌 지역사회의 혁신과 주민참여로 만들어가야할 과제가 부여되고 있음.

#### - 지방선거 본격 준비기

2006년을 지방정치 개혁과 혁신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제도개혁과 지방행정에 대한 감시견제 활동, 지방정치인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임.

#### - 기타 국내외 전망

두차례 예정되어 있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에 따라 여소야대 정국의 전환 가능성 및 새로운 정치연합 시도와 출현(합중연환)의 가능성이 있으며, 경기양극화와 더불어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와 구조화가 예측됨.

또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중대한 기로에 봉착할 것이며,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갈등과 주40시간 본격도입, 비정규직 보호, FTA, 중소기업 중심의 갈등 심화, 퇴직연금제 도입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에 대한 개혁 갈등이 본격적으로 분출할 것임. 특히 중소기업의 실질임금 하락과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노동쟁의의 증가가 예상됨.

아울러,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전 및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될 것이며, 보수 세력의 능동화, 신지역주의, 이익집단 표출, 사회병리현상 심화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일상화 되면서 사회병리적 현실도 분출할 것임.

끝으로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소비자 환경문제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사회적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2. 주요 지역현안

- 예산사전배분제도 및 재정종합정보시스템 시범적용(중가-투심-편성-집행 → 복식부기)
- 중앙데파트 철거 및 하상도로 철거 ↔ 천변도로 추진 본격화
- 지하철 적자의 본격화와 버스준공영제 지원예산 대폭 증액
- 택시 지역별총량제 도입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 도시·건축·여성위 개편 및 정부의 위원회제도 개선지침 마련
-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 3. 2005년도 주요 사업과제

- 개혁전선 구축 /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국가개혁운동 및 한단계 높은 지역운동의 발전을 위한 연대와 기획사업
- 지방자치 10년, 참여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시민참여운동
- 창립 10주년,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체제 구축과 주민운동을 열러가는 도전
- 지방선거 대응준비 / 제도개혁, 지방정치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전 개혁을 위한 대연합의 구축 등

- 시민참여형 운동의 발전과 업무혁신 표준화

#### 4. 부서별 사업과제

##### ① 시민참여팀

- a) 회원참여 및 소통구조 등 내부 민주주의 실현 : '기부회원을 넘어 참여의 주체로'
  - 사업결정에 있어서의 회원참여 창구확대 및 민주적 운영
  - 회원관리 DB화(회원관리의 시스템화) -> 회원조직 내실화 -> 회원참여의 자발성 유도
  - 회원모임의 안정화 및 다양한 회원모임 구성, 자원활동가 운영에 있어서의 체계화
  - 온라인 참장터 활성화 -> 생협 및 조합운동화
  - 회원 만남의 날 정례화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회원가족 참여프로그램 특화)
  - 기본적인 회원서비스 강화 : 월간지 회원소통구조 확대 및 사이버소식지 정례 발송
  - 사이버 시민운동 : 웹 상호침투, 홈페이지 개수를 통한 사이버시민운동 강화
- b) 대전참여자치연대 10주년 기념사업
  - 1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구성 : 10년사 편찬, 지역운동사 10년 평가와 정립
  - 외형적 확장 중심의 기념사업 배제, 모두가 시민운동가 프로그램 개발
  - 기념행사 준비 및 조합운동 결성 지원
  - 사업매뉴얼 제작 : 실무자 전문교육 강화 및 자원활동가 육성체계 구축
- c) 회원확대운동의 획기적 전환 : '찾아가는 회원증모운동 전개'
  - 회원증모운동 : 강제적, 자율적, 계획적 방식 등 혼합된 형태의 회원확대운동
  - 일상적 회원모임 강화
- d) 지속가능한 자립적 재정기반의 구축

##### ② 연대기획팀

- a) 개혁전선(개혁연대) 구축 - 한단계 높은 지역운동의 발전을 위한 연대와 기획사업
  - 개혁연대 로드맵 작성
  - 집행력 높이는 공동 사무처 조직
  - 주민참여 확대사업, 선거제도 개혁, 지방분권 균형발전 과제 등 주요 운동과제 추진
- b) 참여민주주의 완성
  - 주민참정제도의 시범화 사업 추진
  - 지방선거 대응체제 구축
- c) 지방선거 대응준비 - 제도개혁, 개혁적 정치세력블럭, 지방정치인 육성 등

##### ③ 시민참여팀

- a) 지속가능한 사회연대 구축 - 사회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국가 및 지역사회 개혁운동

- 민주주의의 완성,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전국연대 구축
- 조세개혁, 분배개혁을 중심으로 한 사회경제체제 개혁운동 전개 - 지역의제 개발
-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으로부터 지역혁신, 민주적 지방자치에로의 전환
- 평화와 인권을 위한 연대

b) 지방자치 10년, 참여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시민참여운동

- 대전시민사회연구소의 설립과 개혁적 지식인 블록 형성
- 시민참여예산운동의 본격적 추진
- 지방정치인에 대한 모니터링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주민운동 조직의 형성과 활성화를 위한 연대 추진 : 운동의 기반을 확대하는 운동
- 어린이도서관 개관 및 생활협동조합 운동조직의 결성, 운영, 지원

c) 시민참여형 운동의 발전과 업무혁신 표준화

- 사업단의 재정비와 활성화 사업

지역사회 개혁운동의 중심을 복지인권분야로 전환하기 위한 작은권리, 복지포럼의 창조적 발전

사회적 약자 중심의 교통 및 도시계획을 만들기 위한 시민참여운동 사업단 추진

참여예산, 주민참여제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시민참여운동본부의 추진

정책위원회의 연구소 전환에 따른 운동정책 중심의 정책위원회의 새로운 구성

상임운영위원회의 실질화 및 강화

사업매뉴얼 제작팀 구성과 모두가 시민운동가 프로그램 실시

## 5. 월별 사업일정(안)

- 1월	신행정수도 대책	총회준비 사업단별 모임	10주년 편찬사업
- 2월	새회원 만들기 운동	여성회원의 날 행사	신행정수도 서울상경투쟁
- 3월	어린이도서관 개설	복지인권분야 운동역량 모색	1/4분기 신입회원 행사
- 4월	보궐선거(30) 창립 10주년 기념사업	홈페이지 개수	시민참여운동본부 조직
- 5월	시민사회연구소 설립	어린이날 가족행사	5.18항쟁 광주순례
- 6월	개혁연대 구축 살기좋은 도시만들기운동본부 조직	1/4분기 신입회원 행사	
- 7월	지방자치 10주년		
- 8월	광복 60주년	회원한마당(아이디어 사업)	
- 9월	지방선거 준비기획단 구성	추석맞이 물품판매	
- 10월	재보궐선거(28) 총회준비	회원가족 산행(밤줍기 등)	정기국회 대응
- 11월		후원의 밤	
- 12월		송년평가 워크샵(송년회)	회원총회 투표개시

□ <의안4호> 2005년도 예산안 심의의 건

제안자 : 총회준비위원회

<주문사항>

아래와 같은 200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부					
구분	계정	항목 (Code No)	2004년도 결산	2005년도 예산	비고
사업수입	전년이월	(103)	17,887,425	17,328,771	
	회비수입	회원회비 (402)	85,423,000	96,000,000	
	후원금수입	후원금 (403)	37,379,933	40,000,000	
	사업수입	기획사업수입 (405-001)	8,819,000	8,500,000	
		광고협찬수입 (405-002)	1,000,000	6,000,000	
		자료판매 등 수입 (405-003)	24,686,911	24,000,000	
		소계	34,505,911	38,500,000	
	사업외수입	이자수입 (901)	3,231	10,000	
사업수입 합계		157,312,075	174,510,000		
기타수입	차입금수입	(260)	10,000,000	0	
	예수금수입	(254)	4,594,806	5,490,000	
	기타수입 합계		14,594,806	5,490,000	
수입총계(A)			171,906,881	180,000,000	

▷ 수입부 산출방식

- 회 비 : CMS납부자 300명 증액분(매월 30명씩, 200,000원 증액하는 추세로 산출)  
지로 및 은행이체, 현금납부 회원은 전년도와 동일 산출
- 후 원 금 : 후원회 및 각종 후원금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 산출)
- 사업수익 : 1) 기획사업 : 물품판매, 행사참가비, 특별기획사업 등 전년대비 산출  
2) 광고협찬 : 회보광고 500,000원\*12회  
3) 자료판매 등 : 간사단체 지원금, 분담 통신비, 자판기 수익 등

## ■ 지출부

사업지출	인건비	급여 (512)	18,180,000	20,160,000	
		상여금(퇴직금포함) (513)	2,165,000	2,400,000	
		사회보험료 (584)	5,117,034	5,400,000	
		소계	25,462,034	27,960,000	
	사무비	사무용품비 (547)	653,680	800,000	
		소모품비 (548)	1,027,000	1,200,000	
		기기구입비 (868)	2,109,500	3,000,000	
		통신비 (528)	4,320,572	4,000,000	
		소계	8,110,752	9,000,000	
	관리비	임차료 (536)	11,520,000	5,760,000	
		건물관리비 (534)	1,624,830	2,000,000	
		잡비(자료구입) (599)	3,117,430	3,000,000	
		소계	16,262,260	10,760,000	
	홍보비	출판홍보비 (544)	6,708,500	9,600,000	
		발송비 (541)	1,765,640	2,400,000	
		소계	8,474,140	12,000,000	
	사업비	회원사업비 (897-001)	35,606,440	31,600,000	인건비 포함
		연대사업비 (897-002)	8,908,919	20,670,000	인건비 포함
		시민사업비 (897-003)	18,504,050	35,000,000	인건비 포함
		기획사업비 (897-004)	24,717,900	20,000,000	인건비 포함
		사업추진비 (897-005)	2,914,220	3,000,000	
		소계	90,651,529	109,270,000	
	사업지출합계		148,960,715	169,990,000	
사업외지출	사업외지출	지급수수료 (549)	2,218,241	2,000,000	
기타지출	차입금 상환	차입금,이자상환 (931)	15,161,773	650,000	
	예수금 지출	예수금 지출 (254)	4,594,806	5,400,000	
	기부금 (예비비 포함)	(941)	1,530,000	1,960,000	
	기타지출합계		21,286,579	8,010,000	
지출총계(B)			172,465,535	180,000,000	
당월수입지출차액(C=A-B)			-558,654	0	
전 년 도 이월액(D)			17,887,425		
차기년도 이월액(E=C+D)			17,328,771		

### ▷ 지출부 산출방식

- 관리자 급여 : 사무처장 급여로 인건비 산정기준의 변경을 통한 인상분

\*\*\*급여 산정기준 변경내용

- ① 기 본 급여/ 500,000원 → 600,000원
- ② 연 호 봉/ 15,000원 → 10,000원
- ③ 근속수당/ 사회단체 및 직장 군대 경력 50%인정, 민주화운동 투옥 100%인정

	김제선	금홍섭	박상우	김수현	이억수	백경원	유성미
연 호 봉 (연령-19×10,000)	23	17	17	16	13	4	16
근속수당 (경력년수×30,000)	15년	10년11월	7년8개월	5년	4년	5개월	8년3개월
육아수당 (자녀수×50,000)	2	1	1				2

- ④ 육아수당, 직책수당, 교통통신지원비는 변경사항 없음

\*\*\*급여 인상내역

	김제선	금홍섭	박상우	김수현	이억수	백경원	유성미	계
2004년 총급여	1,500,000	1,230,000	1,090,000	915,000	850,000	700,000	1,145,000	7,430,000
2004년 공제액	-91,570	-76,110	-65,600	-57,190	-57,190	-49,690	-65,600	-462,950
2005년 총급여	1,680,000	1,335,000	1,245,000	1,110,000	950,000	755,000	0	7,075,000

- 상 여 금 : 기본급 2회, 미지급퇴직금 포함분(개인당 100,000원\*12개월분)
- 사회보험료 : 사무실 부담금
- 기기구입비 : 캠코더(영상미디어운동), 난방기기 구입비 포함
- 건물관리비 : 상하수도세, 전기료 2005년도부터 적용 추가 산정
- 출판홍보비 : 2005년도 인상, 매월 200,000원 추가 산정
- 회원사업비
  - 인건비 : 16,600,000
    - 유성미 급여/사회보험료(840,000)/미지급퇴직금(1,200,000)
    - 이억수 급여(11,400,000)/사회보험료(720,000)/상여금(1,460,000)/퇴직정산(950,000)
  - 사업비 : 15,000,000
    - 총회(1,000,000) / 10주년기념사업(5,000,000) / 후원회(3,000,000) / 경조사(2,000,000)
    - 회원행사(3,000,000) / 회원소모임(1,000,000)
- 연대사업비
  - 인건비 : 16,670,000
    - 김수현 급여(13,320,000)/사회보험료(720,000)/상여금(1,520,000)/퇴직정산(1,110,000)
  - 사업비 : 4,000,000
    - 개혁연대(2,400,000)/기타(1,600,000)
- 시민사업비
  - 인건비 : 31,255,000
    - 금홍섭 급여(14,760,000)/사회보험료(960,000)/상여금(1,540,000)/퇴직정산(1,110,000)
    - 미지급퇴직금(1,200,000)
    - 백경원 급여(9,060,000)/사회보험료(600,000)/상여금(1,280,000)/퇴직정산(755,000)
  - 사업비 : 3,745,000
- 기획사업비
  - 인건비 : 18,565,000
    - 박상우 급여(14,940,000)/사회보험료(840,000)/상여금(1,540,000)/퇴직정산(1,245,000)
  - 사업비 : 1,435,000
- 차입금상환 : 하나은행 차입금 10,000,000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임

## □ <의안5호> 총회 결의문 채택의 건

제안자 : 총회준비위원회

<주문사항>

아래와 같이 2005 총회 결의문을 제출하오니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민주주의의 완성과 지속 가능한 한국사회를 위한 대장정을 시작하자!

#### - 창립 10주년, 지방자치 10주년을 맞으며 -

1995년 4월 28일, 평범한 시민이 지방자치의 주인으로 참여하자는 깃발을 세우고 참여자치연대가 창립된지 어언 10년이 흘렀다. 먼저 우리는 창립 10주년을 여는 총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민주적 성숙과 발전을 위해 애정을 갖고 격려하고 성원해주신 지역민들의 성원과 지지에 감사드린다. 우리는 창립 10주년을 박제화된 과거의 기록과 회고, 기념의 해로 만들고자 하지 않는다. 우리는 참여자치연대를 통해 지역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일조해온 보람을 당당하게 나누지만 이 작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참여민주주의 완성과 양극화된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다.

#### 1. 우리는 창립 10주년, 지방자치 10주년을 참여민주주의 완성의 분기점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자원의 지방 분산이 부패한 지역 정치인들과 기득권 세력들의 권능만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전락되는 것을 막고 시민의 것으로 되돌리기 위해 헌신할 것이다. 이미 도입된 주민투표, 주민소송제도의 실천을 위해 앞장설 것이며, 시민의 혈세로 조달되는 재정에 대한 시민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잘못된 정치인의 임기중 해임을 위한 주민소환제의 조속한 도입과 같은 참여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하며 헌신할 것이다.

#### 2. 우리는 우리가 속한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면서, 생활현장에서부터 참여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풀뿌리운동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생활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밖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회원 개개인이 속한 사회공동체 속에서 시작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와 인권 역량을 강화해 나가며, 생활협동조합, 어린이도서관과 같은 지역의 생활 권역을 같이 하는 단위로부터의 사회공동체 운동에 참여하고 지원하며 협력할 것이다.

### **3. 우리는 극단적 양극화로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 받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개혁하기 위한 운동에 동참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극단적 양극화는 이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줄지 않는 신용불량자와 가계부채, 불안한 고용사정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 등으로 내수는 살아날 기미가 없다. 무엇보다 소득, 계층, 지역, 산업 사이 양극화와 불균형 성장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까지 위협할 정도다. 서민들의 피폐한 삶을 개선하지 않고는 사회의 희망도, 경제 활력도 기대하기 어렵다. 신자유주의의 야만성이 빚은 양극화의 위기와 모순을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고용 없는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세정의와 사회복지의 확충은 필수적이다. 지속가능한 한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사회경제체제의 개혁을 위한 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

지난 10년간 우리들의 성취는 작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소명은 이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 모든 권력은 스스로를 은폐하는 속성을 가진 것에 맞서 시민의 힘으로 권력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만들어가고자 했던 것으로 시작된 우리 운동은 이제 생활 속에 뿌리를 내리는 성숙을 요구한다. 시대적 상황은 압축적 고령화와 극단적 양극화로 위협받는 사회 양극화를 넘어서기 위한 사회경제적 개혁운동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

비록 우리는 작은 힘이지만 피하지 않고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그 출발은 한사람, 한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히 하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만남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그리하여 온 국민과 더불어 하는 운동을 통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대전,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이다.

2005. 2. 28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제10차 정기총회 참석자 일동

## □ 참여자치시민상 수상자 공고

참여자치시민상-017호

### 참여자치시민상

대전여성환경포럼 의정지기단

귀 단체의 지방의회 참여운동이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대전을 만들어 갑니다. 귀 단체의 노고로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시민의 의정 참여를 촉진하여 참여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려 이 상을 드립니다.

2005. 1. 28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선건 민명수 송인준 윤종삼

참여자치시민상-018호

### 참여자치시민상

알짹 어린이도서관 설립추진위원회

귀 단체의 지역공동체 참여운동이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대전을 만들어 갑니다. 마을 어린이도서관을 만들고 운영하는 나눔과 헌신을 통해 지역사회를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 가꾸며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기려 이 상을 드립니다.

2005. 1. 28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선건 민명수 송인준 윤종삼

올해의 언론인상-005호

### 2005 올해의 언론인상

설인호 화백 /충청투데이 만평작가

귀하는 탁월한 풍자와 고발이 넘치는 충청투데이 만평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애정과 부조리한 현실을 거부하는 투철한 사회정신을 보여줌으로써 지역 언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였기에 그 공로를 기려 이 상을 드립니다.

2005. 1. 28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선건 민명수 송인준 윤종삼

참여시민상-0011호

## 참여시민상

故 이재화 회원

귀하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한 시민으로 참여자치시민연대 등산모임을 창립하고 그 발전에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시민이 주인되는 참여민주주의 사회의 실현을 위해 남다른 헌신과 봉사를 통해 참여민주주의 발전과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도시로 대전을 가꾸는데 크게 기여하였기에 그 공로를 기려 이 상을 드립니다.

2005. 1. 28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선건 민명수 송인준 윤종삼

참여시민상-001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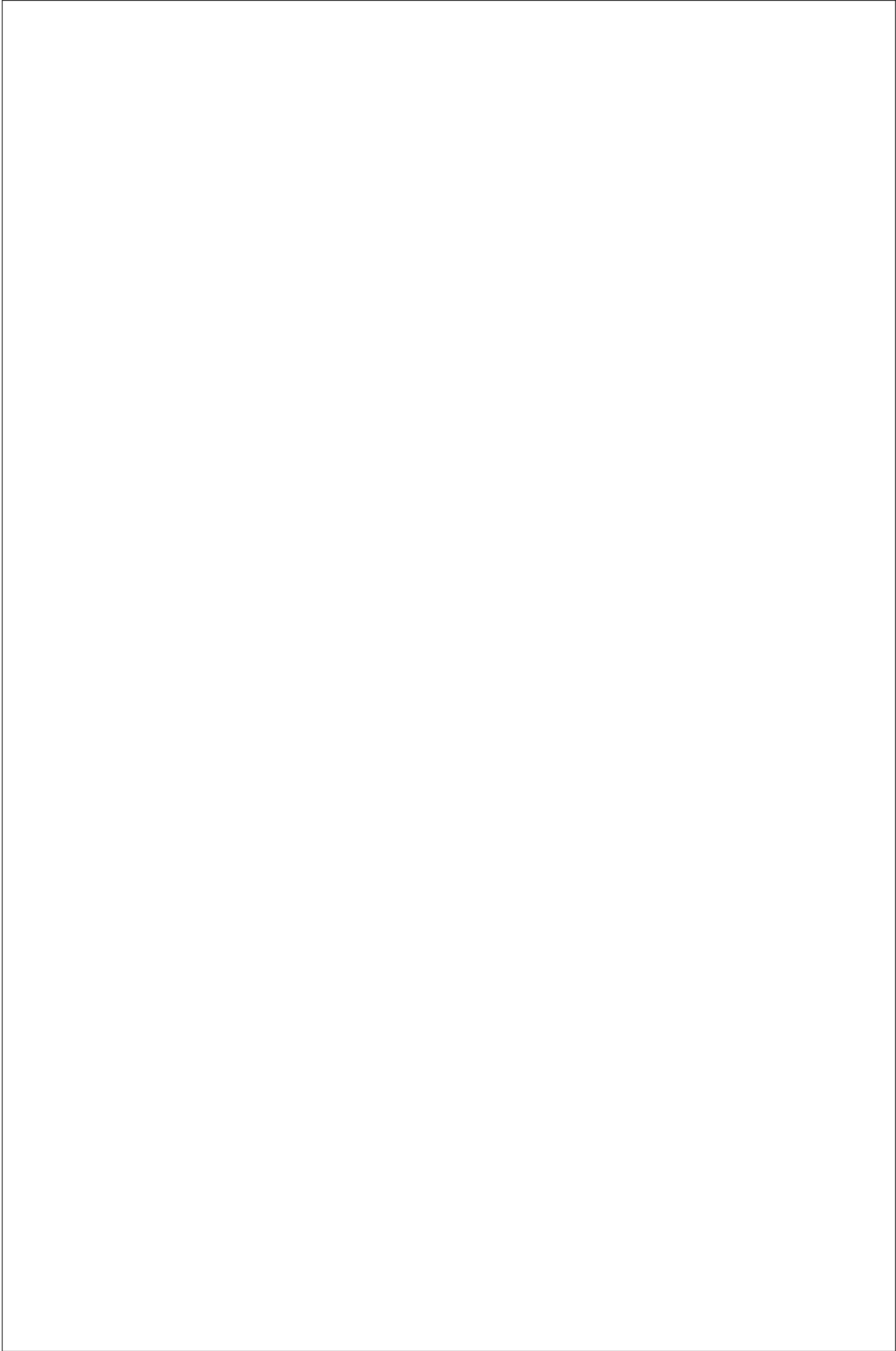
## 참여시민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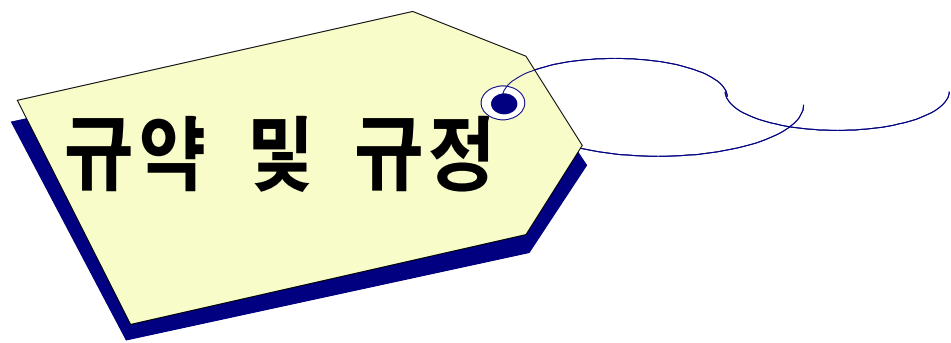
김종현 회원 /산내학살 대책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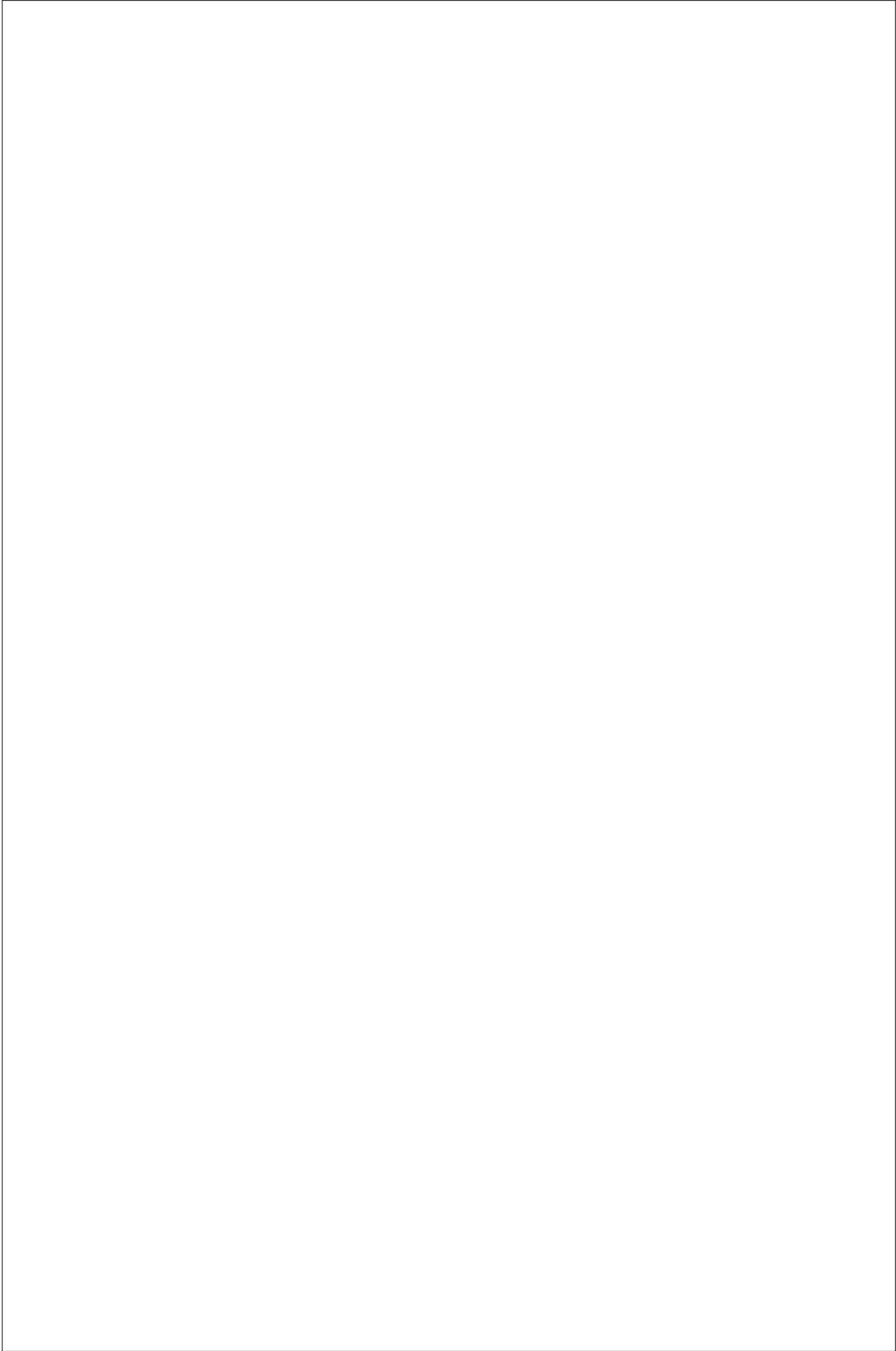
귀하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한 시민으로 한국전쟁 시기 산내학살 진상규명을 비롯한 국가범죄의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헌신함으로써 역사를 바로 세우며 참여민주주의의 발전과 대전을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는데 크게 기여하였기에 그 공로를 기려 이상을 드립니다.

2005. 1. 28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선건 민명수 송인준 윤종삼







##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규약

1995년 4월 28일 창립 총회 제정  
1997년 2월 14일 2 차 총회 개정  
1998년 2월 26일 3 차 총회 개정  
1999년 2월 26일 4 차 총회 개정  
2000년 1월 25일 5 차 총회 개정  
2001년 1월 16일 6 차 총회 개정  
2004년 2월 12일 9 차 총회 개정  
2005년 1월 28일 10차 총회 개정

### 제1장 총 칙

제1조(이름) 우리 모임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라 부른다.(1998.2.26 3차총회개정)(2001.1.16 6차총회 약칭 삭제)

제2조(목적) 우리 모임은 지역 사회의 주인인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기초하여 참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우리 모임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벌인다.

1.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는 인권 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사업
2. 정직과 양심이 우선되는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사업
3. 모든 시민에게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회를 앞당기기 위한여러 사업
4. 시민참여로 운영되는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사업
5. 올바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기타 여러 사업

제4조(소재) 우리 모임의 주된 사무실은 대전광역시 안에 둔다.

###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우리 모임의 목적과 규약에 동의하는 사람과 단체는 회원이 될 수 있으며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눈다.

1. 정회원은 규약에 따라 모든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회원으로 사업과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회원을 말한다.
2. 준회원은 피선거권과 의결권이 제한되는 회원으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나 정기적인 사업과 활동에 직접 참여치 못하는 회원을 말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우리 모임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과 단체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정회원이 되고자하는 사람과 단체는 상임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2001.1.16 6차 총회 개정)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우리 모임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모든 회원은 우리모임의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고 보고받을 권리와 우리 모임의 회의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참여하여 발언하고 표결할 권리를 가진다. 단 준회원은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제한된다.

2. 회원은 규약과 우리모임의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여야하며 우리모임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3장 조 직

#### 제1절 총 회

제8조(성격과 구성) 우리모임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총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1. (1997.2.14 2차 총회 전문삭제)

2. 총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단체회원이 선임하여 파송하는 총회 회원으로 구성하되 단체회원의 총회 회원의 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참여도를 기준으로하여 집행위원회에서 배정한다.(2001.1.16 6차총회개정)

3.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제9조(소집) 정기총회는 연 1회 공동의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집행위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 1/4 이상이 연서명으로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10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의장단, 감사, 집행위원장 등 임원의 선출

3. 집행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2001.1.16 6차총회 개정, 2005.1.28 10차총회 개정)

4. 주요사업 방향 수립과 사업보고, 승인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의1. 우리모임의 해산과 다른 조직과의 통합에 관한 사항

5. 우리모임 운영에 관한 기타 중대한 사항

제2절 운영위원회(2004.2.12 9차 총회 전문삭제)

제3절 의장단



제14조(의장단) 우리 모임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우리단체를 대표하는 약간명의 공동의 장단을 회원직선으로 선출하며, 공동의장단 중 상임의장을 호선한다. 회원선거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2004.2.12 9차총회 전문개정)

#### 제4절 운영기관

제14조의 1(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우리 모임의 일상적인 의사결정 기관이며, 그 구성과 활동은 다음과 같다.(2001.1.16 6차총회 전문개정)

1. 집행위원회는 의장단,집행위원장,사무처장,각 위원회의 위원장, 부설기관, 회원단체, 회원조직, 사업단의 책임자, 부책임자 및 집행책임자, 각위원회의 위원장 등 당연직 위원과 총회에서 선출되는 선임직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2004.2.12. 9차총회 전문개정)

2. (2004.2.12. 9차총회 전문삭제)

3. (2004.2.12. 9차총회 전문삭제)

4. 집행위원회는 인원규제 없이 상임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약과 집행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004.2.12. 9차총회 전문개정)

제14조의 2(회원사업위원회) (2004.2.12. 9차총회 전문삭제)

제14조의 3(정보공개사업단) (2004.2.12. 9차총회 전문삭제)

제14조의 4(시민사업위원회) (1999년 2월 26일 4차총회 전문삭제 )

제14조의 5(지역운동위원회) (2004.2.12. 9차총회 전문삭제)

제14조의 6(여성위원회) (2004.2.12. 9차총회 전문삭제)

제14조의 7(연대기획위원회) (2004.2.12. 9차총회 전문삭제)

제14조의 8(재정위원회) (2004.2.12. 9차총회 전문삭제)

제14조의 9(정책위원회) 우리모임의 정책사업 및 운동 정책을 연구, 주관하는 정책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2004.2.12. 9차총회 전문개정)

제14조의 10(회보편집위원회) (2004.2.12. 9차총회 전문삭제)

제14조의 11(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우리 모임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2004.2.12. 9차총회 전문 신설)

제15조(사무처) 우리 모임의 실무집행기관인 사무처의 구성과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1997.2.14 2차 총회삭제)
2. 사무처는 제반 일상 회무를 총괄 집행한다.
3. 사무처는 사무처장과 업무상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1999.2.26 개정, 2005.1.28 개정)
4. 사무처장은 여러 위원회와 부설기관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해당 기관의 실무를 총괄하여 지원한다.

#### 제4절의 1 회원조직과 특별위원회

제16조(회원조직) 회원은 자신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활동을 벌이기 위하여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다음과 같은 회원조직을 만들 수 있으며 각 기관들은 회원조직의 활동을 지원 협력한다.

1. 회원모임은 관심 분야의 동일성이나 직업계층의 동일성에 기반하여 공동의 활동을 벌이는 회원조직.(2004.2.12. 9차총회 전문개정)
2. 지역조직은 지역별 생활근거지의 동일성에 기초하여 공동의 활동을 벌이는 회원조직.(2004.2.12. 9차총회 전문개정)

제16조의1(특별위원회) 특별한 사업의 집행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은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6조의2 우리모임의 산하 회원조직과 사업단, 위원회와 부설기관의 임원은 각 조직별로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단 총회 또는 집행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2004.2.12. 9차총회 전문신설)

#### 제5절 고문·자문위원·전문위원 및 부설기관

제17조(고문·자문위원 등) 우리 모임의 활동에 대한 지도·자문을 위해 고문과 지도위원, 자문위원, 전문위원을 의장단의 추천으로 집행위원회에서 위촉할 수 있다.(2001.1.16 6차총회개정)

제17조의 1(대변인)(1998.2.26 3차총회 전문삭제)

제17조의2 (부설기관) 우리모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시 다음과 같은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설치는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 올바른 시민 대표의 선출 등 지방자치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사업을 추진하는 참여자치운동본부

2. 참된 주민자치를 실현을 위한 민간 지도력의 개발과 훈련을 위한 여러사업을 추진하는 시민교육센터

3.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한 여러사업을 추진하는 공정선거운동본부

4.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지방자치의 정책대안을 연구 개발하는 여러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정책센터

5. 우리모임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기타 부설기관

제17조의 3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시민의 공공적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상담과 지원을 위해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내규로 정한다.(1999년2월 26일 4차 총회 신설)

#### 제6절 임원의 임기와 의결정족수

제18조(의결정족수) 우리 모임의 각종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의 사항은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2/3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개정
2. 임원의 불신임과 회원의 징계와 복권
3. (2004.2.12. 9차총회 전문삭제)

제19조(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2004.2.12. 9차총회 전문개정)

#### 제4장 상 별

제19조의1 (회원의 표창) 모범적인 활동을 벌인 회원을 집행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제20조(징계) 다음과 같은 잘못을 범한 회원에 대하여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정권,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2000년 5차 총회 개정)

1. 우리 모임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2. 우리 모임의 규약과 주요결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3.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치 않을 경우
4. 시민운동단체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제21조(복권) 징계된 회원은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복권될 수 있다.

제21조의1 (참여자치시민상) 참된 주민자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사와 단체, 기업에 대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참여자치시민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5장 재 정

제22조(재정) 우리 모임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23조(회계년도) 우리모임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2000년 5차정기총회 개정)

## 제6장 감 사

제24조(감사) 총회는 약간명의 감사를 선임하고 감사는 사업 및 재정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 부 칙

제1조(규약의 개정) 규약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발의되고 총회에서 개정한다.

제2조(일반원칙의 준용)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3조(시행) 이규약은 총회에서 통과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1995년 4월 28일 창립총회 제정

## 부 칙(1997년 2월 14일 2차 총회 개정)

제1조(준용)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약은 총회에서 개정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이 규약 발효이전에 회원(단체)으로 가입한 회원은 이 규약이 정한 정회원으로 본다. 단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회원(단체)은 준회원으로 본다.

## 부 칙(2001.1.16 6차총회 개정)

제1조 이 규약의 개정은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발의되고 총회에서 개정한다.

## □ 임원규정

제1조 임원은 공동의장, 감사, 상임집행위원, 집행위원, 각 기구 실행(운영, 집행)위원을 가르킨다.

제2조 임원은 참여자치의 규약과 활동규범, 임원영입 및 활동상의 책임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제3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은 월 2만원 이상, 연 20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다.

제4조 임원이 임기 중에 사퇴하고자하면 사퇴 1개월 이전에 사퇴의사를 소속 조직의 장에게 밝히고 해당 조직의 장은 이를 공동의장, 집행위원장에 보고한 이후에 사퇴처리할 수 있다.

제5조 임원은 조직의 결의 없이 정당에 직책을 갖지 아니한다. 임원이 정당의 직책을 갖고자할 경우 그 전에 임원직을 사퇴하여야한다.

제6조 기타사항은 회원규범에 준한다.

## □ 권력감시운동 준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참여자치연대의 권력감시운동의 일반적 준칙을 규정, 운동의 도덕성을 견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력감시의 정의) 권력감시라 함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영역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기관,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개인 및 조직의 권력 행사와 운용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부당한 권력의 행사와 운영을 방지, 시정을 요구하는 일체의 활동을 뜻한다.

제3조(권력감시의 목적) 권력 감시운동의 참여민주주의를 증진시키고 부당한 권력의 운영과 행사를 방지하는 공익적 목적으로만 진행된다.

제4조(권력감시의 대상) 권력감시의 대상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에 참여하거나 사회적으로 상대적 우월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든 개인, 집단, 기관, 조직 및 그 활동을 가르킨다.

제5조(준칙) 권력감시운동에 있어서 아래의 준칙을 준수한다.

1. 철저한 조사와 합리적 대안을 통해 권력을 감시한다.
2. 권력감시 대상에 대해 일반적 다수의 의견과 한쪽의 의견만을 듣고서 평가하지 않는다.
3. 내부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는데도 쉽게 발언하지 않는다.
4. 권력감시를 완화하는 대가로 일체의 금원과 지위를 보상받지 않는다.
5. 권력감시 대상으로 부터의 일체의 로비를 허용치 않으며 감시대상의 잘못에 대해 타협하거나 침묵하지 않는다.
6. 각종 정부기관의 자문기관에 참여할 경우 성실히 참여하며 전문성 등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치 않는다.

7. 주요 임원의 경우 별도의 결의가 없는 경우 정당원, 선출직 공직선거 후보자 또는 그 선거운동원이 되지 아니한다

제6조(준칙준수) 준칙 위반의 사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회원은 사무처장에게 이를 고지하고 사무처장은 의장단과 집행위원장과 협의 신속히 처리하여야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한다.

제7조(임원의 의무) 권력감시대상자로부터의 접촉, 제안 등 어떠한 형태의 로비를 받은 임역원은 즉시 사무처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한다.

제8조(지문위원 등) 우리 단체의 직함을 가진 사람이 정부기관 등 각종 권력감시대상이 운영하는 기관으로부터 해당기관에서 직함을 부여하는 지위로 참여를 요청 받을 경우에는 즉시 이 사실을 사무처장에 통지하여야하며 사무처장은 이를 의장단 및 집행위원장과 협의 조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될 경우 집행위원회 또는 상임집행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옴브즈맨) 의장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권력감시 사업에 대한 회원과 시민의 평가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자치연대 옴브즈맨을 위촉할 수 있으며 사무처는 옴브즈맨의 제보 사항에 대해 성실히 처리한다.

제10조(보조금 사업) 원칙적으로 권력감시대상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아 권력감시사업을 수행치 아니한다.

제11조(정보의 공개) 권력감시 사업의 사안별 원칙과 방향, 방법 등에 대해 회원의 정보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사무처는 보안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이를 공개한다.

제12조(개별활동금지) 조직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리단체를 표방한 개별적 권력감시활동을 금지한다.

## □ 자원활동 내규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자원활동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자원활동, 자원활동가 및 그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자격) 본 단체의 자원활동가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원칙적으로 무보수로 일하는 분
2. 업무에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
3. 참여자치연대 각 부서에서 매주 3시간 이상 자원활동을 하는 분
4. 자원활동 기본교육을 3회 이상 이수한 분
5. 본 규정의 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분

단, 전문가 집행위원이나 해당 부서장의 판단으로 자원활동가로 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된 분은 그 활동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제외할 수 있다.

제3조(권리) 1. 자원활동가 모임을 만들고 참여할 수 있다. 여기서 자원활동가 모임은 친목도모, 활동가의 자질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담는 성격을 띤다.

2. 자원활동 해당 업무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담당간사와의 협의하에 참여자치연대의 전반적 업무에 관해서도 의사를 개진할 수 있다.

3. 사업참가비 10% 할인 등의 혜택을 받는다.

제4조(교육) 모든 자원활동가는 3회의 기본교육, 반기별 재교육 과정(예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그러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러한 교육이 불필요하다고 해당부서장이 판단한 경우 면제 혹은 연기할 수 있다.)

제5조(배치) 1. 자원활동가 기본교육(3회)을 이수한 분 중 본인의 능력, 관심, 배치희망부서 등 활동가 개인의 요구와 활동부서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자원활동담당간사가 적절하게 배치한다

2. 적절한 활동업무가 없을 경우 자원활동가는 대기할 수 있고, 활동가능 업무가 생기면 배치한다.

3. 배치결정 후 1주일 내에 활동부서 담당간사는 배치된 자원활동가와 연락하여 해당업무에 배치한 후 그 결과를 자원활동담당간사에 통보한다.

제6조(업무변경과 재배치) 주무부서와 활동부서, 자원활동가가 협의하여 부서를 변경하여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고, 업무 변경시 부서별 교육과 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활동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

1. 각 부서에 배치된 자원활동가는 각 부서 담당간사의 책임하에 활동한다.

2. 각 부서에 배치된 자원활동가는 해당 부서의 담당간사와 부서장의 지시와 위촉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활동하다. 특히, 대외적인 업무는 담당간사와 협의하고 자원활동가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3. 각 부서에 배치된 자원활동가는 자신에게 위촉된 업무에 관하여 정확히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경과와 결과를 반드시 해당 담당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일반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제외한 문서는 담당간사와의 협의 하에 열람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중에 취득한 정보나 지식을 다른 곳에 누설하지 않는다.

5. 월 1회 각 부서별로 자원활동 평가의 시간을 갖는다.

6. 매 자원활동시에 활동일지를 기록하도록 한다.

7. 자원활동 시간은 본 단체의 업무시간에 준한다. (단 담당간사와의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8. 활동시간, 업무마감등의 약속을 사전협의 없이 어기지 않는다.

9. 자원활동 수칙을 준수하고 상호간 예의를 지킨다.

제8조(관리 변동 자원업무개발 등) 1. 자원활동가 전체관리는 지정된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활동 담당간사가 하고, 부서에 배치된 자원활동가는 활동부서에서 담당한다.

2. 활동부서는 자체노력을 통하여 자원활동 관리를 하며, 변동시 자원활동담당간사에게 통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 활동부서들은 사업기획 시 자원활동가들의 업무를 미리 선정해 놓는 등 자원활동 업무개발에 힘쓰고 자원활동가들의 수요에 관하여 사전에 자원활동담당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확인 인정 시상 등) 1. 자원활동가의 요청에 따라 자원활동의 내용에 관한 확인서를 수시로 발급해 줄 수 있다.

2. 연 1회 '자원활동 인정서'를 발급한다.

3. 그 동안의 활동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1년 이상 활동한 자원활동가 중 열심활동가를 선정하여 연 1회 표창한다.

4. 표창 대상자 선정은 활동부서 간사와 주무부서 담당자의 협의로 1차 선정하고 집행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한다.

제10조(자원활동의 중단사유) 1. 본인이 종결의사를 밝힌 분

2. 정당한 사유나 사전 통지 없이 연속 4회 이상 약속된 업무에 결근한 분

3. 자원활동 규정을 위반한 분

4. 기타 본 단체에서 자원활동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분

제11조(자원활동 중단절차) 1. 제10조의 2내지 4항과 같은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원활동가의 경우 활동부서 간사가 자원활동담당간사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향후 절차에 관해 상의한다.

2. 제10조의 2내지 4항과 같은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원활동가의 경우 해당 부서의 사무국 간부회의에 안전으로 제출하여 사무국 간부회의 의결로 자원활동 중지를 결정한다.

## ☐ 민원처리 내규

### 1) 목 적

이 규정은 참여자치연대에 접수되는 각종 민원을 공정하고 친절하며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상근자들의 지침이다.

### 2) 민원의 정의

민원이라 함은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접수되는 각종 상담, 진정, 제보 및 시민의견 등을 말한다.

### 3) 민원처리의 원칙

- 참여자치연대에 접수되는 모든 민원에 대해 시민의 권익을 지킨다는 관점에서 친절과 성의를 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참여자치연대에 접수되는 모든 민원에 대해 상근자 개인이 자의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되며



공식적 절차를 밟아 처리하여야 한다.

- 접수되는 모든 민원은 접수내용과 처리결과를 문서상으로 분명히 남기도록 한다.
- 접수되는 민원은 시민의견과 상담 및 진정으로 나누어 각각의 처리절차에 따른다.
- 제보의 처리는 별도의 제보처리내규에 의거 처리한다.
- 민원인의 사적 비밀에 관해서는 공익에 관계되지 않는 한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 민원처리의 절차

##### (1) 시민의견의 처리절차

###### ① 전화, 방문인의 경우

- 최초접수자는 정해진 접수철 양식(시민의견 및 민원)에 따라 성명, 연락처, 의견 등을 빠짐 없이 기재한다.

- 공식적인 접수는 본인이 신원과 연락처 등을 밝히는 경우에 한한다.

- 본인이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경우는 일반정보로 취급한다.

- 모든 상근자는 타 민원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의 연락처를 비치하고 타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신속하게 안내한다.

- 최초접수자는 접수 즉시 해당 기획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실국의 업무일 경우 자체에서 처리하되 타부서의 업무이거나,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 연대기획국장에게 보고한다.

- 연대기획국장은 담당부서 지정이 필요한 경우,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담당부서를 지정 이관하며, 담당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자체 처리한다.

- 시민의견의 처리는 정책참고, 참여자치연대 매체기고를 통하여 가능한 한 반영하고 본인에게 이를 통보한다.

- 시민의견에 관하여 전문가등의 검토에 따라 대응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의견서 발송, 정보공개청구, 감사청구, 고소고발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 민원인에게 답신이 필요한 경우, 전화나 우편을 이용하여 답신한다. 이경우에도 소정의 결재절차를 거쳐 행한다.

###### ② 팩스나 우편의 경우

- 접수된 팩스나 우편물을 접수 문서철에 철하고 민원처리대장에 사본을 첨부하여 전화 접수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 담당부서나 담당자가 명시되어 있거나 분명한 경우 담당부서로 이관하며, 담당자가 불분명한 경우 연대기획국에서 담당부서를 할당하거나 자체처리한다.

- 이 경우에도 전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참여자치연대 사업에 반영하거나 대외적으로 대응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처리한다.

### ③ PC통신의 경우

- 담당부서나 담당자가 명시되어 있거나 분명한 경우 정보통신담당자가 공지사향 문서보관함에 게재하고 담당부서에 통보한다.
- 담당자가 불분명한 경우 정보통신담당자는 내부랜상의 공지사향 보관함에 게재하고 연대기획국장에게 보고한다.
- 연대기획국장은 담당부서를 할당하거나 자체처리한다.
- 그 처리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전화, 팩스, 우편의 경우에 준한다.

### (2) 상담 및 진정의 처리절차

① 상담 및 진정의 접수는 전화상담, 팩스 및 우편상담, PC통신 및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 상담 및 진정의 접수는 3항의 접수지침에 따른다.
- 방문의사를 표하는 상담인에 대해서는 전화로 접수한 후 방문여부를 연락하겠다고 답변한다.
- 사전에 아무 연락없이 방문하는 상담자는 가급적 접수만 한 뒤 추후 연락하여 답변한다.

② 접수된 상담은 반드시 상담인에게 그 검토결과를 통보하되 일주일 이내에 처리,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안에 따라 일주일을 넘길 시 상담인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한다.

③ 전화상담은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친절하게 접수한다. 상담인의 태도가 극히 불량하더라도 예의를 갖추어 친절하게 접수한다. 상담인의 태도가 극히 불량하더라도 예의를 갖추어 더 이상 응대하기 어려울시 부서책임자에게 협조를 요청한다.

④ 여타 민원기관에서 상담하는 것이 상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은 타 민원기관을 안내한다.

⑤ 변호사가 이미 선임된 사건, 판결이 확정된 민형사사건은 접수하지 않는다.

⑥ 개인간의 순수한 민사분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⑦ 법률조언이나 상담이 아닌 언론에 제보, 압력을 요구하는 상담은 일단 접수한 뒤 여론조성을 통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검토하여 추진한다.

⑧ 참여자치연대에 접수된 상담인의 개인정보는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는다.

⑨ 1차 상담자는 상담내용에 대한 즉답을 가능한 한 피하고 접수한 후 2차 상담자에게 넘긴다. 다만 급박한 사안이거나 바로 즉답이 가능한 경우 접수 후 2차 문의, 토론후 바로 회답해 준다.

⑩ 참여자치연대에 상담을 하는 사람은 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이 많으므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를 상담인이 알게 하면서 공감을 얻도록 한다. 국가권력에 의한 개인 피해인지, 재벌 등에 의한 개인 피해인지, 강하고 악한 개인에 의한 피해인지, 단순한 사인간의 분쟁인지, 단순한 감정 싸움의 확장인지를 파악한다.

(3) 상담 및 진정의 접수 - 처리에 관한 세부지침

- ① 접수자 및 접수방법, 접수일을 상담카드에 먼저 기재한다.
- ②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려는 상담자에게는 회신을 받으시려면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고 설득하고 그래도 남기지 않겠다면 그대로 접수한다. 단 이같은 상담은 접수로써 종료한다.
- ③ 상담제목은 상담의 내용을 상세히 파악한 후 2차 상담자가 기재한다.
- ④ 상담내용 작성은 일반적인 6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작성하되 기초사실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우선 메모한 뒤 상담인에게 그 내용이 맞는 지를 확인하여 카드에 기록한다.
- ⑤ 상담인이 권리침해를 당한 대상기관, 기업, 또는 개인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 ⑥ 상담인이 참여자치연대에 바라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여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즉, 법적조언을 구하는 것인지, 소송대리를 원하는지, 변호사소개를 원하는지, 언론을 통한 여론형성 및 압력은 원하는지, 해당기관 또는 기업에 항의를 조직적으로 해달라는 요구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⑦ 팩스 및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된 상담은 지정된 담당자가 그 내용을 간략히 상담카드에 기록한 후 첨부서류와 함께 2차 상담으로 넘긴다.
- ⑧ 회원가입여부는 2차 상담자가 답변을 주면서 상담인의 성향, 만족도 등을 파악하여 권유한다.
- ⑨ 처리결과란에 답변자 성명은 2차 상담자 중 최종 답변자가 기록한다.
- ⑩ 2차 상담자는 자신이 최종답변을 내리지 않을 때라도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자기나름의 검토의견을 기재하여 다음 상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말미에 성명을 기록한다.
- ⑪ 2차 상담자는 최종답변에 대한 자신있는 판단이 서지 않을 시 참여자치연대의 관련변호사에게 전화하여 기탄없이 문의한다.

5) 민원의 처리유형

- (1) 참여자치연대에 접수되는 각종 민원 중 당사자가 직접 대응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진정, 정보공개청구, 감사청구, 방문처리등의 요령을 안내하여 당사자가 직접 처리케 한다.
- (2) 참여자치연대에 접수되는 각종 민원 중 참여자치연대가 대상기관에 공시의견서를 발송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 ① 참여자치연대 명의로 공문발송 : 가치판단 전무  
[예시문안] “별첨 문서와 같이 진정인이 저희단체에 — 내용으로 진정해왔는 바 귀기관에 이를 송부하오니 진정인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선처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 ② 참여자치연대 명의로 공문발송 : 일부 가치판단  
[예시문안] “별첨 문서와 같이 진정인이 저희 단체에 — 내용으로 진정해왔는바 저희들의 검

토로는 — 점에서 일리 있다고 판단되는 바 엄중히 처리하여 진정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참여자치연대 명의로 공문발송 : 특정양식

[예시양식] 수사의뢰/감사의뢰 등등

(3) 접수되는 민원중 참여자치연대가 직접 정보공개청구, 감사청구, 고소고발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각각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4) 참여자치연대에 접수되는 민원 중 참여자치연대가 직접 처리키 어렵고 그렇다고 당사자가 직접 처리키도 어려운 경우 전공 변호사나 기관에 대해서 소개해 준다. 다만 이 경우에는 나중에 그 변호사나 기관과의 분쟁에 대한 책임이 없도록 당사자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만 소개한다.

(5) 참여와 자치 등의 매체에 게재하는 것이 필요하고 판단되면 해당 국장이나 연대기획국장의 판단에 따라 게재한다.

## □ 제보처리 내규

### 1) 목적

이 규정은 참여자치연대에 접수되는 각종 제보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제보에 대한 공정한 처리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처리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제보접수자의 임의적 처리에 따른 문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처리원칙

- 제보는 접수자가 임의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결재과정을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 제보내용은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되며 최소한의 증빙을 통해 제보내용의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외적으로 처리한다.
- 제보가 접수되면 먼저 제보자의 신원, 제보자와 피제보자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보에 대해서는 제보내용의 객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와 검토를 해야 한다.
- 제보내용의 객관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위법성 여부와 함께 사회적 상식이나 규범, 도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제보의 처리는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보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 3) 절 차

- 제보의 최초 접수자는 제보의 내용과 증빙자료, 일차적인 검토의견을 “제보내용 및 처리결과” 서식을 통하여 소속 국장에게 가능한한 신속하게 보고한다.
- 제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부서의 장은 검토 후 즉시 사무처장에게 보고한다.]
- 제보내용에 대한 최종확인과 처리방법의 결정은 사무처 간부회의에서 하며, 회의록에 기재하고, “제보내용 및 처리결과” 서식은 연대기획국에서 별도로 보관한다.
- 제보내용의 대외적 처리는 고소 및 고발, 수사의뢰, 정부기관이첩 등으로 하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제보내용의 처리는 사전에 대표 및 집행위원장 등 주요 임원과 협의한다.

### ☐ 회의자료 작성 제출

1) 모든 회의자료는 보고자료와 안전자료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① 향후 일정 : 일시, 장소, 행사제목
- ② 보고자료
- ③ 안전자료
- ④ 안전 배경자료
- ⑤ 위원의 출석현황 및 회비 납부현황

2) 간부회의 (매주 목요일 오전 7시30분) (2005.1.18 10차총회 전문삭제)

- 각 부서의 담당간사는 매주 수요일 오후 5시까지 보고 및 안전자료를 취합, 작성하여 기획국으로 보낸다.

- 보고의 내용은 주간 단위로 지난 업무의 보고와 다음 주간의 업무계획으로 구성된다.

- 기획국에서는 실국의 자료를 모아 회의자료를 작성한다.

- ① 전체 일정 통합정리
  - ② 전차회의록 정리
  - ③ 전차 회의 결정사항 및 집행결과 보고
  - ④ 국실별 보고
  - ⑤ 안전
  - ⑥ 안전배경자료
- 회의록은 기획국에서 작성하여 회람하도록 한다.
- 회의자료는 보안문서

3) 상임/집행위원회 (매월 세 번째 화요일 오후 7시)

- 각부서 담당간사는 매월 첫 번째주 금요일 오전3시까지 상근간부회의 자료와 함께 기획국으로 부서의 자료를 취합. 작성하여 보낸다.
- 월별 단위의 업무보고와 업무계획, 안건으로 자료를 작성한다.
- 집행위원회의 보고자료는 압축적으로 작성하여 A4 반장을 넘기지 않도록 작성한다.
- 전달의 회계보고를 첨부한다.
- 두 번째주 토요일 오전 e-mail로 집행위원들에게 보낸다.

4) 운영위원회 (2005.1.28 10차 정기총회 전문삭제)

- 반기별 개최된다. (1년에 2번)
- 운영위원회 자료는 개최일 1주일 전까지 제출한다.
- 운영위원회의 안건은 운영위원회 개최직전 상임집행위원회에서 확정한다.
- 사무국은 모든 운영위원에게 e-mail 혹은 우편으로 발송하고, 참석여부를 확인, 위임여부와 참석자를 파악한다.

## ☐ 회계관리 내규

이 내규는 참여자치연대의 사무처 중앙재정, 각 실국별 독자재정부서의 회계관리 방침을 일원화 하고 회계항목의 처리, 보고, 결재 등의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1). 지출의 발의, 결재, 영수 및 입금 처리

(1) 모든 부서의 지출은 참여자치연대 수입지출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5만원 이하는 각 부서의 장의 협의를 거쳐 회계담당자가 지출하며 5만원 이상은 실국장을 거쳐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는다.)

(2) 모든 지출은 지출결의서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지출결의서의 발의, 결재, 지출란의 날짜와 금액, 비고란을 기입하고 지출결의서 뒷면에 영수증을 붙인다.

(3) 모든 수입은 입금표를 통한다. 입금표는 세액은 공란으로, 입금액에 금액을 표기하고, 날짜와 비고란의 입금내역을 표기한다.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은 통장기재일 혹은 통장정리일을 기준으로 입금 처리한다.

(4) 입금표와 지출결의서는 날짜순으로 보관하며, 월별로 철한다.

## 2) 회계장부의 처리

- (1) 회계장부는 입금표와 지출결의서의 내용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 (2) 회계장부 기입은 지출결의서상의 지출날짜별로 당일 기입하여야 한다.
- (3) 회계장부에는 월별잔액을 표기하고 이는 실제 금액(통장잔고와 현금상황)과 일치하여야 한다.
- (4) 회계장부는 手技를 원칙으로 하되,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계장부를 기입할 경우에는 월별로 장부를 출력하여 실국장과 사무처장의 결재와 승인을 받는다.
- (5) 프로젝트사업의 재정은 부서 회계장부이외에 별도의 회계장부 및 통장으로 관리한다.

## 3) 회계 항목의 구분

- (1) 수입지출 회계처리는 다음 항목(표1,2)에 따라 한다.
  - ① 구분항목은 지출결의서 우측상단에 이용할 수 있다.
  - ② 특정한 행사수익과 행사비는 타항목과 겹치는 수입과 지출내역이 있더라도 단위행사별로 결산하여 처리할 수 있다  
(○○토론회 행사비(지51) : 행사준비를 위한 홍보, 발송, 사무비품 등 동항목에 묶어서 처리할 수 있음)
  - ③ 출장비(지92)는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차 무궁화 기준, 버스는 일반 고속버스 기준인 교통비에 제한하여 지급한다.
  - ④ 회의비(지91)는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다.
  - ⑤ 회의참가비(지93)는 각종 회의, 워크샵, 교육 참가비를 포함하며, 금액과 무관하게 실국장과 사무처장의 결재를 요한다.

- (2) 회계보고는 수입지출 항목에 맞도록 한다.

## 4) 회계상황 보고 및 감사

- (1) 사무처와 각 부서의 회계상황에 대해서는 월별로 각 단위의 체계 (위원회, 본부, 포럼 집행위)에 보고, 검토하고 정기 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 (2) 회계장부와 지출결의서, 입금표, 총장은 반년별 사무처 감사의 자료로 이용하며, 사무처는 반년별 감사보고서를 감사와 집행위원회에 제출한다.

## 5) 통장의 개설

- (1) 사무처, 실국별 필요에 따라 통장의 개설과 폐지는 사무처장의 결재를 요한다.
- (2) 부서별로 개설한 통장은 그 구좌를 회계 담당부서에 등록한다.
- (3) 간사나 임원 개인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때에는 예금주 뒤쪽에 부서명을 표기한다.(예-장재완(복지),복진국(청년))

(4) 업무를 위하여 부서별로 마련된 통장은 다른 목적으로 겸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6) 내부거래

(1) 실국별로 대출, 차입을 할 경우에는 사무처장의 승인을 요한다.

(2) 실국별 대출, 차입, 대출상환, 차입금 상환은 반드시 참여자치연대 외부의 대출, 차입과 구분하여 항목 정리한다.

<표1> 수입항목 및 계정 (2005.1.28 개정 -계정항목은 개미회계 계정으로 변경한다)

<표2> 지출항목 및 계정 (2005.1.28 개정 -계정항목은 개미회계 계정으로 변경한다)

#### 7) 재정보금의 원칙

- 모금활동은 후원금과 관련된 다양한 모금활동을 말한다.
- 본회는 소액다수가 참여하는 조건없는 후원 성격의 모금활동을 원칙으로 한다.
- 본회는 사업별 후원금, 전체 후원금, 사무실이전 등과 같은 특정 목적형 후원금, 출판물 광고수주를 통한 후원금, 행사 협찬금의 형태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 사업별 후원금 모금은 후원자회를 두고 추진할 수 있다.
- 모금활동 대상에서 정부기관과 대기업은 제외한다. 단, [참여자치]에 한해서는 기업 광고를 게재 할 수 있다.
- 이외의 후원에 대해서는 상임집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친다.

### ☐ 보수기준 내규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다음의 보수기준은 참여자치연대 간사에게 적용된다.

2) 급여는 기본급, 연호봉으로 구성되며 이를 <표준급여>라 한다. 근속수당, 육아수당, 직책수당, 식비 등 수당을 재정형편에 따라 상임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액 혹은 증액 지급할 수 있다.

① 기본급 : 600,000원

② 연호봉 : 10,000원 × (연령-19)(만 19세부터 1년)

③ 근속수당 : 30,000원 × 근속년수

- 근속년수는 수습기간부터 산입하는 것으로 한다.
- 3년이상 근속자에 한해서는 국내 대학원 진학기간을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 3개월이상의 무급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퇴직후 복직한 경우 퇴직기간을 뺀 기간을 합산하여 근속년수를 정한다.

④ 육아수당 : 50,000원 × 자녀수

⑤ 직책수당 : 국장급 이상 100,000원

⑥ 교통통신지원비 : 100,000원

⑦ 위 급여 중 갑종근로소득과 주민세, 각종 사회보험료중 본인 부담금을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한 후 지급한다.

⑧ 3년이상 근속자가 국내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학비보조금을 일정액 지급할수 있다.

3) 상여금은 기본급의 200%로 분기별 50%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재정 형편에 따라 상임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액 혹은 증액 지급할 수 있다.

#### 4) 직급에 따른 구분

· 정간사 : 표준급여, 상여금 및 수당지급

· 수습간사 : 표준급여 및 상여금 지급

· 견습간사 : 견습기간 2개월 내 위 급여의 50%지급

· 자원활동 간사 :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활동비 일정액을 부서활동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재정자립 부서의 경우에는 부서활동비를 자체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 사무처 재정지원 부서의 경우에는 자원활동 간사의 인원 및 소요비용에 의거해 예산신청서에 부서활동비를 산입하여 제출한다.

· 반상근 등의 근무형태일 경우에는 표준급여에 근무일자를 고려하여 지급한다.

## □ 인사 내규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무처 간사의 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인사위원회) ① 인사위원회는 간사의 직무분석, 채용 및 징계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집행위원회에 선임하는 5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회의는 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3조(직급 및 직위)① 모든 간사는 그 직급에 따라 상근 및 반상근의 정간사, 수습간사, 견습

간사, 자원활동 간사로 구분된다.

② 간사는 부설기관등 재정독립부서를 포함하여 부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유급, 무급 직원을 포함한다.

③ 견습기간은 3개월, 수습기간은 9개월로 한다.

④ 간사는 그 직위에 따라 처장, 국실장, 부장, 간사로 구분된다.

제4조 (임면권) 본 회 간사의 임면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처장이 행한다.

제5조 (채용, 진급, 급여등) ① 자원활동 간사를 제외한 정간사, 수습간사, 견습간사의 채용 및 진급은 사무처장의 추천에 의해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이루어진다.

② 간사의 신규채용은 소정의 자격을 구비한 자 중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한 사무처장의 추천을 통해 인사위원회의 면접과 의결로 한다.

③ 수습간사는 3개월의 견습기간을 이수한 후 근무성적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진급한다. 단, 6개월이상의 자원활동경력자는 견습기간을 필한것으로 간주한다.

④ 정간사는 9개월의 수습기간을 이수한 후 근무성적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진급한다.

⑤ 간사의 직위 및 보직은 경력, 근무성적등을 고려하여 사무처장이 결정하되 직급에 구애 받지 않는다.

⑥ 정간사와 수습간사의 급여는 보수기준에 따르고, 정간사는 복직규정의 혜택을 받는다. 견습간사는 보수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다. 자원활동간사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그 활동비를 부서활동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6조 (교육) ① 견습간사는 1주일의 집중직무교육과 2주 간격의 부서별 순환교육을 받을 의무를 갖는다. 견습간사는 사업에 대한 책임을 갖지 않으며, 인사위원회간사의 책임 하에 교육을 이수한다.

② 수습간사는 기획국이 구성한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받을 의무를 갖는다.

③ 자원활동 간사는 해당 국실장의 책임하에 소정의 교육을 받을 의무를 갖는다.

제7조 (징계) ① 간사가 참여자치연대에 상당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징계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주의, 경고, 감봉, 해직으로 구분된다.

④ 징계 결정을 위한 인사위원회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여 해명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제8조 (이의절차) ① 인사 및 징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인사위원회의 결정 후 1주일 내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이 제기될 시 인사위원회는 반드시 재심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 본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 본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

제3조 기타 사항은 본 규정과 연관된 각종 규정에 준한다.

## □ 성희롱방지 내규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리 단체 각종 활동과 사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지원과 대책을 전개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성희롱의 정의) 단체내 성희롱이라 함은 우리단체의 회원간에 단체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활동 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성희롱 고충 처리의 원칙) 성희롱에 관한 문제는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조사, 처리하며 성희롱 고충에 대한 조사는 신속하게 하고 비밀을 보장하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한다.(제재조치는 징계위원회 규정 준용)

제4조(성희롱 고충 처리) 활동 중에 발생한 성희롱에 대한 회원의 고충 접수와 처리를 위해 여성위원장을 성희롱고충처리 담당자로 지정하며 임원과 상근자는 성희롱에 대한 고충이 발생한 것을 아는 즉시 성희롱고충처리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성희롱 고충 처리 담당자는 고충 접수 즉시 사무처장에 보고하고, 사무처장은 의장단, 집행위원장과 협의하여 신속히 고충을 처리하여야한다.

제5조(성희롱 예방 지침) 상근자와 임원은 아래와 같은 성희롱 예방 지침을 숙지하고 일반회원들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1. 음담패설을 하지 않는다.
2. 회원간 존칭을 사용한다.
3. 성희롱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을 분명하게 표현한다.
4. 상대방의 싫다는 표현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5. 회식 때 술과 유흥을 강요치 않는다.
6. 공식공간에서 음란물을 보지 않는다.
7. 신체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8.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

9. 피해자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10. 양성평등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5조(성희롱 예방 교육) 사무처장은 년 1회 상근자 전체가 참여하는 성희롱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하며, 성희롱 방지내규 및 성희롱으로 규정되는 행위에 대한 예시를 임원들이 숙지토록 공고·게시하여야한다.

제6조(성희롱 제보 불이익 금지) 임원 및 사무처장은 성희롱에 대한 고충을 제기한 사람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제7조(성희롱으로 보는 행위 예시) 성희롱으로 규정되는 행위

1. 눈으로하는 행위

- 특정 신체부위를 음란한 눈빛으로 반복적으로 쳐다보는 행위
- 옷은 입은채로 자신의 성기등을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말로하는 행위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 패설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3. 몸으로하는 행위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4. 성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행위

- 원하지 않는 사적인 만남이나 교제를 요구하는 행위
- 회식자리에서無理하게 옆에 앉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회식자리에서 블루스를 출 것을 요구하는 행위
- 원하지 않음에도 계속 집요하게 따라다니거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 ☐ 회원투표 및 임원선정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규약 제 10조의 1에 의거하여 회원투표 및 임원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모임의 민주적 운영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회원투표라 함은 참여자치연대 회원 전원이 직접 의견을 표시하여 결정하는 의사결정 방법을 말한다.

제3조(회원투표의 종류) 회원투표는 임원 선거를 위한 선거투표와 우리 모임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의결하는 의결투표로 나뉜다.

제4조(회원투표의 방법) 회원은 투표소 방문, 우편, 인터넷의 투표 방법을 선택하여 투표할 수 있다. 단 투표관리위원회는 투표자가 회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표방식을 정하여야 한다.

## 제2장 의결투표

제5조(의결투표의 발의) 의결투표의 발의는 집행위원회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의장단이 발의한다.

제6조(의결투표의 관리) 의결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5인 이내의 회원투표관리위원회(이하 투표관리위원회라 부른다)를 구성한다. 투표관리위원은 의안에 대해 찬반운동을 벌일 수 없으며, 사무처는 필요 실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투표의 공고) 의결투표는 투표일 20일전에 참여자치연대 회보, 홈페이지 및 우편 또는 전자 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의안과 투표 절차에 대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명부의 작성) 의결투표가 공고되면 사무처는 즉시 회원명부를 작성 투표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열람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회원이 명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투표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투표관리위원회는 재심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투표 운동) 회원은 허위 사실 유포, 인신 공격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의안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다. 투표관리위원회는 회원의 참여를 촉진하고 의안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의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찬반 토론 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의안을 설명하는 공보를 인터넷 또는 인쇄물로 제작 배포할 수 있다.

제10조(의결종족수) 의결투표는 재적 회원1/4이상의 참여와 투표 참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결의 효력) 회원투표를 통한 의결 사항은 우리 모임의 최고 의사결정으로 효력을 가지며 같은 회기 안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 2회 이상 회원 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

### 제3장 선거투표

제12조(의장단·감사의 정수) 집행위원회는 임원이 임기 만료 50일전에 의장단과 감사의 정수를 정하고 7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3조(후보의 자격) 회원은 회원생활 문화 규범과 임원규정 등 우리 모임의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는 사람으로서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한 회원은 의장단과 감사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제14조(입후보의 등록) 의장단·감사가 되고자하는 회원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다.

1. 사진이 첨부된 생년월일과 학력 및 경력을 포함한 자기 소개서
2. 우리 모임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서
3. 사업단, 위원회 등 회원 조직의 추천 의결서 또는 회원 10이상의 추천서

제15조(후보자자격심사) 등록된 후보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격 심사를 실시한다.

1. 의장단·감사후보 자격 심사위원회는 집행위원회에서 구성한다.
2. 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에 대한 후보자의 적격성을 심사한다.
  - 후보등록서류의 신뢰성
  - 회원 생활문화규범 및 임원규정 등 우리 모임 제반 규정 준수 의지와 능력 소지 여부
  - 기타 우리 모임의 임원으로서 결격 사항 여부
3.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자격 심사에서 부적격 심사의견을 받은 사람에 대해 후보 등록을 취소한다.
4. 부적격 결정을 받은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재심하여야 한다.

제16조(선거의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당선자의 결정) 투표자 다수의 지지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입후보자가 정수 이내인 경우에는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8조(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투표 방법 등은 의결투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집행위원장 등의 선임) 회원은 본인 또는 타인을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 사무처장의 후보

로 추천할 수 있다. 추천된 후보는 회원생활문화규범과 임원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정회원으로 의장단과 감사로 구성된 집행위원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기타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은 의장단 선거 규정을 준용하되 사무처장은 상근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 제4장 회원의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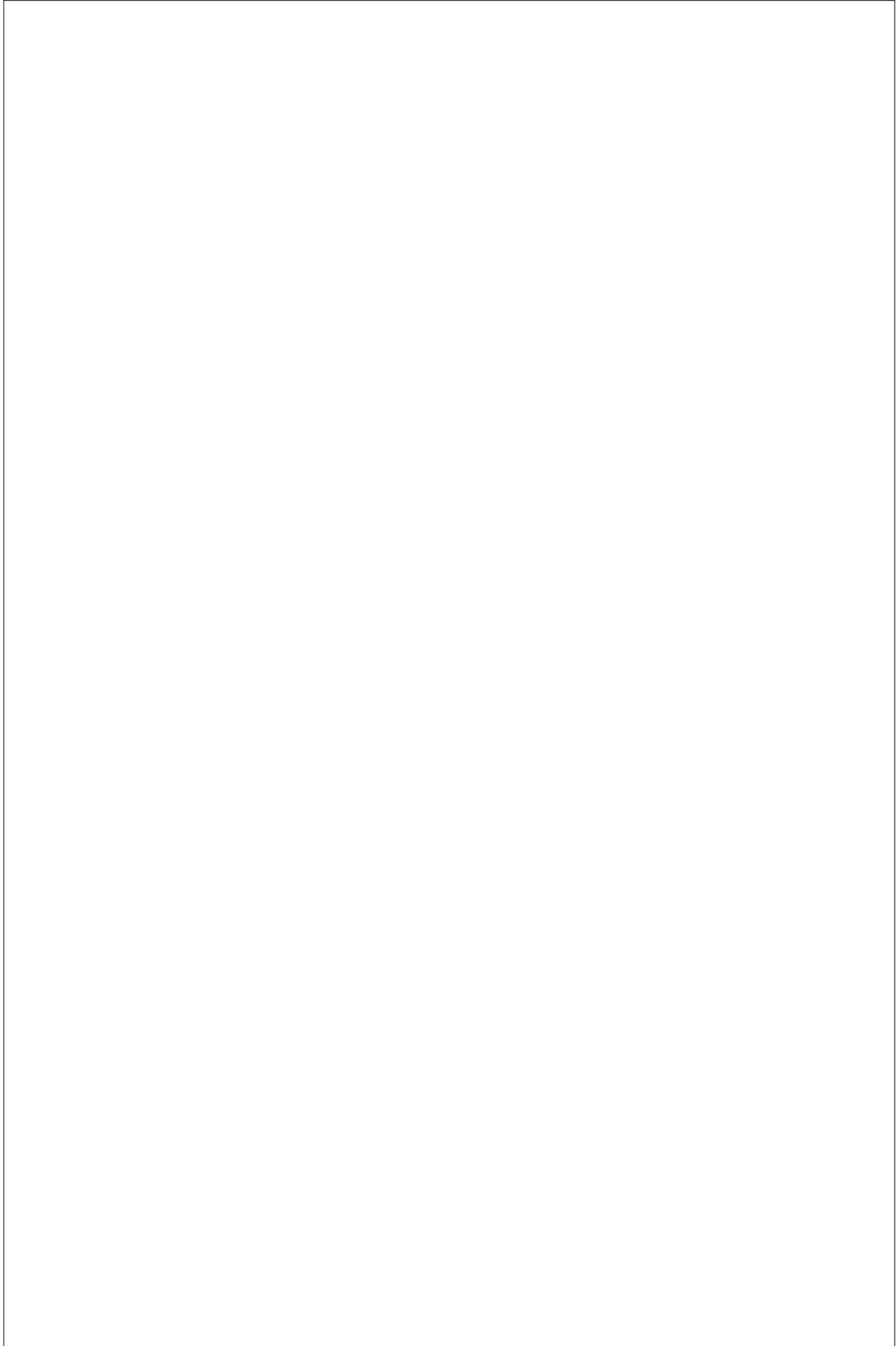
제20조 집행위원회는 우리단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운영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회원의견을 참조하기 위해 전화ARS또는 인터넷 전자우편을 통해 회원의견을 조사할 수 있다.

제21조(회원의견 조사의 효력) 집행위원회는 회원 의견 조사 결과를 존중하여 의사 결정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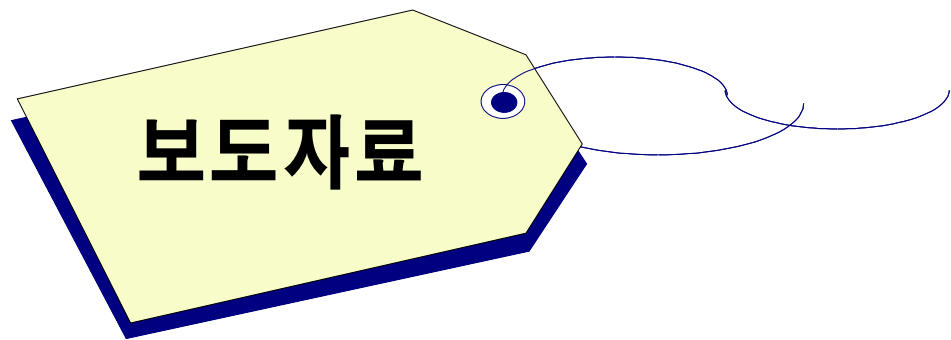
#### 부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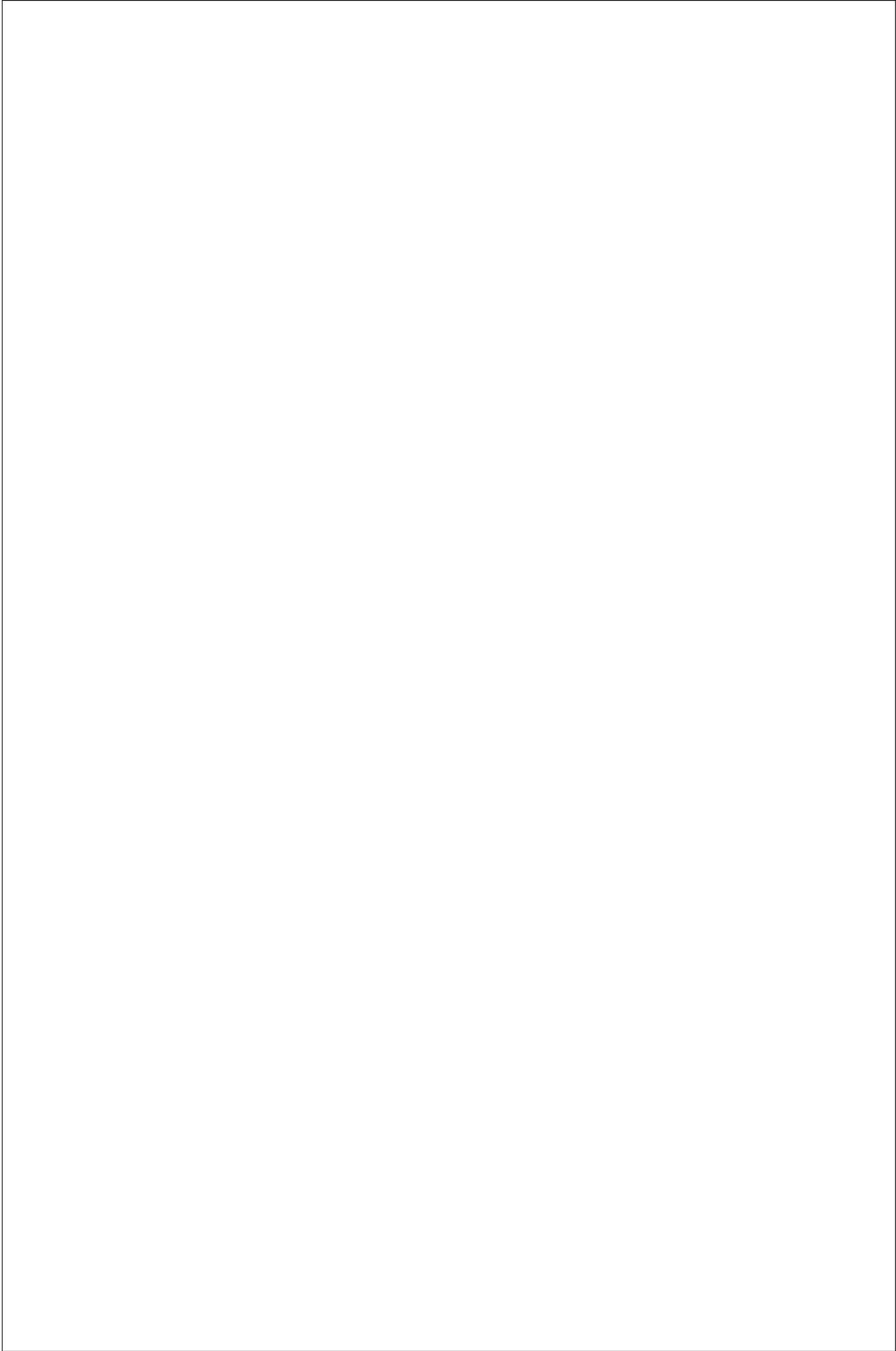
제1조 이 규정은 제정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통상 관례에 따른다.









## ■ 무늬는 '지역균형발전', 실제로는 '수도권발전'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즉각 백지화하라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국회본회의 통과와 기쁨도 순간, 겉으로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말하면서 뒤로는 수도권집중을 부채질하는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반지방적 행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산자부는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수도권 공장증설을 2004년 1월중 허용하고 올해말로 끝나는 첨단업종 외국인 투자대기업에 대한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한 공업배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이 이제 막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기도 전에 발표된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조치를 보면서 우리는 과연 현 정부가 지방을 살리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수도권을 살리겠다는 것인지 분노와 배신감, 허탈감을 지울 수 없다.

마치 법통과를 기다렸다는 듯이 국회통과 바로 다음날인 30일 이같이 수도권집중을 가속화시키는 정책을 발표한 저의는 어디에 있는가?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계속될 것이 확실시되는 마당에 공장 신·증설까지 허용된다면 미처 시행령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무슨 실효를 담보해낼 수 있다는 말인가?

말 그대로 무늬만 국가균형발전법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정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수도권의 공장 증설문제, 규제완화는 인구유입과 경제력 집중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속도를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언급해온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그럼에도 출발선도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의 대규모 공장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기만이며, 해비급 선수와 플라이급 선수를 링위에 올려놓고 겨루어 보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가뜩이나 수도권에 신도시가 속속 건설되고 산업 행정 신도시계획이 추가발표되는 등 반지방적 정책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지않은가.

우리는 분명히 말하고자 한다.

국가균형발전법과 수도권 규제완화를 같이 말해서는 일극집중현상을 해소할 수 없다. 수도권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대기업의 지방이전이 가시화되어 자생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보일때라야 논의될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우리는 정부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조치를 반대하며 2,400만 지방주민과 더불어 이의 총력저지에 나선 것이다.

2. 정부는 더 이상 수도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환경오염과 물류비용의 급등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수도권을 살리고 실질적인 지방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들을 즉각 실천에 옮길 것을 촉구하며 공업배치법 시행령의 개정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한다.

3. 우리는 아직도 중앙부처의 일부 관료들이 소신없이 중앙논리, 수도권논리에 젖어있음을 개탄하며 시대에 흐름에 역행하는 반지방적 관료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4. 우리는 수도권 주민에게 호소한다.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은 수도권의 집중을 해소하는 길뿐이다. 인구집중과 경제력집중에 따른 피해자는 결국 수도권 주민일 수 밖에 없다. 숨막히는 수도권에 더 이상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지않도록 이의 반대운동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 ■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반개혁·부패정치인 낙천낙선운동 돌입 예고

- 2004대전총선시민연대 준비위원회를 구성, 오는 2월 10일 발족, 2004총선시민연대와 연대할 예정 -

○ 녹색연합·참여자치연대·환경운동연합·여민회 등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2004년 1월 30일, 참여자치연대 참여광장에서 2004총선 연대기구 결성을 위한 1차 간담회를 갖고, 2004년 총선에서 반개혁, 부패정치인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가칭)2004대전총선시민연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전격 합의했다.

○ ‘(가칭)2004대전총선시민연대 준비위원회’에서는 오히려 2000총선시민연대가 낙천낙선운동의 깃발을 들었을 때보다도 부패정치 퇴출과 비리정치인 심판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훨씬더 거세졌다고 평가하면서, 지역의 책임있는 시민사회단체로서 끓어오르는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인 동시에, 후안무치한 정치권을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시한번 2004대전총선시민연대를 결성, 2004총선시민연대의 전국적 낙천낙선운동에 적극 합류기로 하였다.

○ 이날 준비위원회에서는 오는 2월 10일에 ‘(가칭)2004대전총선시민연대’ 결성 기자회견을 갖기로 하는 한편, 결성 기자회견 이전에 2차 준비간담회와 대표자회의 등을 개최하여 반개혁, 부패정치인 낙천낙선운동의 세부활동계획 및 조직 구성을 최종 완료기로 결의하였다.

○ 2004대전총선시민연대 결성에 참여하고 있는 박상우 국장은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유권자운동이 반개혁, 부패정치인 낙천낙선운동과 돈선거 감시 시민행동이며, 이러한 목적과 방향에 동의하는 대전지역의 모든 비정파, 비영리단체는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총선시민연대임을 표명했다. 또한 특정정당의 당원이 아닌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개인자격으로도 2004대전총선시민연대 시민행동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낙천낙선운동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 ■ 경선불복 및 상습적 철세 형태 선정 기준 논란에 대한 2004총선시민연대의 입장

1. 2004 총선시민연대의 낙천 대상자 선정기준 가운데 2000년 총선시민연대 낙천 낙선 대상자 선정과 비교하여 가장 큰 특징은 ‘선거법 위반 사범 중 낙천대상자를 당선무효형 이상으로 제한’한 것과 함께 ‘경선 불복 및 상습적, 반복적 철세 행태’를 우선적용기준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2. 이는 경선 불복이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의 근본을 부정하는 매우 심각한 반유권자적 행위이고, 일부 정치인의 고질병인 상습적, 반복적 철선행태가 선거 결과와 의회, 정당질서를 왜곡시키는 주범이며 국민의 정치 혐오감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이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이번 낙천 대상자 선정기준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에서도 매우 높은 비중(28.7%, 3순위, 2004총선 시민연대 발족식 보도자료 (2004.2.3) 참조)으로 나온 국민적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3. 1차 낙천 대상자 발표 이후 다른 기준 및 낙천 대상자 선정에 대한 논란이 거의 없는 것에 비해 경선 불복 및 상습적 철선행태 기준의 적용에 대한 논란이 일부 정당과 언론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이는 2004 총선시민연대가 단순한 당적 변경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오해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되는데 대부분 명단에서 제외된 정치인 중 당적 변경자를 예로 들며 이번 낙천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 기준에 따라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은 기준 적용에 대한 일부의 오해와 함께 사실 왜곡에 기초한 매우 의도적인 정치공세도 포함되어 있어 우려스럽다.

4. 분명한 것은 2004 총선시민연대는 단순한 당적 변경을 선정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경선 불복과 권력을 추종한 상습적, 반복적 철선행태만을 낙천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참고로 이 사유로 선정된 27인중 경선불복이 21명, 상습적 철선행태가 6명임. 경선불복을 사유로 선정된 경우 중 경선불복 단일 사유가 11명, 경선불복과 철선행태 등 다른 사유가 병합된 경우가 10명임. 그리고 반복적, 상습적 철선행태를 이유로 선정된 정치인은 6명으로 이 중 상습적 철선행태만을 이유로 선정된 의원은 단 2명에 불과하고, 다른 사유와 병합된 경우가 4명이다.

5. 이는 정당간 이합집산이 반복되어온 왜곡된 우리 정치사를 반영하여 분당, 합당 및 일회적인 당적 변경을 기준으로 할 경우 너무나 많은 후보자가 낙천대상자로 선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함으로써 대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6. 사실이 이러하고 발표 당시 이점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4 총선시민연대가 마치 당적 변경 그 자체를 선정기준으로 한 것처럼 일부 정당과 언론이 사실을 왜곡하며 형평성 시비를 하는 것은 총선시민연대를 음해하고 낙천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훼손함으로써 그 국민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된 정치 공세라고 판단된다.

7. 더욱이 정치권에서는 위헌 소지로 인해 국회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에서 조차 입법화를 유보한 경선 불복자 입후보 금지를 법제화하려 하고 있으며, 선거 후 1년 내 당적을 변경할 경우 지역구 의원이라 하더라도 의원직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권이 이렇듯 경선 불복이나 잦은 당적이탈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면서 총선연대의 선정기준을 문제삼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8. 우리는 총선연대의 낙천대상자 선정기준이 당적변경이 아니라 경선불복과 권력을 추종하는 상습적, 반복적 철선행태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정치권은 사실을 왜곡하며 총선연대를 음해하고 낙천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훼손하기보다는 국민 여론을 겸허히 수렴해야 할 것이다.

# ■ 관주도의 일방적 조직 구성과 운영이 아닌 참다운 협력의 기틀을 형성할 것을 촉구한다!

## -대전광역시 지역혁신협약회의 졸속 출범에 대한 몇가지 의견-

오늘 대전광역시가 지역혁신협약회의를 공식 발족시켰다. 대전시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한 조직이라면서 관련 시행령은 4월 1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지역혁신협약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도 마련치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출범시켰다.

우리는 혁신협약회의가 참다운 지역혁신의 주체로 바로서야 하며 또 하나의 관변 들러리 조직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몇가지 의견을 밝힌다.

대전시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지역혁신협약회의의 운영 근거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대전광역시 지역혁신협약회의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갖는 자리에서 벌써 1차 지역혁신 5개년 계획을 보고했다. 이는 대전시가 지역혁신협약회의 자체를 내발적 발전 전략의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지역혁신주체간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실질적 혁신주체로 만들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부응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확보에 유리한 환경이나 조성해보자는 식의 구시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혁신협약회의 스스로가 지역혁신의 방향과 원칙을 정립하고 스스로의 역할을 먼저 정립하여 주체적으로 활동하게끔 해야지 시청에서 끌고 다니는 방식으로 지역혁신주체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아울러 우리는 인적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산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마련한 시행령안에 의하면 60인으로 구성할 수 있는 지역혁신협약회의를 40인 이내로 구성하면서 지역혁신의 주요 구성원이어야 할 노동계가 배제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노동계의 협력과 참여가 없는 지역혁신은 새로운 갈등과 대립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없었다는 것은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전략의 부재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안에 의하면 분야별 지역 혁신 주체의 추천에 의거하여 시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는데 추천절차에 의거하기보다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위촉 구성한 것도 지역혁신을 통한 내발적 발전 역량을 결집하는 전략의 결핍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지역혁신협약회의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균형발전기획단과 대응하여 지역혁신기획단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단순히 사무국을 대전발전연구원에 두는 정도의 운영구상도 기존의 관행과 제도의 틀에 너무 얽매어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지역혁신협약회의가 혁신주체의 역량을 발굴하고 발전시켜나갈 중추적 핵심 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역혁신의 기획과 집행 기능을 감당할 전문성과 일관성 투명성 책임성이 부여되어야한다. 특히 혁신협회가 대전시와 중앙정부 및 기초단체를 매개 조정하고, 자립적 지방화를 위한 제도적 학습 능력 제고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면서 각종 지역혁신 지원기관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부여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대전시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의 합의 형성을 위한 노력을 다시 기울여야할 것이다.

우리는 지역혁신 협의회가 공정하고 혁신의지와 역량이 갖춰진 인사들로 구성되도록 촉구하면서 동시에 지역혁신협의회가 주민과 기업 자치단체, 대학이 서로 돕고 협력하는 혁신체제의 구축을 위해 헌신할 것을 호소한다. 또한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이 선언에 그치고 실질을 상실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균형발전을 표방하는 산자부가 벌써 수도권 규제완화에 앞장서고 건교부가 수도권 신도시 개발에 열중하면서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쥐꼬리만한 재원을 배정해 놓고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면 이를 단호히 비판하고 배격하는 결연한 자세를 지역혁신협의회는 가져야 한다. 물론 지역혁신계정의 재원 자체를 증액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체계를 갖추기 위해 혁신협의회 스스로의 노력도 필수적일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지역혁신사업이 기술혁신에 기초한 산업형 지역혁신 사업 구상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지역혁신의 기반으로 로컬거버넌스의 형성과 사회자본의 축적, 문화 생태적 환경에도 주목하는 민주적 지방자치의 확장으로서 지역혁신계획 수립과 추진을 위해 수고해주길 바란다.

대전시는 지역혁신협의회를 하나의 통과 의례나 들러리가 아니라 참다운 지역혁신의 주체 형성의 계기로 삼으면서 아래로부터의 광범위한 지역혁신운동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지역 혁신 주체들 상호간의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인센티브 부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2004. 2. 18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선건 민명수 송인준 윤종삼

#### ■ 500만 유족의 분노를 모아 모리배 집단 한나라당을 심판할 것이다!

2004년 3월 2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은 더 이상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정략적 모리배이며 일부 특수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당이라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었다. 이로써 한나라당과 이에 부역한 의원들이 이 땅에서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한나라당은 총선전략으로 해묵은 이념논쟁, 구시대적인 색깔론을 들고 나와 국민통합과 인권신장을 위한 법안을, 어두웠던 과거 역사의 진실을 밝혀 고통어린 반세기를 산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법안을,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부결시킨 그 죄값을 반드시 치루게 될 것이다.

대전산내학살대책회의 유족을 비롯해 우리 500만 민간인 피학살 유족들은 한나라당의 폭거에 대한 거대한 분노를 모아 이번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단죄할 것이다. 역사의식도 소신도 없는 한나라당 거수기 의원들에 대한 낙선 운동은 물론이거니와 이번 폭거의 원흉인 홍사덕, 이강두 의원의 지역구에 표적 출마 등 정치적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4년 3월 2일  
대전산내학살대책회의

#### ■ 대통령 탄핵안 의결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소추는 합법을 가장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의회 쿠데타이다!**

오늘 우리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하는 국회를 보며 비통함을 넘어 울분을 금할 길 없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진 코미디를 보며 국민들은 쓴웃음과 헛웃음밖에 지을 수 없는 지경이다. 비록 대통령 탄핵안이 합법이라는 외피를 썼다 하더라도 헌법적 근거조차 희박한 정략적 산물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민의 의사를 외면한채 대표권을 남용한 의회 다수의 횡포로서 의회 쿠데타라 아니 부를 수 없다. 한마디로 오늘은 제2의 국치의 날이자,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에 대한 총칼 없는 쿠데타의 날과 다름없다.

우리는 이번 탄핵안을 가결시킨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과연 나라와 국민이 안중에 있는지 묻고 싶다. 이번 탄핵소추안 의결의도는 국민적 여론을 외면한 이성을 잃은 결정으로 이후 벌어질 국가적 혼란은 모두 정략적 탄핵안을 가결한 무책임한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책임이다. 비록 탄핵안 가결에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그 정략적 의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오늘 그들이 선택한 것이 자멸의 길이 되도록 할 것이다. 결국 이들의 정략적 의도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결국 좌절될 것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위헌적인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서 신속하게 결정함으로써 국가적 혼란을 조기에 종식시켜야 함은 물론 온당한 명분도, 법리적 근거도, 상식적 설득도, 국민적 공감대 등 어느하나도 만족시키는 못하는 결함 많은 탄핵소추안에 대해 6개월이나 끌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명쾌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불안과 나라의 안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정략적으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한 16대 국회의 장례를 선언하며, 더러운 의회 폭거에 맞서는 시민운동을 제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연대하여 즐기게 벌여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04. 2. 18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선건 민명수 송인준 윤종삼



## ■ 대전총선시민연대, 독자적인 낙천낙선대상자 선정 위해 총선 출마예정자 소명자료 접수 개시

○ 2004대전총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용우)는 지난 2월 11일 발족 기자회견장에서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동시에 지역정서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낙천낙선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전총선시민연대는 2월 18일 대전지역 총선 출마예정자들을 상대로 소명자료를 접수받기 위한 소명자료 요청공문을 발송하였다.

○ 대전총선시민연대는 2월 24일 낙천낙선리스트 발표에 앞서 리스트 선정의 공정성과 반론권 보장을 위해 소명자료를 요청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제출기한은 2월 21일 오전 11시까지이며, 접수는 대전총선연대에 개설되어 있는 팩스(252-6976)와 이메일(ngotj@korea.com), 그리고 우편등기로 가능하다.

○ 대전총선시민연대가 소명을 요구한 내용은 전국 총선연대가 공천반대인사 선정에 적용했던 7가지 주요 기준(부패비리행위, 선거법위반행위, 개혁법안및정책에대한태도, 반인권전력및헌정질서파괴전력, 의정활동성실성및반의회반유권자적행위, 도덕성및자질, 기타선관위등에등록토록되어있는기초사항의진위)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특히 지역정서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감정 조장행위, 반유권자적·반지방자치적 행위, 지역 주요현안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소명을 요구하였다.

## ■ 낙천낙선운동, 대전 유권자 54.3% 지지, 반대는 겨우 24.1%에 그쳐

낙천낙선명단에 오른 후보는 투표하지 않겠다는 대전지역 유권자가 48.1%

대전총선연대의 낙선낙천대상자 추가발표에 대전지역 유권자 55.7%가 찬성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정치인을 낙선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67.6% 찬성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도사퇴에 대해서도 낙선대상에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53.6%

서청원 전대표의 석방결의안에 가담한 의원에 대해서도 63.6%가 낙선대상에 포함시켜야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 그 어느때보다 높아 69.6%가 투표의사 내비침

○ 대전지역 유권자들은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찬성이 54.3%로 나타난 반면 반대는 24.1%에 그쳐, 상대적으로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총선시민연대가 ARS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디지털 정치문화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결과,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찬성 54.3%, 반대 24.1%, 잘모르겠다는 견해가 21.5%로 나타났다. 이번 ARS전화여론조사는 지난 2월 16일 20세 이상의 대전 지역 거주자 20세 이상의 유권자 1,248명을 대상으로

음혜세력2004대전총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용우)는 지난 2월 11일 발족 기자회견장에서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동시에 지역정서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낙천낙선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전총선시민연대는 2월 18일 대전지역 총선 출마예정자들을 상대로 소명자료를 접

수받기 위한 소명자료 요청공문을 발송하였다.

○ 대전총선시민연대는 2월 24일 낙선낙선리스트 발표에 앞서 리스트 선정의 공정성과 반론권 보장을 위해 소명자료를 요청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제출기한은 2월 20일 오전 10시까지이며, 접수는 대전총선연대에 개설되어 있는 팩스(252-6976)와 이메일(ngotj@korea.com), 그리고 우편등기로 가능하다.

○ 대전총선시민연대가 소명을 요구한 내용은 전국 총선연대가 공천반대인사 선정에 적용했던 7가지 주요 기준(부패비리행위, 선거법위반행위, 개혁법안및정책에대한태도, 반인권전력및헌정질서파괴전력, 의정활동성실성및반의회반유권자적행위, 도덕성및자질, 기타선관위등에등록토록되어있는기초사향의진위)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특히 지역정서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감정 조장행위, 반유권자적·반지방자치적 행위, 지역 주요현안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소명을 요구하였다.

#### ■ 16대 국회가 정치개혁을 위해 마지막으로 꼭 해야 할 일

- 비례대표 대표 확대
- 인터넷 실명제 도입 폐지
-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연령 인하

1. 16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있다. 지난 2월 27일 국회는 정치관계법 및 민생입법 처리는 당연히 뒤로 한 채 자신들의 밥그릇 늘리기 투표만 끝내고 유유히 사라졌다. 정치권의 이런 뻔뻔스러운 행각에 국민들은 혀를 내둘렀다. 16대 국회는 부패로 얼룩져 사상 초유의 구속 기록을 세우면서 결국 자신들의 철밥통만 챙기는 꼼수의 정치로 끝나고 마는가? 정치개혁연대는 16대 국회의 최소 양심에 온 힘을 다해 호소하며 마지막 책무를 촉구한다. 반드시 비례대표를 확대하라.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폐지하라.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연령을 인하하라.

2. 이제는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요구를 수용하여 최소한의 면죄부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정치개혁을 주도한 오명의 국회로 역사 속에 남을 것인지 국회의 선택만 남았다. 16대 국회에 대한 국민적 정서는 국민무시, 부패비리, 안하무인, 이전투구, 후안무치 등이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확인시켜주듯 각 정당은 빗발치는 국민적 비난을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민적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겨갔다. 이런 정치권을 보며 국민들은 무력감과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3. 국민들은 그동안 정치권이 한 일을 낱알이 기억하고 있다. 각 정당의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선택은 명약 낙선(名藥落選)의 결과로 귀결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44일 뒤면 국민들은 당당히 유권자로 일어난다. 국회의 최소 양심 발휘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국민적 요구를 촉구한다. 16대 국회에서 정책전문성, 직능대표성, 여성 및 소외계층의 정치 진출을 위해 비례대표를 반드시 확대하라.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도 반드시 폐지하라.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연령을 반드시 낮춰라. 각 정당이

3월 2일 오늘을 앞으로 가장 후회하는 날로 기억되지 않길 염원한다. 국민들은 묵묵히 4월 15일을 기다리고 있다. 끝

#### ■ 국가와 국민을 무시하고 나라를 혼돈에 빠뜨리는 대통령 탄핵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어제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59명은 헌정사상 최초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총선을 불과 30여일 밖에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불거진 대통령 탄핵정국이 국정파탄과 민생불안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분노와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제 16대 국회는 국민들의 바람과는 거리가 먼 구태와 비리, 부정부패로 얼룩지고 말았다. 반드시 다루어야 할 법안의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하지 않거나 폐기시키고, 현역의원들의 이해관계와 당리당락에 따른 지역구 의석 늘이기에 집착하는 등 임기 마지막까지 한심한 작태로 일관하였다. 정치권이 그동안의 직무유기에 대한 뼈를 깎는 자기반성은 하지 않고 대통령 탄핵을 정략에 이용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다수당의 횡포이자 또 다른 형태의 헌정 파괴임을 지적한다.

그렇다고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회견에서 있었던 노대통령의 특정 정당 지지발언은 정쟁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자 선거중립의 의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 노대통령은 중앙선거위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 요청을 존중하여 남은 기간동안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나라와 국민을 무시하고 부정부패와 당리당락으로 국민을 실망시킨 16대 국회와 두 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거두어들이고 정정당당하게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이 염원하는 정치개혁의 추진과 철저한 자기반성으로 16대 국회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2004년 3월 10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박재묵 김규복 김용우 윤종삼 정순진 조연상

1. 2004총선시민연대(이하 전국총선연대)는 3월 9일(화) 오전 10시 철학마당 느티나무(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무시 공천철회 및 개혁공천 촉구 집중행동주간’을 선포하고 집중 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국총선연대는 각 정당의 공천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지만 정치권 물갈이를 통해 공천혁명을 하겠다고 각 정당의 공언은 빈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전국총선연대는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각 정당의 공천과정을 규탄하며 공천부적격자 공천 철회와 개혁공천을 촉구하기 위한 전국적인 집중 행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2. 이를 위해 전국총선연대는 ▲공천부적격자 공천철회와 시대정신을 반영한 공천기준에 따라 다시 공천할

것 ▲각 정당 공천기준과 공천 세부 기준을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전국총선연대는 1차, 2차 낙천대상자에서 제외된 인사들이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인정되어서는 안될 것임을 밝히고 유권자 검증이 필요한 후보들의 다양한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고 각 정당의 공천결과도 철저히 평가하여 유권자에게 공개하여 향후 정당평가를 통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전국총선연대는 오늘부터 국민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각 정당과 지구당 앞 1인 시위 및 전국 동시다발 길거리캠페인, 100만 유권자 선언 운동 등 집중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 하였다. ▲전국총선연대는 총선이 38일에 밖에 남지 않은 점을 언급하고 국민무시 공천은 국민이 결국 그 정당을 외면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3. 이와 함께 전국총선연대는 각 정당의 공천심사위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공천세부기준을 공개하고 각 정당의 공천기준에 반하는 공천자의 선정사유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기식(총선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사무처장), 서주원(총선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환경연합 사무총장), 백찬홍(2004총선시민연대 집행위원, 정의평화를위한기독인연대 대외협력위원장), 김민영(총선시민연대 공동사무처장), 김해에(총선시민연대 공동사무처장)등이 참석하였다.

4. 이날 2004대전총선시민연대(이하 대전총선연대)는 국민무시 공천철회 및 개혁공천을 촉구하는 전국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각 정당 공천심사위원회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각 정당 시지부에 발송하였다. 끝.

별첨 1. 공천부적격자 공천철회 및 개혁공천 촉구 성명(기자회견문)

#### ■ 공천부적격자 공천철회와 개혁공천을 촉구하는 전국적 집중행동에 돌입합니다.

각 정당의 공천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정당은 공천과정에서부터 국민들과 약속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물갈이를 통해 공천혁명을 하겠다고 각 정당의 공언은 빈말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4총선시민연대는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각 정당의 공천과정을 규탄하며 공천부적격자 공천 철회와 개혁공천을 촉구하기 위한 전국적인 집중 행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합니다.

공천부적격자 공천철회와 시대정신을 반영한 공천기준에 따라 다시 공천할 것을 촉구합니다.

2004총선시민연대는 부패비리 혐의가 있는 정치인 등 공천부적격자는 불출마를 선언하고 명예롭게 은퇴할 것과 공천부적격자를 각 정당 공천과정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각 정당의 공천은 부패비리연루자, 경선 불복 및 상습적 철세정치인, 반인권 전력자, 도덕성 및 자질 부족자를 공천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적 요구에 반하는 국민무시 공천일 뿐만 아니라 시대 정신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공천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에 2004총선시민연대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각 정당의 공천결과를 규탄하며 공천부적격자의 공천을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도덕성, 개혁성, 전문성 등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공천기준에 맞게 새롭게 공천을 할 것을 각 정당에 재차 촉구합니다.

각 정당 공천기준과 공천 세부 기준을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각 정당은 공천혁명을 내세우며 국민의 뜻을 반영한 공천기준을 바탕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공천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각 정당은 외부심사위원회까지 위촉하며 공천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노력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정당은 말로만 개혁공천을 운운할 뿐 어떤 정당도 세부적인 공천기준을 당당히 국민 앞에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천기준조차 공개하는 못하는 것이 과연 개혁공천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외부심사위원회도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2004총선시민연대는 각 정당의 공천기준과 공천 세부 기준을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각 정당 공천심사위원회와 공개 토론회도 제안합니다.

낙천대상자 외에 다른 후보자의 정보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할 것입니다.

2004총선시민연대는 1차, 2차 낙천대상자에서 제외된 인사들이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인정되어서는 안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2004총선시민연대는 낙천대상자 외에 그동안 수집해왔던 다른 후보자의 각종 정보를 일제히 공개할 예정입니다. 공개되는 다른 후보자들도 낙천대상자 선정기준의 개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의정활동 및 정책에 대한 태도, 도덕성과 자질 등 유권자 검증이 필요한 후보들의 다양한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제공할 것입니다. 더불어 각 정당의 공천결과도 철저히 평가하여 유권자에게 공개하여 향후 정당평가를 통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무시 공천 철회와 개혁공천을 촉구하는 집중행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동안 2004총선시민연대는 공천되어서는 안될 인사들의 명단을 각 정당에 전달하고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각 정당은 이를 무시하고 시대착오적 인물들을 다수 공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4총선시민연대는 오늘부터 국민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각 정당과 지구당 앞 1인 시위 및 전국 동시다발 길거리캠페인, 100만 유권자 선언 운동 등 집중적인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총선을 38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무시 공천은 결국 국민이 그 정당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각 정당이 유권자의 물갈이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2004년 3월 9일  
2004총선시민연대

#### <각 정당 공천심사위원회에 보내는 공개 서한>

각 당 공천심사위원회는 공천세부기준을 공개하고 기준에 반하는 공천자의 선정사유를 해명해야

공천혁명, 정치권물갈이를 약속하며 시작된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이 이제 절반을 넘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초 각 정당은 도덕성, 개혁성, 전문성 등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공천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을 엄밀하게 적용하여 혁명적 공천 물갈이로 국민적 바람에 부응하겠다고 공언(公言)한 바 있습니다. 부패와

비리, 반칙과 탈법으로 얼룩진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밀린 어쩔 수 없는 선택이든, 정당 스스로 자구적 차원에서 이뤄진 변화와 개혁의 몸부림이든 이 같은 원칙은 시대적 흐름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막상 내용을 뜯어보면 예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공천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개혁성을 지닌 유능하고 참신한 정치인은 찾아보기 힘든 반면 현역의원, 직업정치인의 공천비율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정치신인을 적극적으로 등용하겠다는 약속은 당선가능성과 기득권의 벽에 가로막혀 공언(空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당 스스로가 내세운 공천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사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천되고 있는 것은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부정·비리연루자, 탈당·경선불복 등 해당행위자, 선거법위반 전력자, 파렴치한 범죄전력자는 총선연대의 낙천기준이 아니라 각 정당이 스스로 제시한 공천배제기준입니다.

총선연대가 3월 2일 현재 각 정당의 공천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야 3당이 총선연대가 낙천대상자로 선정한 정치인 중 부패·비리연루자 10명, 경선불복 혹은 상습적 철새정치인 11명, 반인권전력자 6명, 도덕성 및 자질부족자 5명 등 24명의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역의원의 약60%를 재공천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각 정당이 부패·비리 문제로 국민 앞에 사죄하던 것을, 당적을 옮긴 정치인을 철새정치인이라며 맹비난하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닿을때마다 공천혁명, 물갈이 등을 다짐하던 것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천결과는 식언(食言)을 넘어 유권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한나라당 김문수 공천심사위원장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재판을 계속중인자, 파렴치한 범죄전력자, 부정·비리 등에 관련된 자, 탈당·경선불복 등 해당행위자, 유권자의 신망이 현저히 부족한 자는 우선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총선연대가 선정한 낙천대상자 중 공천을 확정된 20명 중에는 철새·경선불복 경력을 가진 정치인, 부패·비리연루자, 도덕성·자질부족 정치인이 1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비리혐의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뺑소니 전력을 지닌 정치인도 있습니다. 이들이 공천된 이유가 무엇인지 총선연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나라당은 당내부의 반발마저 무시해가며 반인권 혹은 헌정질서파괴 전력을 지닌 다수의 정치인을 공천했습니다. 시대착오적 공천이라는 내·외부의 비난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이같은 공천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단지 ‘구시대의 인물’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색깔론 시비, 지역감정 조장 등과 같은 구시대적 정치행태를 보였거나 인권침해, 헌정질서 파괴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같은 행위는 ‘그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짊어져야 했던 짐’이 아니라 본인이 얼마든지 이를 피해가거나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적극적인 선택으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경력이 인정돼 정치에 입문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공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민주당 역시 상임중앙위 회의에서 공천기준을 강화해 부패·비리혐의 연루자는 공천이 부적격하다고 인정할 이유가 있는 경우 공천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총선연대가 낙천대상자로 선정한 정치인

중 공천이 확정된 12명의 절반이 부패, 비리혐의 연루자입니다. 대선불법자금 문제 등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부패정치 행태를 비난하던 민주당의 모습과는 너무도 상반된 것입니다. 경선불복 정치인, 철새정치인에 대한 공천확정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당을 떠난 정치인은 철새이고 입당한 정치인은 구당자로 평가했다면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얼마전 정치권이 경선 불복자의 입후보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정하려 했던 취지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총선연대의 낙천인사 기준을 심각하게 고려했다면서도 정작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뇌물수수후보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면서 불법적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인을 공천했으며, 이념을 달리하는 당적변경자 역시 공천을 배제한다면서 당선을 목적으로 상습적인 탈당과 경선 불복을 행한 정치인을 공천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도덕성의 기준에 비해 뇌물수수와 불법정치자금 수수의 차이가 무엇이며, 총선연대가 낙천근거로 삼은 상습적, 반복적 철새정치 및 경선 불복과 열린우리당이 말하는 당적변경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열린우리당의 공천과정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이들이 경선도 거치지 않은 채 단일후보로 확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정신과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있습니다.

총선연대는 각 정당이 이 같은 구시대적이고 자가당착적인 공천 행태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외부공천심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외부공천심사위원회는 공천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계파간 이해,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배제하고 국민과 유권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유권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정치인이 공천되거나 기준과 원칙에 어긋난 정치인이 공천된다면, 이를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할 역할을 맡고 있는 외부공천심사위원들의 책임 역시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당내이해관계 또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간의 의견이 엇갈려 외부인사의 의견이 완벽하게 반영되지 못했다면, 이는 각 정당이 적용한 공천심사원칙과 세부기준을 공개해 공천내용의 정당성 여부를 당원과 국민에게 검증 받음으로써 이 같은 한계와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떤 정당도 공천기준과 세부적용원칙을 대내외적으로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시민단체에 불과한 총선연대 역시 낙천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적용기준과 원칙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받고 있는 마당에 공당(公黨)의 국회의원 입후보자 공천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선정세부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이에 총선연대는 각당 공천심사위원장과 외부공천심사위원들에게 공천기준과 세부적용기준을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앞서 지적했던 지금까지 각 정당이 밝힌 공천기준에 반해 공천이 확정된 정치인의 선정사유와 근거를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합니다.

2004년 3월 9일  
2004총선시민연대

별첨 3. 집중행동 주간 사업계획

○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

- 일시 : 3/ 9(화) ~ 3/ 12(금)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
- 장소 : 각 정당 및 지구당 앞에서 전국적인 1인 시위 전개
- 내용 : 공천 부적격자 공천 철회 및 개혁 공천 촉구

○ 각 정당 공천심사위원회 공개서한 발송

- 일시 : 3월 9일(화), 기자회견 이후
- 공개서한 내용 : 공천기준 및 세부지침 공개촉구  
각 정당 공천심사위원회에 보내는 공개서한 발송  
각 정당 공천심사위원 면담추진 및 공개토론 요청

○ 후보자 온라인 정보공개

- 일시 : 3월 10일(수)
- 17대 총선 후보자 온라인 정보공개(<http://www.redcard2004.net>)

○ 국민무시 공천 규탄 및 정치 3악 추방 길거리 캠페인

- 일시 : 3월 13일(토) 오후 4시
- 장소 : 인사동

○ 정치 3악 추방을 위한 시민등반대회 및 캠페인

- 일시 : 3월 14일(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도봉산 매표소 입구, 이후 등반대회

● 대전총선시민연대, 희망정치를 소망하는 낙선후프

- 일시 : 3월 19일(금) 오후 5시 ~ 3월 20일(토) 새벽 01:00
- 장소 : 오류동 센트리아오피스텔 뒤편 <프로포즈>레스토랑

※ 대전총선연대는 각 정당 지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통령 탄핵안 발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 -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탄핵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가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한 것을 보고 참으로 경악과 개탄을 금치 못한다.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계기로 구성된 대통령 탄핵 정국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대립과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여 필경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민의 다수가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은 잘못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를 시정하는 것이 마땅하



지만, 경미한 선거법 위반이 탄핵 사유가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야당들의 행동이 잘못이라는 여론 조사결과가 지금 이 시국을 보는 국민들의 균형 잡힌 민심이라고 본다.

사실 국회의원 선거에 엄정중립을 지켜야할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발언을 한 것은 잘못이며, 지난 대선시기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잘못이고, 대통령 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그 진의가 어떠한 대통령의 거듭된 사소한 말 실수가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참여정부 집권1년 동안 정책의 혼선과 국정운영의 미숙함을 보여 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는 탄핵 소추안 발의 사유에 동의할 수 없다.

우리는 ‘선관위의 지적에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고 보지만 탄핵발의가 잘못되었다’는 대다수 보통사람들의 여론이 옳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들은 무리하게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탄핵소추안 발의가 진정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총선을 앞둔 당리당략에서 출발한 것임을 모든 국민은 알고 있다. 대통령의 경미한 잘못을 빌미로 엄청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탄핵안으로 대응하는 야당의 행위가 말로 국가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생을 도탄에 빠트리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참여정부 출범 후 지난 1년 동안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에 생산적인 정책토론은 없고 소모적인 정쟁만이 지속된 정치 현실을 보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민족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 민생을 위해 상생의 정신으로 대타협하는 큰 정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현실을 개탄해 왔다.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지방분권 관련법 제정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지방 살리기 3대법 제정운동에 전념해왔다.

우리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작년 12월 29일에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권 특별법조치법 등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이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놓는 최소한의 법률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이 법들의 입법취지에 맞게 관련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며 주민참여에 기초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해 지방을 살리는 일이 당면과제라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구체화 운동과 주민자치운동 및 지역혁신운동을 전개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제 막 시작한 지방분권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이 선결요건이며 모든 지역, 모든 정파,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일관되고 강력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한 참여정부 대통령의 리더십 발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한다. 대통령이 흔들림 없이 국정을 수행할 수 있어야 지방분권 개혁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적 위기를 몰고 올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고 있는 중앙정치권의 행위는 참으로 무책임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지방경제를 살리고 농촌을 살리는 일에,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에, 정부여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할 이때, 대통령 탄핵이라는 무모한 정쟁을 일으키는 행위는 반국가적이고 반국민적이며 반지방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대통령 탄핵

발의라는 비상사국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국회가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고 지방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국회라면 대통령 탄핵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역사에 길이 남을 지방 살리기 3대법을 통과시킨 국회가 그 막바지에서 역사에 죄를 지을 탄핵안을 가결한다면,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지방민의 이름으로 국회의 즉각적인 해산을 요구하는 운동에 나설 것이며, 이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4. 3. 10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대표자회의 의장 김 형 기

**■ 대전·충남 6,254인 비상시국선언문 -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을 무시하고 나라를 혼돈에 빠뜨리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오늘 우리는 대통령 탄핵 발의라는 헌정 초유의 사태를 직면하며 비통함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 위기의 주범 중의 하나인 거대야당의 대통령 탄핵발의는 사유의 적합성 여부를 떠나 의도 자체가 대한민국의 존립근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심각한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의 탄핵 발의는 안팎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정략의 산물이고, 총선승리라는 유일한 목표 아래 국민을 볼모로 한 다수당의 횡포이며 의회정치의 폭거이다. 총칼이 아닌 수(數)의 우세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부정하는 의회 쿠데타이다.

우리는 다분히 정략적인 탄핵 발의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표하며,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에게 대통령 탄핵 발의를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만약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대통령 탄핵 발의를 수(數)의 우세로 관철한다면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전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소속 의원 159명이 발의한 대통령 탄핵사유는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물론 대통령의 특정정당 지지 발언은 선거중립의 임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분명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고, 대통령은 선관위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 요청을 존중하여 남은 기간 동안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법조계가 한결같이 지적하듯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발언과 측근비리, 경제파탄에 대한 책임 등을 탄핵사유로 삼기에는 법리적으로 경미하다. 대통령이 사과를 하면 탄핵소추를 중지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던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지도부의 행태가 이를 반증하는 것이며, 이것은 대통령 탄핵을 정쟁의 산물로 삼는 치졸하고 비열한 자기모순의 정치행태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만약 이러한 것이 대통령 탄핵사유가 된다면 온갖 불법과 탈법으로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국회의원들, 무책임한 폭로와 저질 공방이 난무하고 부정부패와 정쟁만을 일삼는 직무유기로 인해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의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을 모두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통령 탄핵 결의와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리기 전까지의 대통령 유고 사태는 국정공백으로

인한 사회혼란과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한국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것임은 자명하다. 사회혼란과 경제 위기로 인한 고통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되는 것이다. 정쟁의 산물로 볼모를 잡는 것도 모자라 국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고 파렴치의 절정이다.

도를 넘어선 무모하고 무책임한 정치공세는 즉각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는 온당한 명분도, 법리적 근거도, 상식적 설득도, 국민적 공감대 그 어느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오로지 4월 총선만을 겨냥한 정략적 도구로만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국민의 불안과 걱정, 나라의 안위와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당의 이해관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대야당의 횡포가 분노를 넘어 측은하기까지 하다.

건국에서 6.25 한국전쟁, 분단과 군사독재를 거치며 헤아릴 수 없는 분들의 죽음과 피와 땀으로 일궈왔던 민주주의의 역사와 정통성이 도전받고 있다. 그 저의와 논리가 너무 치졸하고 미약하여 실소만이 나올 뿐이다. 우리는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그 어떠한 도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다시 한 번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에게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책임정당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탄핵발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국민의 불안과 나라의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총선승리에만 집착한다면, 거역할 수 없는 국민적 저항으로 인해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

2004. 3. 11.

대통령 탄핵 추진의 즉각적 중단과 동의안 철회를 요구하는 대전충남 비상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 ■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소추는 합법을 가장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의회 쿠데타이다! -대통령 탄핵안 의결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오늘 우리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하는 국회를 보며 비통함을 넘어 울분을 금할 길 없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진 코미디를 보며 국민들은 쓴웃음과 헛웃음밖에 지을 수 없는 지경이다. 비록 대통령 탄핵안이 합법이라는 외피를 썼다 하더라도 헌법적 근거조차 희박한 정략적 산물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민의 의사를 외면한채 대표권을 남용한 의회 다수의 횡포로서 의회 쿠데타라 아니 부를 수 없다. 한마디로 오늘은 제2의 국치의 날이자,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에 대한 총칼 없는 쿠데타의 날과 다름없다.

우리는 이번 탄핵안을 가결시킨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과연 나라와 국민이 안중에 있는지 묻고 싶다. 이번 탄핵소추안 의결의도는 국민적 여론을 외면한 이성을 잃은 결정으로 이후 벌어질 국가적 혼란은 모두 정략적 탄핵안을 가결한 무책임한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책임이다. 비록 탄핵안 가결에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그 정략적 의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오늘 그들이 선택한 것이 자멸의 길이 되도록 할 것이다. 결국 이들의 정략적 의도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결국 좌절될 것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위헌적인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서 신속하게 결정함으로써 국

가적 혼란을 조기에 종식시켜야 함은 물론 온당한 명분도, 법리적 근거도, 상식적 설득도, 국민적 공감대 등 어느하나도 만족시키는 못하는 결함 많은 탄핵소추안에 대해 6개월이나 끌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명쾌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불안과 나라의 안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정략적으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한 16대 국회의 장례를 선언하며, 더러운 의회 폭거에 맞서는 시민운동을 제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연대하여 줄기차게 벌여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04. 2. 18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선건 민명수 송인준 윤종삼

#### ■ 대통령 탄핵절차의 중단을 촉구한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했다. 야당이 이번 대통령 탄핵 발의가 가결된다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고 가결에 실패한다면이라도 복잡한 당내 사정과 총선전략상 불리할 것이 없다는 정략적 계산이 개재되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탄핵은 대통령의 잘못에 비해 터무니 없이 무거운 벌이며 그 부작용도 너무나 크다는 점에서 정상적이지 못한 정치행위로 규정,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의 핵심 사유도 선관위에서 벌하지 않는 위법 정도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탄핵발의를 통해 정파간 대립과 갈등 및 국론의 분열, 국가신인도 하락에 따른 경제의 위기도 우려되는 상황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국민들은 받아들이 수가 없다. 의회의 다수가 탄핵을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다수의 국민이 이를 반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더욱이 우리는 국민의 불신을 받는 16대 국회가 이런 행위를 할 자격이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16대 국회는 유례없는 부패로 얼룩졌고 정치관계법 개정 과정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개정 시한을 못지켜 사실상 위헌 사태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자기들끼리의 합의마저도 저버리는 추태를 보인바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사안으로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국회의원 전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위배한 채 뒤늦은 선거법 처리를 자행한 국회자체가 해체되어야할 대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엄청난 국정혼란과 위기를 초래할 정략적 대통령탄핵절차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3월 10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선건,민명수,송인준,민명수

#### ■ 국가와 국민을 무시하고 나라를 혼돈에 빠뜨리는 대통령 탄핵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어제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59명은 헌정사상 최초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총선을 불과 30여일 밖에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불거진 대통령 탄핵정국이 국정파탄과 민생불안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분노와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제 16대 국회는 국민들의 바람과는 거리가 먼 구태와 비리, 부정부패로 얼룩지고 말았다. 반드시 다루어야 할 법안의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하지 않거나 폐기시키고, 현역의원들의 이해관계와 당리당락에 따른 지역구 의석 늘이기에 집착하는 등 임기 마지막까지 한심한 작태로 일관하였다. 정치권이 그동안의 직무유기에 대한 뼈를 깎는 자기반성은 하지 않고 대통령 탄핵을 정략에 이용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다수당의 횡포이자 또 다른 형태의 헌정 파괴임을 지적한다.

그렇다고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회견에서 있었던 노대통령의 특정 정당 지지발언은 정쟁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자 선거중립의 의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 노대통령은 중앙선관위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 요청을 존중하여 남은 기간동안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나라와 국민을 무시하고 부정부패와 당리당락으로 국민을 실망시킨 16대 국회와 두 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거두어들이고 정정당당하게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이 염원하는 정치개혁의 추진과 철저한 자기반성으로 16대 국회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2004년 3월 10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공동대표 박재욱 김규복 김용우 윤종삼 정순진 조연상

#### ■ 대통령 탄핵안 발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 -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탄핵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가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한 것을 보고 참으로 경악과 개탄을 금치 못한다.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계기로 구성된 대통령 탄핵 정국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대립과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여 필경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민의 다수가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은 잘못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를 시정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경미한 선거법 위반이 탄핵 사유가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야당들의 행동이 잘못이라는 여론 조사결과가 지금 이 시국을 보는 국민들의 균형 잡힌 민심이라고 본다.

사실 국회의원 선거에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발언을 한 것은 잘못이며, 지난 대선시기에 불법 정치자금 받은 것도 잘못이고, 대통령 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그 진의가 어떠한 대통령의 거듭된 사소한 말 실수가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참여정부 집권1년 동안 정책의 혼선과 국정운영의 미숙함을 보여 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는 탄핵 소추안 발의 사유에 동의할 수 없다.

우리는 ‘선관위의 지적에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고 보지만 탄핵발의가 잘못되었다’는 대다수 보통사람들의 여론이 옳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들은 무리하게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탄핵소추안 발의가 진정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총선을 앞둔 당리당략에서 출발한 것임을 모든 국민은 알고 있다. 대통령의 경미한 잘못을 빌미로 엄청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탄핵안으로 대응하는 야당의 행위야말로 국가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생을 도탄에 빠트리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참여정부 출범 후 지난 1년 동안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에 생산적인 정책토론은 없고 소모적인 정쟁만이 지속된 정치 현실을 보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민족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 민생을 위해 상생의 정신으로 대타협하는 큰 정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현실을 개탄해 왔다.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지방분권 관련법 제정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지방 살리기 3대법 제정운동에 전념해왔다.

우리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작년 12월 29일에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등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이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놓는 최소한의 법률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이 법들의 입법취지에 맞게 관련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며 주민참여에 기초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해 지방을 살리는 일이 당면과제라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구체화 운동과 주민자치운동 및 지역혁신운동을 전개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제 막 시작한 지방분권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이 선결조건이며 모든 지역, 모든 정파,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일관되고 강력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한 참여정부 대통령의 리더십 발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한다. 대통령이 흔들림 없이 국정을 수행할 수 있어야 지방분권 개혁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적 위기를 몰고 올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고 있는 중앙정치권의 행위는 참으로 무책임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지방경제를 살리고 농촌을 살리는 일에,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에, 정부여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할 이때, 대통령 탄핵이라는 무모한 정쟁을 일으키는 행위는 반국가적이고 반국민적이며 반지방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대통령 탄핵 발의라는 비상사국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국회가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고 지방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국회라면 대통령 탄핵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역사에 길이 남을 지방 살리기 3대법을 통과시킨 국회가 그 막바지에서 역사에 죄를 지을 탄핵안을 가결한다면,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지방민의 이름으로 국회의 즉각적인 해산을 요구하는 운동에 나설 것이며, 이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4. 3. 10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 ■ 탄핵무효·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대전지역 촛불시위

### - 탄핵무효 및 민주수호를 위한 대전 촛불시위 4일째 이어지다 -

○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필두로 머릿수만 앞세워 대통령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의회쿠데타와 반민주주의적 행각에 대해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하였고, 결국 그 분노는 온국민들의 촛불시위로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서 ‘탄핵무효’, ‘민주수호’, ‘국회해산’이라는 함성과 민주수호를 위한 희망의 촛불이 을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 대전지역 역시 탄핵무효와 민주수호를 위한 촛불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의 열기와 인원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탄핵이 가결되었던 12일에는 2,000명의 시민이 참여하였고, 다음날 16대국회 장례식을 치르던 촛불시위에는 4,000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으며, 휴일이었던 14일 규탄대회에는 5,000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그 함성은 대전 중앙로를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 현재까지 벌어지고 있는 촛불시위는 어느 특정단체가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반민주주의적 행각과 의회쿠데타에 분노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속에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가칭)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대전행동 준비위원회 실무자 및 회원들과 일반시민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촛불시위를 돕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이 촛불시위의 목적을 약화 내지 변질시키려는 정치권과 수구세력들이 주장하는 내용들, 즉 친노-반노의 대립구도도 아니며, 개혁-보수의 대결구도도 결코 아닙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촛불시위는 민주주의의 이행과정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구태정치인들에 대한 시민의 항거이며, 민주-반민주의 대립구도 하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시민들의 숭고한 소망입니다.

- 촛불시위 : 오늘(3.15) 저녁은 6시, / 내일(3.16)부터 매일 저녁 7시, 동방마트 앞에서
- 규탄대회 : 매주 토요일마다 개최 / 대전역에서 (일정은 추후 예정)
- (가칭)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대전행동 발족 기자회견 : 3. 17(수) 11:00 예정

## ■ 대전지역 중앙로 촛불집회에 대한 우리의 입장

오는 3월 17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을위한범국민대전행동(이하 범국민대전행동)"은 매일 오후 7시에 중앙로(동방마트-홍명상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범국민 촛불집회의 불법시비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범국민대전행동은 이후 진행할 모든 행사에 있어 가장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따라서 범국민대전행동은 중앙로 촛불집회에 관련하여 어제(3.15) 경찰에 시민문화행사로 집회신고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단, 48시간 이전 집회신고 규정으로 인해 오늘 3월 16일 집회에 관하여는 집회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나 대전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하되 가능한 자발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2. 대전 중앙로 촛불집회는 기존의 정치적인 이슈와 관련한 특정 정치집회와 달리 전 국민적인 문화행사이며, 자발적인 의사표현의 무대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월드컵이나 여중생관련 촛불집회에서 보여지듯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성숙한 질서인식 속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는 일반 집회와는 구별되는 성숙한 국민의식에 기초한 국민적인 행사로 자리잡아 우리 사회의 참여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시위문화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집시법 규정과는 달리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 범국민대전행동은 이런 취지에 따라 이후 주말 집중집회가 아닌 평일 촛불집회는 가능한 퇴근길 교통불편이나 보행을 막지 않는 형태로 중앙로 주변 인도 등에서 진행할 예정이고, 불가피하게 인원이 많아져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4. 마지막으로 부패정치청산에 대한 국민적 정서와 참여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성숙한 시민문화행사에 대해 혹여 공권력으로 원천봉쇄하거나 과도한 진압 등으로 인해 이보다 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경찰에게 돌아가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 ■ ‘민주개혁 완성을 위한 범국민대회’ 집회신고 불허에 대한 우리의 입장

○ 3월 20일 충청남도지방경찰청은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을 위한 범국민대전행동(이하 탄핵무효범국민대전행동)과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가 공동주최하는 ‘민주개혁 완성을 위한 범국민대회’ 행사에 대해 집시법 제10조( 집회시위의 시간에 관한, 즉 야간시위의 제한규정)를 이유로 불허방침을 전달해왔다.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 탄핵무효범국민대전행동은 ‘대전역 범국민대회는 어디까지나 문화행사로 기획되었고 이에 합당하게 추진될 것’ 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오늘 행사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청과 참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기존의 정치적인 이슈와 관련한 특정 정치집회와 달리 전국민적인 문화행사이다. 우리는 100만인 범국민대회를 맞이하여 최대한 평화적이고 질서있게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힌 바 있으며, 동시에 촛불문화제와 범국민대회는 일반집회와 구별되는 성숙한 국민의식에 기초하여 참여민주주의에 기여하는 문화행사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행사를 야간집회와 정치집회로 전락시켜 문제삼는 것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까지 집시법으로 제한하려는 위헌적인 처



사라 아닐 수 없다.

○ 우리는 충남지방경찰청이 야간집회를 이유로 대전역 행사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남용에 의한 위법임을 분명히 지적하려 한다. 현행 집시법 제10조 단서에서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범국민대전행동은 부득이 일몰시간 이후에 행사를 하게 된 이유를 1)참가단체의 회원 가운데 자영업자와 직장인이 많아 참석이 어려웠던 점, 2)대회특성상 일몰이후에 가능한 촛불문화제라는 점, 3) 또한 민주노총이 동일장소에 이미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여 협의가 되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질서유지자 100인을 두고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이번 범국민대회를 금지시킨 것은 야간집회를 허용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단지 '야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범국민대회를 불법화시키는 명백한 재량권 남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탄핵 결의안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반대가 광범위하게 조성되는 상황에서 그 분노를 삭혀가며, 참여민주주의의 새로운 시위문화를 형성해가려는 모습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찰이 탄핵반대에 대한 국민적 쟁점을 정치집회로 전락시키고, 불법시비로 전환시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권의 압력에 경찰이 스스로 굴복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 이에 범국민대전행동은 충남지방경찰청의 집회 금지처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탄핵의결에 대한 국민들의 민주수호의 의지를 표출할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3월 20일 범국민대회를 강행할 것이다. 또한 이번 경찰의 집회 금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고려하는 한편,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 등을 모아 모든 법적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한민자 야3당은 스스로 탄핵안을 철회하고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라!**

**- 한민자 야3당이 자멸을 벗어나는 길은 이것뿐이다 -**

민주주의 수호천사는 국민이었다.

2004년 3월 12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날이다. 분단과 전쟁, 군부독재의 지난함을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극복하고 이룩해낸 민주주의를 일거에 후퇴시킨 의회쿠데타의 날이다. 사랑하는 조국과 우리의 삶과 희망과 미래에 대해 회의를 품게된 참혹한 자기부정의 날이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슬픔과 좌절에만 안주하지 않았다. 분노를 폭력적 항거로 표출하지도 않았다. '탄핵무효와 민주수호'를 외치며 촛불 아래 자발적으로 모인 국민들은 평화롭고 즐거운 축제의 주인이 되었다. 합법을 가장한 의회쿠데타 세력에 맞서며 민주주의 수호천사로 나선 국민은 결국 승리하였다. 지난 3월 20일 대전에서도 6,000여명의 시민들은 평화적인 촛불행렬에 함께 했다. 전국적으로 50여만개의 촛불이 거리거리에서 밝혀졌으며, 온라인 참가자를 포함하여 150여만 명의 국민이 이 역사적 민주대행진에 함께 동참했다.

### 3.12 의회쿠데타는 실패하였고 국민은 승리하였다.

결국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평화적인 국민 행동은 승리하였다. 우리 국민들은 합법을 가장한 의회쿠데타를 자행한 반민주세력에 대해 결코 용서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천명하였다. 그러나 의회쿠데타를 자행한 낡은 정치세력은 촛불 아래 자발적으로 모인 국민들의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의지와 열망에 대해 ‘특정 정당의 배후조정’이라는 시대착오적 정치공세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의 뜻과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는 후안무치한 행태에 우리는 울분을 넘어 허탈한 실소만이 나올 뿐이다. 촛불 문화제에 대한 국민의 참여 열기는 바로 의회쿠데타 세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의지이고, 민주주의 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평화대행진인 것이다. 한민자 3당은 이러한 국민의 진의를 직시하기는 커녕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왜곡하며 스스로 자멸의 늪으로 빠져가고 있다.

탄핵정국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한민자 3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탄핵안을 자진 철회하라.

이미 3.20 범국민대회를 통해 국민들은 탄핵이 무효임을 증명해 보였다. 또한 수차례 이뤄진 여론조사를 놓고 보더라도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열기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한민자 3당 내부에서조차 국민 앞에 사죄를 요구하며 탄핵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차츰 커지고 있다. 식발과 단식 농성을 진행하며 탈당까지도 불사하는 의원들도 있다. 사면초가이다. 상황은 이미 끝났다. 한민자 3당은 종료된 상황을 현명하게 직시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결의로 인한 국가적 혼란 상황을 빨리 끝내고 국민이 생업에 편안하고 안전하게 전념할 수 있도록 사태해결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헌법재판소 결정까지의 법리논쟁에 따른 혼란과 소모적인 정쟁으로 인한 국가적 역량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결자해지 차원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대통령 탄핵결의로 야기된 국가적 혼란 상황을 종료하기 위한 조속하고도 유일한 해법은 한민자 3당이 국민 앞에 사죄하고 탄핵안을 자진철회하는 길이다. 또한 탄핵결의에 찬성한 의원들은 정당 차원의 대국민 사죄와 별개로 국민 앞에 고해성사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이것이 국정을 정상화하고 한민자 3당의 파멸의 길을 막는 상생의 길이다.

민주주의 진전에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파멸의 길을 걸을 것인가!

반민주세력의 독재와 폭거에 맞서 국민들은 민주주의 수호와 진전을 위해 거리에 모여들고 있다. 87년 6월 그 감동의 물결이 2004년 촛불 문화제로 부활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들은 3.12 의회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3월 20일 범국민대회에서 증명되었던 전국민적 공분을 수용하지 못하고 국민적 탄핵무효 의사를 무시하며 계속적인 정쟁으로 사회 혼란을 유도한다면 결국 준엄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민주주의 진전의 동반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 진전의 걸림돌로 남아 자멸의 길을 걸 것인가, 선택은 전적으로 한민자 3당에게 달려있다. 그 유일한 선택은 오로지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민앞에 사죄하고 탄핵안을 철회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평화적 국민행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87년 6월 항쟁 이후 최대 규모의 평화적인 국민행동의 부활은 탄핵무효와 부패정치청산, 민주개혁완성을 염원하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흥겨운 축제 한마당이였다. 승리를 함께 만들어가는 감동의 드라마였다. 따라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낡고 부패한 정치세력의 처절한 몸부림에 맞서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국민들의 평화행동은 그치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3.12 의회쿠테타 세력이 국민 앞에 사죄하고 탄핵안을 자진 철회할 때까지 국민들의 평화적인 촛불 물결은 거리거리를 밝힐 것임을 다시한번 천명한다.

2004년 3월 25일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을 위한 범국민대전행동

### ■ 3·27 민주수호 촛불문화제 -탄핵무효, 수구부패정치 심판의 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납니다.

대전지역 5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을 위한 범국민대전은 2004년 3월 27일 오후 6시부터 327민주수호 촛불문화제 - 탄핵무효·수구부패정치 심판의날 행사를 대전역 광장에서 진행한다.

우리는 이미 지난 3월 20일 전국 곳곳에서 100만개의 촛불을 만들기 위한 국민의 힘을 보았으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큰 함성을 들었다. 탄핵반대 여론이 금방 가라앉을 것이라는 향간의 평이 거짓임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오는 3월 27일에도 100만의 촛불로 되살아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알리기 위해 서울 광화문과 전국의 도심 곳곳에서 탄핵무효를 위한 촛불을 밝힐 예정이다.

범국민대전행동 측은 320촛불문화제 이어 327촛불문화제 역시 전대전시민의 축제 한마당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그동안 대전시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민주주의식이 정점으로 표출되는 '가장 평화적이고 절제된'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촛불문화제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                           |                          |
|---------------------------|--------------------------|
| • 진행 -김인경                 | • 대회사                    |
| • 함께하는 민주수호 율동            | • 대전팍스오케스트라 목관악기팀 공연     |
| • 대전환경운동연합 노래모임 '소풍' 공연   | • 새날을 여는 촛불 밝히기          |
| • 시민자유발언                  | • 랩송 2곡                  |
| • 마당극단 좋다 상황극 '너흰 아니야' 공연 | • 영상보고서 '대전민주주의수호대행진' 상영 |
| • 시민 듀엣가수 '더본' 노래공연       | • 촛불의식 및 민주수호 행진         |
| • 노래와 율동 속의 촛불 난장         | • 기타부대행사 및 페이스페인팅        |

### ■ 부패무능 정치인 낙선운동을 재개하며 - 썩은 정치를 청산하기 위한 단호한 낙선운동 절실 -

17대 총선에서 정치를 개혁하고 유권자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전국의 유권자운동은 지난 3월 12일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건에 직면하여 일제히 멈춰 서버리고 말았다.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정치권의 폭거에 항거하는 일만큼 화급하고 중대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민주수호의 촛불을 들고 일어난 국민운동은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퍼져갔으며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저질러진 대통령탄핵은 원천 무효임을 온 국민과 더불어 확인했다.

우리는 반민주적 대통령탄핵사건을 겪으며 나라와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권력욕만 불태우는 썩은 정치가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똑똑히 보았다. 또한 부패한 정치권을 청산하지 못한 후과가 얼마나 큰 것인지 온몸으로 체득하게 되었다. 국민을 무시하고 부패무능하기 짝이 없는 정치를 청산하기 위한 유권자운동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우리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민행동을 위해 잠시 미뤄놓았던 부패무능 정치인 심판을 위한 낙선운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하고자 한다.

2004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부패비리 정치인, 반의회 반유권자적 행위를 한 정치인, 반인권·민주헌정질서파괴 전력, 선거법 위반, 도덕성과 자질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정치인들을 정치권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것을 목표로 전개될 것이다. 최종 낙선대상자는 그동안 조사해왔던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전국에서 모인 유권자위원회의 심의와 대표자회의 등을 거쳐 4월 6일 공식 발표할 것이다.

3·12대통령 탄핵에 관여한 정치인들은 2004총선시민연대의 기준에서 볼 때 명백히 반유권자적 행위를 저지른 것이요, 이를 어떤 형태로든 낙선대상자에 반영하는 것은 총선연대의 의무라 할 것이다. 표결에 참여한 195명 모두를 낙선대상자로 선정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분명한 결론을 갖고 있지 않지만 국민다수의 의사는 분명히 이들을 낙선운동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들 가운데 반대표를 던진 정치인의 경우 본인이 이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 이상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패하고 무능한 낙선대상 정치인들을 실제로 낙선시키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4월 6일 이후 선거운동기간동안 전국적으로 전개될 것이며 온라인을 통한 정치인 검증자료 공개도 동시에 진행될 것이다. 각 정당의 정책에 대한 평가 및 검증작업의 결과물도 4월 8일 경 발표하여 유권자의 정당선택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국민의 뜻은 하나이다. 제발 이제 지긋지긋한 구시대 정치와 단절하고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치가 펼쳐지기를 고대하는 것이다. 2004총선시민연대는 다시는 이 땅에 썩은 정치권에 의해 자행되는 반민주적, 반유권자적 폭거가 재연되지 않도록, 다시는 이 땅에 국민을 분노케 하는 정치부패가 자리잡을 수 없도록, 구시대 정치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단호한 유권자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동참을 기대한다.

2004년 4월 1일  
2004총선시민연대

■ 대전시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전면적인 무료환승 시스템 도입을 촉구한다.

4.12 시내버스 노선조정은 근본적인 해결책 못돼-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시는 오는 4월 12일부터 시내버스 17개 노선에 대해 조정 또는 폐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기종점지의 변경 및 고속철도 개통, 그리고 중복노선에 대한 폐지 등의 충분히 납득이 되는 면도 없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대전시가 주민편의 확대 및 통학 등의 접근성 제고 등 주민의 조정수요를 반영한 나머지, 노선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무시한 노선조정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난해 전면적인 노선개편이후 그동안 끊임없는 주민집단 민원 및 일부의회 의원들의 민원성 노선조정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혹여 노선조정 수요 여론에 밀린 노선조정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4.12 시내버스노선 세부조정안을 보면, 810번이나 810번 등 고속철 개통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에서 노선조정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전체 17개 노선 가운데, 115번, 509번, 120번, 185번 등의 다수노선의 경우, 단거리 직선노선에서 노선조정을 통해, 심한 굴곡 장거리 노선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노선개편이 과거 경험에 비추어보면, 당장 주민불편 해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노선개편의 애초 취지에 어긋남은 물론, 결국 노선효율성 저하로 전체 대전시민들에게는 피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이번 노선조정의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민관공동대책위원회 등의 관련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으며, 더욱이 교통카드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시민불편을 어느정도 상쇄시킬 수 있는 점과 노선운영의 효율성과 체계성 조차도 고려치 못해,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는 땀질식 노선조정이라 판단된다.

【참고자료】 무료환승 시스템은 시내버스 노선효율을 높이고, 갈아타는 불편과 경제적 부담의 해소를 위해 일정시간(인천시 60분) 이내에 갈아탈 때 100%무료로 탑승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경남 김해시가 2002년부터 도입운영해오고 있으며, 최근 서울시가 전면적인 무료환승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가운데 인천시가 지난 1월부터 100%무료환승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노선조정에 따른 시민불편과 경제적 부담덜기 위해 100% 무료환승시스템 도입돼야

특히, 우리는 수년전부터 시내버스개혁의 일환으로 획기적인 노선개편을 요구해 왔으며, 그때마다 갈아타는 불편과 요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환승시스템 도입을 누차 촉구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재정부담을 고려 극히 일부노선에 대해서만 무료환승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런사이 인천시는 올 1월부터 전노선에 대한 100%무료환승 시스템을 도입하여, 교통카드 도입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시내버스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시내버스 보유대수 및 면적이 대전보다 훨씬 큰 대구시나 인천시 그리고 시세가 비슷한 광주시

의 노선수가 대전보다 훨씬 적은 것은 그만큼 대전시의 시내버스 노선효율이 떨어진다고 밖에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처럼 사후약방식의 땀질식 노선개편이 계속된다면, 작금의 시내버스 문제 및 도시교통문제를 절대 해소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대전시의 대중교통 중심 교통정책으로의 전환도 중요하겠지만, 시내버스 노선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극복하면서 시내버스노선 개편을 획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전노선 100% 무료환승시스템 도입만이 최선의 대안이라는 점에서, 무료환승시스템 전면도입을 다시한번 대전시에 촉구한다.

아울러, 대전시는 이해당사자간의 반발에 의해 버스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일을 계기로, 버스운영체계 개혁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시내버스 개혁을 포함한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 개혁과 관련한 청사진과 추진일정을 시민앞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건설교통부가 2002년 발표한 『7대 도시의 시내버스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일 기준 하루 시내버스 이용인원은 서울 638만명, 부산 221만명, 대구111만명, 인천 82만명, 광주 66만명, 대전 59만명, 울산 34만명 순이었으며, 시내버스 노선 수는 서울이 372개, 부산 193개, 대전 115개 순이었으며, 버스 정류장간 평균거리는 울산이 646m로 가장 길고, 서울 570m, 대전 525m, 광주 498m로 조사되었다.

또한, 배차시간은 서울과 인천이 각각 7분, 8분인 반면 대전, 울산은 각각 19분, 30분으로 나타나 지역별 편차가 컸으며, 운행거리 10km당 수송인원은 부산이 29명, 광주 26명, 서울과 대전,대구 24명, 울산 18명에 그쳤다.

4월 7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선건,민명수,송인준,윤종삼

## ■ 탄핵무효·부패정치 청산 대전지역 서명운동 전개

○ 대전지역 5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을 위한 범국민대전행동은 선거법상 4월 2일부터는 거점서명운동이 불법화되기 때문에 하루 전날인 4월 1일 동방마트 앞에서 집중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동시에 대전지역 서명운동 중간집계 상황을 발표하였다.

○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3월 13일 전국 550개 시민사회·민중운동단체들은 비상시국회의를 갖고, 탄핵무효,부패정치 척결 범국민행동 결성에 합의하는 한편, 각 지역조직들이 결성되어, 탄핵무효·부패정치 청산 범국민촛불행사를 진행하였는 바, 해외를 포함하여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3월 27일까지 15일간 온라인, 오프라인을 포함하여 총 210만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대전지역의 경우에는 15일간 20,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다고 상황실은 밝혔다.

○ 또한 탄핵무효 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함에 따라, 3월 30일 오후 2시 현재 전국적으로는 291,983명이 서명에 참여하였으며, 대전지역은 6,922명이 서명에 동참하였다. 범국민대전행동 측은 참가하고 있는 부문단체들의 서명운동까지 집계가 끝날 경우 10,000여명의 서명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촛불행사는 시민모금으로 진행되었으며, 전국적 조직인 범국민행동은 현장과 온라인, 은행후원을 통해 총 316,302,506원(3월 29일 현재)으로 집계되었음을 밝혔다. 범국민대전행동 또한 촛불행사때마다 성금 모금액과 지출액을 시민들에게 밝혀온 바 있는데, 4월 1일 현재 시민성금 총액은 12,087,210원(51달러 포함안됨)으로 집계되었다.

#### ■ “고속철도- 분권·분산시대를 향해 질주하라” =수도권집중 열차를 경계한다=

경부·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됨으로써 전국이 반니절 생활권으로 좁혀졌다.

우리는 지방의 공간적 거리감을 해소하게 될 고속철도가 수도권 일극집중시대를 마감하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법적·제도적 기틀아래 새로이 펼쳐진 新지방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개통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고속철도는 분명 지방의 개발여건과 환경은 물론 지방민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국토통합과 지역간 교류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속철도가 지방외락을 가져온 수도권 초일극 집중의 거대한 블랙홀을 더욱 증폭시키는 역기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방의 모든 것을 흡인해가는 ‘수도권 집중열차’가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또한 회자되고 있다.

우리는 동경일극집중을 심화시킨 일본의 신칸센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순기능을 한 프랑스의 TGV의 사례를 상기하며 한국의 고속철도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조류인 지방화와 국토통합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고속철도는 분권을 촉진시키고 수도권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균형발전을 고속화시키는 ‘지방민의 희망열차’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등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에 담긴 정책들을 보다 강력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한다. 자립형 지방화의 기반이 미처 갖춰지기도 전에 고속철도가 엉뚱하게 수도권 집중화를 질주하게 된다면 지방의 회생은 공염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신지방시대, 그리고 고속철도시대의 동시 개막, 그 순기능과 역기능을 우리는 철저히 주시하고 경계할 것이다.

2004. 4. 1.  
지방분권국민운동

#### ■ 탄핵무효 촛불행사와 관련, 경찰의 출석요구에 따른 자진출두에 앞서

-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문화행사를 법적으로 문제삼으려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표현 자유를 통제하는 관료적 발상이며, 낡은 관행일 뿐 -

부패한 정치권이 사회의 변화에 눈과 귀를 막고 있는 동안, 시민들의 정치참여와 개혁의지는 더욱 적극화 되어 가고 있고 그 표현방법과 주체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시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낡은 제도와 관행으로 가로막고 있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듯이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을위한 범국민대전행동(이하 범국민대전 행동)’이 주최해온 탄핵무효 촛불행사는 전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평화롭게 진행되어 왔다. 특히 이번 촛불행사는 기존의 정치적인 이슈와 관련한 일반집회와 달리 성숙한 국민의식에 기초하여 진행된 합법적 문화행사였다. 그럼에도 이러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문화행사를 야간집회와 정치집회로 전락시켜 문제삼으려는 것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까지 집시법으로 제한하려는 관료적 통제의 발상이며 낡은 관행인 동시에 위헌적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다시한번 밝히지만 범국민대전행동은 평화적 촛불행사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대해 결코 거부하지 않는다. 따라서 촛불행사에 참여한 대다수 시민들과 이의 평화적 진행을 위해 협력한 일부 시민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無理하게 출석요구를 청구하는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평화로운 촛불행사를 위해 제반의 노력을 다해온 시민자원봉사자 개개인들에게 출석요구서까지 발부한 경찰의 모습은 법률적인 근거가 대단히 미약하며, 무리한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번 촛불행사로 인하여 만약 책임질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범국민대전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54개 시민사회단체가 땀땀하게 받을 것이다.

따라서 지난 3월 13일 촛불행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를 받아온 소환대상자 3명과 범국민대전행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문화행사를 법적으로 문제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대로 합헌적으로 진행된 문화행사임을 밝히기 위해 오늘 당당하게 자진 출두하는 것이며, 출두에 앞서 아래와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첫째, 우리는 탄핵무효 촛불행사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평화적 의사표현이며 문화행사이므로 집시법 대상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며, 이를 통제하려는 발상은 헌법상 보장되어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려는 위헌적 행위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과거에 일부 보수단체가 집회허가가 나지 않는 서울시청 앞에서 ‘종교행사’를 했으나 사실은 그 자리에서 다양한 정치적 주장이 제기된 바 있었음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촛불행사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사표현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경찰의 방침은 적절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둘째, 우리는 3월 20일 이전의 촛불행사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주최한 적은 없으나 320대회 이전의 행사 모두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이루어진 문화행사로서, 이를 보다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질서유지 차원에서 안내와 조력에 역점을 다해왔다. 만약 이 과정에서 시민자원봉사자로 참여해왔던 시민들 또는 일부 관계자들의 행동에 책임질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개개인의 책임으로 전가되



어서는 안되며,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범국민대전행동에서 질 것임을 분명히 한다.

셋째, 우리는 3.20대회의 경우 충남지방경찰청이 야간집회를 이유로 대전역 행사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남용에 의한 위법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현행 집시법 제10조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야간집회를 허용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준해 100인의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집회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허통보한 것은 명백한 경찰의 재량권 남용이며, 오히려 경찰이 탄핵반대에 대한 국민의 쟁점을 정치집회로 전략시키고 불법시비로 전환시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권의 압력에 경찰이 스스로 굴복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현재 우리는 경찰의 3.20대회 금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며 전국의 시민사회들과 연대하여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번 촛불행사가 선거법 저촉여부나 집시법 위반 관련 사안에 대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며, 만약 전국민을 대상으로 합법적 의사표현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하겠다면 우리 역시 기꺼이 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그 모든 책임은 범국민대전행동에서 전적으로 질 것임을 재차 밝히는 바이다.

2004년 4월 7일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을위한 범국민대전행동

#### ■ 대전참여자치연대, 폭설 속 고속도로 대란 - 위자료청구 소송 진행하기로

1. 대전참여자치연대는 3월 9일(화), 지난 5, 6일 양 일 간에 걸쳐 내린 폭설로 경부·중앙고속도로 상에 1만 여명 이상의 시민이 최장 30여 시간을 고립되어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이번 폭설 속 고속도로 대란은 충청남북도 지방에 대설주의보가 내린 상황에서 이미 차량 지체가 13킬로미터나 이어진 사태를 단순 차량 지체로 오판한 한국도로공사 측의 과실에 기인한다고 판단하고 피해자를 모아 집단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해 발생시 지체없이 재해 경감을 위해 재해응급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각종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할 건설교통부와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대해서도 즉각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3. 참여자치연대는 현재 인터넷([www.cham.or.kr](http://www.cham.or.kr), 문의: 작은권리팀(042)331-0092)을 통해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또한 고속도로 대란의 주 발생지인 충청북도 지역 시민단체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www.citizen.or.kr](http://www.citizen.or.kr), 문의: 송재봉 사무처장(043)267-0151)와 서울 참여연대 인터넷([www.peoplepower21.org](http://www.peoplepower21.org), 문의: 시민권리팀(02)723-5303)에서 원고를 함께 모집한다. 소송에는 5, 6일간 고속도로 상에 갇혀 있었던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4. 한편 이러한 공익소송의 사례로 서울 참여연대가 1998년 12월 7일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발생한 지하철 지연사고시에 지하철속에 최장 50분간 갇혀 있었던 승객들을 모집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1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얻어낸 예를 들 수 있다. 당시에 법원은 지하철 공사가 '전동열차가 역과 역 사이의 지하나 고가구간에 장시간 정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후행열차를 운행시켜 많은 승객들이 지하철에 갇혀 장시간 불쾌감과 불안감에 빠지게 한 것은 지하철공사가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이번 고속도로 대란의 경우에도, 차량진입통제를 하지 않고 상황을 방치한 한국도로공사나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고립시간을 장기화한 정부가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5. 이번 소송의 의미는 단지 고속도로 상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은 시민들에 대한 개별적 보상을 요구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매번 재난이 벌어지고 나서야 뒤늦게 대책을 내어놓은 정부와 관련 기관이 이번에도 정말로 제대로 된 총체적 재난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지금까지의 안이한 태도에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의미가 더 크다. -끝-

#### ■ 이제부터 시작이다, 내사랑 대한민국이여! 탄핵,수구,지역주의 정당을 심판하자!

##### - 대전지역 유권자 여러분께 드리는 투표참여 호소문 -

탄핵무효와 민주수호를 위해 노력해오신 사랑하는 대전지역 유권자여러분!

드디어 17대 총선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지난 3월 12일 의회폭거에 경악할 수 밖에 없었던 우리 국민들은 오랫동안 이 심판의 날을 기다려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대전지역 유권자 여러분,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들 앞으로 다가온 17대 총선에서 탄핵세력을 심판하고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되살리겠다는 본의는 점점 사라지고, 또다시 지역주의와 냉전적 색깔론 그리고 정치쇼만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다름아닌 탄핵?수구세력들이 지지율을 올리려고 필사의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뜻이야 어떻든 시종일관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다문 채 지난 3월 12일 의회폭거에 대해서는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신들은 탄핵과는 무관하다는 몸짓으로 독재자의 유령을 불러내어 표를 구걸하고 있으며, 또한 망국적인 지역주의에 절판과 눈물판을 벌이는 등 이미지 정치로만 일관하였습니다.

탄핵?수구?지역주의 정당의 부활을 꿈꾸는 낡고 부패한 정치세력들은 결국 눈물의 절만 일삼으며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하면서도 결코 단 한번도 그 어떤 참회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참담한 현실은 탄핵?수구세력들의 달콤한 언사와 겉치레 정치행각을 통한 정치적 위선과 기만에 많은 유권자들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짓밟았던 독재자의 유령까지 불러내어 구차한 정치생명을 연장하는 낡고 부패한 수구세력들이, 민주주의에 역행하면서 머릿수로 의회폭거를 감행하던 탄핵수구세력들이 어쩌면 또다시 대한민국 국회를 점거할 수 있다는 불길한 조짐에 우리는 전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유권자 여러분!

더이상 똑같은 고통과 역사의 비극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고통과 비극이 50년간 반복된 이유 중의 하나는 정치인들에 대한 엄정하고 냉혹한 평가와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국을 뒤덮은 촛불축제에서 분노와 좌절의 시련을 이겨내고 살아갈 의욕을 되찾았던 대한민국의 희망을, 그리고 4월 15일 낡고 부패한 탄핵?수구세력과 이를 동조한 정당을 평화적으로 심판하자는 유권자의 순결한 약속을 잊지 맙시다. 꼼꼼히 따져보고 반드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합시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유권자 여러분!

후보자를 판단한 최소한의 기준은 있습니다. 다시한번 상기하고 다시한번 살펴보고 투표에 참여합시다. 최소한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자신의 뱃속을 채우는 부패정치세력과 정당은 반드시 심판합시다. 의회폭거를 감행한 탄핵정치세력과 이를 동조한 정당도 반드시 심판합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총칼로 억압했던 독재자의 유령을 불러내어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수구정치세력과 정당도 반드시 심판합시다. 한국정치사를 짓눌러온 색깔론과 지역주의에 의존하는 정치세력과 정당도 반드시 심판합시다.

이제 대한민국 전 국민의 승리를 위해서는 유권자의 단호하고 비장한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투표장으로 향하는 유권자의 한걸음 한걸음과, 정치사기행각에 휘둘리지 않는 유권자의 날카로운 머리와, 희망의 정치를 세우는 유권자의 정직한 손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과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탄핵?수구?지역주의 정당과 정치세력들을 심판하는 민주의 대장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2004. 4. 13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을위한 범국민대전행동

#### ■ 투표참여 유권자 호소문 "2004년 4월 15일은 정치개혁 원년의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4.15 선거혁명의 주인공은 유권자입니다.

겨울의 길목을 지나 완전한 봄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국민들은 처절한 겨울살 만큼이나 고단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정치인들은 민생고와 경제난에 시름하고 있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를 일삼으며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우롱하였습니다. 차떼기를 위시한 대선불법자금 수수, 지역주의와 색깔론, 연일 계속되는 정치공방으로 인한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합법을 가장한 의회쿠테타 세력의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에 맞선 국민들의 평화로운 촛불 물결은 그 절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권의 구태는 종식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당당한 주권행사로 입증해 보여야 합니다.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 대상자는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2004대전총선시민연대는 국회와 정치인에 대한 정보공개가 제한된 조건에서 유권자의 최소한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낙천낙선대상자를 발표하였고, 지역주의와 돈선거 추방을 위한 다양한 실천활동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유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낡은 정치, 구태정치를 반복하며 유권자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정치인들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적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더이상 짜증나는 정치, 절망의 정치를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낡고 부패한 정치를 종식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총선연대가 선정한 낙선대상자를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탄핵소추안 가결의원은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2004년 3월 12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날입니다. 우리가 발 딛고 서있는 사랑하는 조국과 삶, 희망과 미래에 대해 근본적 회의를 던지게 하는 참혹한 자기부정의 날입니다. 87년 6월 항쟁에 버금가는 평화로운 촛불물결은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낡은 정치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국민적 결의의 절박한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배반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한 의회쿠테타에 대해 엄중한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부패정치청산과 민주개혁완성을 위해 4.15 총선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의원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지역주의와 색깔론, 돈선거를 조장하는 수구부패 정치인들을 영원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지역주의와 색깔론, 돈선거는 낡고 부패한 정치가 뿌리내리게 된 배경입니다. 총선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오직 총선승리에만 혈안이 되어 지역주의와 색깔론의 망령이 곳곳에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 막바지 돈선거가 횡행하면서 당선무효형이 확실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수없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번 4.15 총선을 통해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와 색깔론, 돈선거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정치개혁은 또다시 요원하기만 합니다. 정치개혁 원년이란 구호도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지역주의와 색깔론에 편승하고 금품살포 및 향응제공 등의 돈선거를 조장하는 수구부패 정치인들은 이번 선거에서 영원히 퇴출해야 합니다.

유권자가 정치개혁의 희망입니다.

한국 정치는 한국현대사의 굴절된 역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냉전적 사고와 지역주의,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와의 단절은 새로운 정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4.15 총선을 통해 낡고 부패한 정치와 과감히 결별해야 합니다. 이제 유권자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유권자의 당당한 주권행사를 기대합니다. 유권자가 희망입니다. 고맙습니다.

4월 13일  
2004대전총선시민연대

■ 탄핵세력에 대한 역사적 심판과 더불어 한국민주주의의 승리를 온 국민과 더불어 환영한다.

- 17대 국회의원선거 결과발표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

17대 국회의원선거 결과발표를 지켜보며 탄핵세력의 역사적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온 국민과 더불어 환영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를 온 국민들과 더불어 축하한다.

우리는 임기 40여일밖에 남아있지 않은 16대 국회가 4년의 임기를 남겨둔 대통령을 탄핵할 자격이 애초에 없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대 국회는 헌법이 규정한 주권재민의 원칙,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저버린 구테타적인 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우리는 온 국민과 더불어 탄핵무효, 민주수호 촛불을 들고 이를 규탄해 왔으며, 결국 총선거에 참여하여 국민들의 뜻으로 의회구테타 세력을 심판하였다.

무능한 16대 국회사 정치인들은 촛불을 밝혔던 국민들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여 다시 한번 16대 국회사 정치인 스스로가 탄핵 소추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적법성을 상실한 대통령 탄핵소추를 조속히 각하하여 국정안정을 도모하고, 민주발전의 수호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줄 것을 다시한번 권면한다.

우리는 국민의 뜻이 결국 꺾이지 않는다는 소박한 꿈이 이루어졌음을 자축하며, 대통령의 탄핵소추 철회를 촉구하는 촛불 문화제를 오는 17일 대전역에서 재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4. 4. 15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을위한 범국민대전행동

■ 참다운 국민 참여 정치 시대를 열자!

17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났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결과는 의회 세력의 재편을 통해 그 동안 민의를 배반하는 정치, 부패와 정쟁, 퇴행의 정치를 끝장내며, 국회가 정책생산 중추로서 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초석을 놓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를 한 차원 끌어올려 새 정치의 틀을 만드는 국민 승리로 기록될 것이다. 앞으로 17대 국회는 참다운 국민 참여 정치 시대를 열어 가야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총선 민의를 여야정당이 겸허히 받아들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할 것을 다시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선거 결과에 열린우리당이 자만해서는 안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번 총선은 대의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주권재민을 부인한 탄핵세력에 대한 심판이었지 열린우리당에 대한 신뢰와 지지만이 아님을 열린우리당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민주정부가 들어섰다고는 하지만 사회 계층간의 빈부격차는 심화되어 왔으며 망국적인 사교육비에 서민의 허리가 휘고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피폐화는 갈수록 심화되어 왔을 뿐이다. 17대 국회는 경제의 양극화에 따라 수출과 내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고 370만이 넘어서 신용불량자,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의 고통을 해결하여야 할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치개혁을 위한 지속적 노력도 쉬지 말아야 한다. 선거법 위반 당선자에 대한 엄격한 정리를 비롯해 국민을 두려워하고 스스로 겸손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노동당의 선전을 통한 원내 진보야당의 출현을 한국정치의 획기적인 진전으로 높이 평가하고 이를 환영한다. 그동안 한국 민주주의가 낮은 투표율로 대표되는 참여의 부족, 이로 인한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취약한 대표성, 민의 대의기능의 약화, 다시 낮아지는 국민참여로 인해 초래되어왔던 현실을 확인해 왔다. 진보 야당의 등장은 이런 취약한 국회와 정당의 대표성을 확장시킴으로서 참다운 국민참여정치시대를 열어갈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민주노동당이 참다운 서민의 대변 정당으로서 국회의원들의 정당을 떠난 밀실야합을 엄격하게 감시하고 견제하길 희망한다. 아울러 노동자 서민의 통합과 희망을 더욱 발전 시켜 국민의 희망을 북돋아 주길 기대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보여준 일부 지역주의로의 회귀와 아직도 유권자의 수준을 따라 오진 못하는 선거법, 정당법 등 정치개혁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04. 4. 15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송인준

■ “정치개혁을 염원하며 낡고 부패정치를 심판한 대전지역 유권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총선결과는 야3당의 탄핵에 대한 심판일 뿐이지 열린우리당에 대한 전폭적 신뢰와 지지가 아님을 유념하기 바라며, 열린우리당은 더욱 겸손히 국민을 위해 일하고 국민통합과 민생개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17대 총선 결과 우리 대전지역의 경우 낙선대상자의 전원 낙선을 확인하며 정치개혁을 염원하며 부패정치, 구태정치 심판에 앞장선 대전지역 유권자 여러분에게 경의와 감사를 드린다.

이번 선거결과로 더 이상 주권재민의 원칙을 부인하는 정치인, 민의를 배반하고 자신의 잇속만을 챙기는 정치가 재현되지 않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아울러 우리는 개혁적인 17대 국회활동과 국민의 참여정치를 통해 위기의 한국민주주의를 회생시킴으로써 향후 4년 뒤에 또다시 낙선운동을 벌이지 않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또한 지난 선거과정을 돌이켜 보면 선거법의 개정과 높은 국민의식의 결과로 상대적으로 깨끗하게 치러진 것도 부패에 포획된 선거로부터 각 후보자와 정당이 자유로워짐으로서 정치부패의 사슬을 끊을 계기를 형성한 것이 되었기를 소망한다.

다만 흑색선전과 금품 향응의 불법을 자행한 후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률적, 정치적으로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감시할 것임을 다시한번 천명한다. 아울러 선거비용의 실사와 검증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도 분명히 밝혀둔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도 적지 않다. 앞으로 우리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공개제도의 정비,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확충, 선거연령의 인하, 인터넷 실명제의 폐지 등 산적한 선거법의 개정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열린우리당은 이번 총선 결과가 야 3당의 탄핵에 대한 심판일 뿐이지 열린우리당에 대한 전폭적 신뢰와 지지가 아님을 유념하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욱 겸손히 국민을 위해 일하고 국민통합과 민생개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4월 15일  
2004대전총선시민연대

#### ■ 2004총선시민연대 선정 낙선대상자 대전충남 낙선률 발표

"대전 낙선률 100%, 충남 낙선률 70%"

1. 2004총선시민연대는 낙선대상자로 대전 2명, 충남 10명을 선정 발표하였다. 또한 2004대전총선시민연대는 공천반대 대상자로 5명을 이미 선정 발표한 바 있다. 4.15 총선결과 대전은 2004총선시민연대와 2004대전총선시민연대 선정 대상 5명 중 5명 전원 낙선으로 낙선률 100%를 보였으며, 충남은 2004총선시민연대 선정 대상 10명 중 7명 낙선으로 낙선률 70%의 결과가 나타났다.

2. 2004총선시민연대와 2004대전총선시민연대는 부패비리행위, 선거법위반행위, 반인권전력 및 민주헌정질서 파괴전력, 경선불복 행위 및 반복적인 철세정치 행태, 도덕성과 자질, 색깔론과 지역감정 조장 등의 반유권자적 반의회적 행위에 대한 엄정한 기준을 놓고 낙천낙선 대상자를 선정 발표하였고, 의회 쿠데타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통령 탄핵결의안에 찬성한 의원들을 낙선대상자로 선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 전국적인 낙선률에 비해 우리 지역에서의 낙선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부패정치와 지역주의정치 청산 등 낡은 정치를 종식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에 부합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에 대한 염원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있다.

3. 2004대전총선시민연대는 18대 국회가 이러한 민의를 반영한 개혁국회, 민생국회로 역사에 길이 남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2004대전총선시민연대에 참가한 모든 단체는 18대 국회가 개혁국회와 민생국회로 자리잡

을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대안을 제시하며 시민사회의 역할을 높여내는 데에 매진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끝-

4월 16일  
2004대전총선시민연대

#### ■ 4.17국민승리, 탄핵철회 촛불한마당 대전시민결의문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촛불로 지킨 민주주의, 진정한 승리자는 우리 국민 모두입니다. 탄핵은 무효입니다

이번 17대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다시 한번 민주주의 수호의 의지와 개혁을 향한 결의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수구부패정치를 촛불로 심판하였으며 그 어느 정치세력도 이루지 못한 한국사회의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소중한 원칙인 주권재민을 다시 한번 확인한 우리 국민이야말로 이번 총선의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의회권력을 이용하여 야당이 가결한 대통령 탄핵은 분명 무효임을 만천하에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야3당은 스스로 탄핵을 철회하길 요구합니다. 이는 민심이요, 곧 천심입니다

대통령 탄핵을 가결시킨 야 3당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스스로 탄핵안을 철회하길 요구합니다. 선거 기간 내내 국민 앞에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눈물과 읍소로 표를 호소하던 야3당은 스스로도 탄핵이 정당하지 못했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앞에 참회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적인 심판이 끝난 지금 무슨 이유로 탄핵철회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자며 국민의 뜻을 또다시 외면한다면 그들이 말하는 ‘국민을 위한 헌신’은 헛된 약속임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위한 힘찬 발걸음에 모두 함께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경제문제, 평화문제 등 산적해있는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하루빨리 비정상적인 탄핵사태를 끝내고 정치권이 나라경제를 살리고 서민생활을 돌보는데 온힘을 쏟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가 우리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헌재판결에 따라 대통령이 물러날 수도 있는 불안한 정국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경제회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여야, 정치권과 국민, 지역, 세대간 구분이 없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촛불행사로 확인한 민주주의, 개혁의 의지를 모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자랑스러운 한국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당당한 주체가 될 것입니다.



2004년 4월 17일

탄핵무효,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범국민대전행동

## ■ 대전시는 진정 첨단과학 도박도시로 거듭나려 하는가? - 장외경마장을 반대한다!

대전시는 진정 첨단과학 도박도시로 거듭나려 하는가? 최근 장외경마장 등 각종 도박시설이 앞 다투어 경쟁적으로 우리지역에 개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며, 개탄해마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경륜장 유치가 추진되고 있는가운데, 중앙시장 상인들이 구 대전백화점 자리에 장외경마장 유치에 나선 것은 물론, 또 다른 한 곳에도 장외경마장 유치신청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지역상인들의 주장처럼 도박장 유치운동이 상권활성화를 위한 교육정책의 조치라 하더라도, 지하철 개통임박과 더불어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원도심 지역에 건설되면서, 원도심 활성화의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는 마당에 수요추정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도박장 유치경쟁은 사행성 조장 등으로 생활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첨단과학기술도시를 지향하는 대전시의 발전에도 반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난해 대전시가 경륜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많은 시민들의 반발을 사면서 무리를 빚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문광부의 최종허가를 받지 못한 현실을 감안할때, 총선국면중에 급작스럽게 추진되는 장외경마장 등 도박장 유치경쟁 소식은 대전시민 전체를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에 이미 월평동 장외경마장을 비롯해, 유성에 장외경륜장과 경정장이 개장중에 있어, 이용자수만도 매년 100만명이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특히, 대전시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고 있는 대전경륜장이 개장된다면, 매년 30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4곳의 도박장을 이용할 계획이라는 점에서도 추가적인 장외경마장 등의 도박장 개장은 도박중독자 양산 등의 부작용을 외면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장외경마장 유치는 도박중독자 양산 등 사행성 조장과 첨단과학기술도시라는 대전시 정체성에 심각한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전시와 중구청, 동구청은 법적절차 여부를 떠나, 관련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시민여론을 모을 것을 요구한다.

또한, 지역자금 역외유출 규모면에서 대전경륜장보다도 더욱더 큰 장외경마장은 다른지역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도박시설로서, 울산시와 대구시, 가까운 청주시, 전주시가 이미 행정적으로 규제를 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동구청과 중구청은 관련시설에 대해 불허처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대전시도 원도심 활성화는 도박장 유치를 통해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란 점에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적극적인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03년 4월 26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대법원의 의정회 예산지원 무효판결을 환영하며...

-대전시는 의정회와 행정동우회의 예산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조례를 폐지하라-

지난 4월 23일 대법원은 서울시 서초구의회가 ‘서초구의회설치 및 육성지원조례안’을 재의결한 것과 관련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우리는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사실상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자체가 법적으로 불합리하다는 해석이므로 대전시 역시 의정회를 비롯하여 행정동우회 등에 대한 예산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조례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지난해 5월에도 행정동우회 육성 지원조례 개정안을 부결하고 조례자체를 폐기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대전시의회는 특권층 조성과 시민의 혈세낭비라는 지역주민의 지적을 저버린채 결국 개정안을 가결하였다. 이는 지방행정과 의정을 직접 담당했던 자들로 구성된 특정단체에게 제식구쟁기식식의 주고받기식 특혜를 위해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능을 스스로 포기한 처사였다.

그러나 이제는 대법원이 조례안제외결무효확인소송에서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조례로 판결한 만큼 대전시의 예산지원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대전시의회는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하고 있는 의정회 및 행정동우회 육성지원조례를 폐지해야 마땅할 것이다.

아울러 대전시 의정회나 행정동우회도 퇴직자들의 축적된 경험을 살려 사회봉사활동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다면 특혜가 아닌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동등한 지위에서 활동함으로써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모범을 보일 것을 다시한번 권면한다.

2004년 5월 11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송인준

■ 반유권자적인 예비후보의 선정 철회를 촉구한다.!

- 열린우리당의 6.5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선정에 즈음하여 -

6·5보궐선거를 20여일 앞두고 각 정당은 경선후보자 선출이나 후보자 공천에 한창이다. 그러나 우리는 각 정당의 경선후보자 선출과정이나 공천과정을 예의주시해 본 결과, 과연 이들이 정치개혁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각 정당의 공천은 한마디로 중앙정치에 비해 지방정치가 퇴행하고 있는 듯한 실망감과 함께 각 정당이 최소한의 후보 심사라도 거쳤는지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특히 열린 우리당의 예비후보자 선정의 결과는 유권자들의

정치개혁 여망을 저버린 반유권자적인 수준에 이르렀음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어 이에 우리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깨끗하고 유능한 지방정치인을 뽑을 권리가 있는 지역 주민을 더이상 우롱하지 말라!

우리는 지난 4월 총선에서 부패에 연루된 정치인, 도덕성과 자질이 의심스러운 정치인, 반유권자적 행위를 일삼은 정치인 등에 대해 공천반대 및 낙선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결국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적 열망이었던 정치권 물갈이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에 힘입어 2004대전총선시민연대가 선정한 공천반대자 및 낙선대상자 전원이 낙선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는 낡은 정치와 구시대적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적 퇴출 의지로써 새로운 정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염원이 반영된 결과였다.

이처럼 우리 지역주민들은 보다 개혁적이며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정치인을 갈망하고 있다. 그러나 보궐선거를 앞두고 현재 각 정당에서 확정된 경선후보자나 공천 명단을 면면히 살펴보면 이런 지역주민의 요구가 반영되었는지 납득할 수 없는 ‘지역주민 무시 공천’일 따름이다.

특히 열린우리당이 선정한 경선후보자 가운데에는 한국정치의 최대 화극인 의원 꺾주기에 가담하고 불법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하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던 송석찬 국회의원과 공무담임중 대가성 뇌물 수뢰혐의를 받고 이당 저당을 옮겨다닌 박병호 전 동구청장이 포함된 것은 정치개혁을 앞장서서 추진하겠다는 열린우리당의 의지를 근본적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처사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무자격·부패 정치인들의 경선후보자 선정이나 공천을 즉각 철회하라!

우리 대전지역 주민들은 부패비리 정치인, 최소한의 도덕성과 자질도 갖추지 못한 정치인,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정치인, 최소한의 민주적 물조차 지키지 않는 정치인, 이당저당 습관적으로 옮겨다니며 권력을 탐하는 정치인들에게 결코 대전을 맡길 수 없다. 각 정당의 반자치적, 반주민적, 비상식적, 안하무인격 공천으로 지역주민들의 권리를 더이상 우롱하지 않기를 다시한번 권면하며, 지금이라도 무자격·부패 정치인들의 경선후보자 선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제1당이자 집권여당이 경선후보자를 선정하거나 공천을 한다는 것은 정당이 지역 주민에게 자치단체장 후보로 충분히 자격을 갖추었음을 보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누가보아도 지역주민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 뻔한 인사들을 추천해놓고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뻔뻔하기 이룰데 없는 무책임한 정치행위이다. 열린우리당은 지금이라도 무자격 부패정치인들의 경선 후보 선정과 공천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더 나아가 무자격 지역정치인들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심각한 결함을 수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대는 변화하고 있다. 지난 총선결과에 의해 특정정당의 깃발만 곱으면 당선된다는 지역정치인들의 시대착오적인 정치의식이나 정당의 안이하고 구태의연한 공천은 결국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열린우리당이 높아진 지지율에 자만하여 무자격 정치인들을 공천한다면 총청권을 대변한다는 정당의

전철을 뱉게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우리는 나머지 보궐선거 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후보자들에 대해 철저히 평가하여 그 내용을 지역유권자들에게 전면 공개할 것이다. 또한 공천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도 높은 방법으로 다양하게 대응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4년 5월 14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송인준

### ■ 시내버스 파업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 운송사업 조합의 부실협상을 규탄한다!

또다시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시민을 협박하는 지경에 이른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시내버스의 노사갈등에 접하여 사용자측인 버스운송사업조합의 무책임한 불성실 교섭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운송사업조합은 노동자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임금동결’에서 나아가 기존에 지급해오던 ‘상여금 600%'의 전면삭감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사실상 노동조합에 파업을 종용하여 ‘요금인상’이라는 시민부담과 ‘공적지원 확대’를 대전시로부터 얻어내고자 하는 술수임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 경영난을 핑계로 단체교섭을 파국으로 몰아가서 자신들의 잇속만을 채우려는 속셈 때문에 버스교통의 소비자인 대전시민들이 더 이상 우롱 당할 수 없다.

이미 대전시는 버스사업주에게 연간 7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건교부의 지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로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을뿐 아니라, 수익금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한 준공영제의 도입을 통해 적자분의 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파업을 강요하는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버스산업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해 버스운송사업조합측은 성의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이러한 작태를 시민과 함께 엄중 규탄하며 대전시에도 무조건 끌려 다니는 모습을 털고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버스교통의 활로는 이용자의 감소를 되돌려 이용객의 증가를 가져올때만 가능하다. 이런점에서 그동안 대전시가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교통의 근본적 활성화를 위한 정책전환이 미흡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업계가 파업을 강요하고 강요된 파업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원칙에서 벗어난 퍼주기를 감행한다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악화될 뿐임을 유의해야 하며, 불성실 교섭 사업주로 인해 파업이 발생할 경우 그동안의 지원도 백지화할 것임을 내외에 천명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대전시와 시의회가 버스개혁 및 도시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BRT시스템 전면도입과 100% 무료환승시스템 도입 등 특단의 대중교통개혁안을 즉각 수립하고, 시내버스 업계와 노조는 시내버스 요금상정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자구노력을 이행할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요구한다.

2005년 5월 24일

■ 유족들의 통한 50년도 더 넘었다. 진상규명법 즉시 제정하라!

인권시민단체는 요구한다. 17대 국회는 개원 즉시 민간인학살 문제 해결하라!

17대 국회가 개원했다. 모든 정당이 '원칙'과 '개혁'을 내세우며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각 당이 16대의 구태를 벗고 국민적 여망에 부합하는 의정활동을 하며 시대적 사명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법' 제정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 국회와 국가는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미군 등 유엔군, 국군, 경찰, 우익단체 및 인민군에 의해 10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아무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참히 학살당했는데도 그 실상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 500만 유족의 통한이 반세기 넘게 지속되고 있고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사건의 광범위함과 야만성이 실로 치를 떨게 할 정도로 끔직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현실은 인권 국가를 지향하는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대착오적인 정치인들은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해 색깔론을 들먹이는 등 이념적인 문제인 것처럼 왜곡시켜 지난 3월 2일 16대 국회의 본회의에서 '진상규명법'을 부결시키며 고통받고 소외당한 피학살 유족들의 염원에 또다시 재를 뿌렸다. 그러나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사회의 진정한 민주발전과 국민대통합은 가능하지 않다.

이미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해서는 4.19직후 제4대 국회에서는 진상규명이 시도됐으나 5.16군사쿠데타로 인해 그 노력이 짓밟혔다. 5.16군사쿠데타 세력은 오히려 피해 유족들을 탄압하고 연좌제로 평생을 고통속으로 내몰았다. 또한 이후 반민주적인 독재세력에 의해 학살의 진실은 철저히 왜곡되고 은폐되고 말았다. 이렇게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적인 살인범죄를 처벌하지 않은 후과로 우리 사회는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국가권력에 의한 의문사, 고문, 조작 등 불법행위를 경험하는 불행한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민간인 피학살 유족들은 지난 30여 년간 침묵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우리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된 90년대에 들어서야 다시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그렇게 유족과 인권시민사회단체의 노력으로 지난 16대 국회에서는 55년만에 민간인학살 진상규명법이 심의되었다. 16대 국회의 행정자치위원회, 과거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는 동안 법안은 진상규명이 아니라 사실 확인에 머무는 초라한 법안으로 왜곡되었으나 그 마저도 우여곡절을 겪으며 2004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었다. 그러나 "보상법"이라는 호도와 "대한민국 허물기법"이라는 폄훼로 진상규명법은 과거사 4대 입법 중 '유일'하게 '부결'되고 말았다. 이는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를 열고자 하는 국민적 염원을 짓밟은 16대 국회 폭거였다.

17대 국회는 민간인학살 진상규명법을 즉시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이 법은 애초 16대 국회에서 다른 과거사법안과 함께 제정되었어야 마땅했던 법이다. 입법을 반대했던 한나라당이 제1당에서 물러나고 부결을 주도한 수구 국회의원들이 대거 낙선한 것은 국민들의 의지가 과거청산에 있음을 반영한다. 게다가 이미 415 총선 이후 각 당에서도 언론이나 관련단체에 민간인학살 진상규명법을 최우선 과제로 입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리는 또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법 제정을 요구한다. 우리 사회는 이미 각종 과거청산 입법의 경험을 갖고 있으나 주무기관들은 번번이 짧은 조사기한과 조사권한 부족, 정부 부처의 비협조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 활동을 하지 못했다. 강조하건데 이번 입법은 조직적으로 자행된 전국의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해 그 어떤 가치보다 진실에 접근하고 철저히 진상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이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17대 국회가 진정으로 진실의 토대 위에서 개혁의 노력을 경주하기를 기대한다. 온 국민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한국전쟁의 비극, 그 속에서 발생한 국가폭력의 실체를 낱알이 규명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과제를 제대로 수행해 나갈 때 17대 국회는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책무를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17대 국회 개원 즉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법을 제정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우리 19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각 당의 진상규명법 제정 노력을 주시하며 500만 유족과 함께 제대로 된 입법이 완성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04년 6월 1일  
19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 ■ 대전광역시 주민투표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1. 주민투표 조례제정 기본방향

주민투표법은 외국인의 주민투표 자격(제5조), 주민투표 대상(제7조), 주민투표 청구요건(제9조), 주민투표 청구(제12조),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 금지기간(제22조) 등 많은 주요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주민투표의 운영양상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가 제안한 표준조례안은 권고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지역특성에 따른 자율적인 제도설계 보장과 법률 규정사항을 최소화하고 조례위임을 가급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주민투표 조례는 일단 주민투표법의 범위 내에서 직접민주적 개방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하며, 특히 주민투표 대상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가능한 포괄적인 규정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고 주민투표가 가능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의 대상영역을 지나치게 제한해 시행자체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 2. 주민투표 대상

주민투표 대상과 관련하여 주민투표법 제7조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과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및 "공무원의 인사·정원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투표법이 재정·인사·조직에 관한 주요사항을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주민투표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대전시 주민투표 조례 입법예고에서 주민투표 대상을 "1.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집행기관과 의회, 또는 기초자치단체간의 대립되는 주요 정책결정사항" "3.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대상영역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시행자체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효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주민투표 대상은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방향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3.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을 "3. 기타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으로 확대하거나, "4. 기타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을 신설하여 포괄적인 적용을 통해 주민투표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주민투표 청구요건

주민투표 청구요건과 관련하여 주민투표법 제9조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0 이상 1/5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행정자치부가 권고한 인구규모 대비 적용비율에 근거하여 "100만 이상 150만 미만" 기준인 1/16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6(6.25%)을 기준으로 하면 대전지역의 유권자 대비 서명자수가 약 6만 3천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스위스와 미국 등 평균 2% 정도인 선진국의 기준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고 실효성이 적어 조례만 있고 시행이 없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례제정에서 주민투표 청구요건을 주민자치법이 허용하는 1/20(5%)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시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고 주민참여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

## ■ 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정비, 충분한 논의 거쳐 확정해야

1. 현재 정부는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지방정부의 재정분권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이양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지급방식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재정분권화가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사회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우리는 복지분야의 분권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분권화의 내용과 방법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에 큰 변화가 초래될 수 있음에 주목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방식 변경 등의 논의가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밟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 2. 현재 논의 과정과 내용에 대한 우리의 우려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복지업무의 지방이양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보건복지 관련 70여개 사업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며, 또다른 70여개 항목에 대해서도 포괄보조금 등의 방식으로 예산지원 방식을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역중심의 지방 협치(Governance)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분권화에 대한 논의마저 중앙집권적 방식으로 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논의과정에 지방의 참여가 저조한 점, 복지 분야의 국고보조금 제도의 변화를 논의하면서 지방정부, 복지전문가 그리고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별로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은 현재 지방분권 논의의 심각한 한계로 보인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 복지재정의 저열성을 고려해 볼 때, 국가의 복지재정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하지 못한 복지재정의 지방분권화는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에산 확충에 대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복지정책의 자율적 수립과 집행은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 수준의 사회보장 급여와 서비스가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가능한 것이며, 이를 위한 재정 확보의 책임은 우선적으로 중앙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의 사업별 내용과 성격, 지방정부의 상이한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분권화 전략이 수립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점이 고려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의 자율성 신장과 특성화된 복지정책의 집행이라는 분권화의 긍정적 결과보다는 지역별 복지격차의 확대라는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3. 지방분권의 핵심은 정책과 관련된 제 주체들의 참여에 의한 지역 거버넌스의 실천에 있다.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지역복지 실천 조직의 참여가 없는 분권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정부는 당장 2005년부터 복지재정의 분권화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복지'와 '분권화' 모두 주요한 과제이나 '분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복지'가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분권화의 긍정적 요소가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서라도 성급한 시행보다는 충분한 사전 논의와 준비를 충실히 하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2004. 6. 7.

경기복지시민연대 · 광주참여자치21 · 구로건강복지센터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복지세상을 열어가는지민모임 · 성남시민모임 · 우리복지시민연합 · 울산참여연대 · 인천참여자치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 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나눔의공동체광진주민연대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 ■ 김선일씨의 석방을 호소하며...

- 김선일씨의 무사귀환은 이라크 추가파병을 철회하는 길 뿐이다! -



○ 오늘 우리는 이라크에서 발생한 한국인 김선일씨의 피랍사건 소식을 접하면서 충격을 넘어 분노를 감출 수 없다. 특히 한국 민간인 김선일씨의 억류와 살해위협에 대한 비보를 접하고 슬픔과 충격에 빠져있을 김선일씨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 우선 우리는 김선일씨를 억류하고 있는 무장단체들에게 김씨의 석방을 간곡히 호소한다. 그동안 미국의 부당한 이라크 침략과 한국군의 추가 파병에 반대해 온 우리는 이라크 국민의 울분과 저항을 이해할 수 있으나, 민간인에 대한 납치 및 살해 등의 비인도적 방법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우리 한국 국민들은 미국이 이라크 국민의 자유와 평화가 아닌 자신들의 패권과 석유를 위해 이라크를 침략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으며, 또 미국의 이라크 점령 이후 이라크 국민들의 주권이 빼앗기고 술한 인권유린이 자행되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부당한 전쟁과 점령에 반대해왔고, 한국군의 파병을 혼신을 다해 막아내고자 노력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 민간인 억류사태는 한국 국민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양심적 시민들로 하여금 동의를 얻기 힘든 것으로써, 한국 정부의 정책결정과 무관한 김선일씨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줄 것을 호소한다.

○ 이번 사태는 예견되었던 비극이다.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한 채 그 어떤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무원칙한 파병으로 미영점령군에 대한 명분없는 지원을 강행하려는 정부는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서둘러 김선일씨의 무사귀환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나 대책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한다.

진정 참여정부와 17대 국회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승복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재검토 및 철회해야 한다는 여론이 과반수를 넘어서고 있고, 적어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80%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파병 일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명분없는 파병에 따른 민간인의 희생을 막는 길은 오직 정부가 이라크 추가파병 일정을 중단하는 길 뿐이라는 것을 바로 직시해줄 것을 바라며, 더 이상 무고한 한국인들의 목숨을 놓고 저울질하지 않도록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2004년 6월 21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송인준

■ 행정수도이전계획은 충청권 표심을 얻기 위한 급조된 공약이 아니다.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엄연한 국가발전계획이다.

1.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2. 최근 정부의 신행정수도건설추진과 관련해 서울대 환경대학원 최상철 교수 등 105명으로 구성된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이명박 서울시장과 손학규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수도권 정치인, 한나라당 등에서 절차적 하자과 위헌론, 천도론 등을 주장하며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폐기하거나 또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 대부분이 충분한 논리로 반박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지만, 행정수도이전계획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충청권의 표심을 얻기 위해 급조된 공약이라는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울대 최상철 교수의 논문이 있어 이를 근거삼아 반박하고자 한다. 참고로 최상철 교수는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극비리에 지시를 받아 행정수도이전에 관해 연구를 하였다.

4. 결론부터 말하자면, 행정수도이전계획은 지난 대선에서 충청권의 표심을 얻기 위해 급조된 공약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국가발전계획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최상철 교수의 논문은 2001년 8월 23일 오후 2시 대전 유성호텔에서 대전광역시개발위원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신수도 건설의 재평가와 대전위상 정립”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으며, 본문의 내용 중에는 「신수도건설은 1977년 2월 박대통령이 서울특별시 연두순시 중 신수도건설 발표이후 2년 8개월 동안 추진되다가 1979년 10월 26일 시해사건이 중단(중략), 만약 박정희 대통령이 그대로 집권하였다면 1986년 천안과 대전사이의 어느 곳에 신수도를 건설하고 청와대와 행정부가 이전하였을 것이고 우리나라 국토공간구조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며 지역주의도 새로운 양상을 띠었을 것(중략), 1977년 2월부터 1979년 10월 26일까지 거의 2년 8개월 동안 신수도 건설을 위한 청와대 경제수석 아래 중화학공업추진기획단이란 이름으로 실무작업단이 구성되었고 부문별로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신수도 건설계획을 위한 입지선정, 도시계획, 추진방법과 수도이전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작업이 이루어진 바 있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은 이미 1977년부터 최소 2년 8개월 동안 철저한 과정을 거쳐 추진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을 건설하였으며,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더하여 유성에 국립현충원을 건설하였으며 계룡산 신도안 일대에 3군 사령부로서의 계룡대를 건설하였다. 이미 대덕연구단지를 건설하였고 충남 대학교를 이전하여 유성에 새로운 캠퍼스를 조성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정작 신수도 계획은 둔산 신시가지에 정부대전청사건물로 변형되어지고 말았다.」는 등의 내용이 있어 1979년 10월 26일 시해사건이후에도 청주국제공항 등 행정수도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갖추기 위한 주요 시설들이 건설되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은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국가발전계획이라는 판단을 가능케 하고 있다.

따라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은 어느 날 갑자기 선거기간에 표심을 얻기 위해 급조된 공약이 아니라, 이미 박정희 정권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다가 잠시 차질을 빚었을 뿐 이후 정권에서 중단되지 않고 서서히 추진되다가 노무현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제정하고 추진기구를 출범시켜 입지선정을 절차과정에 박차를 가하는 등 본격케도에 올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5.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우리가 서울대 환경대학원 최상철 교수의 논문을 공개하는 목적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이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급조되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해 철저한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음을 입증하는데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최상철 교수가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 그런 의도가 전혀 없음을 밝혀둔다.

2004. 6. 21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상임의장 김민남

#### ■ 김선일씨의 사망소식을 접하여

##### - 이라크 추가파병의 전면 백지화와 철군 계획을 즉각 수립하라 -

김선일씨의 사망 소식에 접하여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희생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더불어 애도한다.

우리는 매우 실망스러운 정부의 대응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정부는 자국민이 피랍된 사실도 미국정부로부터 통보 받지도 못하였다. 이런 속에서 한-미동맹을 위해 추가파병을 졸속으로 결정하였을 뿐 아니라, 김선일씨의 "나는 죽고 싶지 않다"는 절규에도 불구하고 파병 강행의 의지만을 천명하였을 뿐이다. 대한민국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가 되고 말았다.

우리는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테러에 반대한다. 그러나 이라크 침공의 정당성을 아직도 입증치 못하면서 비무장 민간에 대한 살육을 자행하기도 한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협력한 형편에, 이라크 저항세력을 비난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지 자괴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김선일씨와 같은 민간인 희생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라크 추가파병의 전면 백지화와 서희, 제마부대의 철군 계획의 수립에 착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 향후 계획

1. 이라크 전쟁 희생자 故 김선일 분향소 설치(장소 대전참여자치연대 참여광장)
2. 장례일까지 추모 촛불집회 개최(매일 저녁 19시 동방마트 앞)

2004년 6월 23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송인준

#### ■ 행정수도 후보지 결과발표에 즈음한 지방분권대전본부 논평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후보지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후보지 평가결과 연기·공주지구는 88.96점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는 행정수도이전 후보지 평가결과 발표에 즈음하여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는 행정수도이전 논란에 따른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을 야기한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수도권과 지방을 동시에 살리는 상생의 길과 국민통합의 대장정에 온국민이 합심하여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행정수도이전이 수도권 비만과 지방의 영양실조라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임은 지난 2002년 대선

과 2003년 12월 29일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던 사실에서 이미 명약관화하게 확인된 바 있다.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반대여론을 교묘하게 확산시키며 수도권 이기주의와 기득권 논리에 집착하는 수도권의 일부 지식인 집단과 언론, 정치권 일각은 더 이상 여론왜곡과 국론분열을 조장하지 말고, 상생과 국민통합의 대장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만약 흑세우민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몸부림친다면 지난 4월의 탄핵 후폭풍과 같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참여정부는 어떠한 정치적 논리나 외압에 흔들림없이 행정수도이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야 하며,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과 같은 부작용을 막기위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여야 한다.

충청도의 3개 지자체(대전, 충남, 충북)은 수차례 확약한바와 같이 오늘의 발표에 깨끗하게 승복해야 하며, 충청지역민들은 오늘의 발표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상생과 국민통합의 대장정에 모범적으로 나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 끝 -

7월 6일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 ■ 대전경륜장 건설 찬성한 지역 국회의원을 찾습니다.

##### - 대전지역 국회의원 6인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최근 두명의 국회의원이 문광부를 찾아가서 경륜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염홍철 대전시장이 언급에 대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7일 대전지역 6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사실확인을 추진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전참여연대는 공개질의를 통해 단 한명의 국회의원이라도 이러한 변화된 입장을 견지하거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다면, 이는 지난 4.15총선을 통해 확인된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 6명 모두의 대전경륜장 반대입장과는 상반된 의견이자, 공개적인 질의를 통해서 확인한 유권자와의 약속을 뒤집는 것이라며, 시민단체의 사실확인 요구에 응당히 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경마, 경륜, 경정 등 도박산업 환경이 최근들어 더욱더 악화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도박산업의 올바른 관리를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기존의 대전경륜장 반대 입장에서 아무런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찬성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광부를 찾아가서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힌 대전지역 국회의원 두 명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밝힐 것과 대전경륜장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외에도 ‘문광부가 현재 추진중인 도박산업 개선방안 용역에 대한 인지여부’,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도박장에 대한 적정규제와 올바른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총 6문항에 대한 공개질문을 하였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도박산업의 올바른 해결방안을 찾고있는 시점에서, 대전경륜장 추진여론을 조장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대전경륜장 등 도박산업 문제의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기 위해 17대 국회가 노력할 때라고 주장하고, (가칭)사행산업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도박산업의 정확한 실태와 수요, 향후 적정공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무총리산하에 도박산업 관리위원회를 만들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사행산업의 적정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7대 국회가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2004년 7월 7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선건, 민명수, 송인준, 윤종삼

<대전지역 국회의원 여섯분께 드리는 공개 질의서 >

정치개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열린우리당 소속 지역국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공사다만한 가운데 이렇게 공개질의서를 보내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역 한 인터넷신문에 보도된 믿기지 않는 보도내용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이 “그동안 의원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문광부에서 승인을 안 해준다고 했는데, 최근 두 명의 지역 국회의원이 문광부에 가서 ‘경륜장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라고 말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기대하겠지만, 단 한명의 국회의원이라도 이러한 변화된 입장을 견지하거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다면, 이는 지난 4.15총선을 통해 확인된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 6명 모두의 대전경륜장 반대입장과는 상반된 의견이자, 공개적인 질의를 통해서 확인한 유권자와의 약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공개 질의서를 내는 것은 염시장의 발언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함입니다. 경륜장 건설은 시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공개적으로 토론되고 결정될 사항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경륜장 건설을 반대하지 않거나 또는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이 있다면 그 정책적 소신이 공개적으로 표명되고 토론될 일이지 밀실에서 거래될 일은 아닐 것입니다.

경륜장 건설여부는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다면 무기명으로 '두명'의 국회의원으로 알려져서도 안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회의원님께 공개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의 언급에 따르면, 두 명의 국회의원도 문화관광부를 찾아가 대전경륜장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의원님께서도 문화관광부를 찾아가서 대전경륜장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사실이 있습니까? 찾아가지는 않으셨으나 반대치 않는다거나 찬성한다는 의견을 문화관광부에 직접 또는 보좌진을 통해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러한 사실이 있다면 비공개로 문화관광부에 전달할 일이 아니라 공개적인 정책 소신의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절차 없이 밀실 의사전달 행위를 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부에 이런 의사 표명을 한 사실이 없다면 염홍철 대전시장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대전지역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상호간을 이간하고 국회의원님들의 명예를 훼손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텐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예훼손에 대해 대전시에 사과를 요구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둘째, 의원님께서는 대전경륜장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경륜장 찬반 여부를 떠나 유권자로서의 당연한 질의를 드리고자 하오며, 특히, 지난 총선거간중에 공개질의를 통해 대전지역 국회의원 여섯 분 모두 반대입장을 견지한 바는 물론, 총선후 당선자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경륜장 사업추진에 대해 주민투표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만큼 염홍철 대전시장의 발언 진의여부에 대한 확인차원에서도 대전경륜장 추진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셋째, 의원님께서는 현재 올해 초 청와대의 지시로 문화관광부에서 용역을 통해 사행산업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곧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의 도박산업 2003년 1인당 1일 평균배팅비용이 45만4200원에 이르고 레저산업에서 차지하는 도박 산업의 비율 또한 50%에 육박하고 있어 일본의 두 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대전경륜장을 비롯해 전국의 100여곳이 넘는 곳에서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미명아래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도박장유치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도박중독자가 정부자료로도 300만명에 이르러 성인인구의 9.3%에 이르는 등 도박산업의 심각한 문제점이 사회적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난해부터 도박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해결방안 제시를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며, 참여정부는 용역을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전경륜장 추진여부 또한 이번 용역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집권여당 소속 국회의원도 대전경륜장 건립 찬성의견을 밝히는 것은 용역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물론, 도박산업에 대한 올바른 규제 및 해결방안을 찾는데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현재 전국의 합법적인 대형 도박장은 총 60여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안으로도 30여개의 도박장이 장외 발매소를 중심으로 허가될 계획입니다. 수요에 의한 적정 공급계획에 의하지 않는 무분별한 도박장 난립으로 사회적 비용은 2001년 기준으로 도박장 총 매출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마사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도박장에 대한 적정규제와 올바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지역 국회의원님!

도박산업의 올바른 해결방안을 찾고있는 시점에서, 지금은 대전경륜장 추진여론을 조장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전경륜장 등 도박산업 문제의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키 위해 17대 국회가 노력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미, (가칭)사행산업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도박산업의 정확한 실태와 수요, 향후 적정공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무총리산하에 도박산업 관리위원회를 만들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사행산업의 적정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7대 국회가 노력해줄 것을 여러 차례 촉구한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청원컨데, 대전시가 의도하는바대로 대전경륜장이 건립되려면, 기존 세곳의 도박장과 더불어 매년 3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도박장을 출입하고 2조가 넘는 도박 매출을 올려야 함을 직시해주시길 간곡히 기대합니다.

이상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대전지역 국회의원님들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 ■ 대전시는 대전경륜장 건립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라!

최근들어 도박산업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대전시는 대전경륜장 건립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

2004년도 상반기 중 경마장과 경륜장 매출액이 각각 22%씩 감소하였다고 한다. 경륜 매출액은 올 상반기 중 6770억원으로 작년 동기(8720억원)보다 22.3% 줄었다. 입장객 수는 작년과 비슷했으나, 1인당 경주권 구입액이 많이 줄었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개장한 부산경륜장의 경우, 애초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올 상반기까지 매출이 315억원에 불과해 2004년도 총매출은 85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세수 확보는 커녕 인건비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부산시로부터 250억원의 경상경비를 지원받아야 할 판이라는 것이다.

대전시가 대전경륜장 건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하면서 사례지역으로 삼았던 창원경륜장의 경우도 2002년을 고비로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총 매출은 2천56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천462억원에 비해 26%가 감소했다고 한다.

비단 경륜장만이 아니라, 최근들어 경마,경정,카지노,복권 등 대표적인 도박산업의 총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급감원인은 경기부진에서 찾을 수 있겠으나, 사행성 레저수단(합법적인 도박장 시설 -> 인터넷 등)의 다양화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도박장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경제여건 환경이 호전되고 주5일제 근무에따른 레저기회가 확대된다하더라도 ‘도박장 확산’, ‘도박종류 다양화(우권장, 견경장, 인터넷 도박 등) ‘도박중독 방지를 위한 1인당 1회 배팅한도 제한’ 등의 환경변화가 이루어진다면 도박산업 전망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다. 앞으로 도박장도 일본처럼 문닫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다.

이러한 도박환경에 대한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시는 지난 2002년 실시한 대전경륜장사업 타당성조사 보고서에 의존한 ‘매출 및 지방세수 확보’ 논리로 대전경륜장 건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대전시의 논리대로라면, 대전경륜장의 경우 개장 5년후부터 200만명이 넘는 고객과 1조가 넘는 매출을 보이고, 매년 1,200억원의 지방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다. 또한, 기존 월평동 장외경마장과 유성의 장외경륜, 경정장을 포함하면, 매년 300만명이 넘는 대전시민들이 2조가 넘는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최근 도박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권역별로 대형 도박시설의 입지 등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은 물론, 부산 및 창원경륜장의 해당지역민의 이용율이 90%가 넘는 것을 감안한다면, 대전경륜장의 예상매출은 과다포장된 예측치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시는 대전경륜장 건립추진과 관련하여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대전경륜장 타당성 검토를 다시해야 할 것이다. 수요예측의 잘못으로 시민혈세를 축내거나 부산경륜장 처럼 새로운 수익금 창출을 위해 장외경륜장을 4곳이나 확장하는 등의 비효율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도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

한다.

아울러, 대전경륜장 건립에 대한 찬반 이해가 분명한 만큼, 편협된 논리로 조금한 추진보다는 현재 문광부에서 용역중인 도박산업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결과와 도박산업 환경변화를 적극 고려한 후에 대전경륜장 건립 여부를 재검토 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2004년 7월 9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송인준

**■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국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은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는 우선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환영한다. 국회에서 통과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입법권을 무시하고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으로 초법적인 권한행사이다. 대통령에게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것은 초법적인 권한 남용을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헌법소원과 같은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민주시민으로서의 덕양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수도이전 헌법소원이 각하 될 경우 겹쳐지게 수용하길 촉구한다. 만약 헌법소원 각하에도 불구하고 국론분열을 조장하며 발목잡기를 계속한다면 준엄한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정파와 지역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수도권권의 과밀과 집중, 지역의 균형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임이 분명하다는 것은 반대론자들이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충분히 확인된다. 결국 행정수도이전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반대를 위한 명분일 뿐, 실상은 수도권 이기주의와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헌법소원 청구인단에 서울시의원 50여명이 포함된 사실에서도 충분히 입증된다.

우리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헌법소원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실체가 규명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밝히는 바이다. 더 이상 국민투표와 같은 초법적인 권한행사를 강요하며 여론왜곡과 국론분열을 조장하지 말고,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이전 논란의 실체적 규명을 검허히 받아들이어야 하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국체를 부정하는 행위로 탄핵 후 폭풍과 같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7월 12일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 김주일 안성호 조연상



**■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못믿을 시내버스 원가용역, 외부 회계감사 즉각 실시하고, 시민들에게 사회적 기여비용을 대중교통 요금체계에 반영하라!**

최근 대전시는 시내버스 요금을 최고 200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미, 서비스 개선없는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누차에 걸쳐서 주장한바 있으며, 아울러 BRT시스템 전면 도입 등 강력한 버스개혁 정책을 조속히 도입할 것을 대전시에 강력하게 촉구한바 있다.

우리들의 이런 요구에 대해 대전시는 BRT시스템 전면도입 및 무료환승시스템 도입 등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버스개혁 정책을 시내버스민관공동대책위 차원에서 합의하고 염홍철 대전광역시장 및 시의회의 동의를 밟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버스개혁 방안을 제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최근 재정경제부에서 물가대책 차원에서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포함해 서민경제에 영향이 큰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조정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저조한 교통카드 이용율을 고려치않고 최고 200원의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시내버스 이용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실제로, 광주시와 대구시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없는 과도한 요금인상에 대한 시민반발을 우려 요금인상 시기를 조정하고 있으며, 이미 울산시는 하반기로 요금인상 시기를 연기하는 등 타 광역시에서는 물가인상 및 서민경제를 고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전광역시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 승차권 발행을 전면 중단한 것은 시내버스 이용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외면하고 승차권 구매시 감액금액을 없애고 현금이용율을 높이려는 알팍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시내버스 업계의 처사는 서비스 개선 등의 시민들의 최소한의 목소리마저 외면한 시내버스 업계 이기주의의 극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점에서도 과도한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또한, 2002년 말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전제로 시민들과 약속했던 무료환승시스템 도입과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 노선개편 등의 대전시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업계가 기자회견을 통해 서비스 개선 약속을 하였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전혀없다는 점에서도 이번 요금인상 명분은 없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얼마전 통계청의 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995년부터 지난달까지 10년 사이 38.8% 올랐지만 시내버스 요금은 전국 평균 116.4% 올라 물가 상승률의 3배를 웃돌았으며, 시내버스 요금 가운데 학생요금도 이보다 높은 118.2%나 났음은 시내버스 요금인상의 부당성을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실제로 대전시의 경우도 최근 10년 간 도시형 버스 기준으로 94년 290원에서 2002년 700원으로 인상폭이 141%에 이른다.

더욱이, 대전시가 시내버스 요금인상 근거로 제시했던 『운송원가 용역보고서』를 분석해본 결과 시내버스업계가 수익금을 고의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실례로, 『요금함 실사 및 실적자료 조사비교』에서 좌석의 경우, 실사(305,253원)와 실적자료(263,427원)와의 차이가 25,836원(15.88%)으로 나타났으며, 도시형의 경우, 실사(341,696원)와 실적자료(338,791원)간 차액이 2,905원(0.86%)으로 나타났으며, 중형의 경우 실사(161,894원)와 실적자료(137,324원)간 차액이 24,570원(17.89%)에 달했다.

특히, 대전시의 경우 공동배차를 하고 있는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본다면 수익금 편차가 거의 발생할 수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 각회사별 실적자료분석 차량1대당 평균운송수입금 산출표에 따르면, 좌석(실운행차량수 기준, 차액 51,055원, 18.7%) / 221,431원(금남) - 272,486원(경익), 도시형(실운행차량수 기준, 차액 45,945원, 13%) / 307,163원(금남) - 353,112원(경익), 중형(실운행차량수 기준, 차액 38,375원) / 107,956원(대흥) - 146,331원(충진)으로 편차가 13%~26.2%까지 발생한 것은 수익금 축소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아울러, 운송원가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기사 및 관리직수, 정비직수도 과다계상하고 있다. 운송원가계산 보고서에 따르면, 회계보고서상 관리직(140명)보다 많은 194명으로 계상해 놓았으며, 기사수 및 정비직수도 실제인원이 아닌 대당소요인수로 계상해 놓아 차량 1대당 월노무비만도 209,415원을 높게 책정해 놓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참고자료 / 기사수 과다계상에 따른 노무비 산출>

■ 차량1대당 월 노무비 차액 총액 209,415■900대 = 188,473,500원

이외에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고 있는 임직원 임금지급과 기부접대비 운용, 차량유지비 운용 등을 감안하면,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며, 이런 결과는 시내버스 운송원가 내역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다.

또한, 수익자부담원칙이 가격을 지불하는 중요한 수단이긴 하지만 준공영제 도입과 BRT시스템 도입 등 대중교통의 공공성 회복을 주장하고 있는 대전시와 시내버스 업계가 대중교통요금 책정에 사회적 공공성은 외면한채 소비자 분담을 통한 과도한 요금인상만을 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처사임이 분명하다.

특히, 소비 성격에 있어서 쓰면쓸수록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해야 하는 일반적인 요금체계와는 달리 대중교통은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교통혼잡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요금체계 안에 사회적 기여비용을 포함시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요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대전시가 추진중인 과도한 시내버스 요금인상은 자제되는 것이 마땅하며, 정확한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출을 위해 외부 회계감사 실시와 더불어, 서울시가 정확한 시내버스 이용객수 조사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타코메타 등의 제도적인 감시시스템을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준공영제를 통한 시내버스 업계에 직접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사회적 기여비용에 대한 인센티브제라고 할 수 있는 무료환승시스템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2004년 7월 21일

## ■ 대전 도시철도기본계획안 변경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시민을 관객으로 전락시킨 도시철도기본계획안 공청회와 부실용역을 규탄한다!

대전시 지하철 건설본부는 어제(22일) 대전시청에서 대전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하철로 당초 계획했던 5개 노선(총연장 102.3km)을 3개 노선(78.8km)으로 축소 건설하고, 지하철 1호선 이후 모든 노선은 경전철로 건설함이 타당하다는 용역보고를 발표하였다.

그동안 지하철 1호선 건설에 천문학적인 막대한 예산과 10년이 넘는 공사기간으로 인해 시민에게 교통 혼잡과 재정부담의 굴레를 씌울 뿐 비용대비 편익이 우수치 못한 대중교통 대안임이 입증된 가운데 개최된 이번 공청회는 많은 기자들의 취재와 500여명의 청중이 참석하는 등 외형상으로는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상 대전시의 재정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중량전철방식의 지하철을 포기함을 밝히는 이번 공청회는 또다른 형태의 천문학적인 재정부담과 교통혼잡을 초래할 경전철을 대안 교통수단으로 제시하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대부분의 청중이 지하철 건설업체 직원들로 채워졌다는 지적과 시민단체 대표 1인을 제외한 도시철도 건설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사회자와 패널로 구성한 것은 대전시가 이번 공청회를 경전철 추진을 위한 요식행위에 그친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이번 공청회 개최 이후, 공청회가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용역보고서가 여러곳에 사실보다 과장하여 만들어졌다는 비판과 더불어 시민여론을 배제했다는 점에서, 공청회 용역자료를 근거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공정한 공청회가 진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행정절차법에 명시하고 있는 절차와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공청회(公聽會, public hearing)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는 형식’이다. 그런점에서 이번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에 명시하고 있는 절차와 공정성은 전혀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5억 7천만원에 이르는 용역비용과 공청회 개최비용만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건설업체 직원들로 동원된 청중과 한명을 제외한 경전철 예찬일변도의 패널구성, 심지어 용역에 참가했던 전문가까지 패널로 참여시킨 것은 공정성을 고려치 않은 처사임에 틀림없다.

둘째, 경전철 필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차세대 대중교통 수단 선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인구추정을 과다하게 늘려잡고 있다.

각기 다른 계획들의 인구예측을 나열, 그동안 누차 지적된 인구추계치가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을 의식해서 낮추기는 했으나 통계청 인구예측치(2020년, 175만명) 보다 목표년도 인구가 23만명이나 많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용역의 신뢰성을 스스로 떨어뜨렸다.

셋째, 인구예측과 더불어 도시철도 수송인원 수요예측은 교통수단을 선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수송수요 예측의 실패는 곧바로 적자폭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수요예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도시철도 1호선~3호선 이용인구를 1,035,000명으로 예측 한 것은 다른 도시의 사례에 비추어보면 과도한 수요예측이란 지적이 크다.

실제로, 서울 등 타도시 지하철 개통초기 예측치 대비 실제 수송인원의 비율을 보면, 서울지하철이 29%, 서울도시철도 24%, 부산지하철 32%, 대구지하철 22%, 인천지하철 27%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도시철도 km당 건설비용은 타당성을 검증하는 매우중요한 척도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용역에서는 대폭 축소되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도시철도는 가장 우수한 대중교통 수단가운데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문학적인 건설비용 때문에 전세계 많은 도시에서 BRT시스템 등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해왔다.

실제로 지하철 1호선 이후 2,3호선 경전철의 경우 km당 49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최근에 건설된 경전철 건설 사례를 보면, 이보다 훨씬 많은 km 650억 이상을 예상하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지하철 건설비용이 건설과정에서 50~100% 증가되었던점(대전시 지하철 1호선 기본계획 발표시 1조2천억원 -> 현재 1조8천5백억원 예상)과 계획노선 가운데 상당수가 도심을 통과하여 지하로 건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해본다면, 이번 km 경전철 건설비용의 축소는 도시철도 반대 여론을 잠재우려는 알박한 의도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이외에도 지하철 1호선 건설과정에 얻게되는 막대한 빚 부담과 완공후 매년 300억원이 넘는 순수운영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런 지하철 1호선 누적적자와 더불어 2,3호선 건설비용 및 운행적자의 누적비용에 대한 대책은 이번 용역에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점도, 이번 도시철도 용역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이번 공청회는 시민을 관객으로 전락시킨 것은 물론, 도시철도 건설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변수)를 과대 축소 포장 함으로써 지하철 1호선 이후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경전철을 선택한 사유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지하철이나 경전철이 매우 우수한 대중 교통수단이라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다. 문제는 대전시 재정이 이의 건설을 감당할 수 있는가, 공사기간이 단기간에 완료되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아가 경전철이든 지하철이든 운영적자가 없이 운영될 수 있는 수요의 존재 여부이다.

이번 공청회는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해답도 내놓지 못했다. 단칸 월세방에 사는 사람이 50평짜리 아파트가 좋다는 사실을 몰라서 넓은 집으로 이사 못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경전철이 좋은 교통수단인

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경전철을 감당할 도시공간과 환경용량이 있는지, 이의 추진에 따른 재정조달 능력이 있는지가 문제인 것이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대전시민 전체의 편익과 대전광역시의 재정 수요를 고려한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은 찾아볼 수 없고 지하철건설본부를 비롯한 공무원과 관련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집단이기주의를 합리화하는 장으로 전락한 것이다.

우리는 지하철 건설본부의 이번 용역보고 공청회가 절차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점을 대전시에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조작된 여론 수렴은 하지 아니한만 못하다는 것을 대전시는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용역보고공청회를 통해 경전철 2, 3호선을 도시철도 계획으로 확정지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될 수 없다. 아울러 우리는 현재 상태에서는 지하철 1호선 이후의 어떠한 도시철도 건설도 추진되서는 안됨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는 대전시 지하철건설본부가 아닌 대전광역시가 집단이기주의에 사로잡히지 않은 중립적인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도시철도 이외에도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의 대안이 검토될 뿐아니라 재정 대책 및 시민 불편 최소화의 대안을 도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전시는 더 이상 부실용역 보고서로 대전시민을 우롱해서도 안될 것이며, 도시철도기본설계를 별도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현재 입법예고중인 지방대중교통계획으로 통합운용 하여 도시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 모든 행정역량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2004년 7월 23일

경전철 반대 BRT 전면도입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 ■ 자리 나눠먹기식의 대전시의회 의장단 선거를 지켜보며

- 더 이상 지방의회의 권능을 스스로 추락시키지 마라 -

우리는 지난 8일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대한 시의원들의 행동에 실망감을 금할 길 없으며, 매우 절망스러운 시의회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지방정치의 저열함은 이미 알고 있었으나, 설마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이 정도까지 과거의 폐단과 과오를 탈피하지 못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특히 지방정치의 발전을 위해 소위 유급제, 보좌관제 도입 등에 대한 입법화가 거론되는 시점에서 자리 나눠먹기식의 배분 선거는 지방의회의 권능을 스스로 포기한 처사로써, 대전시의회가 어떠한 미사여구를 동원한다해도 주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자, 지방정치의 발전과도 역행한다는 점에서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결국 구태한 시의회 의장단 선거는 지난 10여년동안 진행되어온 반쪽짜리 지방자치의 현실을 더욱 후퇴시킨 것이며, 정치개혁과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선 현행 의장단 선거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교황 선출식 방식보다는 차라리 후보등록을 받고 출마를

공론화하여 공개적인 선거운동을 통해 의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이 문제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최근 지방의원에 대한 보좌관제, 유급화의 문제를 입법화하려는 시점에서, 또한 자치조직권, 자치인사권, 자치입법권 등을 확대해나가려는 시점에서 이렇듯 지방의원들이 낡은 관행만 일삼는다면 앞으로 주민들의 지원과 신뢰가 있을런지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의원들이 지방정치의 발전을 뒤로한 채 이러한 자리나뉘먹기나 줄서기에 집착한 나머지 이런 명분없고 실리없는 정치를 계속해서 자행하고 민의를 무시해나간다면 이에 대한 모든 부담은 결국 지방의원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주민대대의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의 권위는 주민대표로서 역할을 다할 때 세워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다시한번 이번 처사에 대한 대전시의회의 납득할 만한 해명을 촉구하며, 원칙과 정도를 지키며 변화하는 지방의원들의 일대 혁신을 기대해마지 않는다.

#### ■ 대전천변 고속화도로 건설계획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대전천변 고속화도로 개설계획을 전면 중단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시는 삼천교 - 문창동 문창교 사이 5.175킬로미터 구간에 2006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완공후 30년간 소유권을 민간업체가 갖게되는 BOT방식의 대전천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을 제안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그동안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의 지난 지방자치 선거에서 대전천의 생태복원을 약속하는 등 대전천 생태복원 사업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온것에 대해 높이평가하고 시민참여 속에서 제대로 추진되길 희망해왔다.

그러나 이번 대전천변고속화도로 건설 제안 접수는 밀실에서 생태환경 조성을 핑계로 한 또 다른 대규모 토목사업이 추진되었음이 된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더욱이 대전시가 추진하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대전천변고속화도로로 건설 제안을 접수하고 심의할 단계가 아니다. 생태하천조성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있으며 차세대교통체계를 중심으로 한 교통체계전반에 대한 재검토 작업 중에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안이 추진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독단적 밀실 행정이고 거래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시가 이런 사업에 대한 선호도를 전달하지 않을 상태에서 기업체 컨소시엄이 임의로 이런 사업제안을 제출하였다는 것을 믿을 시민은 아무도 없다.

대전시는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기본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시민합의를 먼저 이뤄야 한다. 나아가 차세대교통수단을 확정 짓고 이에 따른 전반적인 교통체계의 종합 정비 방안이 우선된 이후에야 대전천변고속화도로에 대한 논의 검토가 가능한 것이다. 이번 대전천변 도시고속화도로의 경우, 종합적인 교통체계와 관련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있어서, 경제성 등의 편향된 의견만

이 제시된채 사업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사업의 교통수요 예측도 신뢰하기 어렵다. 갑천천변고속화도로의 일단계 개통을 앞둔 지금 유료통행 수요의 과다 예측으로 기차 상환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음에서 알수 있듯이 지나친 유료도로의 남발이 과잉수요에 의해 추진되어 환경도 파괴하고 이용자 감소로 교통소통에도 기여치 못하는 악순환을 염려치 않을 수 없다.

100여미터 남짓한 좁은 천의 넓이위에 16m에 달하는 고가도로를 4차로 넓이로 개통한다는 것은 조망권 파괴, 친수공간 파괴와 같은 하천기능 마비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따라서, 대전시는 대전천변 도시고속화도로는 한번 설치하면 다시 철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생태복원 및 도시교통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생태복원이라는 미명아래 대전천이 대형토목 사업으로 변질된다면 차라리 생태복원사업을 하지 않은만도 못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대전시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외자유치와 민자유치를 통해 대전시민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양적 팽창방식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질적팽창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개발이 이뤄져야 함을 거듭 지적하고자 하며, 갑천도시고속화도로의 경우처럼 밀실행정이 가져올 시민부담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대전시는 그간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폐쇄행정, 막무가내식 개발을 하고 있다는 시민의 불신을 씻어 주어야만 할 것이며, 일련의 대전시 교통행정을 두고, 우려하고 걱정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해 대전시는 참견한다고 치부치 말고, 책임있는 자세로 면밀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컨데 대전시는 친환경적으로 대전천을 복원하겠다는 애초 취지에 거스르지 않도록 이번 대전천 고속화도로 계획은 전면 백지화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04년 7월 28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의장 송인준

#### ■ 실행정수도 관련 한나라당 공개질의서 전달에 대한 우리의 입장

4일 한나라당 수도이전문제특위(위원장 이한구)가 실행정수도 건설 문제에 대해 11개 항목의 공개질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것에 접하여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보낸 공개질의서를 보면서 실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전면 반대의 입장이 아닌 토론과 논의를 통해 올바른 실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2002대선을 통해, 또 국회에서 합의된 사안에 대해 책임있는 정당으로써 실효성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한채 비판적 시각만을 통해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특히 한나라당이 먼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이사를 명확히 표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문제제기만을 했다는 것은, 현행 정치지형의 조건에 비추어 볼때 사려 깊지 못한 모습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를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 경쟁력 재고를 위해 반드시 성취해야할 국가적 대사로 인식해 왔다. 따라서 지금은 ‘왜’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어떻게’라는 질문을 통해 신행정수도가 차질없이 올바르게 추진되기만을 기대해 왔다. 그러나 여야 합의하에 추진되어 왔던 신행정수도를 최선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책임있는 정당으로써 문제제기식의 비판을 하기보다는, 신행정수도 보다 더 효과적인 방안, 즉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실효성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다. 즉 합의된 사안을 다시 재논의하지는 것은,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이 그 이유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까지 제시해야 마땅한 것이다.

더불어 우리는 한나라당 소속의 단체장들이 많은 경기지역에서 공공기관의 이전까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심히 우려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같은 공개질의서가 제기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상생과 국론합의, 균형발전과 과밀해소를 주장하고 있으면서 그 어떠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볼 때, 한나라당이 원칙적으로 신행정수도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004. 8. 4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 김주일 안성호 조연상

#### ■ 대전시의 시금고 공개경쟁을 환영한다!

최근 대전시가 공개경쟁방식으로 시금고를 선정키 위해 공고를 내고 심사기준을 공개한 것은 시금고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조치로 이를 시민과 더불어 환영한다. 시 자체 재정운영액 2조원, 구청재정까지 합산할 경우 3조원에 이르며, 평잔도 2~3천억원에 달하는 시금고는 안정성과 함께 높은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금고선정평가위원회의 중립적이며 객관적인 인선과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아울러 시금고의 특성상 시민이용의 편리성과 전산의 호환 준비 등을 고려할 때 급격한 변화가 어려워 실질적 경쟁 구조의 형성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때, 단수금고 원칙을 천명한 것에는 아쉬움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등 재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수금고 선정의 가능성을 배제치 않음으로써 대전시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수익률 모두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아쉽다. 향후 시금고 선정에 있어서는 단수금고 원칙을 고집하지 말고 복수금고의 가능성을 개방하여 추진하길 당부한다.

더불어 우리는 지난해 대전시의 ‘시금고 선정 및 운영 조례’ 제정 당시에 주장했던 것과 같이 공개경쟁방식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조항들 -즉 단수금고 원칙, 수익계약 부분, 심의위원회 구성 등- 에 대한 개정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대전지역에 입주한 정부기관 역시 수익계약 방식의 금고운동을 벗어나 공개경쟁 방식의 금고운동을 통해 지방화시대에 일조해 줄 것을 동시에 촉구한다.

2004년 8월 10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송인준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건설 성공기원 범국민물결대회

- ☐ 일 시 : 2004년 8월 19일(목) 오후 2시
- ☐ 장 소 : 대전광역시 오페라웨딩홀 4층 컨벤션홀
- ☐ 주 최 : 지방분권국민운동 / 충청권발전협의회
- ☐ 주 관 : 지방분권국민운동충청권협의회
- ☐ 후 원 :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대학, 언론사, 시민사회단체 등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 지역 130여개 단체)

○ 지방분권국민운동과 충청권발전협의회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충청권 지역민들은 오는 8월 19일 신행정수도 건설의 성공을 선포하는 범국민물결대회를 대전에서 개최하기로 발표했다. 이 행사를 주관한 지방분권국민운동충청권협의회는 지난 8월 11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인 신행정수도 후보지 최종 결정을 계기로 그 성공을 기원하고 다짐하는 동시에 반대론자들의 왜곡된 억지논리를 종식시키는 한편, 상생과 화합을 기초로 하여 신행정수도 건설의 범국민적 물결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이날 범국민물결대회는 신행정수도 건설의 성공을 축하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며, 지방분권국민운동 전국대표자회의 의장인 김민남 교수와 충청권 3개 시도지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충청권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여 성공 추진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 또한 범국민물결대회에 참석한 충청권 3개시도 지방의회 의장단은 ‘우리의 다짐’을 통해 수도권 의 이기주의에 집착한 일부 반대세력들의 논리가 국민적 설득력을 상실했음을 선언하는 한편, 신행정수도 건설과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을 지방분권과 분산정책의 필요충분조건임을 선언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이 모두 상실했던 교훈을 거울삼아 신행정수도 건설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나 부동산 투기, 정주민 소외문제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감시의 역할도 다할 것임을 선언할 계획이다.

○ 한편 이창기 행법련 공동대표와 김용분 대전여성환경포럼 대표는 신행정수도 건설 성공을 염원하는 대국민물결대회에 동참을 호소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수도권 주민들에게는 수도권과 고향인 지방이 동시에 사는 상생의 길이 신행정수도 건설임을 주장하는 한편, 전국의 지방민들에게는 지방살리기의 첫 출발점이 신행정수도 건설임을 주장하면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분산정책과 지역산업 특화, 지방분권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호소할 예정이다. 더불어 충청권 지역민들에게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충청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한 역사적 사업임을 인식하고, 지금까지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이기주의를 넘어선 높은 시민의식으로 참여와 협력을 호소할 예정이다.

○ 끝으로 지방분권국민운동충청권협의회 안성호 대표는 향후 시민사회단체들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 발표를 통해 신행정수도 성공기원 범국민물결대회를 시작으로 범국민적 신행정수도 건설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이를위해 지방분권국민운동 전국본부 차원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전국조직 성격인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며, 전국 순회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 광고

를 비롯하여 홍보포스터 등을 제작하는 등 대국민홍보사업을 통해 반대세력들의 왜곡된 논리와 본말이 전도된 논리를 전면 반박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언론의 편파적 왜곡보도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언론 대책본부도 구성할 예정이다. 한편 이 범국민물결대회 확산을 위해 충청권 기초자치단체별로 신행정수도 성공결의대회 개최를 제안한 상태라고 밝혔다.

#### ■ 수익성도 없는 경륜장 건설 추진을 중단하라!

##### - 대전시장의 경륜장 허가를 위한 문화관광부 방문에 즈음한 논평

오늘 보도에 따르면 오늘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은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을 면담하고 대전경륜장 허가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전시가 경륜장 추진을 위해 문화관광부에 승인요청을 한지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추진을 확정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하면 대전시의 답답함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부산 경륜장의 대규모 적자(2004년 예상매출 총 850억원, 경상경비 250억원 적자예상)와 창원경륜자의 이용객의 급격한 감소(2002년 7,100억 -> 2003년 7800억원으로 감소) 등 이른바 사행레저 산업의 매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개설만이 능사가 아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시는 경륜에 의한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세수 확충을 기대하며, 건설비 전액을 기채하여 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른바 도박산업으로 공공기관이 돈을 벌어 문화 복지 환경에 투자하겠다는 논리였던 셈이다. 우리는 이런 논리 자체가 행정의 공공성을 상실한 것으로 규탄해왔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경륜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성이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경륜장 경주 시행 허가를 서두르고자 하는 것이야 말로 어리석은 일이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현실은 정부의 도박장에 대한 무분별한 인허가의 남발과 경기의 위축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이며 따라서 대전시는 경륜 경주 시행 허가를 서둘러서는 안된다. 일본의 경우도 지자체 마다 경륜장을 세웠지만 수지를 맞추지 못해 오히려 공공 재정만을 낭비하고 문을 닫았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대전시장이 문화관광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월드컵 잉여금을 활용한 잔디구장 조성 사업과 같은 지역문화예술 체육의 진흥을 위한 건전한 협력을 요청하길 기대한다. 나아가 대전시의 경륜장 허가 대기 중에도 무분별하게 번지고 있는 도박장의 장외발매소(텔레비전 경마, 경륜, 경정)의 정비를 통해 도박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건전레저 문화의 확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호 협력 방안을 강구하길 촉구한다.

특히 경마, 경륜, 경정, 우권장, 카지노, 복권 등의 도박장 시설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도박산업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서 검토예정인바, 법제정 이후 시행될 사행산업의 총량 규제에 따른 이해 득실을 따져서 대전경륜장 사업의 시행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여야할 것이다.

대전시가 경륜장 유치를 추진하는 까닭에 동구청이 구도심활성화를 명분으로 제2장외경마장 유치를 위해 구대전백화점 건물에 대해 용도 변경 허가를 시행해도 교통혼잡의 증가, 재래시장 활성화 역행의 명백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제시키는 지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

다. 대전시가 대형 도박산업을 유치하는 형편에 자치구가 작은 도박산업을 유치하려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특히, 이미 월평동의 장외경마장과 유성의 장외경륜 및 경정장을 이용하는 고객만도 100만명이 넘어서고 있으며, 대전경륜장과 제2장외경마장이 개장되면 총 350만명이 넘는 고객이용율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도박중독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일어날 경우 대전시는 어떻게 이를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대전경륜장과 4곳의 장외도박시설이 본격적으로 가동될시 매년 1조5천억원의 매출에 5천억원에 가까운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은 물론, 45만4천2백원이라는 1인1일 평균배팅비용을 감안할시 도박중독자 양산 등 각종 사회적 부작용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임과 이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역사적 부채를 대전시가 지게될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2004년 8월 24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의장 송인준

#### ■ 조선일보 9월 1일자 시민단체 정부지원금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

조선일보와 문화일보의 ‘시민단체 정부지원금’에 관한 9월1일자 기사와 사설은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국가와 NGO의 관계를 왜곡하는 악의적인 작문으로 일관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입장을 밝힌다.

##### 1. 정부의 지원을 받아 ‘친정부’ 적인 활동을 한다는 주장에 대해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시민단체 지원금이라는 것은 한나라당 집권기인 김영삼 정부시절 정무 장관이던 현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가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공공 프로젝트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였고, 이후 지원의 규모가 확대되어 온 것이다.

조선 문화일보가 언급한 시민단체 상당수는 이 제도를 통해 김영삼,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비슷한 형태의 공익적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용역사업비를 받아 사업을 집행한 것으로서 친정부적인 활동의 대가로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이 때문에 시민단체가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방기하거나 외면한 경우 역시 없다.

그러나 두 신문의 논리대로라면 시민단체가 정부 지원금을 챙겨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김영삼 정부를 위해,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김대중 정부를 위해, 그리고 드디어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는 노무현 정부를 위해 친정부 활동에 앞장서 왔다는 것이 된다.

행정자치부의 민간단체 지원금의 경우, 지난 2000년 제정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요건을 마련하고 프로젝트 공개모집,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 사업실행 결과 보고 및 감사가 공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사업수행 실적이 평

가되며 부실하게 일한 단체에 대해서는 상응한 법적 조치가 엄격하게 이뤄지고, 차기년도 사업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이 처해지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이 제도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이른바 ‘관변단체’에게 편파적으로 막대한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던 폐해를 개선한 것이기도 하다.

기사에서 언급된 단체들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조성된 정부 각 부처의 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서 대부분 공개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에 대해 지원한 사례들이다. 이를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편파적인 지원이나 특혜인 것처럼 왜곡하여 보도하고 있는 두 언론사의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시민단체의 정부 지원 가운데 언론개혁 활동을 주도적으로 벌이는 단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은 언론개혁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깔린 비열한 행태로 판단된다.

## 2.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NGO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주장에 대해

시민단체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공공 프로젝트라는 것은 국가기관이 직접 나서기 어려운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회통합을 위해 수행하는 공익적 목적의 활동이다. 대부분 선진국가 NGO에 대해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재정적, 세제적 지원을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바로 국가와 공공기관만으로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없으며, 민간이 이를 대체하거나 보완해 나가는 것이 현대사회의 국가와 시민사회, NGO의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적 공공서비스와 사회통합을 위한 공익활동 확대를 위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협력관계는 시민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전제로 한 것이며 정부의 지원이 시민단체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현대사회의 국가와 시민사회의 협력관계에 대한 몰이해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다.

## 3. 정부지원과 총선연대 활동이 관련되었다는 식의 기사내용에 대해

정부지원 공공프로젝트와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이라는 별개의 사안을 하나로 묶어 마치 시민단체가 친정부 활동의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국가와 시민사회, NGO의 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이거나, 개혁을 저지하고자 하는 악의적인 의도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문화일보의 경우 사실을 통해 총선연대 활동이 ‘이런 정부 돈과의 연계성이 없다는 것을 버선 속을 뒤집어 보아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도덕성을 얘기할 자격이 있다’고 으박지르고 있으나, 총선연대의 경우 국민의 후원금과 소속 단체의 분담금으로 활동을 한 것으로 이미 그 활동에 따른 경비 사용내역이 공개되어 있으며, 그 ‘정부돈’이라는 것 역시 공공프로젝트 수행결과를 ‘예산회계법’에 근거하여 보고하고 있으므로 근거가 없는 억지소리를 늘어놓은 것에 불과하다.

또한 총선연대의 활동이 부정과 부패, 일하지 않는 국회를 개혁하자는 국민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을 대변한 활동이 분명함에도 이 같은 활동을 특정 정당의 선거홍보인양 폄하하려는 태도는 비판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해 정부 각 부처를 상대로 2002년, 2003년 민간단체 지원현황에 관하여 정보 공개 청구를 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한바 있다. 이미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사실을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받은 자료를 근거로 악의적으로 짜깁기하여 마치 처음 알려진 사실인양 보도하는 것은 성숙한 시민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비이성적 태도이다. 그와 같은 태도를 지속할수록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적 저항을 더욱 불러일으킬 뿐이라는 점을 충고한다.

#### 4. 한나라당의 NGO 정부지원금 삭감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은 지난 16대 국회때 행정자치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150억원 중 50억원을 삭감하고, 정부 각 부처의 각종 민간단체 보조금을 삭감하였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합법적으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빌미삼아 ‘홍위병’ 논란을 일으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는 태도를 일관해 왔다. 책임있는 제 1 야당으로서 시민사회의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행위가 고작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시민단체의 활동을 억압하려드는 것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미 여러 차례 정부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에 있어 일관된 원칙과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직접적인 재정지원 방식보다는 기부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정책을 확대 할 것을 요구해 왔다.

우리는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언론이 시민단체 지원에 대한 프로크루스테스 침대 식의 접근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토론과 정책개발에 나서기를 바란다.

우리는 건강한 시민사회를 위해서 언론, 기업, 국가, NGO가 상호 비판과 토론,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믿는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조선일보 문화일보에 대해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언론과 NGO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우리는 건강한 시민사회를 위해서라면 정부와 의회, 언론과 기업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활동을 지속해 갈 것이며, 토론과 협력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우리 스스로도 NGO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 혁신을 부단히 해 나갈 것이다.

2004.9.2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시의회 산건위의 버스활성화 관련 추경예산 전액 삭감에 즈음한 논평

## -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는 한시도 늦출 수 없다!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늘(3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심의 과정에서,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 등 용역’ 예산 3억8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우리는 대전의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이 시내버스 살리기를 외면하는 시의회를 이해할 수 없다. 사회적 약자이자 교통약자인 대다수 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교통의 위기와 이에 따른 시민불편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매번 악순환처럼 되풀이되는 요금인상과 서비스 악화, 굴곡장대노선과 정시성 부재로 인한 시민불편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시민의 고질적인 고통이다. 운수사업자들은 적자로 종사자는 낮은 처우로, 시민은 높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형편 없는 서비스로 버스교통자체가 생사의 기로에 선 것이다.

이런 버스교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바로 시민불편을 방치하는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중앙정부의 대중교통육성법의 입법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도 예산 삭감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입법이 없으면 아무것도하지 말아야한다는 말인가.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만 쳐다보는 식의 의정활동은 지방의회의 존립의 필요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자기당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안의 시급성은 개통을 눈 앞에 둔 지하철과 버스교통의 연계 및 이를 통한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번 회기내에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혼란 없는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을 집행할 수 있음을 의회는 알아야 한다. 계획도 준비도 없는 행정이 가져다줄 시민불편은 엄청난 것임을 시의회가 이해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시민의 이익을 외면하고 행해지는 의회의 의정활동을 시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며, 향후 예정된 등의 심의 과정에서 대다수 서민들의 교통 수단인 버스를 살리기 위한 기초예산으로써 대중교통기본계획 관련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9월 3일

경전철반대 BRT시스템전면도입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 ■ 외국인전용카지노장 신규허가 계획 철회하라.

(투명성 확보 위한 관련법 개정 및 관리감독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 ‘도박산업 규제와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는 오늘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서울 2곳, 부산 1곳에 대한 외국인전용카지노장 신규허가 계획 발표에 심히 우려하며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문광부는 최근 관광업계 및 호텔업계를 중심으로 외국인전용카지노장 확대 및 내국인 출입 허용 요구에 대해 문광부 산하의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주최로 단 1차례 토론회를 가진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신규허가를 발표하였다.

지난 8월 9일(월) 진행된 “외국인 전용카지노 정책방향” 에 대한 공개토론회에서 주발제자인 이충기 교수

(경희대)은 카지노 시설의 산업 특수성을 설명하며 대형리조트형이나 테마파크형이 되어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제주도에 8개나 난립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외국인 전용카지노장 확대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였다. 또 발제자인 이진오 집행위원장(본 단체)는 카지노 뿐 아니라 국내 도박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기구가 단 1곳도 없고, 각 도박산업이 개별법으로 난립해 무분별하게 경쟁하는 구조를 정비하고, 도박중독자에 대한 예방과 치유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카지노장 신규허가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토론자들은 이외에도 외국인전용카지노장의 내국인 출입문제, 도박시설의 무분별한 양도문제 등을 지적하며 관련법 미비를 지적하며 전반적으로 반대하였다.

문광부가 정식으로 주최하지도 않고 산하기관을 통해 형식적으로 진행한 정책토론회 결과가 이러함에도 문광부가 일방적으로 ▲ 외래관광객 유치 ▲ 관광수지 개선 ▲ 카지노산업의 경쟁력 재고 ▲ 일자리 창출이라는 객관화 되지 않은 이유로 신규허가를 발표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문광부가 내세운 이유는 외래관광객 유치, 관광수지 개선은 근거가 없으며, 카지노 산업 경쟁력 재고와 일자리 창출 주장도 실효성도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도박산업을 단순한 경제적 논리만 이해한 것으로 국가 경영철학을 의심케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 문광부는 외국인전용카지노장 신규허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 문광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여론을 즉각 수렴하라.
2. 개별법으로 난립해 경쟁체제로 있는 도박관련법을 총괄할 통합법을 제정하라.
3. 도박산업 전반을 관리감독할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관리감독위원회’를 구성하라.

도박산업 규제와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직인생략)

공동대표: 권병휘(홍대교수), 김병균(광주전남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김일수(기윤실 공동대표), 범산(부산경실련 공동대표), 이용길(민주노동당 충남도지부장), 이우갑(고한천주교회 주임신부)

공동 집행위원장: 이진오(기윤실 정책국장), 이충재(대전YMCA 사무총장) 사무국: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김희경 사무국장 참여단체: 전국단체-기윤실, 경실련지엽협의회, 동물자유연대, 참여자치지역연대, 참교육학부모연대 지역단체-서울 및 수도권지역(공정연대, 성남시민의모임, 의정부참여연대, 인천연대, 참여연대, EYC), 전북(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남(나주사랑시민회), 광주(광주참여자치21), 부산(경실련, 기윤실, 참여자치연대), 경남(마창진참여자치연대), 대구경북(대구참여연대, 포항경실련), 강원(천주교원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제주(제주도범도민회, 제주경실련), 대전충남(대전경륜장건립저지를위한충청지역공동대위), 충북(청주화상경마장반대대책위), 천안(천안화상경마장저지를위한충남시민공동대위)

첨부

외국인 전용카지노 신규허가 주장에 대한 반론.

우리 '도박산업 규제와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도박규제네트워크)는 관광산업 발전, 외자유치, 외화벌이, 고용창출, 독점해소 등의 명목으로 외국인전용카지노장을 확대해야 하며, 기존의 외국인전용카지노장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바이다.

1. 우리는 국가발전과 국민여가활용 개선을 위해 관광산업이 발전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관광인프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6일 정부가 국민관광 활성화와 외래관광객 1천만 시대를 열기 위해 내놓은 '제2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을 적극지지 한다. 특별히 이 방안이 무분별한 외래관광객 수 확대 정책이 아니라, 1차적으로 우리 국민 관광활성화를 통해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8년까지 1천만명의 외래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인 것을 적극 환영한다. 이를 위해 소외계층 관광 활성화나 실버관광, 근로자 휴양시설, 주민 관광시설 확충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은 적절한 것이라 평가한다.

2. 이런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월 17일 문화관광부에 사행산업이 사회윤리, 질서,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분석해 대책을 간구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이는 무분별하게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관광산업을 발전시키지 않고 건전한 관광산업이 되도록 하겠다는 국가경영의 의지라고 생각한다.

3.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적 이익, 지방자치세 확보라는 미명하에 도박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미 전국이 도박장화 되어 있다. 문광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도박시설은 64개소에 이르고 이것도 향후 2-3년 내에 70-80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도박산업 매출액은 14조에 이르는데 이는 총 레저산업의 51.4%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에 따라 도박참여 인구도 2천3백만 명에 육박하고, 국민 1인이 1일 도박으로 날리는 비용은 평균 50여만 원에 이르고 있다. 도박중독 피해도 심각해 한국마사회가 실시한 용역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인구 9.3%에 해당하는 320만 명이 도박중독 증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10조원에 이르고 있다.

4. 현실이 이런데도 정부는 지난해 5월 입법예고한 '관광진흥법개정안'을 통해 도박시설의 인허가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5억불 이상 외자유치의 경우에는 카지노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우리나라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수인 14개의 카지노장(내국인출입1개, 외국인전용카지노13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1개씩만 허가가 나있고, 제주도에 8개가 몰려있어 지역적 형평성에 어긋나며, 외래관광객 분포도(서울85%, 제주도10%)와도 맞지 않아 적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거나 적자영업 중인 카지노를 서울, 부산으로 이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카지노와 같은 도박산업은 국가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제한적이고 정책적으로 허가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지역적 형평성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적자운영 중인 카지노장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서울에 1개소가 있어서 독점의 문제가 있는 것은 업소 수를 늘려 해소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영 및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소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카지노장을 허가한 예가 거의 없는 것을 보아서도 서울에 있는 카지노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외래관광객의 지역분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



다.

6. 외국인전용카지노장이 외국인만을 출입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모든 카지노장이 90% 가량 모두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외국인전용카지노장 제도가 유례가 없는 제도인 점, 그리고 내국인 출입 허용을 요구하고 있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다. 또 문광부가 입법예고한 5억불을 근거로 외자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외자유치를 통해 카지노장을 개설할 때 관련국이 강원 랜드 등과의 형평성 문제로 내국인 출입 허용을 주장하는 통상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더 크다. 더욱이 이미 적자가 심각해 포화상태인 외국인전용카지노장의 수를 조절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더욱 적절치 않다.

7. 외화벌이와 고용창출에 효과가 높다고 주장하지만, 부도덕한 사업을 통해 외화벌이를 하겠다는 발상은 돈만 되면 성매매든 마약이든 가리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현재 외화벌이를 해야 할 정도로 외화 보유고가 바닥난 상황도 아니다. 1만 명 이상 고용창출 효과를 주장하지만, 실제 워커일 카지노가 850여명, 마카오 카지노가 880여명을 고용하고 있는 현실과 우리나라 카지노장 평균 고용수가 200여명 가량인 점을 고려할 때 전국에 50여개 이상 카지노장을 세워 전국을 도박장화하지 않는 한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비록 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도박산업을 활성화시켜 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을 국가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8. 현재 우리나라 14개 카지노를 관리하는 인원은 문광부 직원 1.5명뿐이다. 이는 도박산업을 허가 하면서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도박산업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며, 인허가, 관리감독, 세금, 불법, 도박중독 예방, 치유 등을 포괄하는 감독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도 도박산업 전반에 대한 감독기구 설립이 시급하다. 감독기구는 비단 카지노에만 국한 되서는 안 되고, 다른 도박산업(경마, 경륜, 경정, 경견, 복권 등) 전반을 아우르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국무총리 산하에 '사행산업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이를 통해 무분별한 도박산업을 규제하고, 특정업체 독점 문제 등의 폐단을 해소하고, 공공의 목적에 맞는 수익금 사용, 도박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유행동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력히 요구한다.

9. 위에 언급한 감독기구 신설과 효과적인 도박산업의 규제와 관리감독을 위해 현재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는 도박 관련법규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행산업 규제와 관리를 위한 통합법'의 신설을 강력히 주장한다. 현재처럼 도박에 따라 관련부처와 관련법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는 국가 전체의 건 강한 관광산업과 레저산업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통합법 속에는 국가 산업 속에서 도박산업이 차지하는 합리적인 산업규모와 국민정서를 고려한 도박시설의 인허가 문제가 내포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둔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 ■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차별철폐 걷기대행진 및 문화제' 개최

## 9월 13일부터 1주일간 전국규모 행사로 이어져

대전지역의 노동·여성·장애인·이주노동자·빈곤·실업·시민사회 부문 등 14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차별없는 세상, 평등한 사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9월 13일부터 일주일간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차별철폐 걷기대회에 대전행사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14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차별없는 세상만들기 전국걷기대행진 대전추진위원회(이하 차별철폐대행진대전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구체적인 행사준비에 돌입했다.

이번 차별철폐대행진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는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실업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전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 비정규직 보호입법,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법률, 차별금지법 등이 상정됨에 따라 이들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번 차별철폐대전대행진은 13일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을 시작으로 14일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의 날, 16일 여성 차별철폐의 날, 17일 이주노동자 차별철폐 및 빈곤·실업 추방철폐의 날 등 부문별 행사가 으능정이거리를 비롯해 대전 곳곳에서 진행되고, 18일에는 이들 모든 단체가 서대전공원에서 대전역까지 걷기대행진을 한 후 대전역광장에서 한데 모여 ‘차별철폐 한마당’을 개최한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13일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캠페인’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체험 및 문화제(수화공연, 장애인 보컬공연)를 개최할 예정이며,

15일 비정규직 차별철폐의 날에는 비정규직의 차별철폐를 위한 강연회를 갖은 후, 16일에는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 등과 관련한 극영화를 상영하는 ‘차별철폐 1,000원 영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6일 여성 차별철폐의 날에는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성평등 종이학 접기, 성차별 만화와 그림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나눌 계획이다.

17일 이주노동자 차별철폐 및 실업 빈곤 추방철폐의 날에는 국경을 넘어 이웃으로 보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함께 청년실업문제 홍보와 시민참여마당, 그리고 희망나무심기 등의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대전행사의 마지막날인 18일에는 모든 단체가 함께 참가하여 참여단체간의 문제의식을 소통하고 공유하는 한편, 대전시민들에게 모든 차별의 문제를 홍보하는 ‘차별철폐 문화한마당’을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19일에는 전국 지역의 행사를 총화하고 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으로 집결, 6개의 차별철폐 관련 소주제를 부문별로 정하여 체험형, 참여형, 캠페인, 전시, 행위예술 등 다양한

형태의 볼거리, 놀거리를 부스별로 진행한다. 또 6개의 부문별 색깔과 이미지로 형상화된 박을 터뜨리고, 박 내용물에 차별철폐 플랭카드 및 각 분야별 내용을 담은 물건을 담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소원박 터뜨리기', 참가자들이 차별철폐에 대한 각자의 염원을 담은 내용의 엽서를 쓰고 3m 높이의 커다란 우체통에 담아보내는 '엽서보내기', 참가자들이 영산줄만들기 과정에 함께 하는 '영산줄 만들기' 등 다양한 행사가 시민난장 형식으로 대회를 마치게 된다.

차별없는 세상만들기 전국 걷기대행진 대전추진위원회  
공동추진위원장 김용우 박춘호 송권 송인준 정순진 권술룡

## <참고자료>

### I. 기획배경 및 목표

#### ○ 차별없는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성, 장애인,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빈곤·실업에 대한 차별이슈를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고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을 드러내서 차별문제를 공유합니다.

#### ○ 여성, 장애인,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빈곤·실업 문제를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고, 함께 해결하고자 합니다

2004년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성, 장애인,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빈곤, 실업 문제 등 6개 분야의 차별 없는 세상 만들기에 대한 내용으로 시민홍보전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입법운동에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 ○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빈곤·실업 관련 차별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빈곤·실업 관련 차별문제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입법과제들을 제시하고, 시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대중적 행사를 진행하여 차별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합니다.

### II. 조직 구성 및 부문별 사업개요

#### ○ 주최 및 조직위원회 구성

주 최 : 차별없는 세상만들기 전국걷기대행진 대전추진위원회

참가단체 :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대전문화연대, 대전충남민예총, 대전광역시장애인연합회,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대전지부, 독립영화협회, 민들레의료생협, 홈리스지원센터, 대전진보청년회, 국제친선협회, 대전외국인노동자모임, 민주노동당대전시당, 사회당대전시위원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참여자치연대, 환경운동연합, 여성환경포럼, 녹색연합, 경실련, 생명의숲, 여민회, 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 흥사단, YMCA, 민주언론운동시민연

합,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실업극복시민연대)

○ 행사주간 : 2004년 9월 13일(월) ~ 19일(일)

○ 행사 주간일정

- 9월 13일(월) :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
- 9월 15일(수) : 비정규직 차별철폐의 날
- 9월 16일(목) : 여성 차별철폐의 날
- 9월 17일(금) : 이주노동자 차별철폐 및 실업·빈곤 추방철폐의 날
- 9월 18일(토) : 차별철폐 걷기대행진 및 차별철폐문화한마당
- 9월 19일(일) : 서울집결 '차별철폐 걷기대행진 및 한마당'

### III. 세부 행사내용

○ 9/13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

- 행 사 명 : 장애인 편의시설 캠페인
- 일시장소 : 2004. 9. 13(월) 14:00~17:00 /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 일대
- 주 최 : 차별철폐대행진 대전추진위원회
- 주 관 : (사)대전광역시장애인연합회
- 행사내용 :
  - 1) 편의시설 캠페인 : 편의시설 사진전시, 인권체험, 거리캠페인, 시민참여마당(설문서명운동)
  - 2) 부대행사 : 수화율동공연, 보컬공연, 장애인정보상담, 장애인취업상담

○ 9/15 비정규직 차별철폐의 날

- 행 사 명 :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연대의 날
- 일시장소 : 2004. 9. 15(수) 19:00 / 유성 리베라호텔
- 주 최 : 차별철폐대행진 대전추진위원회
- 주 관 :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 행사내용 : 강연회 '하반기 정세와 비정규직의 투쟁방향'

○ 9/16 여성 차별철폐의 날

- 행 사 명 : 여성 차별철폐 양성평등 캠페인
- 일시장소 : 2004. 9. 16(목) 16:00~18:00 / 으능정이 거리
- 주 최 : 차별철폐대행진 대전추진위원회
- 주 관 : 대전여민회
- 행사내용
  - 1) 성평등한 세상 만들기 첫 걸음

- ① 성차별의 경험을 적어주세요!
- ② 나의 성평등 지수는?
- 2) 우리 함께 동참해요
  - ① 스티커 설문조사와 함께하는 성차별 영역 찾기
  - ② 17대 국회에서 호주제를 폐지하도록 바라는 ‘성 평등’ 종이학 접기
- 3) 성차별 NO! 성평등 YES!
  - ① 만화와 그림 전시회
  - ② 대전지역의 성차별 때려잡기! 본 회 성차별이동신고센터 리플렛 나누기

○ 9/16 차별철폐 1,000원 영화제

- 행 사 명 : 차별철폐 영화의 날
- 일시장소 : 2004. 9. 16(목) 17:00~21:00 / 근로자종합복지회관(대덕구 대화동) 웨딩홀
- 주 최 : 차별철폐대행진 대전추진위원회
- 주 관 :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독립영화협회, 민언련, 문화연대
- 행사내용 : 비정규직, 여성, 실업, 이주노동자, 장애 등 영화상영
  - 1) Part 1. 극영화 상영 : 담장, 빵과 우유 등 상영
  - 2) Part 2. 간접노동실태보고서 : 버스를 타자, 건설노동자이야기 등 상영

○ 9/17 이주노동자 차별철폐 및 빈곤·실업 추방철폐의 날

- 행 사 명 : 외국인 이주노동자 차별철폐를 위한 대전시민 거리홍보전
- 일시장소 : 2004. 9. 17(금) 18:00~19:00 / 으능정이 거리
- 주 최 : 차별철폐대행진 대전추진위원회
- 주 관 : 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
- 행사내용 : 대시민 홍보사업

- 행 사 명 : 청년실업, 실업빈곤 홍보전
- 일시장소 : 2004. 9. 17(금) 16:00~17:30 / 으능정이 거리
- 주 최 : 차별철폐대행진 대전추진위원회
- 주 관 : 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 일어서는사람들
- 행사내용 : 청년실업, 실업빈곤 홍보전, 시민참여마당, 희망나무심기 등

○ 9/18 차별없는 세상만들기 대전걷기대행진

- 일시장소 : 9.18(토) 16:00~17:30 / 서대전공원 집결 ~ 대전역광장광
- 주 최 : 차별철폐대행진 대전추진위원회

○ 9/18 차별없는 세상만들기 대전문화제

- 일시장소 : 9.18(토) 17:30~19:00 / 대전역광장

- 주 최 : 차별철폐대행진 대전추진위원회
- 행사내용 : 부문별 차별철폐발언 및 공연, 차별철폐 대동한마당 등

○ 9/19 차별철폐 걷기 대행진 및 한마당 (전국 지역행사추진위원회 서울집결)

- 기 조 : 차별없는 세상, 평등한 사회, 하나되는 사회
- 일시장소 : 9.19(일) 11:00~17:00 /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 일대
- 행사내용 : 부문별 행사(11:00~15:00) 차별철폐 인간띠 잇기(15:00~16:00)  
차별철폐 선언식 및 문화행사(16:00~17:00)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 전국 17개 시민단체

‘열려라 국회’ 캠페인 돌입

전국 17개 시민단체 전방위 국회모니터링 위해 ‘1000인 네티즌 의정감시단’ 구성 착수

1. 서울참여연대를 포함, 전국 각 지역에서 지역운동을 펼치고 있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 17개 시민단체는 해당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의정모니터 활동을 펼칠 것을 합의하고, 전국적으로 ‘열려라, 국회!’ 온라인 캠페인에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2.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 캠페인의 목적이 지금껏 시민사회단체가 펼쳐온 단편적인 수준의 국회 모니터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체계적인 국회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 유권자들에게 풍부한 의정활동 평가정보를 제공하여 유권자에 의한 일상적인 의정활동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개별 국회의원을 일상적으로 감시할 ‘1000인 네티즌 의정감시단’을 구성하여 시민의 힘으로 ‘깨끗한 국회, 일하는 국회, 국민 무서운 줄 아는 국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3. 17대 총선과정에서 유권자운동과 선거감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 단체들은 총선 직후부터 국회감시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정모니터 활동에 대한 논의와 준비과정을 거쳐왔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그 동안의 의정감시활동이 의원들의 출결, 법안 발의 건수 등을 단편적으로 집계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다고 평가하고 국회를 개혁하고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회감시활동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4.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9월 13일부터 9월30일까지 국회의원 모니터를 담당할 ‘1000인 네티즌 의정감시단’ 구성을 완료하고, 감시단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뒤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월 4일부터 본격적인 감시활동과 온라인캠페인을 시작할 예정이다.

‘열려라 국회’ 캠페인은 온라인국회모니터실(<http://watch.peoplepower21.org>)을 중심으로 펼쳐지며 현재 국회의원 개인정보와 상임위활동정보를 중심으로 가동중이다. ‘1000인 네티즌 의정감시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네티즌은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끝.

<별첨1> ‘열려라, 국회!’ 캠페인 개요

◎ 캠페인 초지바아

국민참여형  
온라인 국회 모니터



정치공론의 장

국회의원 평가  
의정활동 평가

은 ‘네티즌’과 ‘지역단체·시민단체 의정모니터링’이 중심이 되어 국회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속속들이 파헤치고, 감시하는 활동으로 전방위적이고, 입체적인 국회 모니터 활동과 이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개별의원에 대한 평가활동이 핵심임.

- 모니터를 통해 확보된 자료는 웹사이트(<http://watch.peoplepower21.org>)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임. 주된 컨텐츠는 △법안, 의안에 대한 의원들의 태도, 찬반표결현황 △주목할만한 발언 - 특정집단 이익대변, 과장, 허위, 구태의연한 발언, 저질욕설발언 등 △각종회의 출결현황, 법안발의현황, 외유, 정책활동 등 기본적인 의원들의 성실성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 △의정활동 모니터에 있어서 꼭 필요한 개별의원의 재산,병역,납세,정치자금,검정현황 등의 신상자료 등임. 이는 매 시기 개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4년후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중요한 선거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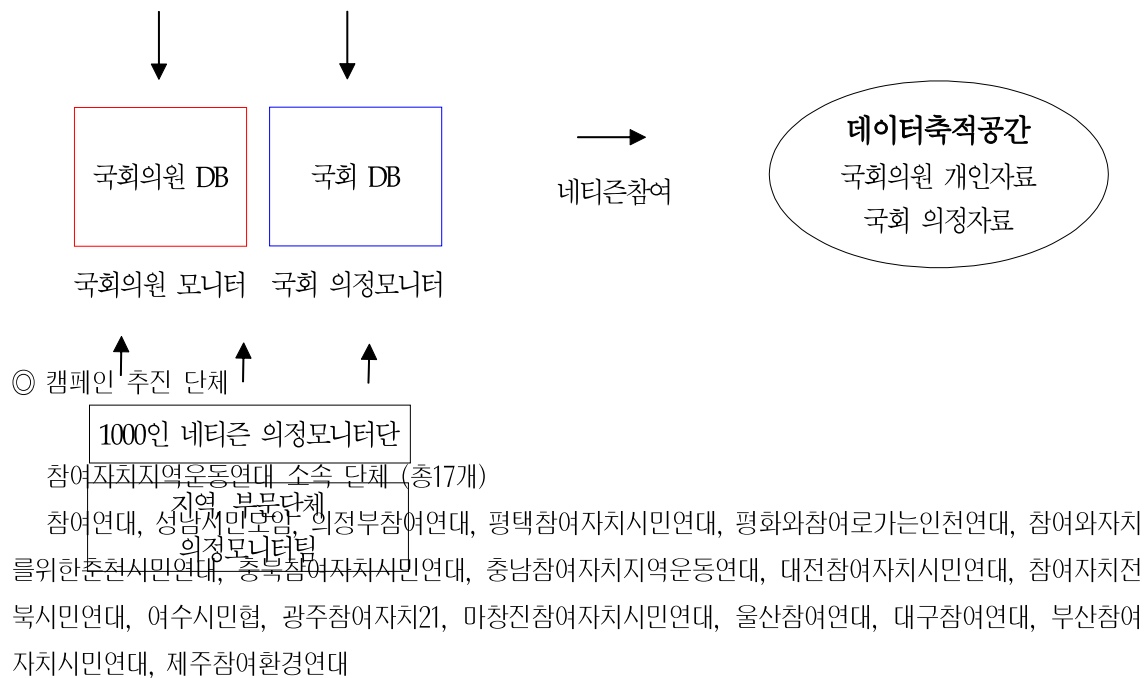
- 또한 모니터 결과물을 중심으로 ‘이 주의 최악의 발언, 최악의 의원’을 선정하는 온라인 투표, 개별의원에 대한 온라인청문회 등의 네티즌 참여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임. 이러한 온라인 의원평가 프로그램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유권자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모아내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있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1000인 네티즌 의정감시단’

- 국회의원에 대한 일상적인 모니터를 위해 ‘1000인 네티즌 의정감시단’을 구성(국회의원 한 사람에 3명의 네티즌 감시단 배정)하고, 감시단은 매일 담당 국회의원에 관한 언론기사, 정책자료, 의정자료 등을 조사·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역할을 담당할 것임.

- ‘네티즌 의정감시단’ 구성에 있어 감시단 활동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가입과정에서 담당 국회의원과의 이해관계가 발생하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동의절차 마련, 감시단의 활동과정에서도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위한 편파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할 것임

◎ 기본개념



#### ■ 갈등조정 능력향상을 위한 충청권 사회활동가 워크숍 개최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유성에 있는 한국토지연구원에서 「갈등조정 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가 워크숍」이 열린다. 이번 행사는 행정자치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나무를심는사람들, 미래사회와종교성연구원 공동주최하고 한국시민교육원‘성찰과비전’이 주관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충남·충북·대전지역 시민활동가 약 30명이 참가하고 있다.

이 워크숍은 지역사회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조직내 의사소통, 계층간, 지역간, 집단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주요한 내용으로 갈등조정과 한국사회 비전, 내안의 갈등과 성찰, 평화적 갈등해결의 기초적 이해, 조정의 원칙과 방법 이해하기, 조정 실습, 몸으로 소통하기, 갈등조정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갈등조정 워크숍은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기법 중심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과 자신과 세계의 소통에 근거하여 지속가능한 변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활동가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정부 들어 부쩍 늘어나기 시작한 사회적 갈등은 미래의 한국시민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손꼽히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워크숍은 시민사회 스스로 갈등조정 능력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충청권 시민활동가들은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기법만이 아니라 시민운동 및 한국시민사회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무를심는사람들 / 미래사회와종교성연구원/대전·충남·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차별철폐 걷기대행진 및 문화제’ 개최

-9월 13일부터 추진해온 1주일간의 차별철폐 행사를 마치다-

차별없는 세상, 평등한 사회를 위해 대전지역 노동·여성·장애인·이주노동자·빈곤·실업·시민사회 부문 등 14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추진해온 <차별없는 세상만들기 대전행사>가 9월 18일 걷기대행진과 문화제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지난 13일부터 장애인의 차별로부터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차별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사를 추진해왔던 대전추진위원회는, 각 부문행사가 대중집회 형식이 아니라 차별의 문제를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인간에 대한 건전한 상식과 가치를 만드는 작은실천의 장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 성과는 컸다는 평가이다.

대전참여자치연대 송인준 상임의장은 ‘이번 대회는 단순히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제는 최저생계비도 못받고 있는 140만명의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이러한 혜택마저도 받지못하고 있는 400만명의 빈곤계층자, 360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들, 건강보험료를 내지못해 병원도 못가고 있는 극빈층과 청년실업 문제, 40만명의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 대중교통 마저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 문제, 500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인구의 절반인 여성 차별문제는 이제 시혜나 동정이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나서야 할 당면과제’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정치인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행사의 마지막날인 18일에는 참가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참여단체간의 문제의식을 소통하고 공유하는 한편, 대전시민들에게 모든 차별의 문제를 홍보하는 ‘차별철폐 걷기대행진 및 문화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집회형식보다는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행진할 때도 시민들과 함께 풍선을 들거나 차별을 반대하는 빼에로나 동물캐릭터를 쓰고 나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문화한마당도 노래나 설장고 공연 등 문화공연에 치중할 계획이라고 주최측은 밝혔다.

차별없는 세상만들기 대전 걷기대행진 및 차별철폐 문화한마당

□ 걷기대행진

- . 일시 : 2004. 9. 18(토) 오후 4시
- . 장소 : 서대전공원 집결, 대전역까지 행진

□ 문화한마당

- . 일시 : 2004. 9. 18(토) 오후 5시 30분
- . 장소 : 대전역광장

차별없는 세상만들기 전국 걷기대행진 대전추진위원회  
공동추진위원장 김용우 박준호 송권 송인준 정순진 권술룡

■ "국가분열과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선동정치를 중단하고,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오늘(9월 17일) 오후 5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수도이전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을 진행하였다. 우리는 출범식에 참여를 서명한 한나라당 78명의 국회의원들과 일부 지방의회 의원, 지식인들의 국론분열과 사회 갈등 조장행위에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003년 12월 29일 다수당으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 제정에 앞장섰으면서도,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유보한 채 장외집회를 불사하는 한나라당의 알팍한 선동정치는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요, 대의기관으로써 국민의 뜻을 무시한 오만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제1야당이라는 책임있는 공당으로 국회 내에서 해결하려는 결자해지의 자세보다는, 국민을 불모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한나라당의 이중적이고 무책임한 정치행태에 환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의 장외집회가 한나라당이 줄곧 주장해온 '국민의 뜻'이요, '국민적 합의의 과정'이란 말인가?

출범식 결의문에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국민의 뜻을 무시한 정략적 졸속 추진이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며, 통일에 대비하지 못하는 분단고착적이고 반통일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 대선, 2003년 12월 29일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특별법 통과, 2004년 4.15 총선에서 국민적 합의의 과정을 거쳤고, 총건설비용 45.6조 중에서 정부투자자는 11.3조원으로 국가재정 운영상 염려할 수준이 아니며, 통일 이후의 남북 불균형에 앞서 남남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통일에 능등적으로 대비하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수차례 천명한 바 있다.

지난 40여년간 역대정부는 수도권의 과밀과 집중, 지방의 과소와 낙후를 극복하기 위해 수많은 정책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권력과 자본, 인재 등 모든 자원을 거대하게 흡수하는 수도권의 블랙홀 현상이 엄존하는 한, 수도권의 과밀을 극복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더욱 심화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40여년간 체험한 바 있다.

오늘 일부인사들의 무책임하고 비성숙한 행동은 이러한 절박한 현실적 인식이 결여된 수도권 이기주의와 기득권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제시 없이 신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하는 논리는 더 이상 정당성과 설득력을 상실한지 오래임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수도권 이기주의에 집착하여 신행정수도 건설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일부 인사들의 행태에 우려와 분노를 표하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획기적인 대안제시 없이 신행정수도를 정략적으로 반대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모든 분권분산 세력과 연대하여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하게 천명하는 바이다.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 김주일 안성호 조연상

#### ■ 대전광역시의회는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라!

##### -사직서 반려는 끝이 아니라 진상 규명의 출발-

우리는 지난 13일,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단 선거과정에서의 납득할 수 없는 파행에 이어 조신행 의원 사퇴 파동 등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시의회의 파행사태에 대해 개탄하며, 이권개입과 무능의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자치의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회복하고 시의회의 정상적 운영을 권면한 바 있다.

이에 하반기 원구성 이후 지방의원간의 불화와 갈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수임하지 못해오던 대전광역시의회는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 황진산 의장에게 조신행의원 처리문제를 일임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황진산 의장은 조의원의 사퇴를 반려하는 대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절차를 밟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우리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스스로 지방의회의 권능과 지위를 무너뜨린채 시민 신뢰를 상실시키는 일련의 사태를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 앞에 사죄하는 절차도 없이 징계 논의에 몰입했다는 것은, 결국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을 무시한 처사에 다름아닌 반주민적 행위라는 점에서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본다.

나아가 이런 파행을 초래한 것에 대해 지방의원들의 변화와 자정노력도 없이, 또한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도 없이 사퇴서를 반려하고 징계절차 과정을 밟으려는 것은 시의회 파행사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보다는 임시방편적이고 봉합적인 성격이 함축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번에 조의원이 지적했던 사항은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위의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며, 지방의원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뿌리채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만약 이러한 이권개입설과 집행부와의 유착설, 의원무능설에 연루되었던 의원들의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없이 시의회가 재가동된다면, 지역주민들과 괴리된 비정상적 의정활동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더불어 지방의회의 권위와 지위를 지역주민들로부터 실질적으로 담보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지방의원 전체가 무능과 유착관계에 있다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뿐더러, 향후 한국 지방정치의 비전을 더욱 어둡게 만든다는 점에서 진상규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는 시의회가 요구한 조신형의원의 사과문 그 어디에도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동료의원의 명예훼손을 하였음을 사과한다’고 밝힌바 없으며 일부 의원과 기자들의 집요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이라고 밝히지 않은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시의회가 요구한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사과를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회장이 직권으로 사직서를 반려한 것은 의회내 역관계에 대해 장고 끝에 내린 결론으로 문제의 발본색원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봉합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써 의회 차원의 정치적 마무리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이번 사태로 불거진 150만 시민의 대전시의회에 대한 불신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형사고소를 통해 허위사실임을 증명하지도 않고, 의회내 진상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지도 않는 것은 결국 진실이 드러나면 문제제기 당사자인 조신형 의원 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다치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기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관되게 조신형의원의 신상처리와 별개로 시민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의혹에 대한 진상의 규명을 요구해왔다. 이 길이야 말로 억울하게 거명된 의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며 시의회 정상화의 전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회가 조신형의원의 사직서 반려와 징계절차 개시로 이 문제를 매듭지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한 행태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시의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정 어렵다면 앞으로 구성될 대전시의회징계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시민단체와 관계 전문가를 참여 시켜 객관적인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부패 무능의회에 대한 시민적 의혹을 씻고 새로운 출발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지방의원들의 변화와 함께 민의를 바탕으로 양심과 소신에 따른 정치활동을 해줄 것을 소망하며, 의혹의 대상이 된 의원들이 직접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주길 권한다. 단순히 차기 지방선거를 겨냥하여 지방정치의 발전을 뒤로한 채 임시 봉합식의 징계로 의원들을 덮어주거나, 의혹에 대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한채 진상을 규명하지 않는다면 상생이 아니라 상망의 길이 될 것이다. 우리는 시의회 차원에서 진상규명 없는 징계가 이루어질 경우 독자적인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데 모든 노력을 강구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대전YMCA 대전경찰련 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 대전어민회 대전여성환경포럼 대전참여자치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언련 대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대전본부 충청노련

**■ 민주적인 주민통제 부족과 단체장의 사병화 우려를 낳고 있는  
정부의 기초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난 16일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과를 설치하고 단체장에게 자치경찰 임용권을 주는 자치경찰제 시행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지역교통과 식품안전, 방법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치안행정을 맡게되며, 구체적으로 전국 234개 시·군·구청 조직 안에 평균 25.3명의 직원을 가진 자치경찰과를 두어 전국적으로 6천여명의 자치경찰을 운영하게된다고 알려졌다.

우리는 그동안 국가권력의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실현, 경찰권에 대한 국민 참여권의 확대, 맞춤형 치안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도입과 시행을 주장해왔다. 경찰권력에 대한 시민참여와 통제가 불가능한 현행 경찰조직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민생치안을 외면하고 시국치안에 치우쳐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만족도가 매우 낮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대대적 국가경찰의 조직 혁신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매우 긴급한 개혁과제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은 참여정부의 제1국정 원리라 할 국민참여의 원칙을 배제하고 국립경찰의 조직 보전과 기초자치단체의 권한 확대라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에 그쳤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은 기존 사법·경찰권의 기득권의 벽에 부딪혀서 사법·경찰권의 국민 참여의 확대를 위한 검찰·경찰의 조직개편 및 역할 분담에 대한 새로운 모색조차 추진 못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무늬만 자치경찰을 나눠주는 것에 그쳤을 뿐이다. 국가적 차원과 지방적 차원 모두에서 경찰권에 대한 국민참여를 외면함으로써 새로운 사법·경찰권력 독점방안이 만들어졌을 뿐이다.

지방분권은 반드시 민주적 지방혁신을 동시에 요구한다. 단순히 중앙과 지방의 관-관간의 권한 이전이 아니라 이양되는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그동안의 국가 경찰이 시국치안에 내몰려서 치안서비스가 낮은 만족도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을 개혁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기초자치경찰 제도는 기초자치단체가 기왕에 갖고 있는 단속권에 '경찰'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지방분권의 열망을 희석시킬 뿐 참된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외면하고 있다. 아울러 이나마 시민참여에 기반한 민주적 통제 수단을 전적으로 외면함으로써 자치단체장의 권력독점만을 강화시키고 있다. 또한 국립경찰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을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보조기관 형태로 두고 임면권을 자치단체장에게 주는 기초자치단체 경찰 창설 방안은 자치단체장의 사병화에 따른 정치적 편향의 발생, 자치단체별 재정능력 격차에 따른 치안 불평등의 초래, 교통 정보통신의 광역화와 규모의 경제의 상실로 인한 효율성의 저하 및

재정력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사법·경찰권에 대한 국민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제1의 원칙으로하여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기초자치경찰 창설방안을 백지화하고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자치경찰을 창설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자치경찰은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마다 설치하고 자치경찰청장에 대한 인사권은, 역시 시·도 단위에 설치되는 자치경찰위원회가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광역화되는 치안서비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하고 자치경찰이 자치단체장의 ‘사병화’ 하는 것을 막고, 주민자치의 본뜻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경찰 민주화의 꽃’인 경찰위원회는 국립경찰과 자치경찰 모두에 즉각 설치되어야한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수는 가능한 많게 하되 당장 주민 직선으로 뽑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면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등 관계 전문가들로 기초, 광역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인사가운데 광역의회의 동의를 얻어 광역 자치단체장이 임명토록 하여야 한다. 특히 자치경찰의 도입으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아니라 맞춤형 치안 비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독립적 경찰위원회의 구성과 이를 통한 자치경찰의 통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국가경찰의 민주적 통제와 권능강화를 위한 일대 혁신이 동시에 추진되어야함은 물론이다.

2004. 9.21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광주참여자치21/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시민모임/여수시민협/울산참여연대/의정부참여연대/참여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전국17개단체)

#### ■ "수도권 이기주의와 기득권 집착이 국가균형발전인가?

**한나라당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말라!"**

어제(22일) 한나라당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 반대당론을 채택하였다. 우리는 우선 한나라당의 행정수도 이전 반대당론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방기한 '수도권 이기주의'와 '기득권 논리'와 타협한 편협한 정치적 산물이란 점에서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작년 12월 29일 한나라당은 다수당으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을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시켜 놓고 신행정수도건설 추진과정에서 반대당론을 채택하는 것은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무시하는 처사이며, 대의기관으로써 국민의 뜻을 우롱하고 배신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한나라당이 검토하고 있는 대안들도 참여정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역대정부의 시책에서 실패한 사례로 전혀 새로운 바가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지난 30여년간 역대 정부는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 수많은 정책을 시도했지만 모두 좌절되었음을 우리는 역사적 체험에서 경험한 바 있다. 우리는 지역간 불균형이 국가경쟁력의 가장 커다란 저해요인 중의 하나로 역대정부가 추진한 단편적인 임시방편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기가 어렵다고 절감하고, 지방의 자생력과 수도권의 삶의 질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 건설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며,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차질없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함을 천명한 바 있으며, 지난 2003년 12월 29일 통과된 지방살리기 3대입법 추진을 위해 혼신을 힘을 경주한 바 있다.

그러나 수도권 일부의 정치인과 지식인, 보수언론에 의해 신행정수도의 건설의 필요성이 왜곡되고 있으며, 이러한 반대논리의 근거에는 '수도권 이기주의'와 '기득권 논리'가 배경에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월 17일에 출범한 '수도이전반대 범국민운동본부'를 한나라당 의원이 주도하고 있고, 한나라당 소속의 서울시장이 행정수도이전 반대 쫓기대회에 국민의 혈세를 전용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나라당의 수도이전반대 당론채택은 결코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뿐만아니라 10월 28일 '수도이전 반대 100만인 쫓기대회'와 같이 국가분열과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불순한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한나라당이 수도권 이기주의와 보수기득권 논리에 집착할 경우,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기원하는 전국의 모든 세력과 연대하여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하게 천명하는 바이다. 또한 10월 28일 '수도이전반대 100만인 쫓기대회'와 같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불순한 행위에 대해선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끝-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 김주일 안성호 조연상

#### ■ 황진산 시의회회장의 친인척 비서실장 채용요구를 규탄한다!

황진산 시의회회장이 현재 일반직 5급 및 7급이 보직되어 있는의장 비서실장과 수행비서자리를 의장의 친인척을 별정직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한 사실에 대해 어이가 없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성명서를 통해 규탄한 것 처럼, 비서실장의 불필요성 강조와 탈권위를 선언한 약속을 반복한 이번 비서실장 친인척의 별정직 채용요구는 친척척 취업용이라는 우려는 물론, 시민

과의 약속을 뒤엎는 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시의회 의장단 선거 파행이후 이권개입과 무능의정에 대한 조신형 의원 폭로로 진상규명을 통해 자치의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회복하고 시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촉구하는 시민적 요구가 높은 가운데, 이번 황진산시의회의장의 비서실장 친인척 채용 요구는 시의회 의장 스스로 의회의 권능과 위상을 실추시키는 물론, 최소한의 시민적 요구도 외면하는 반 자치적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시의회의 친인척 비서실장 채용이 법적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잇따른 시의회 파행에 대한 의회스스로의 최소한의 자정과 반성이 없는 가운데, 또다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무시한 이번 처사는 황진산시의회의장의 도덕불감증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대전광역시의회 비서실장에 의장 친인척을 채용한다고 해서, 그동안 실추된 의회위상이 회복된다고 보지 않으며, 분권과 자치시대의 변화하는 민의를 바탕으로 부패무능의회에 대한 시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자성과 실천만이 실추된 시의회의 위상과 권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대전광역시의회가 민의를 바탕으로 실추된 시의회의 위상과 권능회복을 위해 자정노력을 다할 것을 정중히 요구하며, 더불어 황진산 시의회의장은 친인척의 비서실장 채용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4년 9월 30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송인준

#### ■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공급 민간위탁 선정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서구청이 2년마다 시행하는 쓰레기봉투 위탁과정에 특혜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서구청 쓰레기봉투 위탁의 경우 이미 2년전에도 해당자치구 의회의원이 위탁을 받으면서 서구청내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서구청의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및 음식물쓰레기납부필증 공급 민간위탁을 대행할 경우 수수료만도 매년 1억여원의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고 본격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특혜의혹이 불거져나온 것은 유감이라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난 2002년도에는 공개입찰을 통한 최저입찰 방식이라는 형식을 도입했으나 이번에는 공개입찰요구를 외면하고 수탁심사위원회 심사로 수탁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것은 서구청 스스로 의혹을 부풀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이번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쓰레기납부필증 공급 민간위탁 특혜의혹 대상이 서구청의회 의원이라는 점에서 도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직무상 달성해야 할 이익과 개인적 이익이 충돌하는 ‘이해충돌’에 해당하고 있으며, 이해충돌 그 자체가 부패행위가 되지 않지만 이로 인해 결국 직무를 수



행함에 있어서 가장중요한 기준인 공정성과 공평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이는 자연스럽게 부패를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이해충돌회피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노력이 사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대전시의회 모의원이 시청소식지 인쇄입찰 포기사례에서 보여지듯이 도덕적 문제내지 의혹해소 차원에서라도, 해당의원은 스스로 수탁신청을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민간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투명성 확보 및 비용절감을 위해 공개입찰 요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서구청을 비롯해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공급 민간위탁 방식의 전면적인 재점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이번 특혜의혹에 대한 서구청과 서구의회 한점 의혹없는 해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민간대행업체 선정에서 정해지는 수수료는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조례의 개정을 통한 합리적인 쓰레기 처리 시스템구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참조)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s)이란?

이해충돌이란 특정한 개인(사인으로서의 공무원)의 이해가 그가(대리인으로서의 공무원) 대리하고 있는 집단(예를 들어 일반국민)의 적절한 이해와 충돌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공직과 개인적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 공직자의 청렴성과 중립성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2004년 10월 14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송인준

## ■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은 멈출 수 없다. 행정특별시건설 방안을 검토하라!

### -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판결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 판결한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성문헌법국가에서 그 존재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은 관습헌법을 가정하여 국민의 직접선거로 위임된 국회의 입법권을 부인하고 제한하는 행위는 자의적 법률 해석을 통한 새로운 사법독재의 출현이며, 국민의 입법권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실정법으로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실효로 말미암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 이 소홀히 되어서도 안된다는 점에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 정책은 흔들림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1. 정부와 정치권은 정쟁을 중단하고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의 실효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시행하라!.

1.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헌법 개정 사항이라면 행정 각 부의 지방이전은 대통령의 재량사항임으로 신행정수도의 건설의 대안으로서 행정특별시 건설의 대안을 즉시 검토하라!

2004. 10. 21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송인준

#### ■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흔들림 없이 계속되어야 - 위헌판결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오늘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소건설특별법의 위헌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당혹감을 지울수 없다.

현재의 위헌결정의 주된 취지는 불문헌법(관습헌법)으로 수도의 위치를 전제하고 이로부터 수도이전의 경우 헌법개정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성문헌법국가에서 자의적 불문헌법의 법리를 지나치게 자의적 확장 해석을 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조선시대부터 계속되었던 장자상속권이 60년대 민법을 통해 개정된 것도 관습헌법 개정임으로 개헌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하자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소수의견으로나 있을 수 있는 불문헌법 논리에 근거한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서울중심주의와 서울이기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서울 거주 헌법재판관들의 법논리적 유희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면키 어렵다.

우리나라는 성문헌법 국가로서 입법권을 국민의 직접 선거로 구성된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가 성문화되지 아니한 관습헌법 이론에 근거해 성문법에 의해 보장된 정당한 대의기관의 입법권을 부인함으로써 국민의 입법권을 침해하여 법해석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현재의 입법권에 대한 관습헌법론을 통한 부당한 제한은 또다른 국민 기본권 침해를 가져오는 현재독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대정신으로 정착되어온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전국이 골고루 잘 살게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비롯한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신행정소건설특별법의 실효로 인한 국민 불안과 민생불안이 없도록 정부와 정치권은 조속히 긴급 후속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04.10.21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 김주일 안성호 조연상

#### ■ 충청민들과 국민들을 상대로 대사가극을 펼친 한나라당 규탄 성명

## **"자신이 낳은 아이를 부정하는 부모가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겠는가?"**

어제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판결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당혹감을 지울 수가 없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과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신행정수도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노력했던 우리들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착잡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성문헌법이 기본법인 우리나라에서 불문헌법인 관습헌법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에 대해 우리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조선시대의 장자상속권이 60년대 민법을 통해 개정되었는데, 이것도 헌법 개정 대상이란 말인가? 또한 여야 공히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호주제나 동성동혼 금지도 오랜기간 지속되온 관습이란 점에서 헌법 개정사항이란 말인가? 도대체 지금이 중세봉건 시대도 아니고 관습헌법으로 헌법을 개정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또한 현재의 판결은 성문헌법을 기본법으로 하고,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입법기관인 국회에 위임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체계와 헌법상 삼권분립과 대의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판결이요, 입법권에 대한 관습헌법론을 통한 부당한 제한은 또다른 국민기본권 침해를 가져오는 헌재독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우리가 한나라당 앞에서 비분강개하며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이유를 한나라당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2003년 그해 추운 겨울,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제정을 앞두고 바로 이 건물 앞에 부착되어 있던 '행정수도이전에 한나라당이 앞장서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2003년 12월 29일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을 포함한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에 당시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앞장섰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당시 한나라당 출석의원 94명 중 82명이라는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한나라당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이 통과되자마자 한나라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서로 웃으며 악수를 건네는 사진은 아직도 빛이 바래지 않고 있다. 또한 2004년 3월 31일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표가 충청지역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수도이전은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다'라는 약속은 아직도 우리의 귓가에 생생히 남아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한나라당의 모든 말과 약속은 충청민들과 국민들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고 거짓말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에 앞장섰던 한나라당의 태도는 총선 이후에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당론과 분명한 입장 표명없이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하며 일부 보수언론과 지식인 집단과 결탁하여 실상은 신행정수도 건설 반대론을 조장하는 데 앞장섰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만든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을 부정하면서 입법권을 지닌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무시하고, 대의기관으로써 국민들과의 약속과 뜻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도대체 자신이 낳은 아이를 부정하는 부모가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겠는가? 자신의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지는 못할망정,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제대로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친 것도 모자라 아이를 부정하고 욕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가? 한나라당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그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으며, 오로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정략적 반대만을 일삼았을 뿐이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정책수단으로 신행정수도의 성공적인 건설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과의 상호연계를 통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 세계와 당당히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건강한

나라로 대한민국이 성장하길 염원했던 우리는 한나라당의 이중적이고 무책임한 정략적 놀음에 배신감과 분노로 치를 떨지 않을 수 없다.

어제 현재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위헌판결 직후, 한나라당은 즉각 환영논평을 발표했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현재의 결정을 환영하고 위대한 결정을 내린 재판관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한다"라는 찬사도 아끼지 않았다. 도대체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놓고,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대안제시도 없이 정략적 반대론으로 일관하며 충청민들과 국민에게 대사가극을 펼쳐놓고, 국회의 입법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현재의 판결을 한나라당이 환영할 자격이 있으며, 환영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가? 한나라당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 오히려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과 속임수를 늘어놓고,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국가대사를 명확한 입장이나 대안제시없이 정략적으로 악용하였던 자신들의 행태에 대해 속죄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그간의 이중적이고 무책임한 정치술수에 대해 충청민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순서이다. 한나라당은 지금 축제를 즐길 때가 아니라 회개해야 할 때이다. 만약 그간의 행적에 대한 속죄와 대국민사과 없이 오만불손한 정략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충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한나라당을 심판하고야 말 것이다. 우리는 어제 착잡함과 서러움, 분노에 치를 떨며 불면의 밤을 지새워야 했다. 이런 불면의 밤이 얼마나 더 지속되어야 하는가?

2004. 10월 22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이전 위헌판결과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입장

### < 1. 현재의 행정수도이전 위헌판결에 대한 입장 >

현재의 관습헌법 논리 적용은 헌법체제와 민주적 대의제를 심각히 훼손

헌법 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10월 21일 헌법재판소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에 해당하며 따라서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우리는 현재가 ‘수도는 관습헌법에 해당’ 한다는 생경한 법논리를 적용하고 나아가 이를 이전하려면 성문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서울이 왕조시대 이래의 수도였다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이를 관습헌법으로 해석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백보를 양보해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이 관습헌법의 하나라 하더라도 이를 바꾸기 위해 성문헌법을 개정하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성문헌법국가에서 실정헌법의 제정은 바로 주권자에 의하여 행사된 결과로서 불문헌법은 성문헌법의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도 수도를 바꾸기 위해 헌법을 고치는 나라는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위헌적 권력남용 막을 제도적 대안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이번 결정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이 없으면서도 관습헌법에 대한 해석권을 독점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한 의사형성과정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번 결정은 성문법체계와 헌법상 삼권 분립 및 대의민주체계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헌법 질서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의 이러한 위헌적 권한남용은 선출되지 않는 권력인 헌법재판소를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의 틀 안에 묶어두기 위해 실질적 제도개선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더욱 절박하게 하고 있다. 국민과 의회의 민주적 견제장치, 헌재 구성의 다양성을 제도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 <II.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입장 >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주민자치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현재의 결정으로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은 결과적으로 좌절되었다. 그러나 수도권집중과 국가불균형 해소는 회피할 수 없는 국가적 개혁과제이다. 따라서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분권 균형발전 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노무현 정부가 시정연설에서 ‘현재의 결론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워 반드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당연하고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 구축’과 ‘수도권 신도시’, ‘기업도시’, ‘지방혁신도시’, ‘복합레저파크 건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공임대 아파트 수요 창출’ 등 노무현 정부가 제시한 내용을 보면 ‘균형발전’의 의미는 상실된 채 무분별한 개발정책이 재연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 중추기능의 분산 없는 개발 프로젝트만으로는 “균형발전”이 달성되지 않는다.

그 동안에도 행정수도 이전만으로는 ‘국가균형발전’과 ‘분산?분권’의 효과가 충분치 않다는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더우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 판결로 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이 중단된 상황에서 기업도시, 수도권 신도시, 행정도시 건설,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일련의 도시개발과 토목사업 등 미봉적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수도 이전으로 예상되었던 균형발전과 분산효과는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전 국토를 개발지대화하여 부동산 투기와 환경 파괴의 부작용만을 낳을 위험이 높다.

노무현 정부는 신행정수도를 추진함과 동시에 수도권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완화를 시도함으로써 수도권 과밀해소의 본래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신도시 건설, 수도권 공장설립 규제 완화, 동북아 허브 국가로 자리매김한다는 명목아래 추진되어온 인천?경기 지역의 개발 허용 등의 정책추진이 그것이다. 행정수도이전도 불투명해진 마당에 수도권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완화를 철회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와 명백히 상충된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 강력한 분산정책과 함께 분권, 자치혁신의 균형이 필수적이다.

노무현 정부가 신행정수도를 건설하여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려 했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이제까지 추진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전면 철회하여야 한다.

또한 분권이나 균형발전의 의미는 불확실한 반면, 일부 기업들과 투기세력들의 이해관계는 명확한 기업도시 계획 등은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분권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과주의적 조급증과 개발성장주의 이데올로기에 경도되어온 반면,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정책비전은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데 실패해왔음을 겸허히 인정해야 한다. 국가 전반에 걸쳐 혁신이 수반되지 않은 지역 개발정책들로는 진정한 균형발전과 분권은 이루지 못한 채 지역사회 토호세력의 물적 기반만 강화하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국가균형발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가 중추기능의 강력한 분산정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혁신, 정부기관의 재조정, 국가 재정운용계획의 변화, 주민참여 견제장치의 정비 등이 종합적으로 진행되어야만 가능하다. 특히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는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할 민주적 추진주체를 형성하는 것이 분권과 균형발전의 바탕임을 명심해야 한다.

차제에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국가균형발전과 분산 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의지를 분명해 해야 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 가능한 대안들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새로이 시작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분권 분산 자치의 균형이 필수적이다.

2004. 11. 3.

전국 230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전국 230개 시민사회단체 명단

## ■ 신행정수도건설 비상시국회의 <열린우리당> 건의문

### 1. 신행정수도 건설은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이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비중있는 정책과제였다는 것은 그 어떤 정부도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500만 충청도민들은 다소의 불이익과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유력한 정책대안으로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판결에 따라 신행정수도 건설이 무산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후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나,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선도사업으로써 신행정수도 건설의 중단은 곧 지방말살이며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좌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신행정수도는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 2.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한 헌법재판관을 탄핵해야 합니다.

성문헌법이 기본법인 우리나라에서 관습헌법이란 생경한 논리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린 것은 수도권 이기주의와 기득권 논리를 대변하는 정치적 판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성문헌법을 기본법으로 한 헌법체계와 삼권분립 정신,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무시하는 것으로 균형발전의 후퇴와 지방말살, 민주주의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다수 재판관은 헌법을 해석하는 기관으로써 권한을 남용하여 ‘서울이 수도’라는 지명한 사실로부터 논리적 비약을 거쳐 ‘서울만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제정하고, ‘관습헌법의 개정은 일반법으로 될 수 없고 성문헌법 개정의 절차에 준하여 한다’는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림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헌법 제정권자인 국민의 헌법제정권을 박탈한 살헌(殺憲)행위를 자행하였기에 헌법 제65조에 의거하여 헌법재판관을 탄핵하여 해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 3. 여론호도용 대안제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은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부당한 정치적 판결 이후 제시되고 있는 여러 대안들은 충청도민의 분개한 민심을 무마하기 위한 여론호도용 미봉책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행정특별시나 행정타운, 과학기술행정도시 등과 같은 대안들은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기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서울일극집중체제를 방기한 채로 시행하는 그 어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서울의 흡인력을 견뎌내지 못하고 실패해 왔음이 오늘날 현실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유력한 정책대안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비분강개한 충청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여론무마용 대안 제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2004. 11. 5

신행정수도건설 비상시국회의

## ■ 신행정수도건설 비상시국회의 <한나라당> 건의문

### 1. 신행정수도 건설은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이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비중있는 정책과제였다는 것은 그 어떤 정부도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500만 충청도민들은 다소의 불이익과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유력한 정책대안으로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판결에 따라 신행정수도 건설이 무산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후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나,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선도사업으로써 신행정수도 건설의 중단은 곧 지방말살이며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좌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신행정수도는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 2. 신행정수도건설 지속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 제정 당시 다수당으로 특별법 제정의 주된 책임자이며, 지난 17대

총선 당시 신행정수도 건설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잘못된 수도권 이기주의에 휩쓸려 신행정수도건설을 반대하고 음해하는데 앞장섬으로써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의 위헌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염원하는 500만 충청도민과 국민을 우롱하며 위헌판결을 방조한 한나라당은 이러한 과오를 반성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으로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신행정수도건설 지속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신행정수도건설 중단은 위기를 극복하는 국민적 합의력 형성에 앞장서야 합니다. 신행정수도건설 지속추진 당론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충청권의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전원은 한나라당을 탈당하여야 한다는 것이 500만 충청도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3. 여론호도용 대안제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은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부당한 정치적 판결 이후 제시되고 있는 여러 대안들은 충청도민의 분개한 민심을 무마하기 위한 여론호도용 미봉책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행정특별시나 행정타운, 과학기술행정도시 등과 같은 대안들은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기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서울일극집중체제를 방기한 채로 시행하는 그 어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서울의 흡인력을 견뎌내지 못하고 실패해 왔음이 오늘날 현실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유력한 정책대안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비분강개한 충청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여론무마용 대안 제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2004. 11. 5

신행정수도건설 비상시국회의

#### ■ '신행정수도건설 위헌판결 수용은 지방 살리기 정책의 포기'

공공기관 이전 등 분권-분산정책도 무력화 우려-원안대로 추진해야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위헌판결이후 시대적 과제인 지방분권-분산정책에 엄청난 혼선이 초래되고 국론 분열과 갈등?대립양상이 극도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는 절박감에 '상생'을 기조로 한 지방분권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과 10대 정책의제를 설정, 이의 관철에 전 역량을 기울여온 우리는 중앙과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판결이후 빚어지고 있는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갈등과 반목현상을 참담한 심경으로 지켜보며 다시 한 번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과정의 추동력을 결집, 결연한 의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 지방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수용하기에는 너무도 절박한 상황입니다. 현재의 관습헌법 적용은



국민의 보편적 상식과는 괴리된 무리한 논리이며, 국가의 미래와 지방민의 행복추구권을 간과한 처사입니다.

시대정신을 망각한 현재의 판결로 인해 국가적 담론인 분권-분산정책은 오히려 심각한 혼조에 빠져들었으며 그 후유증과 파장은 지방민과 이전후보지였던 충청권의 심리적 공황상태로 까지 파급되고 있습니다.

위헌판결이후 제기되고 있는 여러 형태의 대안과 논란들은 진정 지방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주장이기 보다는 계층 간, 지역 간, 정치적 이기주의에 매몰되고 있습니다.

현재판결의 법적구속력을 내세워 위헌판결을 수용해야한다는 주장, 청와대와 국회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충청권으로 옮기자는 대안론, 일부 중앙 부처 외에 공공기관을 충청권에 추가배치하자는 의견, 자체에 중앙부처를 여러 지역에 분산배치하자는 주장 등 백가쟁명 식 담론들이 무성합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서로 나름의 논거를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은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며 지방 살리기 정책이 왜곡되거나 지연되고 무산위기로 가는 수순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연구와 논의를 거쳐 지방분권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이 패키지화되지 않고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의 실현에 전력을 기울여 지난해 12월29일 대의정치의 본산인 국회로부터 압도적 찬성을 이끌어냈었습니다.

'지방 살리기 정책'이 막 가시화되려는 초기단계에서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위헌판결은 가뜰이나 강고한 중앙과 수도권이기주의에 편승한 반 분권-반 분산논리로 이어질 것이 뻔하며 지방분권특별법과 지역균형발전법의 추진도 무력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작금 지방 살리기의 본질적 가치와 수단을 깊이 있게 인식하지 못한 채 현실론과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분권만 잘 추진하면 된다'거나, '행정특별시, 행정타운 등 다른 대안을 찾아야한다', '다른 정책수단을 통해 지방대책을 재검토해야한다' 등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발상은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비수도권 지역 간에 유치열기가 뜨거운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정책이 수도권과 해당 기관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는 반면 수도권 규제완화를 외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며, 충청권에 대한 대안들은 다른 지역의 반발을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이로 인해 전국의 지방은 연대와 공조가 와해되고 상실감과 박탈감, 무력감만 증폭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며 모든 지방정책이 흐트러지고 논의만 하다 모든 것을 잃는 우를 범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지방분권만 잘 추진된다는 주장도 얼핏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경제력과 인적자원이 집중되어있는 현실에서 '부익부 빈익빈'만 부추기게 될 것이며, 수도권인력의 흡인력을 제어하는데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 중앙관료와 학자, 언론에 의해 지방분권과 지역분산정책들은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암초에 부딪혀 지방을 더욱 공동화시킬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을 관철시켰던 초심으로 돌아가 모든 지방이 전역량과 의지를 결집하는 것입니다.

신행정수도건설을 포함한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은 결코 왜곡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원래의 안대로 강력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1. 정치권과 정부는 정치적 논리를 배제한 가운데 지방을 살리기 위해 선택했던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의 차질 없는 이행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1. 지방자치4단체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판결로 위기에 처한 지방분권과 분산정책의 회생을 위해 지역 간 이해를 초월, 모든 역량을 결집해주시기 바랍니다.

1.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는 진정한 지방분권과 수도권의 과밀해소,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리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양해해준 비수도권과의 상생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 지역균형발전정책에 협력해주시시오.

우리는 지난 11월 12일 부산에서 열린 지방분권국민운동 대표자회의에서 거둬 무너져 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결의를 다시한번 다짐하면서 이 같은 의제를 구국의 일념으로 논의할 '지방살리기 비상국민회의'를 제안합니다.

뜻있는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2004. 11. 17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상임의장 김민남

■ 시의원 여러분, 대전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 고질적인 파벌싸움과 자리다툼으로 인한 대전시의회의 파행사태를 규탄하며 -

○ 제4대 대전시의회가 납득할 수 없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부터 조신행 의원 파동사태에 이어 연말  
예결산특위 구성에 따른 의장 불신임 문제에 이르기까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싸  
움질로 시작하여 싸움질로 끝내는 불쌍 사나운 모습으로 한해를 마감하는 작태에 실소를 금할 길 없다.

○ 특히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충청인들의 분노와 아우성이 높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신행정수도 지속추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열망하는 시민적 요구는 애써 외면한 채 밥그릇 챙기기에만 골몰  
하는 작태는 허탈하다 못해 한심하기까지 하다. 더욱이 그간의 시의회 파행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고질적인 파벌싸움과 자리다툼에서 비롯된 파행의 연장선이기에 더욱 분  
노하지 않을 수 없다.

○ 이에 우리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스스로 지방의회의 권능과 지위를 무너뜨린채 파행으로  
치달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황진산 의장을 비롯한 지방의원 전원이 지역주민들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한  
다. 나아가 파행 원인이 고질적인 파벌싸움과 자리다툼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지방의원들의 변화와 자정노  
력을 다시한번 권면하며 하루속히 의회를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이라는 국가적 대사와 지역적 어려움 앞에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싸움  
질로 허송 세월을 보낸다면 지역주민의 저항과 함께 차라리 이럴 바엔 지방의회를 해산하자는 지방의회  
무용론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송인준

#### ■ 사회복지전담인력에 대한 지방재정이양을 반대한다.

공공부조정책과 관련한 모든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라!

- 참여정부는 대선공약인 사회복지전담인력 충원 약속을 지켜라

지난 7월6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의해 내년부터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충분한 논의과정이 생략되어 오히려 졸속으로 추진, 지방정부와 사회  
복지계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같은 우려는 사실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관련 예산의 모든 부분은 현행 국고보조방식으로 유지하면서, 유독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를 비롯 공공복지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지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  
다.

참여정부는 대선공약으로 폭증하고 있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담 인력을 매년 1,500명씩  
충원하여 5년간 7,500명을 증원시킬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공약은 전혀 이행되지 않은 채  
오히려 지방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읍, 면, 동 일선에 배치된 사회복지전담인력의 임용, 배치에 관해 보건복지부 스스로가 인  
력관리에 대한 강제력을 상실할 뿐 아니라 지역간 복지형평성에도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즉,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전담공무원의 수와 1인당 담당하는 업무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보다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만약, 정부의 의도대로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지방으로 이양된다면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복지의지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인력을 확충할 가능성은 그만큼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정부는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복지사무소’를 별도의 전담인력의 확충없이 2004년 7월부터 전국의 9개소에 시범 실시하고 있다. 우리는 ‘사회복지사무소’가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에 획기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사회복지전담인력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관련 예산은 국고보조사업인 반면 인력에 관한 예산은 지방이양시켜서는 제대로 된 전달체계를 갖출 수도 없으며 ‘시범사회복지사무소’도 제자리를 찾을 수가 없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의 재정분권화 정책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성을 제고하고 지역복지정책 수립에 긍정적인 요소로 일부분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정부가 재정분권화 정책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줄속으로 진행시키기 보다는 다시 한번 지방이양사업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촉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도 우리는 촉구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건복지부의 재정분권화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질 것을 주문한다. 왜냐하면 적어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이나 사회복지전달체계와 관련된 정책은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복지전담인력의 확충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향후 계획을 내놓으라고 강하게 질타해야 한다. 공약 이행은 하지 않으면서 인력지원은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발상 그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다.

전국에서 사회복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는 빈곤계층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공공인력확충 없이 복지관련제도만 확충되고 있는 부분을 극히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무리하게 사회복지전담인력의 인건비를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시켜, 결과적으로 폭증하는 복지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2004년 11월 23일

사회복지운동단체

경기복지시민연대(수원), 관악사회복지(서울), 민중복지연대(서울), 위례지역복지센터(서울), 장애인지역공동체(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대구) 시민사회단체?정당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대전참여자치연대 복지포럼, 인천참여자치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 ■ 올바른 교육감 선출을 위한 대전연대 결성선언문

금년 12월로 예정되어있는 대전광역시 교육감 선거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며, 교육자치의 실현은 우리사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지방분권시대를 열

어가는 중대한 지표인 까닭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통해 교육 비리를 근절하고, 대전교육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성찰로 공교육 발전의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주체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가져다주는 교육감을 선출함은 교육 관계자는 물론 시민 모두의 소망이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충남교육감 선거와 같은 후보간의 담합과 부정 선거로 당선된 교육감이 구속사임하는 사태나, 제주교육감 선거에서 보여진 교육감 당선자를 포함한 4명의 후보자 모두가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되는 비극적인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고 교육 본연의 위상을 찾기를 기대하기에 그 소망은 더욱 각별하다.

그러나 현실은 9명의 자천 타천의 입후보예정자들이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도 되기 전부터 갈등과 대립의 양상을 보이고, 물밑 선거운동을 치열하게 전개하며 불법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이더니 급기야 선관위에서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관련자를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심각한 지경에 처해있다. 이후로도 학연(출신대학)이나 급별 인연(초등, 중등, 공사립)으로 지지를 확보하려하거나, 자리보장, 금품제공 등 부정한 거래를 통해 표를 얻으려는 행위가 농후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감 선거는 지금의 심각한 교육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과 교육 개혁을 위한 정책방안 등이 논의되는 건전한 정책대결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하는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결코 좌시할 수 없기에 우리 지역의 16개 시민사회단체들의 뜻과 역량을 모아 ‘올바른 교육감 선출을 위한 연대회의’를 결성하고 교육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

깨끗한 선거풍토와 올바른 정책 선거는 우리 모두의 참여와 감시, 비판이 있어야 가능하다. 혐오하고 외면하면 할수록 더욱 혐오스러워지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해왔다. 우리는 시대가 요청하는 깨어있는 유권자의 힘으로 선거를 바로 세우고 교육계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으려 한다. 수동적인 유권자를 넘어서 내가 원하는 교육감을 직접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유권자가 되도록 추동해 나갈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선거문화의 정착과 대전 교육의 발전을 위한 감시자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부정선거감시단을 구성하고 고발센터를 운영하며 불법 선거운동으로 당선되는 후보가 나오는 경우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는 대전광역시교육감 선거가 공정한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청회, 토론회, 후보자 서약식, 캠페인 등을 전개하며 현행의 왜곡된 교육감 선거법의 개정을 위해서도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후보자의 자질과 인격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입법촉구활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다.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만이 교육을 개혁하는 소중한 동력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대전의 모든 유권자는 ‘올바른 교육감 선출을 위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와 함께 새로운 교육을 열어가는 당당한 주인으로 자리매김 할 것을 다시금 호소한다.

## ■ 강동석 건교부장관 신행정수도 망발관련 규탄성명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신행정수도건설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될 시점에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의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포기과 다름없는 어제의 발언은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전국민의 여망을 외면한 처사로 분노를 금치않을 수 없다.

특히, 강 장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과 관련하여 청와대와 헌법기관을 제외한 전 행정기관의 이전방안과 2,165만명에 이르는 해당부지에 대한 토지매입도 불가능하다는 발언은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의사가 없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빠른 시일내에 후속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과도 배치되는 것은 물론, 오늘 이해찬 국무총리가 강조한 조속한 시일내에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과도 배치되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미 강장관은 지난 9일에도 신행정수도 위헌결정과 관계없이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은 유효하다는 발언으로 수도권 시민환경단체의 반발을 산 것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를 외면하는 몰지각을 드러낸 바 있다.

물론, 이런 발언내용에 대해 강장관 본인과 정부여당은 해명을 하고는 있지만, 정권의 진퇴를 걸고 추진하겠다는 참여정부가 신행정수도 추진을 포기하는 사태가 현실화 된다면, 그 어떠한 정책도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은 물론,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은 더 이상 기회가 없음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적 여망을 외면한 강동석 건교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을 수 없으며, 주무장관으로서 공개적 해명과 더불어 국정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도 강력한 정책인 만큼,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범 국민적인 힘과 지혜를 모으는 노력에 매진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4년 11월 26일

신행정수도건설 비상시국회의

## ■ 신행정수도 건설의 지속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문

지난 10월 21일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의 위헌결정에 우리 대전시민은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우리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결코 요청하거나 유치한 적이 없다. 우리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지지하였던 이유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이며, 지금도 이러한 믿음에는 결코 변함이 없다.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의 위헌결정 이후 국가균형발전의 첫걸음인 신행정수도 건설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우리 대전시민들은 단결하였고, 신행정수도 백지화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였다. ‘신행정수도 사수’는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염원하는 우리들의 흔들림 없는 대원칙이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의 지속적인 추진을 바라는 우리의 절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의 정당성을 외면하거나 미온적인 대응으로 충청인을 더욱 분노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신행정수도 건설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범국민적 단결과 협력을 위하여 대전의 학계, 종교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하는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범대전시민연대”를 결성하고자 한다. 우리는 대전시민의 의지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이 성사되는 그날까지 결사투쟁할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1.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최적의 대안

- 인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을 중단없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2. 정부는 우선 예정지 2,160만평을 매입하여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 3. 정치권은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정파간 이해타산과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 4. 언론은 신행정수도 건설의 취지를 국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요구를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당연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다면 충청인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2004. 12. 1.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범대전시민연대

####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주민소송제 개악을 중단하라!

정부는 지난 10월 18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주민소송제 입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르면 12월 2일중 주민소송제가 부실한 정부안보다도 개악되어 국회 행자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확인되었다.

그간 우리는 전국의 많은 시민단체와 함께 정부의 주민소송제 도입안과 관련한 지속적인 문제 지적을 통해 해보다 내실 있는 주민소송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거의 반영하지

않았으며, 유일하게 반영한 내용이 제소기간 제한 기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13조의4 제2항에서는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시한에 대해, “감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없다” 라는 조항을 5년으로 연장한 것이었다.

그런데 정부의 부실한 주민소송제에 대해 보다 진전되고 개선된 안을 만들어야 할 국회가 소위 심사과정에서 제소기간 제한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는 등 주민에 의한 지방정부의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1. 주민소송 제소 기간 제한을 5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는 주민소송제 개악을 중단하고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

주민은 감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무의 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때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정부안을 2년으로 축소한다면 가뜰이나 실효성이 약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다. 또한 위법한 재무회계상의 행위에 대해 2년이라는 짧은 시한을 두고 면죄부를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건전성을 심대하게 해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위법한 행위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야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보통다. 그런데 주민감사청구기간이나 주민소송의 제소기간을 불합리하게 단기간으로 하면, 주민감사청구나 주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자위원회는 즉각적인 법안심사의 중단과 시민단체를 포함 국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최소 5년 이상으로 제소 기간을 연장하라.

2. 주민소송을 어렵게 하는 감사청구전치주의를 폐지해야 한다.

우선,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은 주민소송제기 이전에 반드시 주민감사청구를 거치도록하는 주민감사청구전치주의를 취하면서,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수를 100명에서 300명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하려면, 100명에서 300명까지의 집단서명을 받아 주민감사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서명은 일반 서명과는 달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도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하는 까다로운 서명이다. 이런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시켜서 주민소송을 제기할 주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일본의 경우도 주민감사청구전치주의를 취하고는 있지만, 주민 1인이더라도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손쉽게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소송유형의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소송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어야 한다.

정부(안)에서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위하여 직접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소송 유형과 관련해서 4가지 유형을 인정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유형인 지방자치단체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소송유형에 관하여 간접소송형태만을 인정하고 있다. 즉,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 의원, 당해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명할 것



을 요구하는 소송”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 업자를 상대로 주민이 직접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만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민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에 손해를 끼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 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불 명령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손해배상금 지불명령에 불복하는 자가 있으면 다시 소송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2중으로 소송절차를 거치게 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분쟁이 최종적으로 해결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 또한 장기간 소요되는 소송기간 동안에 자칫 재산도피 등의 행위가 이루어져 지방자치단체가 이 입은 손해를 회복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자신들을 피고로 하여 제기되는 주민소송에 대해 응소하기 위해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될 것이 우려된다면, 현재 존재하는 법률구조제도들이 법률구조를 통해서 적절한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될 문제이다. 이런문제 때문에 2중의 소송절차를 거치게하는 것은 사회적 낭비이다.

근본적으로 보면, 이렇게 소송제기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소송유형을 제한하는 이유는 소송이 남발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민소송은 남발될 것을 걱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것을 걱정해야 하는 제도이다. 주민소송에서 주민은 제한된 정보만으로 소송을 수행해야하고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회복되는 이익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돌아가게 된다.

4. 주민소송의 활성화를 위해 소송을 통해 지자체에 이익을 가져온 내부고발자와 원고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주민들이 주민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송결과 불법, 부정하게 지출된 예산이 환수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초래한 경우 원고에 대한 보상금지급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미국의 연방부정방지 청구법에 의하면 소송제기자는 환수금액의 최소 15%에서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또 우리나라의 부패방지법에 의하면 부패방지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을 추천하고 1년 최고 2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부패방지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 40조).

따라서 환수된 예산이나 재산상의 이득분에서 지급되는 보상금제도는 부패방지법의 예를 참고로 하여 일정한 조건하에서 보상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범위내에서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상의 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하는 기업의 내부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내부고발자가 주민소송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를 회복할 경우에 보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을 가져온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주민소송제도는 향후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제도이다. 아무리 분권을 하고 지역혁신을 하려고 해도, 주민들의 참여가 봉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열매가 제대로 맺는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주민소송제에 대한 국회심의과정에서 이상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개악된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라며, 지금부터라도 시민사회의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여 주민소송제도가 주민참여활성화와 지방자치개혁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2004년 12월 2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참여연대, 광주참여자치21/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시민모임/여수시민협/울산참여연대/의정부참여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전국17개단체)

## ■ 정치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발표에 즈음한 기자회견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의 대책을 마련하라!

어제 한나라당 수도이전문제대책위원회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발표함으로써 주요 정당들의 국가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대책이 발표된 것에 즈음하여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1. 정부 여당측대안에 대하여

정부는 국회특위 보고를 통해 행정특별시, 행정중심도시, 교육과학도시의 3개 대안을 밝힌바 있다.

우리는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하는 후속대책의 성격상 논의의 폭을 넓혀야하는 정부측의 고충을 이해하나 3안 교육과학도시는 정부 스스로가 정한 5원칙 중 수도권과밀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 선도 구심력이 없으며 자족성을 갖출 수 없다는 점에서 끼워 넣기식 대안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행정특별시와 행정중심도시의 대안도 국가의 중추적 관리 기능의 연기공주지역으로의 이전이라는 신행정수도 지속 추진의 원칙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의 중추적 관리기능의 연기공주지역 이전의 원칙을 포함한 신행정수도 지속 추진의지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

### 2. 한나라당 신행정수도이전 문제특위 대안에 대하여

한나라당의 시안은 첨단교육연구도시를 기본 성격으로 하고 중앙부처의 이전은 국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연기·공주 복합다기능 도시건설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시안은 모든 도시가 복합적 다기능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대안은 신도시 하나를 연기공주에 건설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균형발전청사진이라면서 수도권공장총량제의 완화 및 폐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별도 특별법 입법을 명분으로 하는 2010으로의 순연을 밝히고 있다. 이는 정부의 행정특별시 및 행정중심도시 대안조차 헌법재판소 결정 훼손 및 행정비효율 초래로 반대함으로써 국가의 중추적 관리기능의 지방이전을 반대하고 수도권 규제는 완화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포기하는 것이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기타 청사진의 주요 내용도 대덕R&D특구,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을 비롯한 전국 권역별 개발 계획도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단순 조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발전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행정수도이전문제 특별위원회 차원의 시안으로 받아들이며 당론 확정 과정에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선도할 구심력을 갖춘 국가의 중추적 관리기능의 연기공주지역으로의 이전을 위한 대안을 만들기를 촉구한다.

### 3. 민주노동당 신행정수도특위의 대안에 대하여

민주노동당은 대전광역시내 둔산엑스포과학공원을 묶어 대전둔산행정특별시로 지정하여 국무총리산하 기관 및 행자부등 12개 정부 일부 부처를 이전하고, 공주연기지역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는 것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의 골자로 발표했다. 아울러, 획기적인 사회복지의 증진을 통한 낙후지역 활성화 및 국공립대네트워크화를 통한 대학서열화의 파괴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할 것을 밝힌바 있다.

우리는 민주노동당의 대안이 사실상 민주적 중앙집권의 강화를 통해 낙후지역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통한 균형발전의 추진의지를 표방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획기적 사회복지의 증진과 대학서열화의 파괴 대안은 의지와 열정은 좋으나 천문학적 재원조달 계획의 미비로 현실성이 없으며, 대전시내 특별시의 설치에 따른 지역난개발 조장과 연기공주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신행정수도의 건설이라는 일괄추진 방식의 지방살리기의 절박성을 민주노동당이 숙고하여 연기공주지역에 국가의 중추적 관리기능의 집단적 지방이전을 포함한 새로운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4. 우리는 신행정수도 위한 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의 조속한 수립과 2005년 신행정수도 건설 후보지 토지수용을 전제로 국가의 중추적 관리기능의 연기공주이전을 핵심으로하는 후속대책의 마련을 정치권에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 국가의 중추적 관리기능의 연기공주이전 없는 그 어떠한 균형발전 정책도 실효성이 없다는 점, 균형발전 정책의 강력한 추진 없는 지방분권은 지역격차를 심화 시킬 것이라는 점을 정치권은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5. 한나라당의 발표는 의외로 심각한 반지방·반균형발전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중추적 관리기능의 지방이전의 핵심 내용인 중앙부처의 이동을 현재결정 훼손 및 행정비효율로 반대하고 있으면서도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완화 또는 폐지할 것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사실상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목표 년도를 순연시킴으로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좌절시키려함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의 조속한 마무리와 함께 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하여 참여정부가 임기 중에 완료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별도의 특별법제정을 통해 2010으로 순연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반균형 발전적 주장이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6. 우리는 정치권의 다양한 대안 발표를 계기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의 국민적 합의를 위한 토론이 활발해지길 기대하며, 정치권도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최선의 대안을 만들기 위한 대화와 타협을 위해 노력하여 조속히 후속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은 충청권 대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결단임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신행

정수도 후속대책의 지체는 곧바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자체의 지연 좌절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우려한다.

7. 아울러 우리는 수도권의 질적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적 구심역할을 수행할 국가의 중추적 관리기능의 연기공주로의 이전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이전 지속추진의 원칙의 관철과 조속한 후속 대책의 마련, 2005년내 후보지 토지 전면 수용,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4천만 국민과 더불어 투쟁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12월 29일

지방분권국민운동 총청권협의회

지방분권국민운동 대전본부/충남본부/충북본부

## □ 대전지역 시민운동에 대한 시민의식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 1. 연구 배경 및 목적

사회의 빠른 양적이며 질적인 성장과 더불어 꾸준한 민주화 운동은 시민들의 사회참여와 의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점점 시민단체들은 시민들과 함께 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하였으며 풀뿌리운동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시민단체의 인지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그것이 꼭 시민단체가 그만큼 꾸준히 성장한 결과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운동을 바라보는 시민의 의식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2005년 정기총회를 준비하면서 시민운동에 대한 대전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식을 조사하고자 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대전지역 시민들의 시민단체에 대한 인지도와 시민들이 시민단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의식 성향을 알아보고 그리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인지여부를 더불어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전지역 시민들의 시민운동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고 올바른 운동방향과 사업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2. 연구 대상

시민단체를 위한 시민의 의식조사를 위해 대전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 3. 연구 방법

처음 연구방법으로는 설문지작성법과 인터넷 메일발송을 각 50%의 비율씩 계획하였다. 그러나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계획하면서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인터넷 메일발송에 의지하게 되었다.

설문조사 실시 기간은 2004년 12월 27일부터 2005년 1월 15일까지 진행되었다. 총 131명의 응답자 중 29명은 설문지로 작성하였고 102명은 인터넷 메일답변으로 이뤄졌다. 설문지작성법은 인맥을 활용한 고등학생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그 외는 무작위 추출된 일반 시민이다. 인터넷 메일

발송으로는 전문적으로 하는 설문과 메일발송 사이트를 이용하였으며 메일주소 수집 작업은 기존 인맥이면서 참여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으로 이뤄졌다. 그리고 대학교, 공공기관과 모 인터넷 동호회에서 무작위로 메일을 수집하여 발송을 하였다. 여기서 설문작업 대상자들이 무작위로 추출되었지만 대전지역에 거주하거나 대전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 4. 연구의 제한점

첫째, 참여비율이 저조하다. 기존에 계획으로는 200부 이상을 하고자 하였으나 131부로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통계수치로 대전지역 시민의 시민단체에 대한 의식을 분석하여 평할 수 있지만 이것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

둘째,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해 통계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수 있다. 직접적인 대면을 통한 설문조사가 조사자의 시선의식으로 인해 100%의 정확성을 가질 수 없겠지만 가장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 그에 비해서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는 온라인상의 대답으로 인해서 익명성이 보장되어 무성의하거나 거짓답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만은 없다.

#### 5. 설문내용 분석

##### 1) 일반적 특성

<표1> 일반적 특성

구 분		빈 도	퍼 센 트	누적퍼센트
성 별	남성	67	51.1	51.1
	여성	64	48.9	100.0
	합계	131	100.0	
연 령	30대	40	30.5	30.5
	20대	39	29.8	60.3
	20대 이하	25	19.1	79.4
	40대	17	13.0	92.4
	50세 이상	10	7.6	100.0
	합계	131	100.0	
직 업	학생	43	32.8	32.8
	기타	27	20.6	53.4
	전문직	26	19.8	73.3
	경영, 사무직	22	16.8	90.1
	자영업, 서비스분야	13	9.9	100.0
	합계	131	100.0	

131명이 설문에 참여하였고 이 중 남성이 51.1%(67), 여성이 48.9%(64)로 거의 비슷한 비율로 이뤄졌다.

연령대를 보면, 30대가 30.5%(40)로 가장 큰 비율을 보이고 있고 그 뒤를 이어 20대가 29.8%(39)로 나타나고 있다. 20대 이하의 연령대는 90%를 설문지작성법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을 가만해서 제외하더라도 한창 인터넷 매체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30대 이하가 40대 이상의 연령에 비해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다.

직업을 묻는 질문에서 학생이 32.8%(43)로 가장 높으며 기타, 전문직, 경영사무직은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2) 시민단체 인지도

<표 2> 1년에 시민단체 프로그램이나 행사 참여 횟수

항목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없음	71	54.2	54.2
2회 미만	33	25.2	79.4
5회 이상	15	11.5	90.8
2회 이상~5회 미만	12	9.2	100.0
합계	131	100.0	

1년에 시민단체 프로그램이나 행사 참여횟수를 묻는 질문에서는 없다는 응답이 54.2%(71)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회 이상의 참여한 적이 있는 응답자는 20.7%(27)로 저조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시민단체의 활동에 직접적인 참여를 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5회 이상 참여자의 응답률은 9.2%(12)로 매우 저조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3> 가입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수

항목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없음	92	70.2	70.2
1개	18	13.7	84.0
2~3개	15	11.5	95.4
4개 이상	6	4.6	100.0
합계	131	100.0	

위 시민단체의 활동에 직접적인 참여율이 저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응답자들이 시민단체의 가입률이 1개소 이상에서 4개 이상의 모든 비율을 합하여도 29.8%(39)로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다.

<표 4> 시민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

항목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가입할만한 여유가 되지 못 한다	35	36.1	36.1
시민단체를 모른다	30	30.9	67.0
시민단체를 알지만 가입할 생각이 없다	18	18.6	85.6
가입할 의사가 있지만 가입할 단체를 정하지 못 했다	14	14.4	100.0
합계	97	100.0	
결측	34		

시민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92명을 대상으로 묻는 질문에서 97명이 응답하였다. 시민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 중 ‘가입할만한 여유가 되지 못 한다’가 36.1%(35)로 가장 큰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시민들이 시민단체의 활동이나 참여에 있어서 경제적이거나 정신적인 여유가 될 경우에만이 가능하다는 의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민단체를 모른다’가 30.9%(30)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시민단체에 대한 의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표 5> 시민단체를 주로 접하는 수단

항목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대중매체(신문, TV, 라디오, 인터넷 등)	74	71.2	71.2
집회나 캠페인	11	10.6	81.7
기타	9	8.7	90.4
주변의 소개	7	6.7	97.1
월간지, 책자	3	2.9	100.0
합계	104	100.0	
결측	27		

시민단체를 주로 접하는 수단으로는 71.2%(74)로 대중매체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1년에 대전지역에서 집회나 캠페인이 2003년에 319회, 2004년 158회(충남지방경찰청, 집회·시위현황)로 한달에 약 13회 이상의 집회나 캠페인이 행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비율이 더 많다는 것은 앞으로 시민단체가 대중매체를 활용한 운동의 중요성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것과 더불어 시민의 직접적인 행사 참여를 이끌어 내기에는 역부족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 시민단체에 대한 의식성향



<표 6> 시민단체의 주요기능

항목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시민요구의 이해 및 대변자 기능	72	55.8	55.8
정책평가 및 대안제시 기능	27	20.9	76.7
권력(정치/행정) 감시 기능	21	16.3	93.0
민관협력(행정협조) 기능	5	3.9	96.9
기타	4	3.1	100.0
합계	129	100.0	
결측	2		

시민단체의 주요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의 질문에 있어서는 시민요구의 이해 및 대변자 기능이 55.8%(72)로 가장 높으며 민관협력이 3.1%(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아직까지 시민단체가 시민의 편에서 함께 하고 있다는 인식이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 7> 시민단체 정책방향

항목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중도적	55	42.3	42.3
진보적	39	30.0	72.3
보수적	28	21.5	93.8
매우 보수적	7	5.4	99.2
매우 진보적	1	0.8	100.0
합계	130	100.0	
결측	1		

시민단체의 현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중도적이라는 응답이 42.3%(55), 그 다음으로 진보적은 30.0%(39)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시민단체에 대해서 극단적인 평을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기존의 시민단체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8>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 바라는 지자체와의 관계 교차표

			바라는 지자체와의 관계					전체
			협조적 관계	비판적 협력	비판적 감시	대립관계	공격적 대립관계	
시민 단체 와 지자체 관계	매우 호의적	빈도 전체%	0 .0%	1 .8%	0 .0%	0 .0%	0 .0%	1 .8%
	호의적	빈도 전체%	2 1.6%	8 6.2%	0 .0%	0 .0%	0 .0%	10 7.8%
	보통	빈도 전체%	30 23.3%	41 31.8%	10 7.8%	3 2.3%	0 .0%	84 65.1%
	비 호의적	빈도 전체%	11 8.5%	14 10.9%	3 2.3%	1 .8%	0 .0%	29 22.5%
	매우 비 호의적	빈도 전체%	1 .8%	2 1.6%	0 .0%	0 .0%	2 1.6%	5 3.9%
전체		빈도 전체%	44 34.1%	66 51.2%	13 10.1%	4 3.1%	2 1.6%	129 100.0%

설문내용의 9 · 10번의 문항을 교차분석한 표이다. 현재 시민단체와 지자체와의 관계에 대한 응답에서 보통이 65.1%(84)로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으로 비호의적이다가 22.5%(29)이다.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서는 비판적 협력이 51.2%(66)로 가장 높고 협조적 관계가 34.1%(44)로 다음으로 나타났다.

교차분석을 통해 가장 두드러진 비율은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보통이라고 한 응답자들이 비판적협력 관계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협조적 관계의 비율이 높았다. 대체적으로 비호의적이거나 대립관계보다는 협력적인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표 9> 2004년 두드러진 활동 분야 - 1

항목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신행정수도지속추진사업	67	51.9	51.9
탄핵반대운동	37	28.7	80.6
4.15총선연대	10	7.8	88.4
이라크파병반대운동	9	7.0	95.3
국가보안법 철폐운동	6	4.7	100.0
합계	129	100.0	
결측	2		

2004년도의 두드러진 활동 분야의 항목은 우리 단체가 활동했거나 연대하는 등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작성되었고 <표 9>는 외부적인 활동을, <표 10>은 내부적인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표를 보면, 신행정수도지속추진사업이 51.9%(67)로 예상했던 대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탄핵반대운동과 4.15총선연대 모두 대전지역에서 대대적으로 집회가 이뤄졌지만 신행정수도지속추진사업이 가장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하겠다.

<표 10> 2004년 두드러진 활동 분야 - 2

항목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기타	44	36.7	36.7
도박장 반대사업	37	30.8	67.5
경전철 반대 및 BRT 도입추진	27	22.5	90.0
폭설피해 소송제기	12	10.0	100.0
합계	120	100.0	
결측	11		

내부적인 활동의 두드러진 분야는 기타가 36.7%(44)로, 그 다음은 도박장 반대 사업이 30.8%(37)로 나타났다. 기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기타에 응답한 것은 답변을 회피하거나 해당사항이 없을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도박장 반대사업이 가장 두드러진 활동 분야로 꼽을 수 있겠다.

<표 11> 정부재정 지원관련 인식

항목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해 정부재정지원금은 필요하다	46	35.4	35.4
비판과 감시를 위해서는 절대로 받지 말아야 한다	36	27.7	63.1
정부재정지원금은 비판과 감시와는 무관하다	20	15.4	78.5
정부재정지원금은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해 더욱더 확대/지원 되어야 한다	18	13.8	92.3
잘 모르겠다	10	7.7	100.0
합계	130	100.0	
결측	1		

정부재정 지원과 관련한 인식조사에서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해 정부재정지원금은 필요하다'가 35.4%(46)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에 반해 그 다음으로 높게 나온 '비판과 감시를 위해서는 절대로 받지 말아야 한다'가 27.7%(36)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정부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시민들의 양분화된 의식을 알 수 있으며 차후 시민단체가 정부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시민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표 12> 조선동아일보불매운동에 대한 인식

항목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찬성한다	84	64.6	64.6
반대한다	24	18.5	83.1
잘 모르겠다	22	16.9	100.0
합계	130	100.0	
결측	1		

조선동아일보불매운동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는 질문에서는 '찬성한다'가 64.6%(84)로 반 이상의 응답률을 보였고 '반대한다'와 '잘 모르겠다'의 응답률이 비슷하게 나왔다. '반대한다'와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비슷하게 나왔다는 것은 아직도 조선동아일보불매운동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제공이 되지 못 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전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표 13> 개혁되어야 할 분야

항목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시민의식	54	41.5	41.5
정치·행정분야	37	28.5	70.0
경제분야	31	23.8	93.8
사회분야	6	4.6	98.5
기타	2	1.5	100.0
합계	130	100.0	
결측	1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혁되어야 할 분야에 대한 조사에서는 ‘시민의식’이 41.5%(54)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위의 표에서 나왔듯이 시민의 참여율과 가입률의 저조에 대해서 시민단체들만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또한 올바른 시민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의 개혁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4)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인지 여부

<표 14>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아는지 여부

항목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알고 있다	60	46.2	46.2
대충 들어봤다	41	31.5	77.7
모르고 있다	29	22.3	100.0
합계	130	100.0	
결측	1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를 아는지의 여부에서 ‘알고 있다’가 46.2%(60)로 반을 못 미치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알고 있다’와 ‘대충 들어봤다’의 비율을 합하면 77.7%로 어느 정도 시민들에게 알려졌다고 볼 수 있겠다.

<표 17>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지역사회 기여도

항목	빈도	평점(100점 만점)
0	2	61.5
50점 이하	29	
60점 이상	56	
결측	44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85명이 응답하였다. 이 중 50점 이하를 준 응답자는 31명이고 60점 이상은 56명이다. 그러나 평점이 61.5로 나온 것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낮은 점수를 준 것으로 보인다.

## 6. 주요 조사 결론

### 1) 일반적 특성

131명이 설문에 참여하였고 이 중 남성이 51.1%(67), 여성이 48.9%(64)로 거의 비슷한 비율로 이뤄졌다.

연령대를 보면, 30대가 30.5%(40)로 가장 큰 비율을 보이고 있고 그 뒤를 이어 20대가 29.8%(39)

로 나타나고 있다. 20대 이하의 연령대는 90%를 설문지작성법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을 가만해서 제외하더라도 한창 인터넷 매체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30대 이하가 40대 이상의 연령에 비해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다.

직업을 묻는 질문에서 학생이 32.8%(43)로 가장 높으며 기타, 전문직, 경영사무직은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2) 시민단체 인지도

1년에 시민단체 프로그램이나 행사 참여횟수를 묻는 질문에서는 없다는 응답이 54.2%(71)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회 이상의 참여한 적이 있는 응답자는 20.7%(27)로 저조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시민단체의 활동에 직접적인 참여를 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5회 이상 참여자의 응답률은 9.2%(12)로 매우 저조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의 활동에 직접적인 참여율이 저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응답자들이 시민단체의 가입률이 1개소 이상에서 4개 이상의 모든 비율을 합하여도 29.8%(39)로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시민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92명을 대상으로 묻는 질문에서 97명이 응답하였다. 시민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 중 '가입할만한 여유가 되지 못 한다'가 36.1%(35)로 가장 큰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시민들이 시민단체의 활동이나 참여에 있어서 경제적이거나 정신적인 여유가 될 경우에만이 가능하다는 의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민단체를 모른다'가 30.9%(30)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시민단체에 대한 의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시민단체를 주로 접하는 수단으로는 71.2%(74)로 대중매체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1년에 대전지역에서 집회나 캠페인이 2003년에 319회, 2004년 158회(충남지방경찰청, 집회·시위현황)로 한달에 약 13회 이상의 집회나 캠페인이 행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비율이 더 많다는 것은 앞으로 시민단체가 대중매체를 활용한 운동의 중요성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것과 더불어 시민의 직접적인 행사 참여를 이끌어 내기에는 역부족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 시민단체에 대한 의식성향

시민단체의 주요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있어서는 시민요구의 이해 및 대변자 기능이 55.8%(72)로 가장 높으며 민관협력이 3.1%(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아직까지 시민단체가 시민의 편에서 함께 하고 있다는 인식이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시민단체의 현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중도적이라는 응답이 42.3%(55), 그 다음으로 진보적은 30.0%(39)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시민단체에 대해서 극단적인 평을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기존의 시민단체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시민단체와 지자체와의 관계에 대한 응답에서 보통이 65.1%(84)로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으로 비호의적이다가 22.5%(29)이다.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

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서는 비판적 협력이 51.2%(66)로 가장 높고 협조적 관계가 34.1%(44)로 다음으로 나타났다.

설문문항의 9번과 10번 교차분석을 통해 가장 두드러진 비율은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보통이라고 한 응답자들이 비판적 협력 관계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협조적 관계의 비율이 높았다. 대체적으로 비호의적이거나 대립관계보다는 협력적인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2004년도의 두드러진 활동 분야의 항목은 우리 단체가 활동했거나 연대하는 등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작성되었고 <표 9>는 외부적인 활동을, <표 10>은 내부적인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표를 보면, 신행정수도지속추진사업이 51.9%(67)로 예상했던 대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탄핵반대운동과 4.15총선연대 모두 대전지역에서 대대적으로 집회가 이뤄졌지만 신행정수도지속추진사업이 가장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하겠다.

내부적인 활동의 두드러진 분야는 기타가 36.7%(44)로, 그 다음은 도박장 반대 사업이 30.8%(37)로 나타났다. 기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기타에 응답한 것은 답변을 회피하거나 해당사항이 없을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도박장 반대사업이 가장 두드러진 활동 분야로 꼽을 수 있겠다.

정부재정 지원과 관련한 인식조사에서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해 정부재정지원금은 필요하다'가 35.4%(46)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에 반해 그 다음으로 높게 나온 '비판과 감시를 위해서는 절대로 받지 말아야 한다'가 27.7%(36)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정부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시민들의 양분화된 의식을 알 수 있으며 차후 시민단체가 정부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시민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선동아일보불매운동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는 질문에서는 '찬성한다'가 64.6%(84)로 반 이상의 응답률을 보였고 '반대한다'와 '잘 모르겠다'의 응답률이 비슷하게 나왔다. '반대한다'와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비슷하게 나왔다는 것은 아직도 조선동아일보불매운동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제공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전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혁되어야 할 분야에 대한 조사에서는 '시민의식'이 41.5%(54)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위의 표에서 나왔듯이 시민의 참여율과 가입률의 저조에 대해서 시민단체들만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또한 올바른 시민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의 개혁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4)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인지여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를 아는지의 여부에서 '알고 있다'가 46.2%(60)로 반을 못 미치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알고 있다'와 '대충 들어봤다'의 비율을 합하면 77.7%로 어느 정도 시민들에

게 알려졌다고 볼 수 있겠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85명이 응답하였다. 이 중 50점 이하를 준 응답자는 31명이고 60점 이상은 56명이다. 그러나 평점이 61.5로 나온 것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낮은 점수를 준 것으로 보인다.

## 7. 제언

첫째, 시민들이 무엇을 통해 바라보는지, 무엇을 통해 응하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전체적인 사회의 변화와 발전은 시민단체가 더 이상 급진적 사회부류로만이 아닌 대중적이고 시민과 함께 하는 조직으로서의 변화를 꾀하였다. 그러나 시민들의 저조한 참여율과 가입률로 보아 여전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전히 시민단체들은 집회나 시위를 통해 주로 사회정의의를 알리는데 반하여 시민들은 압도적으로 대중매체를 통해 시민단체를 접하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에 대하여 시민들이 왜 대중매체만을 통해서 시민단체를 접하는지, 어떻게 하면 시민들과 함께 거리에서 사회정의를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시민의식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사회참여와 시민단체 활동은 어떠한 여유가 있어야만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시민단체를 모르거나 가입할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시민단체 내부에서도 시민의식 변화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들 또한 개혁되어야 할 분야로 시민의식을 꼽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민단체에서 시민들이 참여하여 학습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며 시민단체에서 어떠한 활동을 할 때 그에 대한 충분한 의견과 정보를 전달하여 시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어야 하겠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바람에서 마지막 조사문항으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또는 대전 지역 시민단체에 바라는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을 적도록 하였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기에 이를 첨부하고자 한다.

시민들의 의견을 알릴 수 있는 단체가 많이 필요하다.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알리십시오.  
좀더 시민생활에 들어가 친해지는 이웃이 되어주십시오.  
좀더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에 국한된게 아니라 나라를 생각하는 시민단체가 되길  
먼저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여론화 형성이 중요하다.  
시민 없는 시민단체=기계적인 중립성 극복/당파성 강화!  
신행정수도이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세요!!  
앞으로도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열심히 일해 주세요.  
적극적인 활동으로 과도한 표현은 자제하며 시민운동 활성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부터의 개선 요구됨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세요.  
눈 : 100개, 코 : 1000개, 귀 : 100000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투쟁꾼들이라는 오명은 듣지 말자  
정부재정지원에 눈멀지 말고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할 것  
초심을 앞으로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 대한 견제는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비판적 감시  
일반 시민들에게 더욱 친근한 단체가 되길 바랍니다.  
고생하는 만큼 보람도 얻는 한 해가 되길..  
비판적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들을 대변했으면 합니다.  
확실히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되길..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정한 시민단체인지 스스로 생각해보심이..  
원칙대로 활동하고 비판, 협력 등도 해야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과 지역의 대변자 역할  
지역이기주의를 탈피, 시민의식 개혁운동 추진 등



## □ 대전지역 시민단체 상근활동가 복지현황 분석보고서

# I . 서 론

## 1. 연구의 목적

시민단체는 정부의 활동에 한계를 극복하고 이들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시민들의 힘으로 시민의 권리를 지켜나가고자 생긴 제 3의 영역 중의 하나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시민단체 활동이 급속히 팽창하였으며 우리나라 사회 전 분야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현재 대전지역의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일과 생활 등을 탐색적 수준에서 살펴보고자한다. 이들 실무자들은 지역의 운동을 주도하고 있고 향후 지역운동을 이끌어갈 자원들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 2. 연구의 대상

본 연구의 목적이 대전지역의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복지현황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기초자료 수집에 있으므로 연구의 대상은 대전광역시내 최소한의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여성환경포럼, 경실련, 생명의숲, YMCA, 양심수후원회, 남북공동선언 대전충남실천연대, YWCA, 여민회, 주부교실, 일어서는 사람들, 전국노점상총청지역연합회, 민연련, 유성민주, 민주노총, 외국인이주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대전충남연합)들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 3.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시민단체들의 실무자들이 느끼는 단체의 현황에 대한 조사이다. 조사대상자의 개인사항과 경제적인 면, 사회적인 면(여가생활, 사회적, 직장 내 관계, 근무환경), 단체현황을 내용으로 이루어 졌다. 본 연구를 통하여 현 시민단체 실무자들의 복지에 대한 만족도를 실무자들의 복지관련 기초 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 한다.

## 4.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시민단체들의 실무자들의 복지현황 파악으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로 진행이 되어진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기법은 현 사회복지조사방법론에서 배우는 설문지를

활용하는 기법과 대표적인 통계프로그램인 SPSS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산출된 결과를 토대로 대전시민단체들의 현 복지현황을 파악하고 시민단체들의 복지에 관한 발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

## II. 본 론

### 1. ‘대전광역시 시민단체 활동가의 복지현황조사’ 도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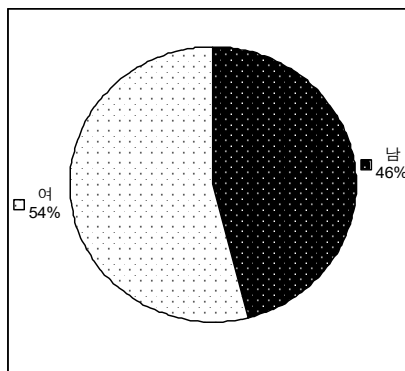
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1) 경제적	현 연봉	(2) 직장내 관계	동료과의 관계
	현 연봉의 만족도		상사의 의사결정 유형
	희망 연봉		단체 이용자와의 관계
	연봉포함 수당		직원간 업무외 관계
	연봉인상 기준		직장내관계의 요인
(3) 근무환경	출·퇴근 소요시간	(4) 여가생활	휴가선택의 자율성
	출·퇴근 교통수단		신청가능 휴가의 종류
	담당 업무량 만족도		한달내 문화생활빈도수
	업무처리의 편리성		주내 근무외 여가시간
	혜택 받고있는 4대보험		업무외 동호회 활동
	평균 하루 업무시간		
	주 중 근무 일수		
(5) 단체 현황	업무능력향상교육 유무		
	대외적 활동비 지급여부		
	후원(회원)확보 부담감		
	단체내 편의시설 만족도		
	단체의 활동가복지 점수		

<표 1-55> ‘대전광역시 시민단체 활동가의 복지현황조사’ 도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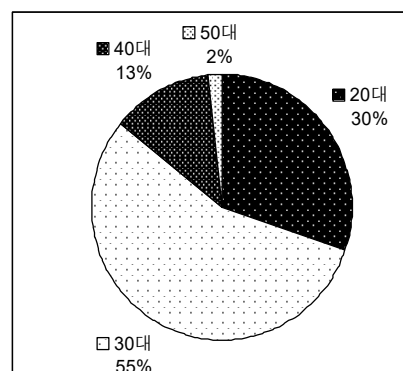
이는 사회조사의 양적 연구 도구중 하나인 설문지이며, 총 대전시민단체 활동가의 복지관련 내용 중, 경제적, 사회적(직장내, 근무, 여가등), 단체만족도 총 5가지 영역에 대해 질문하였다. 질문영역은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그 근거를 확실히 하려 하였으나, 조사 시간이 많지 않아, 대전참여자치연대의 활동가와의 인터뷰 및 관련 자료를 통해, 영역을 정하였다. 이 조사의 목적이 시민단체 활동가의 복지현황을 알아보는 것이므로,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질문하게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그 결과 내용 또한 현 상황을 파악하는 기술적인 면에 중점을 주었다. 조사도구의 문제는 총 36문제, A4 4장의 설문지로, 위의 내용에 조사대상의 기본적 사항도 포함하여 질문 하였고, 응답에 따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기입할 수 있도록 한 문제당 하나의 딸림 문항을 만들었다. 조사도구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설문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 2. ‘대전광역시 시민단체 활동가의 복지현황조사’ 결과 내용

### 1) 조사대상의 일반적인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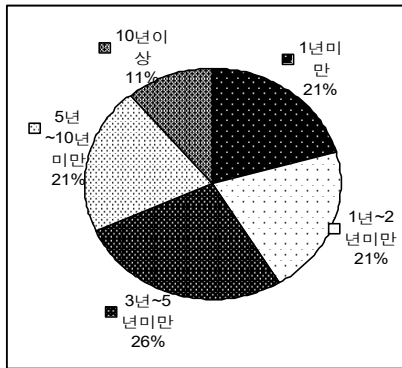


〈그림111-1〉 조사대상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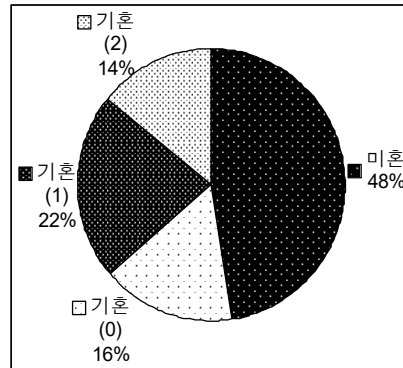


〈그림1-2〉 조사대상 연령대

이번 ‘대전광역시 시민단체 활동가의 복지현황조사’의 대상은 대전광역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 63명 이었다. 주로 대전시민단체의 연대를 맺은 단체의 활동가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각 단체에 찾아가, 설문지를 직접 주고 그 자리에서 수거하는 형식으로 진행 되었는데, 시민단체의 특성상, 외근 및 업무의 과중으로 바쁜 활동가들이 많아 전체 활동가들을 대상이 아닌 적어도 단체 활동가의 50%이상의 활동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인 활동가는 남성이 29명인 46%, 여성이 34명인 54%로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또한 연령대는 30대가 35명인 전체의 55%를 차지하여, 절반이 넘었고, 그 이후로 20대가 19명인 30%, 40대가 8명인 18%, 50대 이상은 1명인 2%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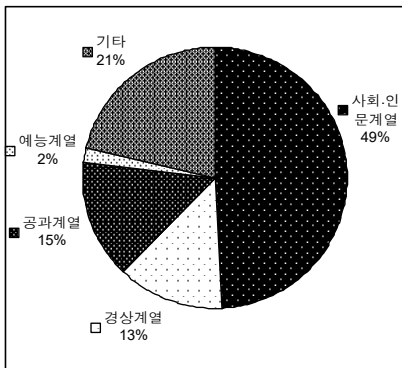


〈그림1-3〉 조사대상 근무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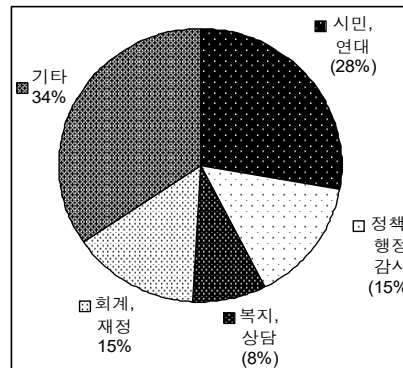


〈그림1-114〉 조사대상 기혼여부

조사 대상의 근무년수는 이직률이 높은 현실을 고려하여, 현재까지의 모든 근무경력을 합산한 값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1년 미만이 13명인 21%, 1년~2년 미만이 13명인 21%, 3년~5년미만이 17명인 21%, 5년~10년미만이 13명인 21%, 10년이상인 7명인 11%로 전반적으로 고른 양상을 보였다. 또한 조사대상의 기혼여부에 따라, 그에 필요한 경제·사회적 복지 조건이 달라지므로, 기혼여부 및 자녀수에 대해 질문하였다. 미혼은 전체의 절반을 넘는 30명으로 48%, 기혼이며, 자녀가 없는 경우는 10명으로 16%, 기혼이며, 자녀가 1명인 경우는 14명으로 22% 기혼이며, 자녀가 2명인 경우는 9명으로 14%였다.



〈그림1-115〉 조사대상 출신전공



〈그림1-116〉 조사대상 담당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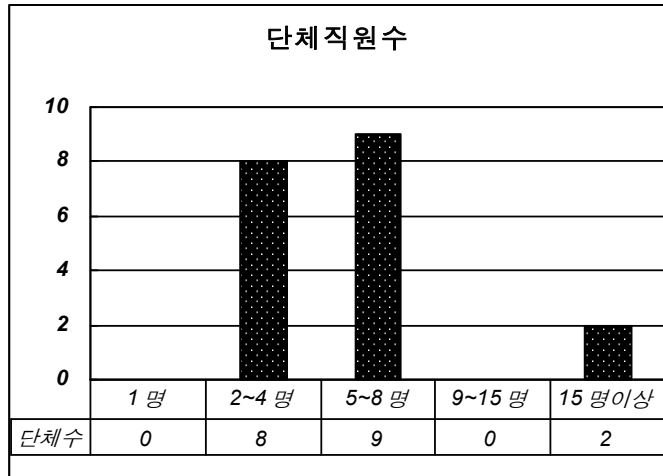
조사대상의 출신전공에 대한 질문은 활동가의 많은 수가 예전 학생운동경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굳이 졸업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인정하기로 하였다. 사회·인문계열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30명인 49%였고, 경상계열은 8명인 13%. 공과계열은 9명인 15%, 예능계열은 1명인 2%였다. 그리고 기타 전공이 13명인 21%였다. 기타전공에는 농과대, 자연대(3명), 보건계열, 신학, 체육, 애견학등의 내용이 나왔다. 그리고 조사대상의 담당분야는 단체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나,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하였다. 시민사회·연대분야가 17명인 28%, 정책·행정감시분야가 9명인 15%, 사회복지·상담분야가 5명인 8%, 회계·재정분야가 9명인 15%였다. 그리고 기타분야가 21명인 34%였다. 기타분야에는 종합분야(2명), 도시계획시민운동, 연구, 회원사업·교육, 건물관리, 회원관리·홍보, 정보운동, 환경

운동, 문화연대, 대전둘레산길잇기, 새벽문화탐사, 통일운동(2명), 조직관리, 노동관련 등의 분야가 있었다.

## 2) 조사대상의 단체별 사항

단체내 직원수	
1명	0 0.0%
2~4명	8 42.1%
5~8명	9 47.4%
9~15명	0 0.0%
15명이상	2 10.5%
합 계	19 100.0%

<표1-2> 조사대상 단체직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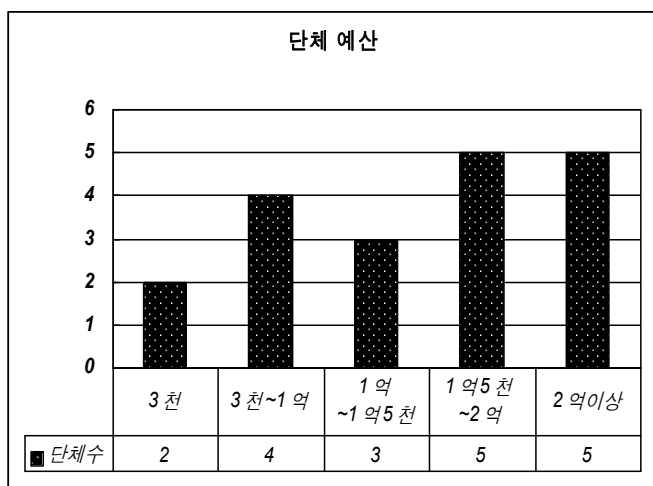


<그림1-7> 조사대상 단체직원수

다음으로 조사 대상의 단체별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를 비롯한 대전시민연대에 가입된 단체를 위주로, 총 19개 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단체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는 이 연구의 목적에 따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단체에서 단체 내 직원 수가 5~8명인 단체가 9곳인 47.4%로 가장 많았으며, 2~4명인 단체가 그다음인 8곳으로 42.1%를 차지하였다. 또한 15명이상인 단체가 2곳이었으며, 1명, 9~15명인 단체는 없었다.

단체 연간예산액	
3천만원	2 10.5%
3천만원~1억원	4 21.1%
1억~1억5천만원	3 15.8%
1억5천만원~2억	5 26.3%
2억이상	5 26.3%
합 계	19 100.0%

<표1-3> 조사대상 단체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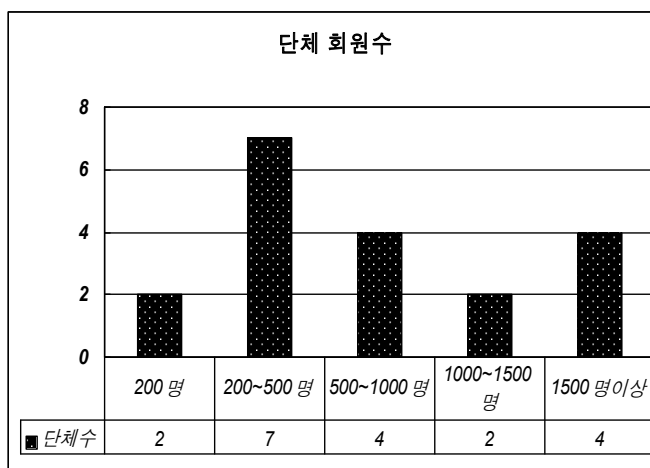
<그림1-8> 조사대상 단체예산

다음으로 조사 대상의 단체별 예산에 대해 알아보았다. 실습단체의 사무처 국장님들과 간

사님들의 도움을 받아 하한선과 상한선을 정하여 설문을 작성하였는데, 1억5천만원~2억인 단체가 5곳인 26.3%, 2억이상인 단체가 26.3%이었다. 또한 3천만원~1억원의 단체가 4곳으로 21.1%였으며, 1억~1억5천만원의 단체가 3곳으로 15.8%였으며, 3천만원인 단체가 2곳으로 10.5%였다.

단체 회원 수	
200명	2 10.5%
200명 ~ 500명	7 36.8%
500명 ~ 1000명	4 21.1%
1000명 ~ 1500명	2 10.5%
1500명 이상	4 21.1%
합 계	19 100.0%

<표1-4> 조사대상 단체회원



<그림 1-9> 조사대상 단체회원

다음으로 조사 대상의 단체 회원수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질문 또한 실습단체의 사무처 국장님들과 간사님들의 도움을 받아 하한선과 상한선을 정하여 설문을 작성하였다. 단체 회원수는 200명~500명인 단체가 7곳으로 36.8%로 가장 많았으며, 500명~1000명인 단체는 4곳으로 21.1%, 1500명이상인 단체는 4곳으로 21.1%, 1000명~1500명인 단체와 200명인 단체는 2명으로 10.5%의 비율을 보였다.

## 2) '대전광역시 시민단체 활동가의 복지현황조사' 결과

### (1) 시민단체 활동가의 경제적 분야

대한민국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경제적인 사항이다. 통상적으로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는 돈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시민단체라도 활동가의 복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분야에서는 현연봉의 내용과 만족, 희망연봉과 연봉내의 수당 및 연봉인상의 기준에 대해 총 5개의 질문을 하였다. 그리고 각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교차분석(카이자승)을 이용하여, 성별·연령에 따른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다.

#### ① 활동가의 현 급여(연봉)내용

현 연봉의 현황	
500만원	3 5.2%
500~1000만원	18 31.0%
1000~1500만원	33 56.9%
1500~2000만원	4 6.9%
2000만원이상	0 0.0%
합 계	63 100.0

무응답: 5명(7.9%)

<표2-1> 경제적 사항(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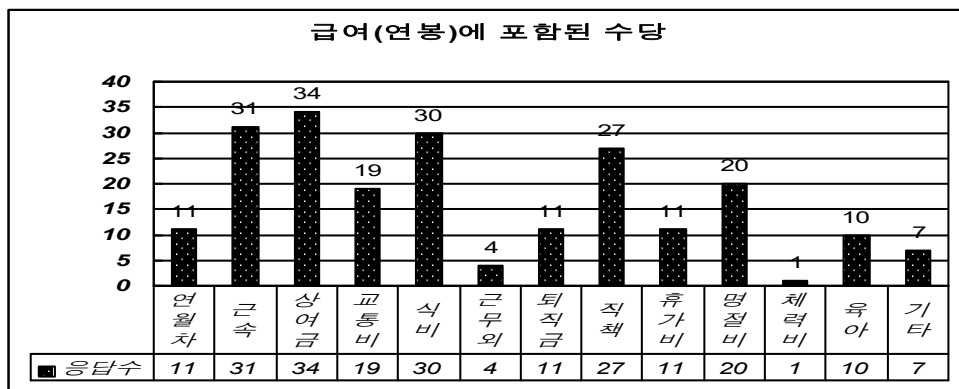
연봉인상기준	
근무년수(호봉)	36 63.2%
업무성과	2 3.5%
승진	6 10.5%
담당분야변화	1 1.8%
기타	12 21.1%
합계	63 100.0%

무응답: 6명(9.5%)

<표2-2> 경제적 사항(2)

경제적 요인은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현실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활동가에게도 자신들만의 생활이 있고, 삶이 있는 만큼 그 것을 유지 또는 발전시키기 위해, 합당한 급여가 주어져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에 활동함에 대한 물질적인 보상으로서, 활동가에게 급여는 많은 의미가 있다.

<표2-1>의 활동가의 현 연봉실태를 보면, 연 1000만원~1500만원을 받고 있는 활동가들이 33명이 응답해, 56.9%의 절반을 넘는 비율을 보였다. 그리고 500만원에 3명인 5.2%, 500만원~1000만원에 18명인 31.0%, 1500만원~2000만원에 4명인 6.9%가 응답하였다. 그리고 2000만원이상에는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또한 <표2-2>의 활동가의 연봉인상기준을 보면, 전체 응답자의 36명인 63.2%가 근무년수(호봉)에 따라 연봉이 인상된다고 응답하였다. 업무성과는 2명인 3.5%, 승진은 6명인 10.5%, 담당분야변화는 1명인 1.8%, 기타는 12명으로 21.1%였다. 기타에는 자체적으로 논의하여, 연봉인상을 한다, 단체경제사정에 따라 다르다, 특별한 기준이 없다등의 응답이 있었다.



무응답: 10명(15.8%)

<그림2-1> 경제적 사항(3)

또한 연봉의 기본금 외에 주요한 요인을 차지하고 있는 수당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연·월차수당들의 다양한 수당을 제시하고, 자신이 받고 있는 수당에 대하여 모두 선택할 수 있

게 하였다. 가장 많이 선택한 수당은 상여금으로, 전체의 34명인 15.7%가 응답하였다. 또한 전체의 31명인 14.4%가 응답한 근속수당이었고, 그다음으로 30명(13.9%)이 응답한 식비가 있었다. 교통비는 19명인 8.8%, 근무외 수당은 4명인 1.9%, 퇴직적립금은 11명인 5.1%, 명절 보너스 20명인 9.3%, 체력단련비는 1명이 응답하여, 0.5%, 육아수당은 10명인 4.6%, 기타는 7명으로 3.2%였다. 기타에는 가족수당 등의 다양한 내용이 나왔다.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현 연봉의 내용을 알아보면, 절반이 넘는 활동가들이 1000만원 ~ 1500만원의 연봉을 받고 활동하고 있으며, 이 연봉의 인상기준은 대체적으로 근무년수라고 하였다. 또한 연봉의 인상기준에 맞게, 연봉에 포함된 수당도 전체의 34명인 15.7%가 응답했었던 상여금과 전체의 31명인 14.4%가 응답한 근속수당이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봤을 때, 그에 따른 연봉 및 수당은 풍족하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아직까지도 근로기준법에서 지정하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는 활동가들도 3명이었다. 이는 아직도 대부분시민단체가 활동가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많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②성별과 연령에 따른 급여정도

		20대	30대	40대	50대	합계
500만원	남	2 100.0%				2 100.0%
	여		1 100.0%			1 100.0%
	합계	2 66.7%	1 33.3%			3 100.0%
500~1000만원	남		4 100.0%			4 100.0%
	여	10 71.4%	3 21.4%	1 7.1%		14 100.0%
	합계	10 55.6%	7 38.9%	1 5.6%		18 100.0%
1000~1500만원*	남	1 5.0%	15 75.0%	4 20.0%		20 100.0%
	여	6 46.2%	6 46.2%		1 7.7%	13 100.0%
	합계	7 21.2%	21 63.6%	4 12.1%	1 3.0%	33 100.0%
1500~2000만원	남			1 100.0%		1 100.0%
	여		1 33.3%	2 66.7%		3 100.0%
	합계		1 25.0%	3 75.0%		4 100.0%

\* $\chi^2=11.459$ ,  $df=3$ ,  $p<0.01$  / 빈칸은 0명(0.0%)

<표2-3> 경제적 사항(4)

그리고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삶의 경제 수준이 달라지므로, 성별과 연령에 따른 활동가



들의 급여수준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 급여(연봉)가 500만원인 활동가는 20대 남성 2명, 30대 여성이 1명이었다. 500만원~1000만원에는 30대 남성 4명, 20대여성 10명, 30대여성 3명, 1명이 응답하였다. 1000만원~1500만원에는 20대 남성 1명, 30대 남성 15명, 40대 남성 4명, 20대여성 6명, 30대여성 6명, 50대여성 1명이 응답하였다. 그리고 1500만원~2000만원에는 40대 남성1명, 30대여성 1명, 40대여성 2명이 응답하였다. 그리고 1000만원~1500만원의 응답은 통계상으로 유의미한( $p<0.01$ )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여성의 14명인 41.1%가 500만원~1000만원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남성의 20명인 58.8%가 1000만원~1500만원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이는 시민단체 내에서도 근소하지만, 남성과 여성에 따른 급여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 차이는 이전 설문에서, 대부분 근무년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다고 응답하였으므로, 이전 비교적 사회활동이 용이했던 남성들이 시민운동을 하기용이 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근소한 차이가 나고, 그 차이 나는 금액이 크지 않아, 어느 한쪽의 성에게 보다 많은 급여(연봉)를 지급하는 것보다, 연봉의 수준을 보다 높이는 것이 급선무 일것이다.

### ③현 연봉 만족도 및 희망급여

현 연봉의 만족도	
매우만족	2 3.3%
만족	8 13.3%
보통이다	31 51.7%
불만족	14 23.3%
매우불만족	5 8.3%
합 계	63 100%

무응답: 3명(4.8%)

<표2-2> 경제적 사항(2)

희망급여	
1000만원	3 5.4%
1000~2000만원	35 62.5%
2000~2500만원	13 23.2%
2500~3000만원	4 7.1%
3000만 원 이상	1 1.8%
합계	63 100.0%

무응답: 7명(11.1%)

<표2-3> 경제적 사항(3)

앞에서 활동가의 현 급여(연봉)의 실태를 알아보았다면, 이 두 질문에서는 활동가들이 현 급여(연봉)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지, 어느 수준까지의 급여를 희망하는 지를 알아보고자 질문하였다. 만약 현 연봉에 대해 만족한다면 다면, 활동가 복지 안에서 경제적 사항은 활동가의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야기 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의 경우가 나왔다면, 앞과 반대의 상황이 될 것이다.

현 연봉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31명인 51.7%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 매우만족에 2명인 3.3%, 만족에 8명인 13.3%, 불만족에 14명인 23.3%, 매우불만족에 5명인 8.3%하였다. 또한 희망급여에 대해서, 현 연봉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질문을 하였는데, 1000만원~2000만원에 전체응답자의 절반을 넘는 35명인 62.5%가 응답하였다. 그

리고 2000만원~2500만원에 13명인 23.2%, 2500만원~3000만원에 4명인 7.1%, 1000만원에 3명인 5.4%, 3000만원 이상에 1명인 1.8%가 응답하였다.

시민단체 활동가의 현 연봉 만족도 및 희망급여에 대한 질문에서 31명인 51.7%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희망급여는 1000만원~2000만원에 35명인 62.5%가 응답하였다. 이는 활동가들이 높은 수준의 급여를 선택하고 있지 않으며, 현 연봉에 대해 큰 불만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활동가들이 높은 급여를 요하고 있지 않다는 것과, 단체의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에 적절한 급여를 상한선으로 잡았거나, 활동가들이 급여에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위에서, 활동가의 현 급여(연봉)내용·성별과 연령에 따른 급여정도·현 연봉 만족도 및 희망급여에 대해 알아보아, 활동가의 복지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전 시민단체의 특성상, 경제적 이유를 남기는 것이 아닌, 사회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활동가나 단체 내에서 경제적인 부분에 다소 취약한 점들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활동가가 자신의 삶 전체를 투신하여,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지 않는 한, 활동가도 자신이 사회에 한 일에 대한 알맞은 물질적 보상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해나가야 함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단체 내에서도, 활동가 스스로도, 경제적인 면에 대한 관심 없이 활동가에게 보다 효율성 있는 사업진행 및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생활이 영위하기 힘든 상황에서 보다 나은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며, 단순 그 사업을 일정기간 유지하는 것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체와 활동가는 가능한 활동가의 물질적 보상수준(급여)을 현실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 **(2) 시민단체 활동가의 사회적 분야**

시민단체는 각각의 단체가 가진 고유의 특성에 맞는 사업 및 연대 사업을 실시한다. 그래서, 시민단체간의 연대관계는 타 분야의 관계보다 더 밀착되어 있고, 그만큼 중요시 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활동가가 활동하는 주요 공간인 직장 내의 면과 활동가에 집중하여 질문하였다. 왜냐하면, 직장 외적 관계는 시민단체사업의 특성상, 업무성과와 연결이 되므로, 활동가의 복지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활동가의 사회적 분야에서는 활동가의 직장 내 관계·직장 내 근무환경·여가생활의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각각 5문제, 7문제, 5문제로 총 17개 질문을 하였고, 현황파악을 위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 **① 시민단체 활동가의 직장 내 관계**

동료와의 관계	
매우그렇다	17 27.0%
그렇다	40 63.5%
그저그렇다	6 9.5%
그렇지않다	0 0.0%
매우그렇지않다	0 0.0%
합 계	63 100.0%

무응답: 0명(0.0%)

<표3-1> 직장내 관계(1)

상사의 의사결정 유형	
독단적	1 1.7%
권위적	3 5.1%
지시적	9 15.3%
민주적	41 69.5%
방임적	5 8.5%
합 계	63 100.0%

무응답: 4명(6.3%)

<표3-2> 직장내 관계(2)

시민단체 활동가가 아무리 외근이 많다고 해도, 직장 내 관계가 활동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활동가는 좀더 편안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직장 내 관계가 개인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활동가의 직장 내 관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을 하였다.

<표3-1>의 동료관계에 대한 면을 보면, 그렇다이상의 반응이, 전체응답자의 57명인 89.5%로, 긍정적인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그리고 그저그렇다에 6명인 9.5%, 그렇지않다 이하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표 3-2>를 보면, 상사의 의사결정유형에는 민주적에 전체의 41명인 69.5%로 가장 많은 활동가들이 응답하였다. 그리고 독단적에 1명인 1.7%, 권위적에 3명인 5.1%, 지시적에 9명인 15.3%, 방임적에 5명인 8.5%가 응답하였다.

단체이용자(회원)와의 관계	
매우그렇다	11 17.5%
그렇다	40 63.5%
그저그렇다	11 17.5%
그렇지않다	1 1.6%
매우그렇지않다	0 0.0%
합 계	63 100.0%

무응답: 0명(0.0%)

<표3-3> 직장내 관계(3)

업무 외 관계 자율성	
매우그렇다	16 25.4%
그렇다	36 57.1%
그저그렇다	10 15.9%
그렇지않다	1 1.6%
매우그렇지않다	0 0.0%
합 계	63 100.0%

무응답: 0명(0.0%)

<표3-4> 직장내 관계(4)

또한 <표3-3>의 단체이용자와의 관계를 보면, 그렇다이상의 응답이 전체응답자의 절반을 훨씬 넘는 51명인 90.5%로 나타났으며, 그저그렇다에 11명인 17.5%, 그렇지않다에 1명인

1.6%이었고, 매우그렇지않다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표3-4>의 직원간의 업무외 관계를 보면, 그렇다이상의 응답이 전체응답자의 절반을 훨씬 넘는 52명인 72.5%로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에 10명인 15.9%, 그렇지 않다에 1명인 1.6%, 매우그렇지않다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관계 영향 요인	
업무의 동질성	5 8.1%
서로간의친밀성	20 32.3%
문제에대한관점	25 40.3%
업무량	10 16.1%
기타	2 3.2%
합계	63 100.0%

무응답: 1명(1.6%)

<표3-5> 직장내 관계(5)

마지막으로 <표3-5>의 직장 내 관계영향요인을 보면, 가장 많은 수의 응답이 나온 요인은 문제에 대한 관점으로 전체의 25명인 40.3%가 응답 하였다. 그리고 서로간의 친밀성은 20명인 32.3%, 업무량에 10명인 16.1% 업무의 동질성에 5명인 8.1%의 응답을 하였으며, 기타에 2명인 3.2%가 응답하였다. 그리고 기타에는 인간관계등의 내용이 나왔다.

시민단체 활동가의 직장내 관계를 보면, 동료·단체기용자(회원)와의 관계에서 85%이상의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으며, 상사의 의사결정유형에도 민주적이 69.5%로 시민단체 활동가의 직장내 관계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업무 외 관계의 자율성에 대해서도 72.5%가 긍정적인 반응을 하여, 직장 내와 그 관계가 직

장 밖에서도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관계에 대한 영향요인에는 문제에 대한 관점이 가장 높게 나와, 사회문제를 다루고, 최일선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특성을 그대로 볼 수 있었다. 시민단체의 활동이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힘든 일이지만, 활동가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직장 내 관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② 시민단체 활동가의 업무환경

### - 시민단체 사무실의 접근성

출·퇴근소요시간(편도)	
30분	34 54.0%
30분~1시간	22 34.9%
1시간~1시간30분	5 7.9%
1시간30분~2시간	1 1.6%
2시간이상	1 1.6%
합 계	63 100.0%

무응답: 0명(0.0%)

<표4-1> 업무환경(1)

출·퇴근 이용 교통수단	
도보	8 12.7%
자전거	1 1.6%
대중교통 (버스·택시)	28 44.4%
승용차	26 41.3%
기타	0 0.0%
합 계	63 100.0%

무응답: 0명(0.0%)

<표4-2> 업무환경(2)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시민단체 활동가의 단체 환경은 활동가가 오래 생활하고, 연대 등의 다양한 업무를 하는 곳인 만큼, 업무처리의 편리성이나, 단체사무실의 접근성, 업무량 등의 요인들은 활동가의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편리한 업무처리나, 접근성이 높은 단체사무실 등의 긍정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활동가의 근로동기를 향상시키는 물론, 전체 업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근무단체의 접근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출퇴근 소요시간(편도) 및 이용교통수단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표4-1>를 보면, 전체의 절반이 넘는 34명인, 54.0%가 30분 소요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30분~1시간에 22명인 34.9%, 1시간~1시간30분에 5명인 7.9%, 1시간30분~2시간에 1명인 1.6%, 2시간이상에 1명인 1.6%가 응답하였다. <표4-2>를 보면, 활동가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버스나 택시등의 대중교통으로, 전체의 28명인 44.4%이었다. 그리고 승용차는 26명인 41.3%, 도보가 8명인 12.7%, 자전거가 1명인 1.6%이었고, 기타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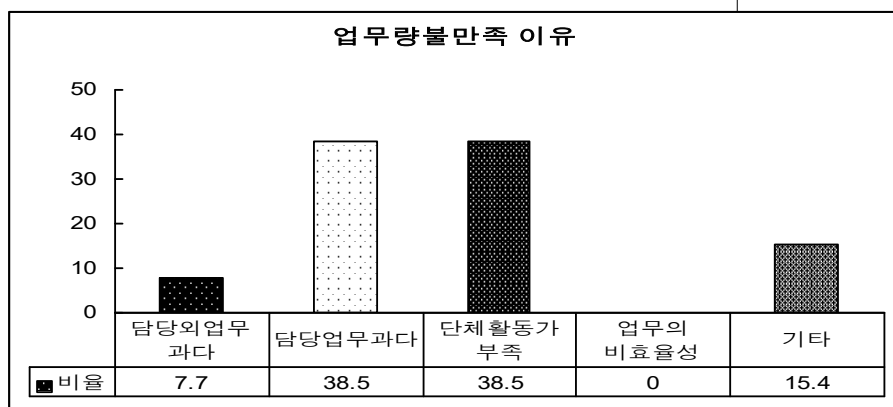
#### - 시민단체 활동가의 업무량

담당 업무량에 대한 만족	
매우만족	2 3.2%
만족	30 48.4%
그저그렇다	17 27.4%
불만족	12 19.4%
매우불만족	1 1.6%
합 계	63 100.0%

무응답: 1명(1.6%)

<표4-3> 업무환경(3)

또한 담당업무량이 활동가가 수행할 만큼 적절한 양인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담당업무량에 대해 만족에 대해 질문하였다. 절반에 가까운 30명의 활동가들이 만족에 응답하여, 48.4%의 응답률을 보였고, 그저그렇다에 17명인 27.4%, 불만족에 12명인 19.4%, 매우 만족에 2명인 3.2%,매우불만족에 1명인 1.6%가 응답하였다.



<그림3-1> 업무환경(3-1)

또한 업무량이 불만족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딸림 문항을 만들어 질문을 하였다. 아래 <그림3-1>을 보면, 단체 활동가의 부족과, 본인담당업무의 과다가 38.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담당 외 업무의 과다가 7.7%, 기타가 15.4%를 보였다. 그리고 업무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항은 응답이 없었다. 그리고 기타에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한다, 업무종류가 다양하다 등의 내용이 있었다.

#### - 시민단체 업무관련

일일 평균 업무시간	
8시간미만	3 4.8%
8시간~9시간미만	31 49.2%
9시간~10시간미만	15 23.8%
10시간이상	13 20.6%
기타	1 1.6%
합 계	63 100.0%

무응답: 0명(0.0%)

<표4-4> 업무환경(4)

주중 근무일수	
5일미만	1 1.6%
5일	32 50.8%
6일	12 19.0%
격주로5일	16 25.4%
기타	2 3.2%
합 계	63 100.0%

무응답: 0명(0.0%)

<표4-5> 업무환경(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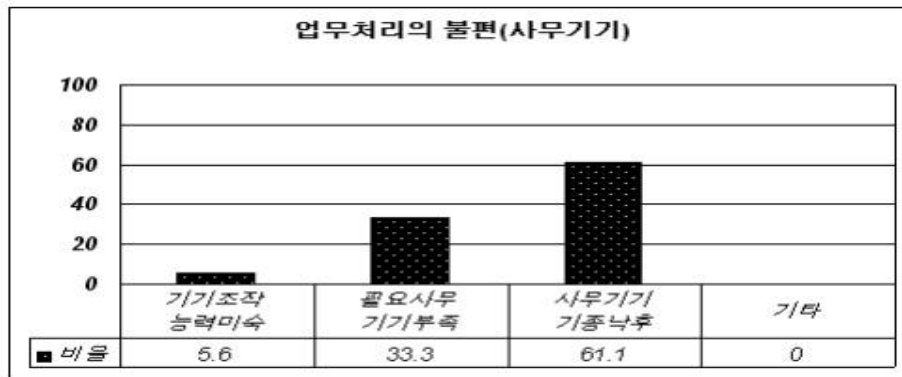
<표4-5> 활동가의 일일 평균 업무시간을 알아보면, 8시간~9시간미만 근무하는 활동가들이 전체의 31명으로, 49.2%가 응답하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리고 9시간~10시간미만은 15명인 23.8%, 10시간이상은 13명으로 20.6%, 8시간미만은 3명으로 4.8%, 기타는 1명으로 1.6%가 응답하였다. 기타에는 업무시간이 불규칙하다 등의 내용이 있었다. <표4-6> 활동가의 주중 근무일수를 알아보면, 가장 많은 활동가들이 5일 근무에 32명이 응답하여, 50.8%의 응답률을 보였고, 6일에 12명인 19.0%, 격주로 5일에 16명인 25.4%, 5일 미만에 1명인 1.6%, 기타에 2명인 3.2%가 응답하였다. 기타에는 토요일 당직제로 운영된다등의 응답이 있었다.

업무처리 편리성(사무기기)	
매우그렇다	4 6.3%
그렇다	26 41.3%
그저그렇다	15 23.8%
그렇지않다	16 25.4%
매우그렇지않다	2 3.2%
합 계	63 100.0%

무응답: 0명(0.0%)

<표4-6> 업무환경(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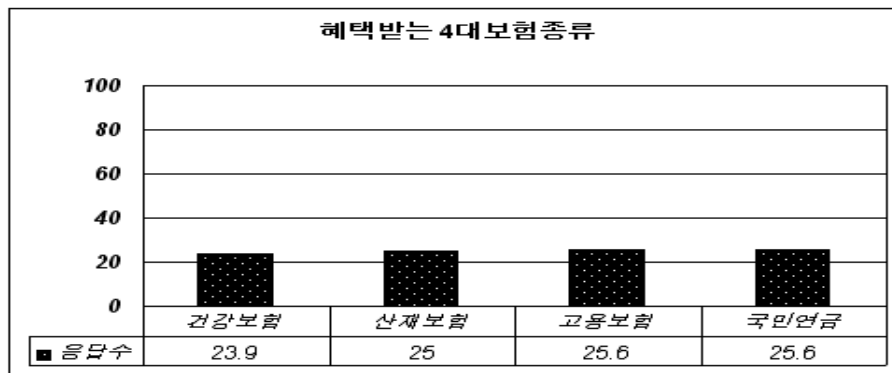
다음으로 업무처리에 대한 사무기기의 편리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시민단체의 대부분이 재정이 불안하고 취약한 상황을 고려해 마련하였다. 절반에 가까운 30명의 활동가들이 그렇다 이상의 항목에 응답하여, 47.9%의 응답률을 보였다. 그리고 그저그렇다에 15명인 23.8%, 그렇지않다에 16명인 25.4%, 매우그렇지않다에 2명인 3.2%가 응답하였다.



<그림3-2> 업무환경(6-1)

또한 업무처리의 사무기기 불만족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그 이유를 딸림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사무기기 기종의 낙후가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넘는 61.1%였고, 필요사무기기의 부족이 그다음인 33.3%, 기기조작능력의 미숙이 5.6%, 기타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사무기기 기종의 낙후가 불만족의 가장 다수가 응답을 한 것으로 보아, 아직도 시민단체에서 재정문제로 인한 사무기기교체 및 재구입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 - 시민단체 활동 혜택 복지서비스



<그림3-3> 업무환경(7)

다음으로, 시민단체의 의무인 혜택 받는 4대 보험의 종류에 대해 질문하였다. 자신이 혜택 받는 모든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는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25.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산재보험이 25%, 건강보험이 23.9%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 비율이 전체응답자의 1/3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많은 단체들이 활동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인 4대 보험을 보장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앞에서 시민단체 활동가의 업무환경을 시민단체 사무실의 접근성·시민단체 활동가의 업무량·시민단체 업무관련분야·시민단체 활동 혜택 복지서비스로 알아보았다. 시민단체 사무실의 접근성에 대한 질문에서, 조사대상 활동가의 절반이 넘는 34명인, 54.0%가 출퇴근에 30분 소요된다고 하였으며, 전체의 28명인 44.4% 가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버스나 택시 등

의 대중교통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시민단체 활동가의 업무량**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30명의 활동가들이 만족에 응답하여, 48.4%의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업무량에 불만족할 경우, 그 이유로는 단체 활동가의 부족과, 본인담당업무의 과다가 38.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담당 외 업무의 과다가 7.7%가 있었다. 또한 **시민단체 업무관련**으로 시민단체 활동가의 일일 업무시간은 전체의 31명인 49.2%가 8시간~9시간미만에, 응답하였고, 9시간 이상 근무하는 활동가들도 28명인 44.4%정도 되었다. 그리고 활동가의 주종 근무일수는 5일 근무에 32명인 50.8%의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또한 업무처리의 사무기기의 편리성에 절반에 가까운 30명의 활동가들이 그렇다 이상의 항목에 응답하여, 47.9%의 응답률을 보였고, 업무처리의 사무기기 불만족한 이유는 사무기기 기종의 낙후가 61.1%였고, 필요사무기기의 부족이 33.3%, 기기조작능력의 미숙이 5.6%, 이었다. **시민단체활동 혜택 복지서비스**에서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25.6%로 가장 높았고, 산재보험이 25%, 건강보험이 23.9%의 응답률을 보였다.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업무환경은 비교적 열악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 문제의 주요 원인은 시민단체가 가지고 있는 불안정한 재정자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이 사업에 집중을 하는데 온 신경을 쏟아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할 혜택(4대보험, 적정업무시간등)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과중한 업무와, 4대보험 혜택(혜택을 받는 비율이 아무리 높아도 전체의 1/3도 되지 않는다.)도 받지 못하며, 사무기기 기종의 낙후 등의 열악한 환경에서 오직 사업에만 관심을 쏟는다고 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 되는 것은 아니다. 당장은 사업이 진행이 잘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장거리로 본다면, 활동가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후, 도저히 생활유지가 안되어 이직하거나, 다른 직종으로 전환 하는 등의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때, 시민단체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고 시민참여를 이끌어내는 역량 있는 활동가들을 잃어, 사업의 뿌리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가 사람을 중요시 하는 만큼,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장기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유한적인 물질적인 자원을 확보보다는 비교적 무한한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로가 좋은 업무환경으로 조성하기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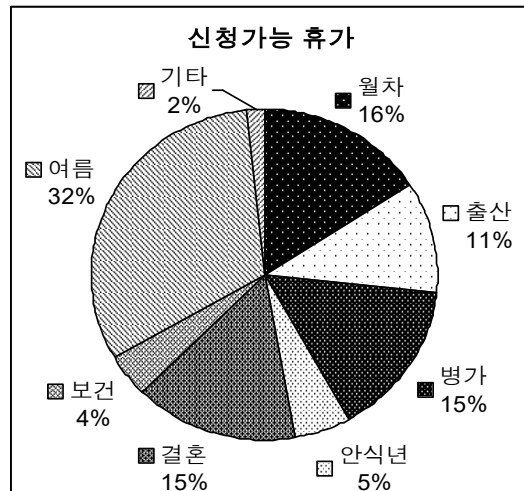
### ③ 시민단체 활동가의 여가생활



휴가선택의 자율성	
매우그렇다	7 11.1%
그렇다	29 46.0%
그저그렇다	17 27.0%
그렇지않다	8 12.7%
매우그렇지않다	2 3.2%
합계	63 100.0%

무응답: 0명(0.0%)

<표5-1> 여가생활(1)



<그림4-1> 여가생활(1-1)

다음으로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여가생활에 대해 질문하였다.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어도 자신의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고, 적당한 시기에 쉴 수 있다면, 그것이 활동가의 복지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5-1>의 휴가선택의 자율성에 대해 알아보면, 그렇다 이상의 반응이 36명인 57.1%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으며, 그저그렇다에 17명인 27.0%, 그렇지않다에 8명인 12.7%, 매우그렇지않다에 2명인 3.2%가 응답하였다. 또한 <그림4-1>의 신청가능휴가에 대해 알아보면,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인 휴가는 여름휴가로 32% 였고, 월차가 16%, 병가와 결혼휴가가 15%, 출산휴가가 11%, 안식년이 5%, 기타가 2%로 나타났다.

한달내 문화생활	
없다	10 16.1%
1~2번	35 56.5%
3~4번	13 21.0%
5~6번	2 3.2%
7번 이상	2 3.2%
합계	63 100.0%

무응답: 1명(1.6%)

<표5-2> 여가생활(2)

주중 근무외 여가시간	
없다	8 12.7%
3시간	13 20.6%
3시간~6시간	16 25.4%
6시간~10시간	16 25.4%
10시간이상	10 15.9%
합 계	63 100.0%

무응답: 0명(0.0%)

<표5-3> 여가생활(3)

다음으로 <표5-2> 한 달 내 문화생활 빈도에 대해 알아보면, 1~2번이 가장 많이 응답한 35명으로 56.5%, 3~4번이 13명인 21.0%, 없다가 10명인 16.1%, 5~6번이 2명인 3.2%, 7번

이상이 2명인 3.2%로 응답하였다. <표5-3> 주중근무의 여가시간에 대해 알아보면, 3시간~6시간, 6시간~10시간에 16명이 응답하여, 25.4%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리고 3시간에 13명인 20.6%, 10시간이상이 10명인 15.9%, 없다가 8명인 12.7%로 응답하였다.

업무외 적 동호회	
없다	27 43.5%
있다	35 56.5%
합 계	62 100.0%

무응답: 1명(1.6%)

<표5-4> 여가생활(4)

(7명), 야생조류 연구회, 들꽃기행 등의 매우 다양하였다.

여가생활의 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여가생활을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동호회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는 전체의 절반을 조금 넘는 35명인 56.5%이며, 동호회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활동가는 전체의 27명인 43.5%이었다. 동호회 활동의 내용은 등산모임(2명), 여성운동, 이전 학교 때 동아리활동유지, 여행, 인터넷동호회(살사, 탈춤), 그래픽스터디, 풍물, 탈춤, 외국인노동자와 함께하는 모임, 종교활동(7명), 야생조류 연구회, 들꽃기행 등의 매우 다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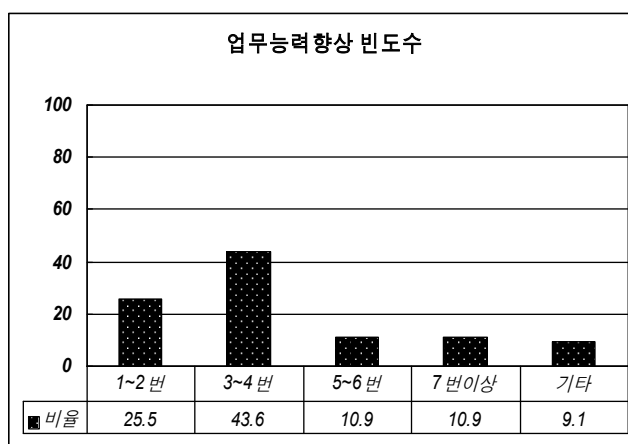
시민단체 활동가의 여가생활은 대체적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그 특성에 맞게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조사하는 시민단체의 예산이나 규모가 매우 다양하여, 이것을 모든 시민단체 활동가의 여가생활이 자유롭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대체적으로 예전보다는 시민단체 활동가의 여건이 나아져, 여가생활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활동가의 연 500만원도 채 안되는 급여를 지급하는 단체에서는 여가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물질적, 정신적 여유가 나지 않을 것이다. 시민단체의 특성인 연대의 의미를 살려, 활동가들도 보다 탄탄한 연대로, 지치고 소진되어있거나,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활동가들을 서로 돕고, 함께 나아가는 데 힘써야할 것이다.

### (3) 시민단체 활동가의 단체현황

업무능력 향상교육	
정기적으로있다	11 17.5%
비정기적으로있다	42 66.7%
없다	8 12.7%
모르겠다	2 3.2%
합 계	63 100.0%

무응답: 0명(0.0%)

<표6-1> 단체현황(1)



<그림5-1> 단체현황(1-1)

마지막으로, 활동가의 사업을 뒷받침해주고, 큰 영향을 미치는 현, 근무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활동가의 소진이나, 업무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 보다 지속적으로 활동가의 활동을 유지 및 발전을 하게하는 업무능력향상교육에 대해 알아보았다. 업무능력

향상교육이 있으나, 비정기적으로 있다에 42명인 66.7%가 응답하였고, 정기적으로 있다에 11명인 17.5%가 응답하여, 전체 80%가 업무능력향상교육이 주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없다에 8명인 12.7%가 응답하였고, 모르겠다에 2명인 3.2%가 응답하였다. 사람을 상대하며, 그 합의를 이끌어내는 시민단체 활동은 정신적인 소진보다는 사람과의 관계나, 사업진행에서의 전문성 부재로 인한 소진이 많을 것이라 예상된다. 시민단체 활동도 하나의 휴먼서비스 이기 때문이다. 보다 정기적인 업무능력향상교육으로 활동가들이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하여,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단체 후원(회원확보) 부담감	
매우 많다	7 11.1%
많다	24 38.1%
그저그렇다	19 30.2%
적다	10 15.9%
매우 적다	3 4.8%
합 계	63 100.0%

무응답: 0명(0.0%)

<표6-2> 단체 현황(2)

단체내 편의시설 만족도	
매우만족	1 1.6%
만족	17 27.0%
그저그렇다	23 36.5%
불만족	15 23.8%
매우불만족	7 11.1%
합 계	63 100.0%

무응답: 0명(0.0%)

<표6-3> 단체 현황(3)

그리고 단체 후원(회원확보)의 부담감과 단체 내 편의시설 만족도에 대해 질문 하였다. 단체 후원(회원확보)에 대한 부담감에서 절반에 가까운 31명의 활동가인 49.2%가 많다 이상에 응답하였으며, 그저그렇다에 19명인 30.2%, 적다에 10명인 15.9%, 매우적다에 3명인 4.8%가 응답하였다. 또한 단체 내 편의시설 만족도를 보면, 그저그렇다가 23명인 36.5%가 응답하였고, 불만족 이상의 항목도 22명인 34.9%가 응답하였고, 만족이상의 항목 또한 18명인 28.6%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하지만, 시민단체 대부분이 재정이 부족한 상태이고, 이전부터 활동가는 물질적 보상보다는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시민단체에서 가장 필요한 자원은 돈보다는 인력자원, 즉 활동가 이다. 능력있는 활동가로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은 일반시민들 모두가 하기는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의 사업이 보다 지속적으로 되길 원한다면, 단체와 활동가 모두 장기적인 시각으로 인력자원을 보다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외적활동비 지급에는 절반에 가까운 32명의 활동가들인 50.8%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아니다라고 응답한 활동가들이 21명으로 33.3%의 응답률을 보여주었다. 또한 모른다고 응답한 활동가들이 10명인 15.9%이었다. 하지만 활동비지급은 명목상 있는 것보다

대외적활동비 지급	
그렇다	32 50.8%
아니다	21 33.3%
모르겠다	10 15.9%
합 계	63 100.0%

무응답: 0명(0.0%)

<표6-4> 단체 현황(4)

그 수준이 중요하므로, 다음에는 보다 실질적인 수준을 질문하여, 향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 근무하는 시민단체의 복지점수를 직접 쓰는 문항이 있었다. 0점부터 100점까지 내의 수준 다양한 결과가 나왔으며, 그 평균은 65.93이었다. 전반적으로 40~60점대의 응답이 많았다.

### III. 결 론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힘으로 시민의 권리를 지켜나가고자 생긴 제 3의 영역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 사회 전 분야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활동 및 활동가의 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활동가의 복지현황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부분의 활동가가 그렇듯이, 돈을 벌기 위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에 맞게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활동가들의 복지현황에 대해 경제적·사회적·단체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경제적 분야에서는 활동가의 현 급여(연봉)내용·성별과 연령에 따른 급여정도·현 연봉 만족도 및 희망급여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시민단체의 특성상, 경제적 이유를 남기는 것이 아닌, 사회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이루어져,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활동가나 단체 내에서 경제적인 부분에 다소 취약한 점들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사회적 부분에서는 시민단체 활동가의 업무환경을 시민단체 사무실의 접근성·시민단체 활동가의 업무량·시민단체 업무관련분야·시민단체활동 혜택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시민단체 사무실의 접근성에 대해**, 54.0%가 출퇴근에 30분 소요되며, 44.4%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버스나 택시 등의 대중교통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시민단체 활동가의 업무량에 대해** 48.4%가 만족에 응답하였다. 또한 업무량에 불만족할 경우, 그 이유로는 단체 활동가의 부족과, 본인담당업무의 과다가 38.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담당 외 업무의 과다가 7.7%가 있었다. 또한 **시민단체 업무관련**으로 시민단체 활동가의 일일 업무시간은 전체의 31명인 49.2%가 8시간~9시간미만이며, 9시간 이상 근무하는 활동가들도 28명인 44.4%정도 되었다. 그리고 활동가의 주중 근무일수는 5일 근무에 32명인 50.8%의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또한 업무처리의 사무기기의 편리성에 30명의 활동가들이 그렇다 이상의 항목에 응답하여, 47.9%의 응답률을 보였고, 업무처리의 사무기기 불만족한 이유는 사무기기 기종의 낙후가 61.1%였고, 필요사무기기의 부족이 33.3%, 기기조작능력의 미숙이 5.6%, 이었다. **시민단체활동 혜택 복지서비스**에서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25.6%로 가장 높았고, 산재보험이 25%, 건강보험이 23.9%의 응답률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단체현황**에 대해 질문 하였는데, 비정기적·정기적으로 업무능력향상교육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80%를 넘었다. 그리고 단체후원(회원확보)의 부담감과 단체 내 편의시설 만족도에 대해 질문 하였다. 단체후원(회원확보)에 대한 부담감에서 절반에 가까운 31명의 활동가인 49.2%가 많다 이상에 응답하였고, 단체 내 편의시설 만족도에는, 그저그렇다가 23명인 36.5%, 불만족 에 22명인 34.9%, 만족에 18명인 28.6%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대외적활동비 지급에는 절반에 가까운 32명의 활동가들인 50.8%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아니다라고 응답한 활동가들이 21명으로 33.3%가 응답하였고, 활동가들이 생각하는 복지점수의 평균은 65.93이었다.

대전광역시 시민단체 활동가 복지현황 조사의 결과를 보면,

첫째로 시민단체별로 그 수준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예로 단체예산을 보면, 1억미만인 단체들이 6곳정도 되었고, 2억이상 되는 곳이 5곳이었다. 이는 단체별로 아직도 그 예산이나, 사업의 폭이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이 비교적 단기적으로 일회성인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다양한 주제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반해 그에 집중할 만한, 활동가의 복지관련 부분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그 사업으로 인한 시민의 합의를 이끌어 내려면, 가능한 시민의 요구에 맞고 완성도 높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복지 관련한 부분이 취약(특히 4대 보험은 가장 높은 수치가 26.5%였다.)할 경우, 계속되는 소진과 전문성 취약은 결국에는 사업의 완성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시민의 참여 또한 이끌어 내지 못해, 시민단체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활동가에 대한 복지는 사업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활동가나 시민단체 내에서 보다 심도 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활동가들 스스로의 복지에 대한 자각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단체에서 예산부족으로 활동가들에 대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는 점을 활동가 스스로가 당연히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활동가들 자신조차도, 당장의 사업이나 현안에 대해서만 중요하게 여길 뿐, 보다 장기적인 사업을 위한 스스로의 복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가져야할 권리와 의무(사회변화를 위해 노력함.)를 예산문제에 치중해, 미루는 것은 자신이 단기간만 시민단체에서 일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시민단체 내에서의 활동가에 대한 복지는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후원이라 생각하고, 장기적 사업을 위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시민단체의 본 목적인 시민의 참여와 사회변화를 위해, 활동가의 복지는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스스로의 복지에 대한 자각으로 보다 전문성있는 시민단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설인호 화백 작품감상







## 닭이 인간에게

설인호

술대없는 엉뚱한 일 하는 것을 닭짓 한다고 하고	머리가 나쁘면 닭대가리라고 한다지	빌빌 조는 꼴을 닭똥 걸렀다 하고	먹을 거 없으면서도 버리기 아까운 것은 계류이라 한다며?
그러면서 아쉬우면 삼 달고 대추 넣어서 탕 끓여 먹고	내소 뭇 거 다 뭇면서 닭똥집만 잘 먹더라	민주주의 잘 하면 됐지 난데없이 내 목은 왜 비틀어?	사위 대접 중요한 건 알겠는데 애꿎은 씨암탸는 왜 잡아?
그래	나는 학처럼 고고한 날개도 없고	날개짓을 할 정도로 강한 어깨도 없다	하지만 나는 땀을 흘릴 날카로운 발톱이 있고
흙을 걸러낼 튼튼한 위장과 모래주머니가 있지	술모도 없는 평장이나 달고 다니는 인간들이여	똥을 치며 새벽을 깨우는 부지런을 아느냐	하늘 보기 부끄러워 땅만 내려다보며 언어를 훑는 결손을 아느냐
물 한 모금 입에 넣고 하늘 한 번 쳐다보는 여유를 아느냐	부화의 순간을 기다리며 긴긴 시간을 견뎌하는 인생을 아느냐	똥질을 깨고 나오는	공통의 불우함을 아느냐
오만과 야만의 땅길 속에서	하루하루라는	2005 새해 마무리	끼리함 인간들이여



## 미안하다, 사랑한다?

설인호

오빠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우리 사이...  
끝난 걸로 아는데.

내가 오빠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빠도  
잘 알잖아, 응?

가! 가! 가! 말아!  
넌 만난 이후로  
한 번도 되는 일이  
없어.

사람이 어떻게  
변하니?  
내가 잘알게.

그만해.  
더이상 상처 따윈  
받지 않겠어.

오빠 그러지 말고  
우리 만나서  
이야기 하자 응?

.....

응? 응?  
응? 아이~  
옴빠~~

좋아 딱 한번.  
하지만 명심해.  
이번이 마지막이야.

쿵쿵

인터뷰 댄다!

오션

집요하다  
집요해...

먹잇감을 통령하는 아수는 없습니다.

연기군수





## 스위치 히터



스위치 히터 : 야구에서 왼쪽과 오른쪽 모두 치는 타자



## 심오한 뜻



## 어린공주



## 백원짜리 동전





